

2008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Ⅰ)

2008. 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권)

권 택 기 의원	1
김 동 철 의원	253
김 영 선 의원	323
김 용 태 의원	511
박 상 돈 의원	523
박 선 숙 의원	567
박 종 희 의원	625
신 학 용 의원	695

(Ⅱ 권)

이 사 철 의원	1
이 석 현 의원	163
이 성 남 의원	189
이 성 현 의원	229
이 정 희 의원	285
이 진 복 의원	315
이 한 구 의원	449
이 한 정 의원	589

(Ⅲ 권)

조 경 태 의원	1
조 문 환 의원	399
조 윤 선 의원	579
허 태 열 의원	721
현 경 병 의원	799
홍 재 형 의원	889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권택기 의원	1-1. 금융위원회 의료산업선진화 워킹그룹 활동 내역	3
	1-2. 연구과제 결과	5
	1-3. 실손형 보험 상품별 판매액 및 수익 현황	6
	1-4. 실손형 보험 확대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입장	9
	2. 2005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규제 검토대상 1,453건의 내용 및 검토 결과	10
	3. 2005년 금융규제 해소 검토대상 269건의 내용 및 규제 해제 추진결과	10
	4. 금융당국과 공정위 이중규제 관련	99
	- 양 기관간의 주요 쟁점별 이견 현황에 대한 조정 및 MOU체결 현황	
	5. 대주주 적격성심사의 법적 근거와 심사기준, 관련 내부규정	105
	6.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현황 및 적격성 심사 결과 조치사항	140
	7.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산업의 선진화 방안과 추진현황	143
	-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위 등 감독당국이 추진했던 사업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서	
	-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8. 선물시스템의 오류 발생현황과 피해액 및 장애발생에 따른 민원접수 및 소송현황(피고별, 원고별, 소송내용, 소송결과)	162
	- 오류발생 대비 비상계획 현황 및 비상훈련 실시 현황	
	9. 간접투자증권 판매인력 등의 자격기준, 능력평가지험 응시 및 비용과 판매인력의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현황	163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권택기 의원	10. 2005년 이후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휴면예금 규모와 집행현황, 휴면예금 사용 점검결과 보고서	165
	11. 증권거래법위반관련	169
	- 증권거래법위반 과징금 부과현황 (2005년~2008.8월말)	
	- 고액 과징금 채납현황	
	-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미수납금액 현황, 사유별 과징금 미수납 현황	
	- 소멸시효로 인해 결손 처분한 채납과징금 현황	
	12.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172
	- 투자유가증권 정리 계획대비 회수 현황	
	- 매각 지연 사유	
	13. 상조업체 운영방식이 유사보험방식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	173
	14. 중소기업 보증지원 기관인 신·기보 관련	177
	- 창업 및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 우선지원 방안	
	- 공적보증에 맞는 보증 운용 및 비효율적인 보증 축소·정비 방안	178
	- 장기보증이용 문제	
	- 중복보증 문제 등에 대한 업무특화 방안	179
	- 신보 단독거래기업에 대해 기보가 신규로 중복보증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	
	- 기보의 벤처·이노비즈 심사 및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가 부실해질 우려에 대한 대책	180
	15. 신·기보 통합 관련	181
	- 금융위원회의 계획안 및 입장, 방향, 추진계획, 추진에 따른 어려운 점, 해결방안	
	16. 권혁세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22일 KBS 라디오 출연	182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권택기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코 투자로 인한 중소기업 손실에 대한 대책 강구하겠다고 발언함.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책 17-1. 외부기관으로부터 금융위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204 17-2. 민간인의 정부기관 파견 법적 근거 204 18-1. 키코(KIKO) 관련 손익현황 자료 209 18-2. 키코(KIKO) 관련 그 동안의 회의내용, 보고자료 및 대책 등에 대한 자료 210 19. 금융선진화 관련 21개 법률 제, 개정안 주요내용, 관련기관 의견 및 금융위원회가 검토한 의견 235 20.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 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239 - 산은 민영화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측에 대한 금융위의 견해, 찬성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반대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239 21. 06년~08년 8월말 현재, 연구용역 내역(용역명, 기관, 금액, 용역기간, 계약방식) 241 22.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과도한 자산유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245 23. 현재 유동화증권 공시제도의 현황, 문제점, 대책 246 24.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과점체제로 인한 문제점, 현황, 대책 247 25. 공매도와 대차거래의 관계 248 26.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 249 27.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250 	
김동철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 BIS 협약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55 2. 최근 3년간 금융위 간부 퇴직자중 금융회사, 로펌 취업현황 256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김동철 의원	3.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57
	4.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92
	5.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및 조치 내역	315
	6.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	316
	7. '07년부터 '08.8월 현재까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321
김영선 의원	1. 금산분리 정책(은행소유규제의 합리화)의 논의 시 작부터 현재까지 년도·단계별 진행 현황(회의, 위 원회, 보고서, 정책산출)	325
	2. 2000년~2008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추이	464
	3. 채무유예서비스(DCDS) 관련 금융당국의 입장과 향후 정책방향	465
	4.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	466
	5.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467
	6.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486
	7.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실태	509
	8.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및 조치 내역	510
김용태 의원	1. 각 부처간 문서 수발신 대장(2006.1.1.- 2008. 8.31.)과 위원장 결재문서 목록(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	513
	2. 2006.1.1~2008.7.31 민원 접수현황과 내용, 처리결과 (관 련 부처로 이첩시 이첩일자, 이첩부처, 이첩내용 포함)	514
	3.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사업 관련 대부업체와의 협업 상황	515
	4.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사업 관련 대부업체와의 협업 상황	516
	5. 증권선물거래소 상품선물관련 자료(양돈상품 등록 관련 방침 및 계획서, 상품선물 거래량 자료, 상품 선물거래 활성화 대책 및 계획, 향후 상품선물 등 록계획)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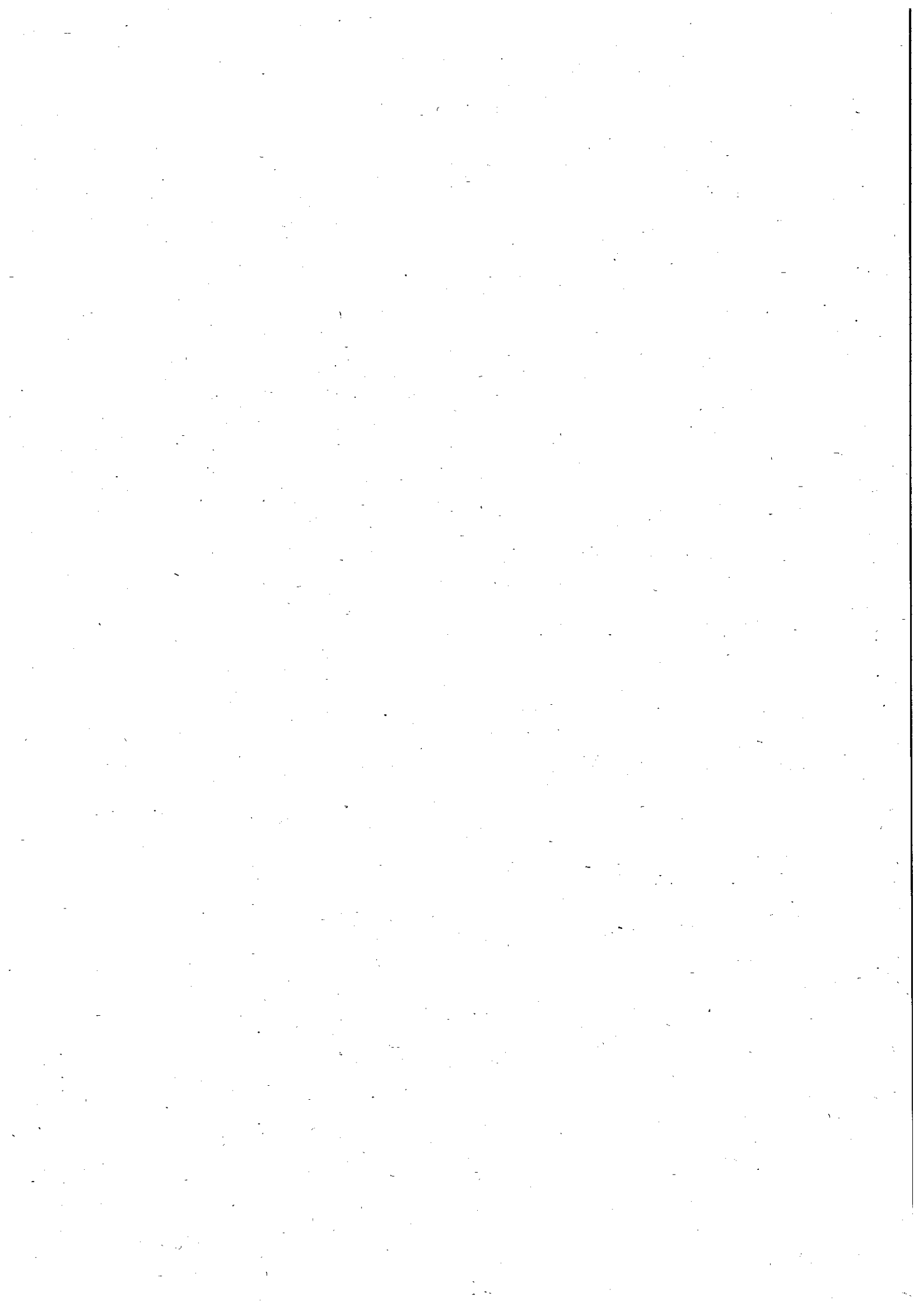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박상돈 의원	1. 최근 5년간 연도별 여성, 보훈대상자, 장애직원의 명수 및 비율 (고용의무 목표 미달시 부담금 납부현황)	525
	2.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자료	526
	3. 직급별 급여, 성과급 현황	527
	4. 08년 임직원의 해외출장/연수 경비내역	529
	5.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현황	531
	6.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532
	7. 기업은행, 우리은행 민영화 계획	532
	8.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 관련 계획	533
	9. 금융공기업(국책은행)의 IB은행으로의 계획	534
	10. 환율정책 관련 기획재정부와 수발신된 공문서 사본	538
	11. 서민금융정책 현황 및 계획	539
	12.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 용역자료, 지원액, 지원방안 및 절차 등 상세자료	541
	13-1.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	547
	13-2.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대책' 의 8월말 현재 사업 실적	548
	14. 골프회원권 보유 및 매도 현황 등	557
	15.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의 발탁 경위 및 배경	558
	16. 휴면계좌의 규모 및 대책	559
	17. 최근 3년간 금감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 (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 등)	562
	18. 최근 5년간 작성된 금산분리 문제에 관한 용역보 고서 목록 일체(작성기관, 제목, 요약내용 등 포함)	566
박선숙 의원	1. 금융위원회 현행 업무위탁 현황과 법적 근거	569
	2. 금융위원회 예정 업무 위탁 내용과 관련 법 조항 (입법예고 포함)	569
	3. 산업은행 리먼브러더스 인수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설명)한 날짜, 보고(설명)시 제출한 자료 일체, 금융위원회의 지시 혹은 건의 사항 일체	585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박선숙 의원	4.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①허용을 결정한 회의, ②법적근거, ③금융위의 후속조치 내용	586
	5.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한 은행권의 주장 및 그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	587
	6. '유가증권 등 위험자산 보유규제, 자회사 관련 규제 등 각종 사전적·직접적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폐지'의 진행 상황	588
	7.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범위를 해지목적 또는 정형화된 형식의 스왑거래까지 확대' 진행 상황	589
	8. 고수익채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는 기초 시장인 프라 구축방안의 진행사항	590
	9. 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	591
	10. '신용회복기금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업의 진척 내용 - 연체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재조정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환승	592
	11.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93
	12.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대책'의 8월말 현재 사업 실적	621
	13.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	622
	14.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 이외에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교육 등의 실적	623
박종희 의원	1. 5년간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사용액	627
	2. 5년간 맞춤형복지 규모와 사용액 및 사용내역	627
	3. 5년간 업무추진비 등 기타경비 규모와 사용액 및 사용내역	627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박종희 의원	4. 5년간 국내외 석·박사과정 및 어학연수 신청자수 및 자격취득자 수	629
	5. 5년간 임직원, 비정규직 수	630
	6. 3년간 업무관련 민원건수 및 주요내용과 사후조치	631
	7. 2003~2008 내부감사자료	632
	8. 최근 5년간(2003~2008.8) 금융위원회의 징계·퇴 직현황과 그 처분사유	633
	9. 5년간 간부급 국외출장 내역	635
	10. 5년간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 제도 시행 후 현재 까지 (2008.8)파견현황 - 성명, 파견근무지, 파견 전 직급 및 직무, 파견 후 직급 및 직무, 추진실적, 파견 전 연봉 및 업무추 진비, 파견 후 연봉 및 업무추진비	638
	11.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 ·용역자료, 지원액, 지원방안 및 절차 등 상세자료	640
	12.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	649
	13.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대책'의 8월말 현재 사업 실적	650
	14. 5년간 특별교부금 금액 및 지출금액, 지출사유, 지 급처	651
	15. 5년간 공관 및 합숙소 관리비 내역	651
	16. 5년간 임차사택 및 주택자금 대여 지원 현황	651
	17. 06년~08년 8월말 현재, 연구용역 내역(용역명, 기 관, 금액, 용역기간, 계약방식	652
	18. 5년간 감사원 감사자료 및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사 후조치	656
	19. 5년간 퇴직자 및 이직자의 재취업 현황	659
	20.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 관련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 일체	660
	21.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 관련	660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박종희 의원	우리금융 및 하나금융, 신한은행, 국민은행과의 컨 소시엄 구성 관련 자료	
	22. 주식시장 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책	661
	23.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방안 최 종보고서	663
	24.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 근거	664
	24-1. 최근5년간(2004~2008.8) 과징금 부과·수납 건 수 및 건별 부과사유(상세)	671
	25. 최근 5년간 과징금 관련	676
	25-1. 최근 5년간 징수한 과징금 중 불복건수 및 발생 사유별 내역	676
	25-2. 최근 5년간 과징금 관련 소송제기 건수 및 발생 사유별 내역	676
	25-3. 최근 5년간 과징금 관련 소송의 승소건수, 승소 율 및 패소 건수, 패소사유, 패소율	676
	26.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정화방안'의 전반적인 내용	677
	27.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	684
	28.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대책'의 8월말 현재 사업 실적	685
	29.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한 금융위원회 대응일자 및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최초 9월 금융위기설 정보 입수 시점 및 이후 단계별 조치	686
	30. FTSE지수 관련 질의	688
	31. 은행 및 개인에 대한 대차거래 및 대주거래 완화 관련 내역	692
	32. 매입당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과 관련 문서	693
신학용 의원	1. 최근 3년간 재벌가 자제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위의 진상파악내역, 해당 재벌자제들에 대한 고발 등 조치 여부	697
	2.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위원장 의 중장기적 비전 및 세부 실천 방안 로드맵	699

의 원 명	요 구 자 료 명	페이지
신학용 의원	3. KIKO 등 환해지 상품 피해 기업에 대한 부채 탕감, 용자지원 등 금융위의 세부 대책 및 자금 조달 방안	700
	4. 국내 금융과 외환 금융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역할 분담 및 공조 관련 위원장의 중장기적 비전 및 세부 실천방안 로드맵	722
	5. 산은의 리먼 인수 시도 관련, 진상조사 내역 및 산은 행장 거취와 관련한 금융위원장의 입장	723
	6. 08년 8월말 기준 금융위 산하 각종 기금들의 국내 외 주식, 간접투자상품, 파생상품 투자 평가손실	724
	7. 금융위원회 홍보비 사용 세부내역	725
	8. 펀드 판매보수 실태 및 외국 사례 참조한 금융위의 수수료 감면 대책	726



권택기의원

1-1.

금융위원회 의료산업선진화 워킹그룹 활동 내역

□ '06.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총리)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설정 방안”을 논의하고

○ 실손보상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표준화 추진을 결정

* 가입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내용('06.10.24) >

(1) 개인의료보험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중심”으로 보장

- 신규 실손형 상품과 갱신 상품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되, 일정 유예기간(부처협의)후 시행

(2) 실손보상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표준화 추진

- 표준화 방안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

(3) 공·사 보험간 기초통계정보 공유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민영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위탁 등

- 위탁 근거를 보험업법에 반영 또는 당사자간 MOU 체결 등

□ 상품표준화(2) 및 진료비 심사 위탁(4)은 향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환자 대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계약형)로 전환할 전제로 추진

○ 그러나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계약체결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추진이 지연됨

* '07.2월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나,금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미반영됨

□ 개인의료보험의 보장제한과 관련하여 당초 위원회안에서는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전면금지(1)를 권고하였으나

○ 정부는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허용하되 실손전액 보장은
제한하는 것으로 논의주제를 변경*하여 현재 논의 중

* 공보험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보장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민간 보험상품과 크게 상충되어 민간 개인의료
보험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게 되고, 제한의 명확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 제3의기관(KDI)에 용역의뢰한 바 중간결과에서 법정본인부
담금 전면금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변경

□ 공·사 보험간 기초통계정보 공유는 현재 보험개발원과 건강
보험공단간 구체적 통계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 중

* 정부는 구체적 통계정보 공유방안이 마련되면 개인정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예정

1-2.

연구과제 결과

붙임 : KDI 용역보고서 결과 : 별도제출

1-3.

실손형 보험 상품별 판매액 및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FY03	FY04	FY05	FY06	FY07
손해 보험	수입보험료	5,261	5,782	6,635	10,162	12,930
	지급보험금	5,015	5,374	6,253	8,578	10,295
생명 보험	수입보험료	1.5	136	193	231	249
	지급보험금	0.1	84	184	134	162
합계	수입보험료	5,263	5,918	6,828	10,393	13,179
	지급보험금	5,015	5,458	6,437	8,712	10,457

주1) 수입보험료 : 실손보상 의료비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 실적

2) 지급보험금 : 상해·질병에 따른 입원·통원 등 의료실비를 가입자에게 지급한 금액

3) 생보 실적은 단체보험임(개인보험은 '05.8월부터 허용되었으나, '08.5월까지 미판매)

<참조1>

생보사 실손의료비(개인보험) 특약 판매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판매개시일	'08.5월	6월 ^{주)}	7월 (미산출)	합 계
신계약 전수	삼성생명	'08.5.13	21,565	46,313	-	67,878
	교보생명	'08.5.20	8,131	20,033	-	28,164
	대한생명	'08.7.1	-	-	-	-
	합 계	-	29,696	66,346	-	96,042
수입 보험료	삼성생명	'08.5.13	2.7	9.9	-	12.6
	교보생명	'08.5.20	1.1	3.7	-	4.8
	대한생명	'08.7.1	-	-	-	-
	합 계	-	3.8	13.6	-	17.4

주) '08.7.4일 기준(6월 실적은 청약철회 미반영 등 정산전 수치임)

<참고 2>

생·손보 의료보험의 정액보장 내역 비교

☐ 입원일당

보험상품명		입원일당			
		암		상해	질병
손보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암(기타 피부암,상피내암 외의 암)	10만원	3만원	3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2만원		
	삼성화재 올라이프 의료보험	암(기타 피부암,상피내암 외의 암)	10만원	2만원	2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2만원		
	현대해상 하이스타 종합보험	암(기타 피부암,상피내암 외의 암)	10만원	2만원	2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2만원		
생보	삼성생명 입원특약 등	암, 4대 성인병	5만원	1만원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남성질환에 한함) 4대만성질환, 부인과질환(여성질환에 한함)	2만원		

- 주1) 손해보험의 경우 암 입원일당은 3일 초과분부터 지급(120일 한도), 상해나 질병입원
일당은 초일 또는 3일 초과분부터 지급(180일 한도) 가능한 특약 모두 존재
2) 생명보험의 경우 입원일당은 모두 3일 초과분부터 지급(120일 한도)

☐ 수술비

보험상품명		수술비	
		보장담보	보장금액
손보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5대장기이식 수술비(최초 1회한)	2천만원
		중대상해(뇌, 내장 손상) 수술비(최초 1회한)	1천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최초 1회한)	1천만원
	(삼성화재) 올라이프 의료보험	5대장기이식 수술비(최초 1회한)	2천만원
		뇌, 내장 손상 수술비(최초 1회한)	1천만원
	(현대해상) 하이스타 종합보험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5백만원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5백만원 한도
		5대장기이식 수술비(최초 1회한)	1천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최초 1회한)	2천만원
		골절 수술비	6십만원
		화상 수술비	1백만원

- 주1) 삼성생명 의료비보장특약의 경우 정액 수술금부가 없음
2) 생보는 대부분 수술분류표에 의거 일정금액 지급

1-4.

실손형 보험 확대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입장

- 현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위, 복지부)는 100% 실손상품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공·사 보험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협의중임
 - 정부는 개인의료보험이 공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료보험이 공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 100% 실손보장 제한여부와 관련하여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의뢰한 KDI의 용역결과에서는
 - 현행 개인의료보험상품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비가입자보다 더 이용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향후 개인의료보험에 따른 과도한 의료제공 및 이용의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 책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는 KDI의 용역결과를 감안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형 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임

2. 2005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규제
검토대상 1,453건의 내용 및 검토 결과

3. 2005년 금융규제 해소 검토대상 269건의 내용
및 규제 해제 추진결과

□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2005년 금융규제 해소 검토대상 보도자료

별첨 2 : 2005년 금융규제 해소 검토대상 269건의 내용
및 규제 해제 추진 결과

별첨 3 : 2005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규제
검토대상 1,453건의 내용 및 검토결과(별도
제출)



보도자료



·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금융감독원 법무실		
· 담 당 자	송현도 사무관(☎ 3771-5031), 박종현 팀장(☎ 3771-5911)		
· 배 포 일	2005. 8.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8월 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 마련

주요 내용

- ☐ 금감위·금감원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였다.
- ☐ 금번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는 모든 유형의 금융규제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었다.
- ① 우선, 각종 건의과제, 등록규제, 행정지도, 유사행정규제 등 금융 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7대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 7대 검토과제

- 1) 국민 건의과제 : 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On-Off line)를 통한 일반 금융이용자들의 건의과제
- 2) 기업 건의과제 :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 건의과제
- 3) 외국인 건의과제 : 104개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과제
- 4) 협회 건의과제 :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관련 협회 등의 건의과제
- 5) 등록규제 : 국무조정실(규개위)에 등록된 금감위(원) 소관 규제
- 6) 행정지도 : 법적 근거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시장참여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 7) 유사행정규제 : 자산관리공사, 각종 금융협회 등 금감위 소관 준공공기관(16개)의 정관, 지침, 요령 등 각종 규정에 포함된 규제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② 또한,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T/F(위원장:금감위 상임위원)』를 구성하고 산하에 실무검토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여 규제건의 → 실무검토 → 최종 정비방안 확정 등 규제개혁 전 과정에 금융회사, 민간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 규제개혁작업단에는 21명의 금융회사 및 협회 임직원이 참여하여 실무검토를 담당하였으며, 10명의 대학교수, 금융관련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가 민관합동 T/F 위원으로서 정비방안 최종 확정 과정에 참여

- 지난 4월부터 금융이용자, 기업단체, 금융협회, 외국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건의과제를 접수하고, 등록규제, 행정지도,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발굴하여 1,453건(건의과제 316건)을 검토과제로 선정하였다.

- 5~6월동안 규제개혁작업단의 6개 실무작업반(공통,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고, 민관합동 T/F의 논의를 거쳐 최종 정비방안을 확정하였다.
- 폐지·개선·중장기 검토를 포함한 개선과제는 건의과제의 경우 전체 316건중 157건으로 약 50%의 수용률을 나타냈고, 전체적으로는 1,453건중 269건으로 약 19%를 개선기로 하였다.

※ 개선방향 및 필요조치에 따른 개선과제 분류(중복과제 제외)

개선과제	개선방향			필요조치			
	폐지	개선	중장기검토	기조치	법령개정 ¹⁾	금감위규정 ²⁾	기타 ³⁾
269	51	157	61	41	80	65	83

1) 재정부고시 포함 2) 시행세칙 포함 3) 협회 등 유관기관 규정 포함

-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규제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금융인프라의 선진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기업, 협회, 외국인 건의과제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금융환경 조성,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금융회사 등이 규제개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였고 그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지도, 유사행정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도 기대된다.

□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제도 등을 개선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한도 등 영업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은행부수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유가증권 차입 등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기업하기 좋은 금융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시공시항목 정비 등 공시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기주식처분제도를 개선하며,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공개요건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지원을 위하여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에게 장외거래 시장을 지속 개방하며, 기업공개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수납관련 유의사항,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업무 위탁관련 유의사항 등과 같은 행정지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법적 근거없는 유관기관 상임임원 선임의 금감위 승인을 폐지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제재금 납부기한 및 민원서류 보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사행정규제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금감위·금감원은 금감위 규정 개정, 행정지도 폐지 등 필요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법령 개정사항은 재정부 등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관련 법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 기관 규정 개정에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1>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추진체계

<참고2>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주요 개선과제

<참고1>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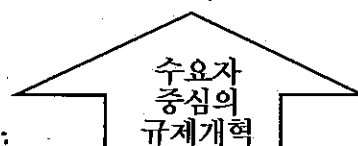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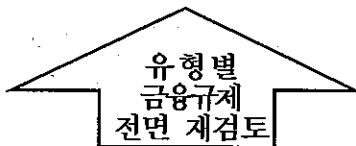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T/F

- 위원장 : 금감위 상임위원, 간사 : 기획행정실장
- 구성
 - 자체규제심사위원(외부위원, 4인)
 - 감독정책 1국장, 2국장(규제자)
 - 권역별 외부위원(민간전문가, 6인)
- 역할
 - 최종 정비방안 확정



규제개혁 작업단

- 단장 : 기획행정실장, 간사 : 금감위 기획과장, 금감원 법무실장
- 구성 : 6개 실무작업반
 - 공통,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 공동반장 : 금감위 과장, 금감원 국장
 - 반원 : 금감위 사무관, 금감원 팀장, 피규제자(3명이상)
- 역할
 - 각종 규제개혁 검토과제에 대한 실무검토



7대 검토과제

국민
건의과제

기업
건의과제

외국인
건의과제

협회
건의과제

등록
규제

행정
지도

유사행정
규제

<참고2>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주요 개선과제

1. 공통분야

【 금감위규정 개정 과제 】

1. 금융회사 업무위탁가능범위의 명확화 및 확대

- ☐ 업무위탁 가능여부의 판단기준인 "본질적 요소"의 정의 명확화와 동일계열내 후선업무 공유 허용 등을 포함한 업무위탁범위 확대

⇒ (개선) 현재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업무위탁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후선업무 공유허용 문제도 동 개선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 ☐ 금융회사의업무위탁에관한규정 개정('05.3/4분기)

2. 외국금융기관도 유사한 업무위탁의 경우 보고생략

- ☐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과 차별 적용

⇒ (개선) 금융기관의업무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 개정으로 국·내외 차별 없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개선

3.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대한 보고 절차 변경

□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신규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내용을 금융감독원 사후 보고에서 사전보고로 전환

⇒ (개선) 업무위탁규제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가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 위수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보고제로 전환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05.3/4분기)

4.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간 자산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 금융지주회사내 신기술금융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경우)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여타 자회사의 부실채권을 양도받을 수 없어 비효율 초래

⇒ (개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업무를 겸업하는 신기술금융회사도 다른 자회사 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양도받아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06년 1/4분기)

5.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완화

☐ 자회사간 신용공여 제한 규정 중, 동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장 매입 등에 대해서도 담보 확보가 요구됨

⇒ (중장기검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에서는 일시적인 여신 또는 단순중개, 당좌대출 등을 자회사간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장 매입과 관련된 신용공여도 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

6. 금융지주회사 경영지도비율(외화유동성비율) 규제 적용 완화

☐ 금융지주회사는 원화유동성비율 100%, 외화유동성비율은 8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잔존만기 7일 이내의 외화자산이 외화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은 0% 이상,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외화 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비율은 10% 이내 유지하여야 함

⇒ (개선)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외화유동성비율의 준수의무가 있으나, 외화부채가 금융지주회사 총자산의 일정 비율(예:1%)에 미달할 경우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적용에서 제외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05.4/4분기)

7.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 변경으로 유용성 확보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일부항목의 유용성이 낮음

⇒ (개선) 회사별 평가등급의 자본적정성 항목중 변별력이 적은
실질자기자본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신규항목 도입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05.4/4분기)

【 법령 개정 과제 】

8.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인가제도 개선

□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회사의 자산규모나 지배하는 금융
회사 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 대해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강제

⇒ (개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하여 금융업종별 및 회사규모별로 인가관련 규제를 차별
화하여 효율성 제고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재경부 기건의)

9.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허용

- ☐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하여 동북아금융허브 추진 등에 장애

⇒ (개선)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 하되,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외국 금융지주회사로 한정하고(금감위 승인 필요),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100% 출자를 의무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

-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재정부 기건의)

10.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범위 확대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 ☐ 손자회사의 범위는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 있는 금융 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제한 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산하 은행 등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비금융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소지

⇒ (개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비금융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것은 지배목적이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통한 채권회수 목적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시 채권금융기관간 공동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어려우므로 예외인정 필요

-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재정부 기건의)

11.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자회사 승격·편입을 신고 대상으로 명확화

- ☐ 금융지주회사의 기존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그룹내의 지분 이동에 따라 자회사로 승격·편입된 경우, 승인 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 불명확

⇒ (개선) 기존 손자회사가 지주회사그룹내의 지분 이동에 따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손자회사와 자회사 편입시 승인 심사요건이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새로이 승인 심사를 할 필요성이 미약하므로 신고대상으로 운영

-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재경부 기건의)

12. 금융지주회사가 일정 투자한도 내에서의 유휴 부동산 임대업 허용

- ☐ 회사분할 방식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기존 회사로부터 승계 받은 유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무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자산운용에 제약

⇒ (개선) 순수지주회사만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유자증권 투자한도) 내에서 업무용부동산(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등이 1/2이상 사용할 경우)소유 및 임대를 허용

-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재경부 기건의)

13. 금융지주회사 내의 자산운용 자회사 등이 당해 지주회사 주식보유 허용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산운용사 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불명확

⇒ (개선) 금융지주회사내의 자산운용사의 경우도 여타 자산운용사와 마찬가지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계열회사 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등의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취득도 허용

-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재경부 기건의)

【 기타 과제 】

14. 각종 금융관련 법규 및 규정의 영문화

- ☐ 금융업과 관련된 각종 법규의 영문화 작업이 미흡

⇒ (개선) 영문화된 법령은 법제연구원 등에서 구할 수 있고, 금융관련 규정은 이미 대부분 영역되어 있음. 다만, 금융관련 규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빠른 시일내에 수정·보완 추진

15. 기 보고된 업무위탁내용 공시 등 보고절차 개선

- 이미 보고된 위탁업무가 동일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예시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

⇒ (개선) '04.11.18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실」에 '업무 위수탁보고'란을 설정하였는바, 본 란에서 보고대상·방법, 세부 보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치

16. RM(Relationship management)제도 관련 규정 개정

- RM의 자료요구·문의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협조에 혼선이 있는 경우 발생

⇒ (개선) RM이 해야할 사항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감독원 조직관리세칙에 반영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자체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하게 운용

- RM업무 가이드라인(자체기준) 작성·운용('05.6.20 기초치)

17. 금융기관 이사회에 검사서 열람의무 부과 폐지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한 검사서를 당해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열람하도록 함

⇒ (폐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부칙 (2001. 11. 13) 제2조에 의하여 2004.12.31로 규제 유효기간이 만료(2005.1 부터 효력이 없음)

18. 공인전자서명 활성화 관련 유의 사항 홍보 지도 폐지

- 공인인증서 적용시점, 공인인증서의 폐기 및 재발급 절차, 사설인증서 전환 권고,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권고, 이용자 유의사항 홍보 유도

⇒ (폐지) '05. 5월 현재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증권거래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적용이 완료되었고, 공인인증서 폐기, 재발급 절차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지도사항 폐지

19. IT투자 관련 유의사항 통보 지도 폐지

- IT부문 투자시 비용편익분석 실시 지도, 내부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지도

⇒ (폐지) IT부문의 통합·전환 및 재개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검업지6761-00015,'03.7.1)과 중복되므로 폐지

20. 비상시 금융기관 전산망 안전 강화대책 통보 지도 폐지

- 파업, 화재, 해킹 등 비상사태 발생시 금융전산망 마비 방지 대책, 신속한 원상복구 등을 위한 대책

⇒ (폐지) 금융전산부문 위기대응메뉴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지. 단, 동 위기대응메뉴얼 확정시('05.10월)까지는 존속 필요

【 유사 행정규제 】

(자산관리공사-1) 지정법무사 선정시 자격요건 폐지

- ☐ 지정법무사 선정시 자격요건에 법무사 경력 5년 이상인자, 공사업무관련 신청 수행경험자로 규정

⇒ (폐지) 공사 법무사대행업무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폐지

- ☐ 법무사운용요강 개정

(자산관리공사-2) 관리직 사원 채용 제한기준 개선

- ☐ 관리직 사원 채용기준을 중견사원은 만29세미만인자, 초급사원은 만26세 미만인자로 제한

⇒ (개선) 명시적인 자격기준(학력 및 연령)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개선

- ☐ 인사규정 개정

(자산관리공사-3) 특수관리직 사원 채용 제한기준 개선

- ☐ 특수관리직 사원 채용기준을 만40세 미만인자로 제한함.

⇒ (개선) 일반업무를 지원하는 특수관리직(수위, 운전, 교환, 전기 등)채용시 현행 연령에 의한 제한기준을 자격증 등 전문기술의 보유여부에 의한 제한으로 개선

- ☐ 인사규정 개정

(자산관리공사-4) 직원채용 제한기준 개선

- ☐ 병역기피 사실이 있거나 공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는 채용을 제한

⇒ (폐지) 채용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채용제한 기준에서 제외

- ☐ 인사규정 개정

(자산관리공사-5) 신원조사 대상자 범위 개선

- ☐ 공사 시설물의 신·증축 또는 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상시 출입하는 설계용역 및 공사 참여인원을 신원조사 대상자로 규정

⇒ (개선) 신원조사 대상자중 공사 시설물 전부에서 보안시설물에 한정

- ☐ 일반보안업무실무지침 개정

II. 은행분야

【 금감위규정 개정 과제 】

1. 외화표시 자산, 부채 평가시 기준환율 대신 종가 적용

- ☐ 외화표시 자산·부채 평가시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있어 외화 자산·부채의 실질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종가 적용으로 변경

⇒ (중장기검토) 세무상 환산기준 등 타분야와의 정합성을 감안하여 실질가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 검토 가능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회계처리기준

2. 신용파생상품거래 감독방안 마련

- ☐ 신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및 신용공여액 산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 건별로 감독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개선

⇒ (개선) 신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및 신용공여액 산출기준을 마련(05.3/4분기)

-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개정

3. BIS 위험가중치 산정기준 개선

- 싱가포르의 최상위 신용등급(AAA)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OECD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제1군 국가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개선

⇒ (중장기검토) 현행 BIS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으로 싱가포르에 대해서만 예외적용하기는 곤란하나,

향후 신BIS협약 도입시(07년말 예정) 국가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차등화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문제해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4. 통화관련 파생상품 회계처리시 평가손익을 외화B/S에 계상

-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외화B/S에 계상되지 않아 외화B/S가 실제 현금흐름이나 외환포지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

⇒ (중장기검토) 외화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기업 회계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실제 외환포지션 및 통화별 현금흐름이 반영될 수 있는 회계처리방안을 검토할 예정

- 기업회계기준(해석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1 외국환계정회계처리기준

5. 은행자회사 업종제한 및 정보공유제한 완화

- 자회사를 이용한 서비스영역 확대 및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업종을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회사 등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 (중장기검토) 자회사에 대한 전면적 연결감독제도 도입 및 금융지주회사 수준의 fire-wall 강화문제와 병행하여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제52조

6. 비업무용 자산 처분기한 완화

- 부동산시장 동향을 감안하여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기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 (중장기검토) 비업무용 자산의 과다보유는 유동성리스크의 원인이 되므로 처분기한 규제가 불가피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공매 유찰 등의 사유 발생시 1년단위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여부를 검토

-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7.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폐지

-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설정

⇒ (기폐지) 신용정보 수수료는 신용정보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개정(2005.4.28)

8.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 통지의무 폐지

- ☐ 신용불량자 등록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통지의무를 부과

⇒ (기폐지)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2조 개정(2005.4.28)

9. 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내역 보고 및 공표의무 완화

- ☐ 사외이사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과 당해 은행간 거래내역을 금감원 및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매반기말기준으로 공표

⇒ (개선) 사외이사 추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제도는 유지하되, 부동산거래 내역은 보고등의 대상에서 제외('05.4/4)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 개정

【 법령 개정 과제 】

10. 신탁경영은행의 공탁의무 폐지

- ☐ 신탁경영은행의 경우 자본금의 0.05% 또는 순이익의 1%를 매년 공탁하도록 하고 있어 은행수지에 부담을 주므로 신탁경영은행의 공탁의무를 폐지(공탁금은 무수익자산임)

⇒ (폐지) 공탁액 사용사례가 없고, 은행의 공신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탁의무 폐지

- ☐ 신탁업법 제16조 개정

11.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개선

- ☐ 우리나라 국채가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계산시 제외되므로 타국 정부발행 국채에 대하여도 동 투자한도 계산시 제외

- 은행들의 자기자본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크게 향상 되었으므로 유가증권 투자한도규제를 폐지

⇒ (중장기검토) 유가증권 투자한도규제는 은행자금의 장기고정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검토 예정

* (예시) 선진국 국채는 유가증권투자한도에서 제외

- ☐ 은행법 제38조

12. 외은지점 이전시 신고의무 완화

- ☐ 지점이전에 대하여 국내은행은 자유화되어 있는 반면 외은 지점은 사전신고가 의무화

⇒ (개선) 동일 지역내 이전인 경우(특별시·광역시·도내 이전) 종전의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 사항으로 완화

- ☐ 은행법 제58조 개정

13. 외은지점에 대해 본점자본금(Global Equity)주의 채택

- ☐ 국제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은행이나 높은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외은지점에 대하여 본점자본금을 인정

⇒ (중장기검토) 본점자본금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경제여건, 부작용 완화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 은행법시행령 제26조

14. 은행부수업무범위 확대(부동산임대)

- ☐ 업무자동화 등에 따라 은행보유 건물의 잉여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 가능면적 확대(50%→90%) 및 은행소유 건물 재건축시 분양사업을 허용

⇒ (중장기검토) 부동산임대 가능면적 확대 및 분양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관련성이 적어 허용키 어려우나, 계열사 입주 면적을 임대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

- ☐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고시)

15. 은행부수업무 범위 확대(유가증권 차입)

- ☐ 유가증권 차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에 따르는 헷지거래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은행부수업무로 유가증권 차입을 허용

⇒ (개선) 파생금융거래에 따르는 헷지수단의 확대 및 유가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차입을 부수업무로 허용하되, 유가증권 차입허용에 따르는 리스크증대 및 시장교란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후 허용

- ☐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고시) 개정

16. 은행부수업무 범위 확대(일반상품 파생거래)

- ☐ 은행이 금속, 원유, 곡물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를 취급할 수 없어 국내기업 등의 헷지목적 거래를 중개할 수 없고,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 어려우므로 일반상품 파생거래를 은행부수업무로 허용

⇒ (중장기검토) 은행이 일반상품 파생거래에 따르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일정수준 확보되는 단계에서 허용방안 검토 가능

- ☐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고시)

【 기타 과제 】

1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경영공시 부담 완화

- ☐ 주식매수 선택권의 경우 부여시점 이후 전체 부여 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크므로, 공시대상 기간을 최근 3년간 부여현황으로 단축

⇒ (개선) 주주 및 예금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은행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행사된 주식매수 선택권은 전체 현황을 공시하되,

행사된 선택권은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공시(금융회사 공시 제도 개선 T/F 일정에 맞춰 추진)

-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개정

18. 현금서비스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폐지

- ☐ 예상손실률 개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도입될 경우 현금 서비스 미사용한도에 대한 충당금 적립은 이중적 충당금 설정 이므로 이를 폐지

⇒ (폐지) 2006년말 예상손실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독당국이 설정하는 최저 적립률제도 폐지

- ☐ 신용카드 미사용한도 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관련 행정 지도 공문(은감경6121-00214) 폐지

19.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폐지(06년말)

- ☐ 가계대출금 및 신용카드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등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 (폐지) 2006년말 예상손실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독당국이 설정하는 최저적립률 제도 폐지

- ☐ 행정지도(은감경6121-10028) 폐지

20. 은행의 부실자산 매각관련 ABS발행기준 폐지(07년말)

- ☐ 부실자산(NPL) 매각관련 ABS발행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NPL ABS 발행시 손실인식 기준 등을 지도

⇒ (폐지) 2007년말 도입 예정인 신BIS협약에 따라 NPL ABS 관련 기준이 적용될 경우 폐지

- ☐ 행정지도(은감경6121-00189) 폐지

21. 예대상계 실시와 관련한 협조요청

- ☐ 예대상계에 따른 일선 영업점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예대상계 조치를 지도

⇒ (기폐지) '04.11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예대상계기간중('04.12.1~'05.2.7)에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항

- ☐ 행정지도(신용기6560-00383) 폐지('05.2.7)

【 유사 행정규제 】

(신용정보협회-1) 신용정보협회 회비의 분납 허용

□ 신용정보협회 회비는 매년 3월31일까지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에 의무화

⇒ (개선) 회비납부 방법을 현행 일시납에서 분납도 가능토록
허용하여 회원사의 부담을 완화

□ 신용정보협회 회비징수규정 제7조 개정

III. 비은행분야

【 여신전문금융회사 】

1. 비상장 및 코스닥 미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의 감독원앞 사전보고 면제

- ☐ 상장사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사전
보고의무가 면제

⇒ (폐지) 비상장 및 비등록 여전사의 수시공시사항을 협회 홈페이지
지에 공시토록 되어있으므로 감독원에 대한 사전보고를 폐지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5년 3/4분기)

2. 감독규정의 보고사항 개선

- ☐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의 보고사항(임원변동, 해외점포
신설이전) 과다로 과중한 업무 유발

⇒ (개선) 보고사항 간소화 추진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개정('05년 3/4분기)

3.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범위 조정

- ☐ 여전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정의를 Positive방식으로 열거하여 실질이 동일한 업무(예, 리스와 렌탈)를 영위할 수 없음

⇒ (개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여전사도 렌탈업무, 보험 대리점, 통신판매업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명시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기개정('05년 2/4분기)

4.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제외

- ☐ 운용리스자산의 경우 리스사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바, 일반적인 여타 채권과 같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

⇒ (개선) 운용리스자산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5년 3/4분기)

5.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비율 축소

- ☐ 여전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리스시장 침체 등으로 과도한 제약

⇒ (폐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비율 폐지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관련조항 기삭제('05년 2/4분기)

6. 매출채권 양도금지 대상의 명확화

- ☐ 규제대상은 가맹점이나 법령상 불명확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필요한 카드사까지도 규제대상으로 오해될 소지

⇒ (개선) 규제대상을 가맹점으로 여전법에 명시

-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7. 여전사의 자금차입 대상 금융기관 확대

- ☐ 여전사는 금감위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은 가능하나, 금감위 등록 여전사로부터 자금차입은 불가능

⇒ (개선) 금감위 등록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자금차입이 가능토록 법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8. 할부금융액 초과대출 규제완화

- ☐ 여전법상 할부금융대출 범위(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에 국한)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은 대상에서 제외

⇒ (개선) 할부금융대출 범위를 구매와 관련한 제반비용으로 확대

-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9.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관련 회계처리 통보

☐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관련 총당금 계상시 경험률 적용기준 통보

⇒ (폐지) 업무보고서에 반영 예정

☐ 업무보고서 개정('05년 4/4분기)

【 상호저축은행 】

10. 유가증권 종목별 투자한도 폐지

☐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면서
종목별·사안별로 투자한도를 별도로 규정

※ 주식 : 자기자본의 40%이내, 비상장 주식 : 자기자본의 5%이내 등

⇒ (개선) 유가증권의 종목별 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05년 3/4분기)

11. 대출한도 확대 등 영업규제 완화

☐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함에도 각종 대출
한도로 인하여 원활한 대출이 제약

※ 동일인대출한도 :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별도의 금액한도 설정
(법인 : 80억원, 개인 : 3억원)

⇒ (개선) 대출한도 등 영업상 규제를 완화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

12. 점포설치 기준 완화

- ☐ 지점 등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건 충족 및 인가를 받도록 하고, 증자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영업활성화 제약

⇒ (개선) 출장소 설치 요건 등을 완화

-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

13. 상호저축은행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금지

- ☐ 저축은행의 2% 이상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여 자산운용상 과도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중장기 검토) 상장 저축은행 등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주요출자자의 지분율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신용협동조합 】

14. 신탁중앙회 자금운용 제한

- ☐ 신탁중앙회의 신용예탁금의 경우 수익증권(주식편입 30% 이하)의 매입한도를 신용예탁금 총자산의 20% 이내로 설정

⇒ (기개선) 신용예탁금의 경우 수익증권(주식편입 30% 이하)의 매입한도를 총자산의 30%까지 확대

- ☐ 감독규정 기개정('05년 2/4분기)

15.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요청

- ☐ 농·수·산림조합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등 절차 개선 촉구

⇒ (폐지) 업무방법서에 반영 예정

- ☐ 폐지 예정('05년 4/4분기)

16. 조합 이사장 및 감사역할 제고 방안 등 수립·추진

- ☐ 신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각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합 이사회 및 감사 역할 제고방안 마련 촉구

⇒ (폐지) 임원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체 예정

- ☐ 폐지 예정('05년 4/4분기)

17. 조합 여유자금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도 요청

- ☐ 신탁의 매입 가능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조정토록 지도 요청(예, 평가등급 BBB-이상 → A-)

⇒ (폐지) 등급별 보유한도를 시행령에 규정

- ☐ 신탁법시행령 개정

【 유사 행정규제 】

(여신금융협회-1) CA(Certification Authority, 국내전용 IC Chip 카드 인증시스템) 운영규약

□ 규약 위반시 경고, 회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

⇒ (개선) 규약 위반시 경고 또는 회원 자격정지 조치만으로 효과 달성이 가능하므로 제명은 삭제

□ CA운영규약 개정('06년 상반기)

(상호저축은행중앙회-1) 회원의 징계

□ 회원의 단결을 저해하거나 중앙회의 사업을 해할 경우 징계 (일정기간 회원 권리행사 정지, 공개경고, 경고 등)

⇒ (개선) 구체적인 징계 요건을 정비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관 개정('06년 상반기)

(신용협동조합중앙회-1) 경쟁 입찰 낙찰자의 결정방법 규제

□ 경쟁입찰의 낙찰자를 예정가격의 70/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획일적으로 결정

⇒ (개선) 낙찰자 결정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예정가격, 계약상대방의 이행능력, 계약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하도록 변경

□ 중요계약규정 개정('06년 상반기)

IV. 증권분야

【 금감위규정 개정 과제 】

1. 자사주신탁계약의 만기전 해지의 명확화

- ☐ 현재 관행상 자사주 신탁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법령상 해지제한기간(6월)이 경과하더라도 계약기간(1년) 이내에 해지하면 공시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어 불합리

⇒ (개선) 계약해지제한기간(6개월) 경과후 계약해지계획을 사전 공시하고, 일정기간(예:1개월) 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이익도 보호되도록 개선

- ☐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및 신탁계약체결·해지신고서 서식개정 ('05. 4/4분기)

2. 자사주처분결과보고서 제출 면제

- ☐ 스톡옵션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필요

⇒ (개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사주의 처분내용이 정기 보고서에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신고서는 현행과 같이 존치시키되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05. 4/4분기)

3.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가액 산정기준 개선

-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방식이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산정 방식보다 엄격하여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의 완화가 필요

⇒ (개선)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등의 전환가액을
①과거 1개월평균, 1주일평균,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②최근일 종가 및 ③청약일 3거래일전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05. 4/4분기)

4. 수시공시항목 축소

- ☐ 수시공시항목을 축소하여 중요한 투자정보 위주로 조정할 필요

⇒ (개선) 상장유지비용 경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적은 공시사항을
재정비하고 기업특성 및 기업부담능력 등에 따른 공시의무
차별화 등을 추진

- ☐ 유가증권의발행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증권·선물거래소공시
규정 개정('05. 4/4분기)

5. 공시의무 규정의 일원화

- ☐ 금감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에 분산되어 있는 공시와 관련된
규정과 전자공시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

⇒ (개선) 공적규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시공시 사항만 금감위
규정에 정하고 여타 사항은 거래소 규정에서 정하는 방
향으로 수시공시 관련 규정체계 정비 추진

- ☐ 유가증권의발행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증권·선물거래소공시
규정 개정('05. 4/4분기)

6.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기준의 개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공시의 경우 금액기준(10억원) 대신 자기자본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하여 기업의 규모별로 공시금액을 차별화할 필요

⇒ (개선) 금액 기준(10억원)은 비율규제에 따른 공시회피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폐지하기는 곤란하나, 상장유지 비용 경감 차원에서 기업특성 및 기업부담능력 등에 따른 공시의무 차별화 등을 검토

□ 유가증권의발행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증권·선물거래소공시 규정 개정('05. 4/4분기)

7. 상장법인 등의 정기보고서 내용의 합리적 개선(1)

□ 기업의 기밀에 해당될 여지가 크거나 공시가치가 낮은 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하거나 내용을 축소할 필요

⇒ (중장기) 연구개발실적, 생산설비관련사항, 원재료 구매가격의 표시 등을 포함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중 투자자보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유가증권의발행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8. 상장법인 등의 정기보고서 내용의 합리적 개선(2)

- ☐ 정기보고서 중 '의결권 현황'란을 개선하여 일부 안전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에 기재토록 하여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수가 정확히 표시되도록 할 필요

⇒ (개선) 일부 안전에 대하여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정기보고서 기재상의 '주의'란에 포함

- ☐ 유가증권의발행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05. 4/4분기)

9.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시기 조정등의 개선

- ☐ 주식을 거액 발행하는 경우 발행분담금의 일정 한도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

⇒ (중장기) 발행분담금 상한선은 수익자부담 원칙 등을 감안 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7조 증권거래법 개정협의

10. 일괄매매에 이론적 평균단가 적용

- ☐ 외국인투자자집단이 같은 날 매매한 동일 주식에 대해서는 단일 평균가격으로 각 ID별 펀드에 주식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선) 투자운용자와 당해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매매 체결된 주식을 배분할 수 있도록 기 개선 ('05.4.27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11. 자기주식 매매 규제 완화

-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도 자기주식 대량매도를 허용하여 자사주 매매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

⇒ (개선)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을 허용하되 거래절차 등은 장 종료 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를 준용

-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05.4/4분기)

12. 신탁회사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용에 대한 개선

- ☐ 상장법인은 자기자본비율의 30%에 달할때까지 당기순이익의 10%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신탁회사는 신탁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거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므로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될 필요

* 현재 은행·증권·보험회사는 적립의무 면제

⇒ (개선) 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 완화방안 검토

-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05.4/4분기)

13.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확대

☐ RP매매대상 유가증권을 현금성 있는 증권 및 증서(CD, CP 등)로 확대하여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거래 기회를 확대

⇒ (개선) 투자자보호 가능성, 시장의 투명성 및 담보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CP등으로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간 RP거래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14. 선물회사 자기자본규제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위험액 산정 기준 완화

☐ 선물회사의 기초위험액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인 평가예탁 자산의 2/100 해당 금액이 위탁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선물 회사에게는 너무 과중하므로 완화 필요

⇒ (중장기) 레버리지효과가 큰 선물·옵션거래의 고위험성에 비추어 평가예탁자산의 2/100로 기초위험액을 설정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하기 어려우나, 향후 동 기준이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 선물업감독규정 개정

15. 선물업자의 고객예탁금 잔액등의 보고 일원화

☐ 고객예탁금 잔액과 관련한 보고시 회원사는 거래소에, 비 회원사는 협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보고체계가 이원화

⇒ (개선)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보고주체를 협회로 일원화

☐ 선물업감독규정 개정('05. 4/4분기)

16. 선물회사의 통장 또는 카드교부의무 폐지

- ☐ 선물회사는 통장 또는 카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인터넷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임

⇒ (개선) 통장발급을 원하지 않는 위탁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 선물업감독규정 개정('05. 4/4분기)

17. 상장법인 증자시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개선

- ☐ 발행가액 산정대상기간에 자본감소 등으로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산정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

⇒ (개선)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산정기준(할인을 규제, 기준주가 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05. 4/4분기)

-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18. 자산양수도 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 ☐ 현재 양수도 사업부문의 자산 등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산양수도 신고대상이더라도 외부평가가 불가능하거나 가치산정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면제하고 금감위가 정하도록 한 신고서제출 대상 범위를 “유형 자산”으로 한정 할 필요

⇒ (중장기) 신고대상, 외부평가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마련

- ☐ 유가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개정

【 법령 개정 과제 】

19. 자기주식 처분제도의 개선

- ☐ 과거 이익소각 절의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을 허용하고,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현물 상환을 허용하여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지급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개선) 신규 취득분의 이익소각과 기존 보유분의 이익소각은 효과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 검토

- ☐ 증권거래법 개정

20. 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의 합리적 개선

- ☐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경우와 같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의 시가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장기) 할인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가치가 희석화되어 행사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2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결산대차대조표 신문공고제도 폐지

-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결산대차대조표 신문공고제도를 폐지

⇒ (중장기) IT화의 진전,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

- ☐ 상법 개정

22. 유가증권 개념의 포괄화 및 유가증권범위의 확대

- ☐ 유가증권 개념규정을 현재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할 필요

⇒ (중장기) 은행, 증권, 보험회사간 업무영역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 증권거래법 개정

23. 고객예탁금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

- ☐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을 부보대상예금에서 제외하고 특별기여금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권역별로 차등화할 필요

⇒ (중장기)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제 운영으로 고객재산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은행보다 불리한 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으로의 조정을 검토

- ☐ 예금자보호법 개정

24. 외국인의 장외거래시장(OTC)을 통한 거래 허용

- ☐ 외국인의 장외거래를 허용할 필요

⇒ (중장기) 국내자본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외거래시장을 개방

* 최근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사유 확대('05.4.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증권거래소의 시간중 대량매매거래 허용('05.3) 등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

-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25. 조사분석자료 대상 주식의 24시간 매매금지 규정 완화

☐ 현재는 정보흐름이 빠르므로 조사분석자료 대상 주식의 24시간 매매제한을 완화할 필요

⇒ (개선) 증권회사가 조사분석자료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동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26. 신용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업무영역의 확대

☐ 신용파생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할 필요

⇒ (개선) 증권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5.3.29)으로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을 다양화(금융상품 → 금융상품, 신용위험, 일반상품)

27. 장외파생상품 겸영 인가요건 완화

☐ 장외파생상품의 인가요건을 완화할 필요

⇒ (개선) 증권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5.3.29)으로 장외 파생상품 겸영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요건 완화(3천억원 → 1천억원, 2년 후 완전폐지)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제한의 완화

☐ CDS(Credit Default Swap) 계약에 의한 신용위험 전가를 자산유동화의 대상에 포함시켜 합성 CDO 상품과 신용파생상품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중장기) 향후 CDS계약을 유동화자산의 범위에 포함하거나 양도 방식 확대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29. 시장간 국제연계거래를 위한 제도 정비-PD 도입

- ☐ 포털 딜러(PD)* 업무를 증권업의 종류에 편입시켜 국제연계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양 거래소간 서로 주문을 전달하고 결제에 참여하는 거래소의 회원

⇒ (중장기) 국경간 거래소가 통합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포털딜러(PD)제도의 도입 및 그 방식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 증권거래법 개정

30. 공매도 규제의 법제화

- ☐ 공매도 관련 규제내용을 현재 거래소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규정하고 기타 세부내용 등을 거래소 업무규정 등에 위임할 필요

⇒ (중장기) 공매도의 개념, 제한사유, 제한범위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 증권거래법 개정

31. 기관투자자 범위 확대

- ☐ 재단법인을 기관투자자로 지정하여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대

⇒ (개선) 주식투자 유인제공 및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 추진

-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32.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증권업 소개거래 업무 허용

- ☐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계열 증권회사에 증권업무를 중개 또는 소개하는 것을 허용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 (중장기)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에 대하여만 특례 인정시의 형평성문제, 증권업 전업주의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 증권거래법 개정

33. 자산관리자의 자격요건 완화

- ☐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

⇒ (개선) 종합신용정보업자(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을 허가 받음)가 아닌 일반신용정보업자(채권추심 및 신용조사)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 검토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34. 증권회사의 종금사 어음관리계좌업무 취급 허용

- ☐ 종금사 어음관리계좌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수익구조 개선 및 기업의 원활한 단기자금 조달에 기여

⇒ (중장기)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35. 증권회사의 취급가능 어음 범위의 제한 완화

- ☐ 증권회사의 중개가능 CP의 최저액면가액을 1천만원 미만 (현재는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필요

⇒ (중장기) 개인투자자의 투자대상 확대 필요성, 종금사 등과의 업무 경합, 유가증권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 재경부 고시 개정

36. 일임선물거래의 규제 완화

- ☐ 거래품목의 종류 및 거래방법에 대해서도 일임매매 허용 필요

⇒ (중장기) 증권거래법상 제한적 일임매매 규정의 변경 여부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

- ☐ 선물거래법 개정

【 기타 과제 】

37. 공시자료에 담당자 연락처 명기

- ☐ 공시자료상에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기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됨

⇒ (개선) 현재 사업(분반기)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의 표지에 작성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이미 기재하고 있음

38. 5%보고 관련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 제고

- ☐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인 경우 영문보고서 양식을 허용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직접 전자공시시스템으로 보고토록 할 필요

⇒ (중장기) 영문공시 허용시 투자자의 영어능력에 따라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39. 스톡옵션 행사수량 조정의 합리적 개선

- ☐ 무상증자, 자본감소 등의 경우에 행사수량 조정을 인정해 줌으로써 스톡옵션권리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중장기) 무상증자 등 주당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스톡옵션 주식수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 ☐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항

40. 코스닥상장전 유상증자 등의 제한 완화

- ☐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전 1년 이내에 자본금의 100% 이내로 유상증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자본조달을 저해하므로 완화할 필요

⇒ (중장기) 특정인에 대한 이익공여 방지 등을 통한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동규제가 필요하나 자본시장의 발전정도 및 주식시장 참가 주체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 완화를 검토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

41. 기업공개요건 개선

- ☐ 상장요건인 부채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기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재무안정성 지표로 부채비율 이외에 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

⇒ (개선) 부채비율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의존도 등을 감안, 계속기업으로서 문제가 없는 경우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05. 3/4분기)

42.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으로의 전환요건 완화

- ☐ 외국계증권사 지점이 현지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허가요건 완화

⇒ (개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전문인력 확보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43. 기업공시(IPO)시 외국인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참여 허용

- ☐ IPO시 외국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외국 투자자에게만 부여되는 증거금(100%)의 납부를 면제할 필요

⇒ (개선) 현행규정상 청약증거금률은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고 관행적으로도 증권회사는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100% 청약증거금을 징수하는 등 외국기관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음

※ 현행 규정상으로 외국인의 참여가 가능하나, 이해부족 등으로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기업공개제도에 대한 홍보와 기업IR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

44. 선물거래 1인당 미결제약정 한도

- ☐ 현재 5,000계약으로 제한되어 있는 선물거래의 1인당 미결제 약정 한도를 확대하거나 동 한도규정을 폐지할 필요

⇒ (개선) 선물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 또는 결제불이행 위험의 감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결제약정 수량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 ☐ 선물시장업무규정 개정

45. 결제 대차거래 및 결제 이연

- ☐ 외국인의 실수로 인한 공매도시 결제보증금 예치 등을 통해 예탁원으로부터 대차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를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개선) 대차·결제 및 결제대용증에 의한 이연(1회 3일)결제가 이미 허용

46. 검사 관련 영문자료 제출 허용

□ 금감원의 검사요청자료 등을 영문으로 제출가능토록 허용

⇒ (개선) 검사, 감독상 요청자료는 해석상 불일치 등 부작용 발생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사안이 경미하고 분량이 방대한 참고자료는 영문제출을 허용하는 방안강구

47. 외국인의 유가증권 등록, 공시절차의 완화 및 국제적 표준화

□ 영어공시의 인정, 미국회계기준 인정, 계열사 공시의 단순화, 한국신용평가사와 외국신용평가사의 합동평가 인정 등 필요

⇒ (개선) 미국회계기준은 이미 인정되고 있고,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을 통하여 계열사 공시도 단순화 된 바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인정하고 있음. 영어공시는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48. 주식옵션 현금결제 방식 전환

□ 주식옵션의 결제방식을 현금결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실물인수도 부담 경감 및 거래비용의 절감 등 유도

⇒ (개선) 주식옵션의 결제방법을 실물결제방식으로부터 현금결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개정 완료('05.7.22)

49. 최선의 매매주문처리

-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위탁등을 받은 경우 2인 이상의 업자로부터 호가를 확인하여 원활한 유가증권 거래를 저해

⇒ (개선) 2인 이상의 업자로부터의 호가확인 의무 폐지('05.4.27)

50. 수수료 배분·환급의 제한

- 증권회사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대리한 증권회사 및 은행 이외의 자와는 위탁수수료에 연동한 수수료 배분을 할 수 없음

⇒ (개선) 은행에 대해서도 위탁수수료에 연동한 수수료 배분을 금지하여 금융기관간 차별을 폐지('05.4.27)

51. 장외파생상품등의 건전한 영업을 위한 업무지침 통보

-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 체제 강화, 주가(지수)연계 증권 발행 관련 종합리스크 관리체제 강화 등 지도

⇒ (중장기) 현재 초기단계인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으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가 정착되면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

52. 유가증권(주식, 채권) 담보취득방법 개선

- 금융기관이 개인의 유가증권의 질권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의 증권예탁결제원 계좌개설을 허용

⇒ (개선) 현행 제도하에서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대한 질권설정을 통해 담보취득 가능

【 유사행정규제 】

(증권업협회-1) 종업원의 채용

- ☐ 증권회사에 대해 종업원 채용시 학력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선량하고 유능한 종업원이 될 수 있는 지의 심사 의무화

⇒ (폐지) 증권회사의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폐지

- ☐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 개정

(증권업협회-2) 채용금지

- ☐ 증권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기간 미경과자 채용금지

⇒ (폐지) 시험응시과정 중 부정행위로 시험응시 제한조치를 받은 것은 증권회사의 업무수행 과정 중 위법·부당행위가 아니므로 채용제한대상에서 제외

- ☐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 개정

(증권업협회-3) 교육연수

- ☐ 실제 구속력을 담보하기 보다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직급별·직무별 교육 이수 의무폐지

⇒ (폐지)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직원 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급별·직무별 교육 이수 의무를 폐지

- ☐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 개정

(증권업협회-4) 개별약관의 제정등

☐ 표준약관 수정 및 개별약관 제·개정 내용을 협회에 보고할때
증권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제출을 의무화

⇒ (폐지) 협회가 약관 개정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의무는 폐지

☐ 증권회사의약관운용에관한규칙 개정

(증권업협회-5) 주식의 배정

☐ 시장상황이나 기업의 특성 등에 상관없이 청약자 유형군별로
공모주식의 배정비율 일괄적으로 명시

⇒ (개선) 대표주관회사가 고수익펀드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완료(05.41)

☐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개정

(증권업협회-6) 자산관리자에 대한 부당편익제공 금지

☐ 증권회사가 영업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편익을 제공
하는 경우 절차 및 한도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금전 및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

⇒ (개선) 증권회사가 자산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의
절차 및 한도 등은 존치하되, 편익내용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문화상품권 제공은 허용

☐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 개정

(증권업협회-7) 투자결과의 통보

-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매월 1회 이상 투자결과보고서를 교부하도록 규정

⇒ (개선) 간투법시행령 제138조에서는 투자결과보고서 교부를 분기당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어 교부주기를 간투법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

- ☐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 개정

(증권업협회-8) 약관의 변경보고 등

- ☐ 약관내용의 변경권고를 받은 증권회사는 권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개선) 증권업감독규정상의 관련조문을 준용하여 당해 권고의 수락여부를 보고토록 하고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 약관을 보고토록 개선

- ☐ 증권회사의약관운용에관한규칙 개정

(증권업협회-9) 신규지정신청시 제출서류

-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인에 관한 서류, 감사보고서, 주권별 견양, 명의개서 대행 계약서 등 제3시장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

⇒ (개선) 제3시장 지정 및 지정법인의 관리와 관련성이 적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제출의무를 삭제

- ☐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 개정

(증권업협회-10) 수수료

- ☐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개선) 위탁수수료 징수율 변경시 보고의무 폐지

- ☐ 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규칙 개정

(증권업협회-11) 응시절차 사항 규정화

- ☐ 제출된 서류와 응시료는 시험 실시전에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개선) 시험전 일정기간까지 응시취소가 가능하고 응시료를 환불하도록 개선

- ☐ 증권전문인력에관한규정 개정

(증권업협회-12) 응시절차 사항 규정화

- ☐ 제출된 서류와 응시료는 시험 실시전에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개선) 시험전 일정기간까지 응시취소가 가능하고 응시료를 환불하도록 개선

- ☐ 선물거래상담사시험에관한규정 개정

(증권업협회-13) 응시절차 사항 규정화

- ☐ 제출된 서류와 응시료는 시험 실시전에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개선) 시험전 일정기간까지 응시취소가 가능하고 응시료를 환불하도록 개선

- ☐ 운용전문인력시험에관한규정 개정

(선물협회-1) 회비납부

- ☐ 협회의 회비납부는 일반적인 회원의 의무이며 회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회원총회에서 정하여 정관에 규정화하여 적용

⇒ (개선) 증권거래법과 같이 회비에 관한 정관기재사항의 변경시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

- ☐ 정관 변경

(선물협회-2) 지체상금율

- ☐ 계약 체결시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체상금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적용의 소지가 있음

⇒ (개선) 지체상금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 회계규정 개정

(종금협회-1) 통일경영공시자료 비치의무폐지

- ☐ 「종합금융업통일경영 공시기준」에 따라 종금사는 매 반기 단위로 통일경영공시자료의 비치공시를 실시

⇒ (폐지) 각종 전자매체의 발달로 「종합금융업통일경영 공시 기준」에 따른 비치된 공시자료를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와 중복

- ☐ 종합금융업 경영통일 공시기준 개정

(한국증권금융-1) 반환주식의 예탁

- ☐ 우리사주조합원 취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무예탁기간의 경과로 반환된 주식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즉시 예탁하도록 함

⇒ (개선)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정을 정비

- ☐ 우리사주관리규정 개정

(한국회계연구원-1) 회원의 자격 소멸시 분담금 반환 청구

- ☐ 회원자격이 소멸되었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에 당해 회원은 회계연구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개선) 회원자격이 소멸되거나 탈퇴를 승인받은 사업년도말 가용재원 내에서 회원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금액을 반환

- ☐ 정관 변경

V. 보험분야

【 금감위규정 개정 과제 】

1. 보험회사 외화증권 투자제한 완화

- ☐ 보험회사가 외화표시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S&P 등 국제적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투자적격등급)을 득한 증권으로 제한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투자제한을 받게 됨

⇒ (개선) 국내발행 외화표시증권의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반영하는 등 투자제한을 완화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6년 2/4분기)

2. 보험상품의 신계약비 부과방식 다양화

- ☐ 신계약비를 계약시에 전부 부과하는 것은 보험상품 가격산정체계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신계약비를 해약시에 부과하는 방식 허용

⇒ (중장기검토) 초년도 신계약비 부과방식외에 해약시 해지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도입에 따른 신계약비 이연상각제도, 표준해약환급금제도 등 보험계리업무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7년 4/4분기)

3.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제한 완화

- ☐ 보험회사 파생금융거래한도는 약정금액 등을 기준으로 총 자산의 1,000분의 5로 제한*되고 있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작아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

* 보험회사의 파생금융거래중 헤지거래는 한도제한이 없음

⇒ (개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및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작업반을 구성하여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완화 추진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6년 2/4분기)

4. 보고서 제출주기 조정

- ☐ 현행 월 보고서의 제출주기를 분기로 변경하되 감독목적상 월 또는 주단위의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보고서 작성부담을 완화

⇒ (개선) 05. 3월말 업무보고서 개선작업을 통해 보고서의 서식수와 작성주기를 완화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5. 3.31 개정완료)

5. 보험회사 외화표시 약관대출 허용

- ☐ 보험사의 외화표시 약관대출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 외화채권으로 명시되지 않아 관련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위배

⇒ (개선) 2005. 6.10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을 개정하여 외화보험 계약의 외화약관대출을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외화채권으로 명시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5. 6.10 개정완료)

6. 판매채널 구분기준 제정의 및 판매방식과 상품차별화를 전제로 한 예정사업비 차별화 추진

- ☐ 동일상품에 대해 판매채널별(방카슈랑스, 온라인자동차보험)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격차별기준이 모호

⇒ (중장기검토) 판매채널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정사업비 차별기준의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7년 2/4분기)

7. 손해조사비 발생손해액으로의 계정처리 변경

- ☐ 손해조사비는 순사업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발생손해액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처리

⇒ (개선) 손해조사비를 발생손해액 계정으로 이관하여 지급 준비금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07년 2/4분기)

8. 신채널관련 규정의 운영지침 재정립

- ☐ 신판매채널의 확대 및 경쟁으로 고율의 수수료, 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판매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판매 채널과 관련한 운영지침 재정립 필요

⇒ (개선) 미비된 신판매채널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 추진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5년 4/4분기)

9. 구상채권(구상가능액) 산출방법 변경

- ☐ 회수가능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행 과거 단순 경험율에 의한 일률적인 산출방식에서 회사별 경험구상실적에 근거한 통계적 산출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 ⇒ (중장기검토) 경험구상율의 산정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액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07년 2/4분기)

10. 적하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개선

- ☐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보험계약자의 의도적인 보험료 미납으로 미수보험료를 양산하는 결과 초래
- ⇒ (중장기검토) 납입유예제도 개선 필요성 및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여부 검토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6년 4/4분기)

11. 파생상품관련 손익의 회계처리

- ☐ 현재 파생상품관련 손익은 투자영업손익으로 반영하고, 현물 관련외환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함에 따라 손익계산서 및 재산이용명세표상 투자영업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경우가 발생
 - 파생상품 평가·거래손익과 환관련이익을 모두 투자영업이익으로 계상하여 투자영업이익의 과대 또는 과소계상 방지
- ⇒ (개선) 투자영업이익의 과대·과소계상방지를 위해 파생상품 평가·거래손익과 환관련이익을 모두 투자영업이익으로 계상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06년 4/4분기)

12. 사모방식의 원화표시 주가지수 연동예금 등에 대한 투자허용

- ☐ ELS 등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방식에 대해 공모 방식은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사모방식은 파생금융거래 한도에 포함되어 투자가 제한

⇒ (개선) 금융회사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사모방식의 ELS 등도 파생금융거래 한도에서 제외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6년 2/4분기)

13. 현금흐름변동위험 회피목적의 파생상품거래 규제완화

- ☐ 헤지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시 기초자산과 헤지상품의 변동 비율이 80~125%를 벗어나는 경우, 초과분을 파생상품거래에 포함하여 투자한도(5/1000)를 제한

- 현금흐름변동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시에는 위험 회피 효과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필요

⇒ (개선) 헤지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시에는 위험회피 효과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6년 2/4분기)

14. 최대손실발생가능액 산정방법의 명확화

- ☐ 프리미엄을 영수하는 파생금융거래는 최대손실 발생가능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규제되나 최대손실 발생가능액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 규정해석의 여지가 존재

⇒ (개선) 파생금융거래의 최대손실 발생가능액 산출에 관한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자의적 규정해석을 방지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6년 2/4분기)

15. 보험회사 외화투자 규제를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

- ☐ 외화투자가 허용되는 자산을 파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함에 따라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권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

⇒ (중장기검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관련규제를 실질적인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6년 4/4분기)

16. 주요출자자 배제요건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 보험업법시행령상 주요출자자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계 법률 등의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나

-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보험회사가 많아 보험자회사 설립 등 사업 다각화가 제한

⇒ (중장기검토) 여타 금융업종 사례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6년 4/4분기)

17. 보험회사 대리점(자회사)관련 임원 겸직 허용

-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을 자회사로 소유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임원이 보험대리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다변화, 영업활성화 등에 제약

⇒ (개선) 보험대리점의 대형화를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임원의 자회사 보험대리점의 임원 겸직을 허용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6년 2/4분기)

18. 신용공여 해석의 명확화 또는 완화

- ☐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과 같이 신용공여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자금의 입출금, 보험료의 집금 등은 신용공여 합산 항목에서 제외 필요

⇒ (개선) 05. 6.10 보험계약자가 입금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신용공여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5. 6.10 개정완료)

19. 지급여력비율기준 설정 및 적기시정조치

- 적기시정조치 유예대상 보험회사에 「기준미달이후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실시되는 회사」도 포함

⇒ (개선) 05. 6.10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실시되는 회사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대상에서 제외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5. 6.10 개정완료)

20.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제한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방법으로 「골동품 또는 서화」의 취득을 사회통념상 영업장 비치 목적 등으로 제한

⇒ (개선) 골동품 또는 서화의 취득을 총자산의 1%와 100억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5. 6.10 개정완료)

【 법령 개정 과제 】

21. 보험회사 외화자산 운용한도규정 개선

☐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를 총자산의 100분의 20까지만 허용함으로써 보험사의 자산건전화에 지장을 초래

○ 따라서 자산운용비율을 법과 같이 30%로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외화표시상품은 관련비율 산정시 제외

⇒ (개선) 보험업법시행령 개정('05. 3.31)시 자산운용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05. 3.31 개정완료)

22. 상품비교채널의 법적책임 강화로 소비자 보호

☐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대리점 등이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임의적으로 비교 제시하는 문제 발생

⇒ (중장기검토) 부정확한 보험정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험상품 비교 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보험업법 개정

23.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감독규제 관련

- ☐ 보험업법시행규칙상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개인대리점 200만원, 법인대리점 500만원으로 규정

⇒ (중장기검토)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영업보증금 제도개선을 검토

- ☐ 보험업법시행규칙 개정

24. 겸영·부수업무의 구분계리 완화

- ☐ 겸영·부수업무의 자산·부채 구분계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 되므로 구분계리 대상금액을 현행(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 또는 10억원중 많은 금액)보다 확대

⇒ (중장기검토)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겸영·부수업무의 규모 및 규제실익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구분계리 대상 금액의 확대여부를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 기타 과제 】

25. 가스배상책임보험제도 개선 건의

- ☐ 가스사고 발생시 농촌과 도시의 피해규모가 다르므로 액화석유가스사고를 보상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도시와 농촌간 보험요율을 차별화 필요

⇒ (중장기검토) 현재 도시와 농촌의 보험요율을 차등화할 만한 경험통계가 없는 상태이므로 통계축적후 차별화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 ☐ 법규개정사항 없음(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반영사항)

26. 표준화된 단체보험요율 적용 허용

- ☐ 외국보험사는 국내에 축적된 단체보험 통계부족으로 개인 위험율을 할인한 단체위험율을 적용할 수 없어 국내 보험사에 비해 불리

⇒ (개선) 자체 경험율이 없는 회사는 개인 위험율을 사용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어 '05. 1월부터 단체상해보험시장의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업계공동의 단체위험율을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음

- ☐ 법규개정사항 없음(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반영사항)

27. 경영실태평가 적용기준 변경을 통한 평가등급 세분화

☐ 경영실태평가지 항목별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종합등급평가는 3등급으로 하고 있어 차별화가 미흡

⇒ (중장기검토) 경영실태평가 기준에 대하여는 꾸준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부합되도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법규개정사항 없음(제도운영사항)

28. 휴면보험금 관리제도 개선방안 통보 : 폐지

29.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수납관련 유의사항 통보 : 폐지

30. 자동이체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보험료 수납시 유의사항 : 폐지

31.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통보 : 폐지

【 유사행정규제 】

(보험개발원-1) 상임이사 선임의 금감위 승인제도 폐지

☐ 상임임원의 선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폐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조항 폐지

☐ 「정관」 개정('05년 3/4분기)

(보험개발원-2) 원장후보자의 금감위 보고제도 폐지

- ☐ 원장추천위원회가 원장후보자(2인)를 선정한 때에는 사원 총회 추천에 앞서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 (폐지) 원장후보자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조항 폐지

- ☐ 「원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개정('05년 3/4분기)

(생명보험협회-1) 제재금 납부기한 연장

- ☐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위반관련 제재결정 통보시 15일이내 제재금 납부

⇒ (개선) 제재금 납부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 ☐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협정」 개정(06년 2/4분기)

(생명보험협회-2) 생명보험 모집인 재등록기한 폐지

- ☐ 생명보험 모집인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 재등록 신청 가능

⇒ (폐지) 생명보험업 종사(설계사 경력포함) 경력1년 이상일 경우 말소일에 관계없이 재등록 허용

- ☐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개정(05. 3.31 개정완료)

(생명보험협회-3)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

- ☐ 매체광고에 대한 심의·부당광고 조치를 위해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 (개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심의위원회의 변액보험
광고선전물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기능을 확대 개편

- ☐ 「생명보험상품통일공시기준」 개정('05.5.31 개정완료)

(생명보험협회-4) 실무경력인정기관 확대

- ☐ 생명보험 언더라이터의 실무경력인정기관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유사보험 취급기관 등으로 제한

⇒ (개선) 생명보험 언더라이터의 실무경력인정기관을 확대

- ☐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05년 3/4분기)

(생명보험협회-5) 생명보험 언더라이터시험 시행시기의 탄력적 운영

- ☐ 생명보험 언더라이터시험 시행시기를 규정
 - CKLU(6월), AKLU(9월), FKLK(12월)

⇒ (개선) 제반환경에 맞춰 탄력적인 시험운영이 가능토록 개선

- ☐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06년 2/4분기)

(손해보험협회-1) 보험회사별 경영공시항목의 합리적 개선

-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별표1의 정기경영 공시항목 및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개선) 불필요한 공시항목을 폐지하는 등 보험회사별 경영 공시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

- ☐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개정('05.5.30 개정완료)

(화재보험협회-1) 관계행정기관에의 협조 요청기준 강화

-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점검에 불응할 때 협회는 관계 행정 기관에 필요한 협조 또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폐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점검에 불응할 때에만 필요한 협조 또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 ☐ 「점검업무 처리규정」 개정('05. 5.31 개정완료)

(화재보험협회-2) 민원 신청서류의 보완기간 연장

- ☐ 보완을 요청한 민원신청서류가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에 재보완토록 요청

⇒ (개선) 재보완 요청기간을 15일로 연장

- ☐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05. 5.31 개정완료)

(화재보험협회-3) 시험진행방법 개선

□ 제품 성능시험의 진행은 접수순으로 처리

⇒ (개선) 시험의 진행은 접수순으로 처리하되 의뢰자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 가능토록 함

□ 「시험업무규정」 개정('05. 5.31 개정완료)

(화재보험협회-4) 시험정지요건에 대한 보완기간 연장

□ 설비 등에 출장시험시 현지설비에 결함이 있거나 시험원의 안전문제 또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을 정지할 수 있음. 단, 시험의뢰자가 이를 10일 이내에 시정할 경우 시험을 진행

⇒ (개선) 시험의뢰자의 시정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고객의 편의 도모

□ 「시험업무규정」 개정('05. 5.31 개정완료)

(보험연수원-1) 연수과정별 최소인원 축소

□ 연수과정별 최소인원을 10명으로 정함

⇒ (개선) 과정별 최소인원을 축소하여 폐강을 감소 도모

□ 「연수운영규정」 개정(05년 4/4분기)

(보험연수원-2)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무료수강기간 연장

☐ 연수원에서 실시한 교육과정 이수자는 평가시험 응시신청후 별도의 수강료 지불없이 해당과정 수강 가능

○ 무료수강기간은 이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

⇒ (개선) 무료수강기간을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

☐ 「보험대리점 연수운영 시행세칙」 개정(05년4/4분기)

Ⅵ. 자산운용분야

【 금감위규정 개정 과제 】

1.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투자대상 확대

☐ 국내에서 판매가능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부동산, 외환 및
실물상품 등에 투자가 금지됨

⇒ (개선)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투자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
하도록 확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4/4분기)

2. 외국간접투자증권의 주식대여 허용

☐ 국내 판매가능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당해 펀드가 보유하는
주식의 대여가 금지됨

⇒ (개선) 자산운용의 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 (4/4분기)

3. 투자가능 외국 사모사채의 요건 명확화

☐ 자산운용사는 신용평가기관의 일정 평가등급 이상인 사모
사채에 한하여 펀드자산총액의 5% 이내 취득 가능하나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 (개선) 신용평가기관을 외국의 적격 신용평가기관(예: OECD
국가 소재)으로 확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 (4/4분기)

4.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규제 개선

-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시 위험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위험회피거래의 범위가 협소하여 효율적 자산운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개선) 위험회피거래 인정기준인 델타(δ)의 개념에 그와 성격이 유사한 듀레이션(D)을 포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4/4분기)

5.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선물증거금 제외

-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선물증거금이 중복계산되는 문제 발생

⇒ (개선)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제외되는 현금성자산의 범위에 선물증거금을 포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4/4분기)

6. 자산운용회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총위험액에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위험액이 포함되어 수탁고 증가시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 초래

⇒ (개선) 간접투자재산위험액 산정시 수탁고 및 펀드규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탁고 증가 등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4/4분기)

7.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일부 평가항목이 유용성이 낮거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이 존재

⇒ (개선) 회사별 평가등급의 변별력이 작은 자본적정성 부분의 실질자기자본비율 항목을 제외하고, 자본적정성 부문에 법정자본금잠식률 계량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자본잠식회사의 자본확충을 유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4/4분기)

8. 단기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제한 완화

☐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MMF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운용이 금지됨

⇒ (개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채권에 대해서 정부투자기관발행채권과 같이 MMF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4/4분기)

【 법령 개정 과제 】

9. 투자회사(Mutual Fund)의 담보제공 금지 개선

☐ 투자회사는 펀드재산으로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담보징구를 수반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불가능

⇒ (개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담보제공 허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10. Multi Manager Fund 도입 검토

- ☐ 하나의 펀드를 수 개의 하위펀드로 나누어 하위펀드들을 각각 다른 운용자에게 운용위탁하는 방식의 펀드 미도입

⇒ (중장기 검토) 자산운용사들의 분야별 전문화 진전도, 운용 업무 위탁범위의 확대방안과 연계하여 도입 검토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 개정

11.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신고절차 간소화

- ☐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신고시 판매대행회사 단위로 신고가 이루어져 판매대행회사 변경 또는 추가시 업무절차가 복잡

⇒ (개선) 판매대행회사가 다수인 경우 대표 판매대행회사를 통한 신고를 허용하고 판매대행회사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2.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공시부담 완화

- ☐ 국내 판매가능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부과되는 공시의무가 당해 외국에서 적용되는 공시의무보다 많아 불편 초래

⇒ (개선) 국내에서 판매되는 펀드에 적용되는 공시제도 전반을 업계와 공동으로 재검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선진화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13. 재간접투자기구의 50% Rule 규제 완화

- 재간접투자기구는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하여는 재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금지되어 자기 또는 계열 운용사의 펀드 편입에 애로

⇒ (개선) 재간접투자기구의 운용자율성 확대를 위해 동 규제 완화(自운용사인 경우 50% Rule 완화 등)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

14.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확대

- 자산운용회사는 고유재산으로 투자증권 투자가 금지됨

⇒ (개선) 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공모 MMF에 대하여는 투자 허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

15. 외국자산운용회사와 국내 자회사인 자산운용회사간 임원 겸직 허용범위 확대

- 국내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그 계열회사인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지 않음

*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국내 계열 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 겸직이 허용

⇒ (개선) 간접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인 외국자산운용회사의 비상근 임직원 겸직을 허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개정

16.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의 통합매매주문 허용

- ☐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등의 매매주문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열사에 同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하는 자산운용사별로 독립하여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제한

⇒ (개선)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자산운용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합주문(Block Trading)을 허용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개정

17. 외화표시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추가

- ☐ 현행 외화표시자산의 평가기준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하는 경우 달러표시 자산(당일 최종시가)과 달러이외통화표시 외화자산(전일 환율)간 적용환율의 시차문제 발생

⇒ (개선) 외국환중개회사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제공하지 않는 외화자산의 경우, 공신력 있는 통신사(Reuters, Bloomberg)가 제공하는 가격을 참고하여 간접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개정

18. 재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제한 완화

- 재간접투자기구는 투자대상 펀드 간접투자증권수의 20%를 초과하여 취득이 금지되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아웃소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개선) 변액보험의 경우 다른 펀드 간접투자증권 수의 2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개정

19. 자산운용사 직판한도 제한 완화

- 직판한도가 수탁고의 20% 또는 4천억원 이내로 제한되어 직판 도입에 따른 효과가 감소

⇒ (중장기검토) 제도도입초기 대규모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직판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나 직판제도가 정착이 되면 시장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직판한도를 확대할 계획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개정

20. 사모펀드의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한도 제한 완화

☐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투자한도 규제*가 사모펀드에도 적용되어 효율적인 운용을 제약

- * i) 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 ii) 총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범위 이내

⇒ (개선) 사모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보호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펀드임을 감안하여 사모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

21. 신용파생상품 투자금지규제 폐지

☐ 간접투자기구에서 신용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되어 효과적인 리스크관리가 어려움

⇒ (중장기검토)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정도에 따라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상품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

22. 펀드에서의 해외국공채 투자한도 확대

- ☐ 투자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가 해외 국공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자산운용회사의 해외자산운용을 제약

* 펀드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금지

** 우리나라 국채에 대해서는 펀드자산의 100%, 지방채 등 공채에 대해서는 30% 투자한도 적용

⇒ (개선)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예: OECD 가입국가)의 국공채에 대해서 펀드자산의 10% 이내로 운용토록 한 제한을 완화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

23. 계열증권사와 20%초과 거래금지 폐지

- ☐ 자산운용회사는 계열증권사와 매월 주식거래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거래가 금지

⇒ (중장기 검토) 수수료 절감, 양질의 연구자료 제공 등을 고려하여 계열증권사와의 거래제한을 완화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규모, 위탁매매증권사 선정기준 등을 공시토록 함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4. 판매채널 확대

- ☐ 판매채널이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투자자의 접근성 및 선택권 제약

⇒ (중장기검토) 판매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 개정

25. 수익자총회 개최부담 완화

- ☐ 수익자총회 의결이 의무화된 사항이 많아 펀드의 과도한 지출 비용 발생이 가능

⇒ (개선) 수익자총회 개최실익이 적은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익자총회 의결대상에서 제외

* 자산운용회사 영업양도, M&A에 따른 수탁회사 변경 등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 개정

26. 펀드에서의 투자증권 차입 공매도 허용

- ☐ 간접투자기구에서 공매도(short sale)이 허용되지 않아 헤지 거래 또는 차익거래가 제한되어 효율적 자산운용을 저해

⇒ (개선)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차입공매도에 한해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펀드자산의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

27. 선물회사의 판매가능 펀드종류 확대

- ☐ 선물회사의 경우 파생상품펀드 이외에는 판매 불가능

⇒ (중장기검토) 펀드 판매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선물회사에 대해서도 모든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

28. 투자일임업무의 외부위탁 허용

- ☐ 전업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일임업무의 제3자 위탁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겸업 투자일임업자(증권사,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외부위탁은 가능하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일임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제약

⇒ (개선) 겸업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위탁가능여부를 명확히 하고, 전업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업무 위탁허용을 추진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 개정

【 유사행정규제 】

(자산운용협회-1) 중복규정 삭제

- ☐ 운용전문인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자산운용사의 위험체계 수립의무,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협회 업무규정에 규정

⇒ (폐지) 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상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

- ☐ 업무규정 개정

(자산운용협회-2) 운용전문인력시험 주관주체 명확화

☐ 운용전문인력시험을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시험 주관주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

⇒ (개선) 운용전문인력시험 주관주체에 대한 근거규정(재정부 고시) 명확화

☐ 업무규정 개정

(자산운용협회-3) 회원사에 대한 벌과금 징수기한 연장

☐ 벌과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벌과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사는 30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

⇒ (개선) 벌과금을 제재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회원사의 부담을 완화

☐ 자율규제위원회 규정 개정

(자산운용협회-4) 회비 납부기한 연장 등

☐ 입회비는 7일 이내에 납부

⇒ (개선) 입회비 납부기한 연장 및 현행 일시납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사의 부담을 완화

☐ 회비납부규정 개정

(자산운용협회-5) 회비 연체료 부담 완화

☐ 회비 미납시 자율규제 및 연체료 부과

⇒ (개선) 회비 미납은 자율규제 행위 위반의 경우 제재하는
벌과금의 연체와 그 성격이 다르므로, 회비 연체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세분화하여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

☐ 회비납부규정 개정

(자산운용협회-6) 광고물의 심사대상 및 절차, 방법 설명

☐ 펀드약관의 금감위 보고후 광고심사 신청 가능

⇒ (개선) 표준약관에 의한 상품의 경우 펀드 설정후 7일이내에
금감위에 보고하므로 광고심사신청도 금감위 보고전이라도
상품 설정후 곧바로 광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

(자산운용협회-7) 운용전문인력 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

☐ 운용전문인력등록 신청의 처리기간이 영업일 수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임

⇒ (개선) 자산운용회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운용전문인력 등록규정 개정

(자산운용협회-8)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제도 운영지침 폐지

□ 목적, 금융거래조회서비스제도의 운영, 조회신청의 접수, 조회결과의 통보, 기타사항

⇒ (폐지) 개인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므로 동 지침을 별도로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

□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제도 운영지침 폐지

4. 금융당국과 공정위 이중규제 관련

- 양 기관간의 주요 쟁점별 이견 현황에 대한 조정 및 MOU체결 현황

□ 업무협약(MOU) 체결('07.11.27) 후 현재까지 양 기관간 이견 사항은 없음

※ 업무협약(MOU) 별도첨부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금감위-공정위간 협약안

이 협약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각각 “금감위”와 “공정위”로 하고, 함께 칭할 경우에는 “양 기관”이라 한다)는 금융회사(또는 금융사업자, 이하 같다)에 대한 규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업결합

1.1 금감위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합병과 자회사 편입 등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를 미리 공정위와 협의한다.

1.2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1.3 공정위는 1.2의 경쟁제한성 심사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특수한 사항에 대한 금감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2. 부당 공동행위

2.1 금리, 수수료, 기타 거래조건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공정위가 규율한다.

2.2 금감위(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2.3 공정위는 위 2.2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로 조치하지 아니한다.

2.4 공정위는 금융회사간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행정지도의 여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금감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2.4 금감위는 위 2.2의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3. 불공정 거래행위

3.1 양 기관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소관 법령에 따라 각기 필요한 조사와 조치(금융감독원의 검사 또는 제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를 할 수 있다.

3.2 양 기관은 중복조사 또는 중복조치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음 -

3.2.1 양 기관은 각각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상대 기관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여부를 불문한다)가 진행 중(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인지 여부를 문의한다. 이 경우 문의과정에서 알게 된 타 기관의 조사계획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2.2 상대 기관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양 기관은 해당 불공정 거래사안에 대한 조사절차를 중지하고, 제6절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조사주체,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조사시기 등에 대해 협의한다.

3.2.3 상대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완료한 경우 다른 기관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3.2.3.1 내지 3.2.3.3.에 따라 처리한다.

3.2.3.1 타 기관의 조치내용이나 수준이 해당 기관이 운용하는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

3.2.3.2 타 기관의 조치내용이나 수준이 해당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소관법령의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은 제6절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협의를 거쳐 소관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되, 조사 보고서 등에 타 기관의 조치내용을 반드시 기재한다.

3.2.3.3 타 기관의 조치가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과징금 등을 산정한다.

3.3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금융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및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간 불공정 거래행위는 공정위가 규율한다.

4. 부당한 표시·광고

4.1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각기 필요한 조사와 조치(금융감독원에 의한 검사와 제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를 한다.

4.2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타 기관이 조사 또는 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위 3.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5. 금융약관

5.1 금감위(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와 공정위는 소관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의 약관에 대해 심사하고 조치할 수 있다.

5.2 양 기관은 약관 규제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를 법령 제·개정시 반영한다.

6. 실무협의기구 운영

- 6.1 양 기관은 해석상 이견사항의 조정 등 이 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한다.
- 6.2 실무협의기구는 감독정책1국장(금감위)과 경쟁정책본부장(공정위)로 구성하되, 사안별로 관련 실·국장 및 팀장(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 등이 참석할 수 있다.
- 6.3 실무협의기구는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되, 한 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대주주 적격성심사의 법적 근거와 심사기준, 관련 내부규정

1. 은 행

① 법적 근거 : 은행법 제16조의4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심사기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별첨 1 참조)

2. 증 권

① 법적근거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2조, 제32조의3

제2조 (정의) 20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신설 2007.7.19, 2008.3.14>

1.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에탁증서를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주요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에탁증서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2조 (허가의 요건)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증권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기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3에서 같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제32조의3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7.7.19> ①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주주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7.1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② 심사기준 :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업감독규정(별첨2 참조)

3. 보험

① 법적근거 : 보험업법 제6조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7.19>

1.~3. (생략)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②~③ (생략)

④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7.19>

⑤금융위원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사기준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2의2 (별첨3 참조)

[별 표] <개정 2008.7.29>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5조관련)

구 분	요 건
1. 한도초과본유주 주가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 여 금융감독원으 로부터 검사를 받 는 기관(「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 자유한회사·투 자합자회사 및 투 자조합은 제외한 다)인 경우	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 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라.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 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나.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및 제2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회사에 한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주식취득 자금이 당해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p> <p>라.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p>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p> <p>나.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p>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p> <p>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이거나</p>

	<p>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p> <p>마.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p>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인 경우(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비 고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 (허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받고자 하는 증권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증권전문인력과 증권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
2. 허가받고자 하는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③ 삭제 <2008.1.18>

④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08.1.18, 2008.2.29>

1. 증권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영업중 일부를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그 영위

하고 있는 증권업외의 다른 종류의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증권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⑥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2008.2.29>[본조신설 2000.9.8]

제18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8.1.18>) ① 삭제 <2008.1.18>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8>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만 해당한다)로서 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③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8, 2008.2.29>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대주주가 되려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1.18, 2008.2.29>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삭제 <2007.6.28>

4. 삭제 <2007.6.28>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8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8, 2008.2.29>

⑦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2008.1.18>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대주주가 되려는 증권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⑧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1.18, 2008.2.29>

⑨그 밖에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본조신설 2006.1.27]

[별표 1] <개정 2008.2.29>

대주주의 요건(제17조의2제5항 관련)

구 분	요 건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 전문회사는 제 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 라 한다)인 경 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

	<p>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p>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증권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p>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p>

	<p>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비고

1.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자에게는 각각 제1호마목 또는 제4호라목의 대주주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08.2.29>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p>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제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제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p>

	<p>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p> <p>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증권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2호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 고

1.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자에게는 각각 제1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의 대주주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증권업감독규정

제1-10조(증권업허가 심사기준)

①영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1.5.3>

②영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1.5.3, 2008.2.21>

③영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 지점설치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력, 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5.3, 2003.3.6>

1. <별표3> 제1호라목(2) 내지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허가신청인의 본국 증권업에 대한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부합할 것

④금융위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나 검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1.5.3, 2008.2.21, 2008.4.7>

제1-16조(대주주 승인신청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하는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1, 2008.4.7>

②외국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영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의3>과 같다. <개정 2008.2.21>

④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10조 제4항의 규정은 대주주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1>

⑤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의 효력은 증권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증권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2008.4.7>

⑥증권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1, 2008.4.7>

[본조신설 2006.2.16] <개정 2008.2.21>

<별표3> <개정 2001.5.3, 2001.7.19, 2001.8.1, 2002.3.20, 2003.3.6, 2003.11.19, 2004.5.19, 2005.4.13, 2006.2.16, 2007.5.3, 2008.2.21, 2008.4.7>

대주주의 요건

1.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대주주의 요건 (제1-10조제2항 관련)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개정 2008.2.21, 2008.4.7>

(1) 삭 제 <2008.2.21>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와 별표3의3에서 같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개정 2008.2.21>

(3)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의 기준을 충족할 것

(4)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200 이하일 것. <개정 2008.2.21, 2008.4.7>

(5)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개정 2008.2.21>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기타 (가) 내지 (다)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6)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08.2.21>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다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1>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1, 2008.4.7>

(7)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개정 2004.3.5, 2004.5.19>

(나) 삭제 <2008.2.21>

(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 <개정 2008.2.21>

(1) 가목(2), (5) 및 (6)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가목(7)(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3)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개정 2008.2.21>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3호 관련) <개정 2008.2.21>

(1) 법 제3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의하여 출자자금이 차입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기타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가목(6)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
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
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이
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가목(7)(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로 다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
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
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에 한한다)가 다음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1 제4호 관련) <개
정 2008.2.21>

- (1)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2) 가목(2)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
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4)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04.3.5, 2008.2.21>
- (5) 가목(6) 및 (7)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08.2.21>

다.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시행령 별표1 제5호 관련)

- (1) 가목의 금융기관인 경우 : 가목(3)·(4)·(6) 및 (7)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나목의 내국법인인 경우 : 가목(6) 및 나목(2)·(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다목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목(6) 및 다목(1)·(4)의 요건을 충족할 것
- (4) 라목의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 가목(6)·(7), 나목(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라목(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08.2.21>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7조의2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8.2.21>

-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6) 및 (7)의 요건
-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6) 및 나목(2)의 요건
-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6), 다목(1) 및 (4)의 요건
-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의 요건
- (5) 그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 <신설 2008.2.21>

사. 가목(6)·(7) 및 나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가목(6)·(7)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6)·(7)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1>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6)·(7)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1>

(3) 기타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6)·(7)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2.21>

2.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의 요건 (제1-10조제2항 관련) <개정 2008.2.21>

가. 증권업허가 신청이 영 제17조의2제5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증권업겸영허가”라 한다)에는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등을 감안하여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요건중 가목(6)(나)와 관련한 요건(이하 “대주주의 경제적책임 요건”이라 한다)만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업겸영허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제적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2008.4.7>

3.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업 추가허가시 대주주의 요건 (제1-10조제2항 관련) <개정 2008.2.21>

가. 증권업허가 신청이 영 제17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증권업추가허가”라 한다) 대주주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1>

(1) 증권업추가허가 신청이 최초로 증권업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요건중 제1호가목(1) 및 대주주의 경제적책임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1>

(2) 증권업추가허가 신청이 최초로 증권업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추가증권업영위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1),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요건중 가목 (2) 및 (5)와 관련한 요건 및 대주주의 경제적책임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1>

(나) 추가증권업영위에 필요한 자본금을 (가)이외의 방법으로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1) 및 대주주의 경제적책임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1>

4. 증권회사 합병, 영업양수도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제1-11조제1항 제7호, 제1-12조관련) <개정 2007.4.27, 2008.2.21>

가. 증권회사 합병, 영업양수도 인가시 대주주요건에 관하여는 대주주의 경제적책임요건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2008.2.21>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회사 합병등의 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제적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2008.4.7>

5. 증권회사의 합병 및 전환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제1-11조제2항제 9호, 제1-12조 관련) <신설 2007.4.27, 개정 2008.2.21>

가.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개정 2008.2.21>

- (1)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2) 제1호 가목 (3) 및 (4)의 요건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개정 2008.2.21>

- (1)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2) 제1호 나목 (3) 및 (4)의 요건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개정 2008.2.21>

- (1)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2)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 중 가장 유사한 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그 해당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재무건전성 또는 부채비율에 대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이상) 또는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마.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중 가장 유사한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해당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와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거나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08.2.21>

바. 제4호 가목의 규정은 가목 내지 마목에 준용한다. <개정 2008.2.21>

사. 기타 <개정 2008.2.21>

(1)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회사 합병 등의 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2008.4.7>

(2)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산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중 영 제17조의2제4항 각호의 자에게는 제4호 가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3)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로 라목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라목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1>

<별표3의3> <신설 2006.2.16., 개정 2007.6.28, 2008.2.21, 2008.4.7>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제1-16조 관련)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2 제1호 관련) <개정 2008.2.21>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제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개정 2008.2.21>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08.2.21>

-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1>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1, 2008.4.7>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삭제 <2008.2.21>

(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개정 2008.2.21>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개정 2008.2.21>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 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 일 것 <개정 2008.2.21>

라. 제1호다목(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다목(3)(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개정 2008.2.21>

가. 법 제3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1호다목(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대주주 중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개정 2008.2.21>

(4) 제1호다목(3)(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영. 별표2 제4호 관련) <개정 2008.2.21>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08.2.21>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 2008.2.21>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시행령 별표2 제5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2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3호 가목·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 제4호 나목·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08.2.21>

6. 특례 <개정 2008.2.21>

가. 삭 제 <2008.2.21>

나. 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의2제4항의 자에게는 다음의 대주주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1>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호다목의 요건

다.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각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1>

라.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다목 2및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1>

(3) 기타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2.21>

마. 증권회사 또는 그 증권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증권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대주주 변경 승인일 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이

내에 당해 증권회사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20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신설 2007.6.28, 개정 2008.2.21>

[별표 2의2] <개정 2008.2.29>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p>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개인인 경우</p>	<p>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p>	<p>가. 승인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p>	<p>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와원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다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비고

1.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이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현황 및 적격성 심사 결과 조치사항

1. 은행

시 기	은행명	대주주	심사결과 및 조치사항
05.06월	외환은행	론스타펀드 IV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수출입은행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코메르츠은행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씨티은행	씨티그룹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SC제일은행	스탠다드차타드뱅크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5.12월	외환은행	론스타펀드 IV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수출입은행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코메르츠은행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씨티은행	씨티그룹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SC제일은행	스탠다드차타드뱅크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6.6월	외환은행	론스타펀드 IV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씨티은행	씨티그룹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SC제일은행	스탠다드차타드뱅크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6.12월	외환은행	론스타펀드 IV	진행 중
	씨티은행	씨티그룹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SC제일은행	스탠다드차타드뱅크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7.6월	씨티은행	씨티그룹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SC제일은행	스탠다드차타드뱅크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7.12월	씨티은행	씨티그룹	진행 중
	SC제일은행	스탠다드차타드뱅크	진행 중

2. 증 권

시 기	증권회사명	대주주	심사결과 및 조치사항
06.9월	하나증권	하나금융지주 등	요건충족(통보)
06.12월	서울증권	유진기업 등	요건충족(통보)
08.3월	KIDB채권중개	오영수	요건충족(통보)
	신흥증권	현대자동차 등	요건충족(통보)
	리딩투자증권	밸류에트투유한회사 등	요건충족(통보)
08.7월	비엔지증권	두산캐피탈 등	요건충족(통보)
	아이엔지증권	ING Bank N. V.	요건충족(통보)
	바로증권중개	박준형 등	요건충족(통보)
	애플투자증권	코린교역 등	요건충족(통보)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등	요건충족(통보)
	엘아이지투자증권	LIG손해보험 등	요건충족(통보)
	토러스투자증권	손복조 등	요건충족(통보)
	비엔피파리바증권	BNG Paribas S.A.	요건충족(통보)
	케이티비투자증권	권성문 등	요건충족(통보)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증권	SC제일은행	요건충족(통보)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요건충족(통보)
08.9월	CJ투자증권	현대비포조선 등	요건충족(통보)
	이트레이드증권	지엔에이케이비아이씨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요건충족(통보)
	KB투자증권	KB금융지주 등	요건충족(통보)

3. 보 험

시 기	보험사명	대주주	심사결과 및 조치사항
05.01월	KB생명	아이엔지 인슈어런스 인터내셔널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 에이지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하나생명	알리안츠 에이지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5.06월	SK생명	미래에셋캐피탈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맵스자산운용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5.09월	교보생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5.11월	신한생명	신한금융지주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5.12월	메트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 멕시코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6.01월	쌍용화재해상보험	태광산업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6.03월	다음다이렉트	엘지화재해상보험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넥스원퓨처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6.10월	그린화재해상보험	이영두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인핸스먼트컨설팅 코리아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6.12월	삼성생명	삼성생명공익재단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7.02월	그린화재해상보험	극동유화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7.05월	교보자동차보험	악사 에스에이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7.07월	하나생명	하나금융지주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7.10월	동양생명	보고티와이엘투자 목적회사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8.01월	하나생명	HSBC 인슈어런스 홀딩스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8.02월	대한화재해상보험	호텔롯데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롯데역사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대흥기획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부산롯데호텔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8.03월	LIG생명보험	우리금융지주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아비바 인터내셔널 홀딩스 리미티드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다음다이렉트	에르고 인터내셔널 아게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08.06월	홍국쌍용화재	홍국생명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제일화재해상보험	한화건설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한화리조트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한화갤러리아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한화엘앤씨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한화테크엠	요건충족(조치결과 없음)

7.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산업의 선진화 방안과 추진현황

-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위 등 감독당국이 추진했던 사업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서
-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8.25일 “금융 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과 향후 과제 (금융위원회 출범 6개월의 점검)”를 발표한 바 있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융산업의 선진화 방안과 추진 현황, 사업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서, 평가결과는 <첨부> 자료에 정리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2008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및 그 실적”

2008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008. 10

금융위원회

목 차

Ⅰ.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Ⅱ.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Ⅲ. 향후 중점 추진 과제

- 새 정부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
- 금융산업은 新성장동력으로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선진화정책 수립, 금융시장 안정, 따뜻한 사회 구축을 위한 섬기는 금융행정,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착실하게 추진



Ⅱ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

금융시장 동향

- 작년 중순 이후 서브프라임 문제, 글로벌 침체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리먼 등 주요 IB 도산과 7,000억불 구제 금융 등 시장 불안 수시로 반복되면서 큰 폭의 조정

* 서브프라임 관련 총손실 : 4,000억~5,000억불 추정(Fitch 4,010억~5,500억불, IMF 9,450억 불)

- 이러한 해외시장의 충격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

- 최근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 지속등의 영향으로 1,300대 후반까지 조정
-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도 연중 최저치 4.88%(4.30일)를 기록한 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82bp 상승(10.2일 5.7%)

정책적 대응

- 서브프라임 여파로 발생한 글로벌 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금감원·금융회사 등과 시장상황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자금흐름,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철저히 점검

* 금융위·금감원 합동 conference call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수시로 점검

- 거시경제정책협의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협의체도 구축

* 신정부 출범 이후 거시경제정책협의회(17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11회) 등

□ 적극적인 정보 전달 및 감독 강화로 시장 불안을 완화

○ 정확한 정보전달로 시장내 불안 심리의 무분별한 확산 차단

* 例 : KIKO 거래현황(8.1), 9월 위기설 관련 기자 간담회(9.2), 리먼·메릴린치 관련 익스포저 파악(9.15) 외화유동성등 금융현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10.6) 등

○ 은행권의 시장성 수신 PF 대출 외화 유동성 등 시장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例 : 시장성 수신,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변동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하반기 건전성 감독 방향 수립·발표(7.15일) 등

□ 주요 점검 지표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체제 가동과 조기 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상시 점검

○ 중점 리스크 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재정부, 금감원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샵(7.15) 개최, 금융위·금감원간 하반기 리스크 점검(7.25) 등을 통해 시장불안 요인 대응방안 모색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

* 例 : 공매도 금지(10.1)

□ 규제금융법안 하원 통과에도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

○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체제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 리스크 요인별 금융위험의 전이 경로 분석 등을 통해 파급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 노력 강화

○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②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추진 실적

□ 규제당국이 주도하였던 이전의 금융규제개혁과 달리
수요자(민간)가 주도하는 금융규제개혁 추진

○ 지난 3월말부터 5월초까지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약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을 통해 총 477건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

- 또한,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약 300여건의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금융규제 혁파

* 총 14인 : 민간 전문가 11인, 금융위 2인, 금감원 1인 (단장 : 민간전문가)

<주요 개선사항>

- 금융회사 업무위탁 범위 확대(총무·인사 등의 후선업무, 전산설비 등)
- 외부감사 대상 축소(자산 70억원이상 → 자산100억원 이상)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폐지
- 신용카드 결제대상범위 확대(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허용
- 은행에 투자자문·투자일임업 겸영 허용
- 보험회사에 신용스왑거래(CDS)를 허용
- 집합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범위를 헤지목적 또는 정형화된 형식의 스왑거래까지 확대 등

향후 조치계획

□ 규제개선사항 중 법률 제·개정사항은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제·개정과 연계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경우에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 또한, 금융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 감독
강화 및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도 함께 마련 추진

* 과징금제도 확대

③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추진 실적

□ '반도체분야의 삼성전자'와 같은 금융섹터 Global Player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을 발표('08.6.3)하여 산업은행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

* 추진일정 : 산은법 개정 및 KDF 설립 입법안 마련('08.8) → 산은의 기업분할('08.12) →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사 지분(49%) 매각(2009~2010) → 산은지주사 지배지분 매각(2011~2012)

-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혼재되어 시장마찰이 확대되고 민간금융의 발전도 제약하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 국책은행에서 민영화된 산은지주회사 체제로 탈바꿈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의 성장 발판 마련

□ 또한, 신설되는 KDF는 민영화되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하여 정책금융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On-lending방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선진형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향후 조치계획

□ 연내에 산은법 개정과 KDF설립법이 국회통과 등을 통해 확정된 후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

-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 지분(49%) 매각을 완료하고, 임기내 지배지분 매각 및 민영화 완료

4 금융투자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성과

- 선진국 수준의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

※ 8개 증권회사 및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허가

- 자본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차질없는 시행(09.2 시행)을 위하여

- 기존 투자금융업자의 인가·등록갱신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추진완료(08.8.4)
- 자통법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9편 442개 조문)을 조기에 제정(08.8.4)하여 업계 사전준비를 지원

향후 계획

- 기존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의 재인가·재등록업무(450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금융위·금감원 및 관련기관 공동으로 전담 T/F구성·운영, One-stop 서비스로 처리

- 자통법에 따라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협회를 금융투자협회로 통합(09.23까지)하고 자율규제 기능 강화

< 주요국 자본시장 현황 >

(07년 말 기준, 조, 개)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장사 (수)	기업공개 규모(신규)	유상증자 규모	채권시장**			
					국채	금융채	회사채	총계
한국	1,051.7	1,767	2.3	14.3	404	377	112	893
미국	18,690.8	5,965	71.9	71.9	5,930	13,267	2,671	21,868
영국	3,613.9	3,307	46.9	30.8	824	393	22	1,239
일본	4,374.8	3,870	0.8	17.2	6,436	841	643	7,967

* 한국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 미국 : NYSE+NASDAQ+AMEX / 일본 : TSE+JASDAQ+OSAKA

** 국채(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통안채, 은행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ABS 포함)

5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실적

- ☐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구축중
 - 다양한 투자·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위해 주식선물(15종목)을 상장(5.6)하고 돈육선물 상장(08.7.21)
 - * 돈육선물의 상장초기 양돈농가 등의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 강화
- ☐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산업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등 상장·퇴출제도 개선(08.9월)
-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편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 펀드상품 유형별로 펀드 판매보수·수수료의 비교공시(자통법시행령) 의무화
 - *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자율적 판매보수·수수료 인하 유도
 -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 절감 유도
 - * 수수료 20% 인하(08.5.13, 인하효과 1,110억원), 수수료 면제(9.22~12.31, 면제효과 1,026억원)

향후 조치계획

- ☐ 자통법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를 단계적(09하반기부터)으로 도입(금년중 개정법안 국회 상정 예정)
- ☐ 중요 불공정사건은 공동조사(금감원·거래소간)를 실시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를 강화하는 등 금년중 불공정거래·공시제도 개선

6.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추진 실적

-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추진

* 신정부 출범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자는 약 780만명으로 추정: 신용등급 7~10등급(약 720만명) + 사금융만 이용하는 자(약 57만명)

-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을 통해 소액 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출범(3.27일)하여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

* 08년 하반기 6개 복지사업자를 통해 총 200억원 지원

-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성실 이행자* 30.7만명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조기에 삭제(6.2)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활동 및 취업이 가능토록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자

- 대출기관 채무자의 채무재조정과 사금융 채무자의 저금리 환승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지원방안을 발표(7.24)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의 기부 또는 출연금 등 최대한 민간재원을 활용 (약 7,000억원)

향후 조치계획

- '08년 하반기중 신용회복기금 시범사업(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을 실시하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을 개시

- 악성 추심행위 근절, 서민금융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도 연내 국회 제출 예정(법무부와 공동발의)

7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

추진 실적

□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일반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08.7.1~)

○ 인허가 등 민원종류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민원인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금융당국 관련 민원을 신청

※ 불필요한 방문·탐색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목적

□ 인허가·등록신고 민원인에 대해 SMS, 이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업무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유권해석·인허가 상담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회신

< 08.7.1 시스템 개통후 접수·처리 실적('08.9.30 현재) >

구 분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합 계
		상담신청		상담신청		
건 수	317	36	370	34	169	926

향후 조치계획

□ 민원인 등 수요자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보완

※ (예시) 다수의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SMS 서비스 등

□ 유권해석 해석사례를 공개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관리하는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 노력을 추진

8] 적극적인 금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금융 위상 제고

추진 실적

□ 금융위원장은 美國 FRB·SEC(4.17~18), 英國 FSA(5.30) 등 전 세계 금융당국과의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구축

○ 또한, 증권분야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 및 정보교환 확대 등을 결정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APRC) 의장으로 선출

※ IOSCO APRC 의장국 진출로 국제금융계에서의 한국정부의 발언권 제고 기대

□ 지난 '08.5월 대통령 訪中 후속조치로 금융위원장 중국방문 (6.12~13)시 양국 금융당국간 금융협력방안 구체화

○ 중국 해외투자자격 은행(QDII)의 對韓 투자를 허용하는 협약체결 및 한국 기관투자자의 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시장 자격(QFII*) 승인

* QDII(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의 기관투자자 중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회사에 대하여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

**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 내국인 거래전용의 A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외국 기관투자자를 의미

- 중국 적격 은행의 투자허용으로 중국 자본자본 총유입액은 향후 2~3년간 60억달러로 전망(국제금융센터 추정)되고, QFII 승인(미래에셋 : 8.1일)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다양화

향후 조치계획

□ IOSCO APRC회의(10월, 발리) 주관 등 금융외교 적극 추진

□ 중국 현지에서 중국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IR)를 개최하여 적격 은행 유치활동을 전개

○ 금융당국간 정례회담 등을 통해서 한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확대에 대한 중국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9] 에그몽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투명한 금융거래 기틀 확립

추진 실적

-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테러자금조달·부패 방지를 위한 FIU의 역할을 제고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기틀 확립

- * 10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전세계 자금세탁방지기구(FIU) 협의체
- * 2008.5.25(일)~5.29(목),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 91개국·262명 참가, 아시아 최초 개최, '역대 가장 성공적 총회' 평가(그룹 의장)

①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의지 대내외 천명

- * 총리님의 개회식 참석과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의지를 천명

②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 * 금융위원장, FIU 원장 등의 언론기고(동아, 한경, 매경),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제고

③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IT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홍보

- * 터키, 싱가포르 등이 공유 요청, 자금세탁방지 IT시스템 견학

④ 우리나라의 FATF가입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의 지지 확보 및 문화·사교행사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향후 조치계획

- 에그몽 총회 개최를 통해 형성된 국가 이미지를 활용,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

- *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 11월 중 우리나라에 대한 가입심사 예정

① 은행소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현황

- ①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와 관련하여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금융감독기능의 강화를 추진
 - ①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②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 ② 증권·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면서, 시너지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추진
- ③ 동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입안과정에서부터 관련 전문가·교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중

향후 계획

- 시행방법·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조만간 확정된 후 금년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② 신종 금융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창출기반 마련

추진 현황

□ 그동안 신종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시장 창출 기반 마련 추진

-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및 CD, ATM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6.26발표)
-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서로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6.26발표)
-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범위를 확대* 추진(5.23발표)

* 보험회사에 자금결제업무 허용,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향후 계획

- 향후 소규모 특화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등 관련규정을 정비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 금융기관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 정비

③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추진 현황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유도
 -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창업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中企자금지원방안*(6.11)의 차질 없는 추진
 - * 합성CDO 및 유동화회사 보증도입, 펀드신용평가제도 도입 등
- 중소기업 지원TF를 구성(08.5월)·운영하여 개편방안 논의
 - KDF 신설 및 보증부문 운영방안, 자본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개선의 일부 내용을 발표
 - “산은 민영화 및 KDF 신설방안(6.2)”에서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기관인 KDF의 설립·운영방안을 마련
 -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6.11)”에서 4대 부문 18개 과제를 설정·발표하고 세부내용을 추진 중
 - KDF 신설 등에 따른 신·기보 등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을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7.28, 8.12)

향후 계획

- 추후 공개토론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을 확정
 - ※ 필요시 「신·기보법 개정안」 등 연내 국회 제출 추진
- 또한,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채은행, KDF,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4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현황

- ☐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를 조성을 추진
- ☐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법을 제정·시행('08.3)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
 - 두차례(6.30, 7.28) 회의를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의 기본 계획안을 심의 및 금융중심지 평가기준 등 마련 지자체 통지
- ☐ '08.9월 설립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관련 인·허가등 애로사항에 대해 One-stop Service 제공

향후 계획

- ☐ 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08.11월중)하면 금년중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계획
 - 지역 선정은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가능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계획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평가단을 구성하고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08.11월 지자체 신청전)
- ☐ 금융회사의 금융클러스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내 입주 금융회사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 시행('09년이후)
 - 금융중심지의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클러스터 내의 생활·경영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

5 금융개혁법안의 성공적인 입법화 추진

추진 현황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 현재 상반기중 마련한 개혁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금융입법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

향후 계획

- '08년 하반기중 21개 관련 법안 마련 후 국회 제출 계획
 - 제정 : 한국개발펀드법(KDF 조직 및 업무 등), 불법추심방지법(심야방문 및 전화 금지 등),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전자증권제도 도입 등) 등 3개
 - 개정 : 금융지주회사법(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한국산업은행법(대외채무 지급보증 근거 등), 은행법(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등 18개

<입법추진 대상 21개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소기업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개발펀드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법,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불법추심방지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8. 선물시스템의 오류 발생현황과 피해액 및 장애 발생에 따른 민원접수 및 소송현황(피고별, 원고별, 소송내용, 소송결과)

- 오류발생 대비 비상계획 현황 및 비상훈련 실시 현황

□ 거래소 통합이후('05.1) 거래중단 등 시장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 장애는 발생한 적이 없으며,

- 따라서, 이에 따른 피해나 민원접수 및 소송현황이 없음

□ 오류발생 대비 비상계획 현황 및 비상훈련 실시 현황

- (비상계획 현황) 거래소 IT Contingency Plan에 의거 비상사태의 유형별로 각 시스템의 비상운영체계를 구축·운영

- (비상훈련 실시 현황) 정기적으로 장애 대응 비상훈련을 시행중

- 매년 분기별 시스템 비상훈련 총 4회 실시

* 08년도에는 1분기('08.3.), 2분기('08.6.), 3분기('08.9.) 실시

- 매년 분기별 네트워크 및 보안관제 비상훈련 총 4회 실시

* 08년도에는 1분기('08.3.), 2분기('08.5.), 3분기('08.8.) 실시

9. 간접투자증권 판매인력 등의 자격기준, 능력평가 시험 응시 및 비용과 판매인력의 실적에 따른 수당지급 현황

□ 간접투자증권 판매인력 자격기준

	판매인력	취득권유인
정의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	판매회사로부터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자격요건	판매회사의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투자상담사 등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운용전문인력 시험 합격자
업무수행 조건	<p>판매업무 및 취득권유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판매인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p> <p>* 간접투자증권에 관한 법규, 판매행위준칙 등이 포함된 교육(30시간)을 마친 후 능력평가지험에 합격할 것</p>	

□ 간접투자증권 판매교육 능력평가시험의 지원자 및 합격률

구분	실시일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1회	2006.04.29	464	435	93.8%
2회	2006.06.11	9,660	3,896	40.3%
3회	2006.08.19	14,009	10,085	72.0%
4회	2006.10.22	15,027	4,685	31.2%
5회	2006.11.19	13,573	9,577	70.6%
6회	2007.02.04	9,111	2,529	27.8%
7회	2007.05.20	21,333	14,605	68.5%
8회	2007.08.19	19,697	8,330	42.3%
9회	2007.11.04	29,858	16,578	55.5%
10회	2007.12.23	33,883	14,982	44.2%
11회	2008.03.23	26,471	15,505	58.6%
12회	2008.05.25	21,406	9,962	46.5%
13회	2008.08.31	51,948	21,149	40.7%
합 계		266,440	132,318	49.7%

* 출처: 판매인력관리위원회

○ 시험 응시비용은 회당 20,000원임

□ 간접투자증권 판매 인력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지급 현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판매인력 및 취득권유인력의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판매회사가 자율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각 회사마다 천차만별임

10. 2005년 이후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휴면예금 규모와 집행현황, 휴면예금 사용
점검결과 보고서

- 휴면예금관리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3월에 설립되었으며,
 - 휴면예금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현황과 복지사업자 지원 현황은 첨부와 같음

< 첨부 >

은행별 휴면예금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현황

(단위:백만원)

은행명	출연금액	은행명	출연금액
국민	35,849	씨티	4,032
농협	27,213	부산	3,020
신한	24,221	수협	2,158
하나	20,226	전북	2,000
우리	16,578	경남	1,212
외환	12,911	산업	746
기업	11,487	광주	529
SC제일	9,630	제주	73
대구	4,641		
총 계		176,532	

보험회사별 휴면보험금의 휴면에금관리재단 출연 현황

(단위:백만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회사명	출연금액	회사명	출연금액
녹십자	628	롯데	1,333
아비바	655	삼성화재	4,942
삼성	16,530	제일화재	1,578
교보	10,483	동부화재	2,030
미래에셋	5,194	현대해상	1,976
AIG	684	메리츠화재	3,261
대한	10,647	한화	1,416
KB	43	LIG	2,765
라이나	1,293	흥국쌍용	1,009
하나	23	그린화재	1,055
PCA	67	계	21,365
동양	2,239		
금호	3,119		
흥국	3,925		
푸르덴셜	125		
신한	5,138		
SH&C	43		
알리안츠	6,409		
뉴욕	45		
계	67,290		

* 9.20일 현재

2008년도 복지사업자 지원현황

(2008.9.12 현재)

분야 (지원한도)	구 분	복지사업자명	2008년' 지원금 배정	교부금액*
소액금융 (250억원)	저소득층 창업·취업	사회연대은행	25억원	12.5억원
		신나는조합	3억원	계약체결 후 출금예정
		근로복지공단	32억원	계약체결 협의 중
	신용회복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60억원	60억원
		한마음금융	60억원	30억원
	사회적기업지원	실업극복국민재단	20억원	10억원
소액보험 (30억원)	저소득층 보험지원	보험회사	소액보험 상품개발 중	
합 계			200억원	112.5억원

* 신용회복위원회는 2회에 걸쳐 지원금 전액 교부완료. 그 외 복지사업자는 1차 지원분이 80% 이상 소진될 경우 나머지 지원 예정

11. 증권거래법위반관련

- 증권거래법위반 과징금 부과현황
(2005년~2008.8월말)
- 고액 과징금 체납현황
-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미수납금액 현황, 사유별 과징금
미수납 현황
- 소멸시효로 인해 결손 처분한 체납과징금 현황

□ 증권거래법위반 과징금 부과현황(2005년 ~ 2008년 8월말)

(단위: 백만원)

	건수	금액	비고
2005년	58	4,566	
2006년	29	10,082	
2007년	50	9,557	
2008년 8월말	26	4,223	
합 계	167	28,428	

□ 과징금 체납현황

- 붙임 엑셀 자료 참조

□ 소멸시효로 인해 결손 처분한 체납 과징금 현황

(단위:원)

	부과일	부과금 잔액	결손처분일자	비 고
까치00	2000.7.24	14,850,000	2007.12.26	폐업(03.11.19)
00시스템	2000.9.14	31,905,000		폐업(03.9.30)
아00	2000.12.26	2,364,000		폐업(01.11.28)
000텔레콤	2000.12.26	85,220		폐업(03.1.5)
00정보통신	2001.02.12	29,835,300		폐업(03.9.25)
0000류투어	2001.07.14	74,167,150		폐업(04.4.28)
00벨리	2001.10.27	7,500,000		폐업(03.10.23)
0000커뮤니케이션	2001.12.31	12,338,400		폐업(04.2.17)
총8건		173,045,070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관련 미수납 현황(08년 8월말 기준)

채납사업자 명	부과 과징금	부과사유	부과일	납부기한	미수납 사유
베000000	2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폐업(2005.3.31)
천0000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부도(2005.1.5), 폐업(2006.06.30)
신000	6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6-22	2005-08-26	폐업(2005.12.30)
(주)한000000	181,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1-24	2006-01-28	폐업(2005.12.21)
최00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3	2006-02-26	거소불명, 재력부족
새0000000(주)	1,222,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3-10	2006-05-14	상장폐지(2007.08.09), 재력부족
고00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10-31	발견재산 무, 현재 성동구치소 수감중
(주)모000000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10-31	발견재산 전무, 코스닥 퇴출
석00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2007-12-29	㈜0000000 전 대표이사로 지명수배중
박00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2007-12-29	㈜000000 전 대표이사로 행불중
㈜0000에너지(구 000000)	560,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2	2008-01-16	부동산 압류후 독촉중, 재력부족
㈜0000에너지(구 000000)	1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2008-01-26	부동산 압류후 독촉중, 재력부족
이00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2008-01-26	㈜000000 대표이사로 행불중
케00000(주)	14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발견재산 무, 재력부족
0000코리아(주)	152,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상장폐지, 재력부족
산양00(주)	31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주공장 압류, 재력부족
윤00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한0 대표이사, 재력부족
(주)한000000	325,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주공장 경매로 회사 도산함
대한00000(주)	441,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2008-06-01	주공장 압류, 재력부족
임00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2008-06-01	발견재산 압류, 재력부족
김00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4-24	2008-06-28	거소불명, 재력부족
동000000	40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4-24	2008-06-28	재력부족
㈜00소프트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5-26	2008-07-25	재력부족
㈜00토토	318,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2008-08-12	상장폐지(08.4.22), 폐업(08.4.30)
조00(00토토 대표이사)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2008-08-12	거소불명, 재력부족
오00(주)	1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2008-08-12	납부연기 요청하여 독촉장과 고지서 재송부함
㈜엘00	72,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008-08-25	재력부족
㈜씨0000	11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008-08-25	재력부족
㈜케000000	820,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30	2008-08-29	대표이사 구속 및 본사 검찰 압수수색, 재력부족
천0000(주)	9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4	2008-09-29	기일미도래
한국00000(주)	49,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9	2008-10-02	기일미도래
박00	1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2008-10-27	기일미도래
이00	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2008-10-27	기일미도래
합 계(33건)	7,989,000,000				

12.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 투자유가증권 정리 계획대비 회수 현황
- 매각 지연 사유

□ 투자유가증권 정리 계획 대비 회수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계획	실적	달성율
06년	10,896	37,795	346.9%
07년	6,542	3,958	60.5%

□ 2007년도에 총 3개사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매각 지연이유는 다음과 같음

* '07년 계획 :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 쌍용건설 : 07년중 매각이 시작되었으나 노조의 실사 저지 등으로 매각이 지연 (금년중 매각이 종결될 예정)

* '08.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8.9월 우선협상대상자의 쌍용건설 실사 완료

'08년말 가격협상,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등 매각 종결(예정)

- 대우일렉트로닉스 : 우리은행은 RHJ 컨소시엄('06.9), 모건스탠리 PE('08.2)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조 실사저지 및 고용승계 요구 등으로 협상이 결렬

* RHJ 컨소시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6.9) → 협상 결렬('07.5)

모건스탠리 PE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8.2) → 협상 결렬('08.8)

** 주관은행인 우리은행 주도로 제3자 매각 등 별도 처리방안 모색 중

- 대우인터내셔널 : 매각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보생명 상장 및 미얀마 가스전 장기판매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채권단이 매각을 보류

13. 상조업체 운영방식이 유사보험방식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

< 상조의 의의 >

- ☐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경조사에 대비하여 대금을 분납 또는 일시납으로 미리받고, 경조사 발생시 약정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業
- 할부금 완납이전에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종료후 당해 계약자에게 잔액을 일시에 청구

< 상조와 보험의 차이 >

- ☐ 상조업은 계약자의 납입금액과 장례물품(서비스)간 1:1의 등가교환관계가 성립
- 상조는 할부금 완납이전에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종료후 당해 계약자에게 잔액을 일시에 청구
- ☐ 보험은 보험가입자 전체 pool의 위험율에 기초하여 대수(大數)의 법칙에 따라 개별 보험료를 정하는 전체 pool : 1의 등가교환 관계
- 장례물품(서비스)의 가격에 기초하여 불입금액이 정해지는 상조에 비해 보험은 사망률이 우선적으로 고려
- * 상조는 계약자에게 금부제공시 차액(제고가액-납입금)을 징수하지만, 보험은 계약기간중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음

○ 실제 지급받는 보험금도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납입한 보험료와 동일하지 않음

* 보험은 계약기간중 “이용자의 부담”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 공유”
→ 따라서 1:1계약시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짐

□ 참고로, 일본의 경우 “상조업”을 “보험업”으로 보지 않고 용역 서비스에 대한 선불식 할부판매로 보아 할부판매업으로 규율

<참고> 일본의 상조업 관리 현황

1) 상조업 실태

- '06.3월 현재 일본은 319개 상조회사, 2,343만명의 가입자, 20,987억엔의 선수금 잔고 보유(경제산업성 자료)
- 일본의 상조회사는 전국단위의 업체는 소수이고, 주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회사
 - 상조회사는 장례식장(1,356개)과 결혼식장(394개)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계약건수 기준으로 장례(60%)와 혼례(40%) 비율임
- 판매되는 상품은 주로 6만엔~60만엔, 월 납입금은 천엔~5천엔, 납입기간은 60회~120회임

2) 상조업 법제 운영(할부판매법으로 규제 : 선납식 할부 판매)

가. 경제산업성의 허가 및 감독

- ☐ 선납할부거래의 특성으로 인한 고객 불입금의 보호를 위해 엄격한 허가제 운영
- 허가 및 허가취소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경제산업대신이 직접 담당
- 허가조건으로는 ①법인, ②자본금이 최소 2천만엔 이상, ③순자산 비율 90%이상, ④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 ⑤사용약관의 적정성 평가 등임
-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 항목은 경상수지상황, 유동비율상황, 부채 상황, 허가 후 일정기간 판매계획, 수지계획, 자본계획을 포함

☐ 상조회사에 대한 감독

- 경제산업대신은 상조회사의 전체자본상황파악 및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해 상조회사, 지정수탁기관 등에 대한 입회조사 가능

나. 영업보증금 공탁제도

- ☐ 영업 허가를 받은 상조회사는 본사 소재지 공탁소에 영업보증금 (최소자본)을 공탁하고 그 관련 서류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야 함
- 법무국 공탁소의 주된 영업소는 10만엔, 기타 대리점은 각 5만엔씩의 영업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함

다. 선수금 보전 조치

- ☐ 상조회사는 매년 2회(3월말, 9월말) 가입자로부터 수령한 회비총액의 1/2이 영업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고객불입금의 50%를 공탁소 또는 보증기관에 예탁하여야 함
- 상조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최소한 고객불입금의 50%에 대해서는 선수금보전조치를 통해 보호

라. 모델 약관 운영

- ☐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의 적정성 평가가 허가요건중 하나임
- 상조업자는 모두 동일한 약관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모델 약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약관을 사용해야 허가가 가능

14. 중소기업 보증지원 기관인 신·기보 관련

- 창업 및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 우선지원 방안

- 신보는 신규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율을 '07년 45.6%에서 '11년 65% 까지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 기보도 기술창업기업 비율을 '07년 41%에서 '11년 52%까지 제고할 계획('08.6.11,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금융지원 방안")

- 공적보증에 맞는 보증 운용 및 비효율적인 보증 축소
· 정비 방안
- 장기보증이용 문제

□ **거액·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감축으로 더 많은 신규기업 지원**

- 거액보증기업의 보증이용한도를 축소(100→70억원)하고
15억원 이상시 가산보증료를 부과(06년 0.1%p→08년 0.3%p)*

* 신·기보 : '06.1월 시행

- 매출액 300억원 이상 신용도 우량기업(신보 BBB,
기보 A 이상)의 부분보증비율(5%p) 감축('06.1월 시행)

□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단계적인 보증졸업 프로그램 운영**

- 5년 초과시 가산보증료('06년 0.1%p → '08년 0.3%p)
부과, 10년 초과시 부분보증비율(5%p) 감축('06.1월 시행)

- 예비 장기기업(7년 초과)은 “분할상환보증”으로 전환
하여 점진적인 보증졸업을 유도*

* 신보 : 08.1월, 기보 : '08.2월 시행

- 중복보증 문제 등에 대한 업무특화 방안
- 신보 단독거래기업에 대해 기보가 신규로 중복보증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

□ 중복보증감축 등 업무특화 방안

- 그간 중복보증 해소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특화방안(신보: 일반 보증, 기보 : 벤처·이노비즈 기업보증, '05.6) 등으로 인해 중복보증은 감소 추세임
- * 신보 중복보증 비중 (%) : ('05) 26.0 → ('06) 11.9 → ('07) 8.0 → ('08.5) 7.3
기보 중복보증 비중 (%) : ('05) 52.9 → ('06) 26.5 → ('07) 17.7 → ('08.5) 15.2

- 기보의 벤처·이노비즈 심사 및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가 부실해질 우려에 대한 대책

□ 벤처·이노비즈기업의 보증사고율이 전체기업사고율에 비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등

○ 현재까지는 벤처·이노비즈기업에 대한 보증이 부실화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

【벤처·이노비즈기업 사고율 추이】

(단위:억원, %)

구분		'04	'05	'06	'07	'08.06
벤처기업	사고잔액	2,773	2,292	1,523	1,485	668
	사고율	9.1	7.3	3.3	2.6	1.1
이노비즈기업	사고잔액	1,581	1,291	1,249	1,729	851
	사고율	10.2	9.4	3.0	3.1	1.4
전체기업사고율		12.9	10.3	6.1	5.4	2.1

□ 앞으로도, 기술평가시스템의 전문화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한 보증지원으로 부실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15. 신·기보 통합 관련

- 금융위원회의 계획안 및 입장, 방향, 추진계획, 추진에 따른 어려운 점, 해결방안

☐ 신·기보 통합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최종결정할 예정

16. 권혁세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22일 KBS 라디오 출연

- 키코 투자로 인한 중소기업 손실에 대한 대책 강구하겠다고 발언함.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책

☐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08.10.1 보도자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KIKO거래기업 포함]

2008. 10. 1.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목 차

I. 중소기업 자금동향

II. 중소기업 유동성지원방안

1. 기본방향

2.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지원 확대방안

가. 기본방안

나.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다. 중기 Work-out 원활한 추진

라. KIKO거래기업 지원방안

3.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 방안

가. 신규 유동성 지원 확대

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

다. 旣 발표된 중소기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III. 기업자금사정에 대한 점검·평가 강화

〈별첨〉 KIKO기업 관련 종합지원대책 추진 필요성

1. 중소기업 자금동향

□ 최근 중소기업은 높은 원자재 가격, 수출부진, 국내내수 침체, 환변동에 따른 손실 등의 多重苦를 겪고 있으나,

○ 국내외 금융불안 등에 대비한 시중은행의 자금긴축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 자금수요 측면에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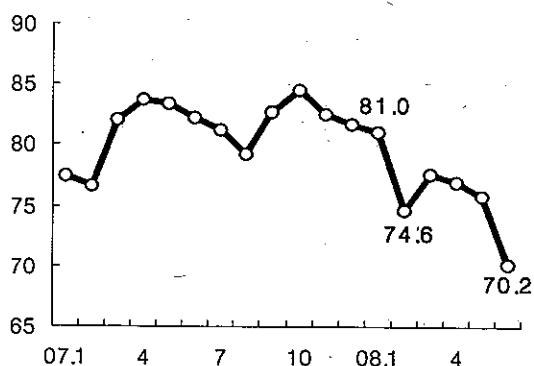
○ 원자재 구입비용 상승과 경기둔화에 따른 판매대금 결제 지연* 등의 영향으로 향후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 어음 평균결제기간(일) : (07.3/4)121.7 → (4/4)122.1 → ('08.1/4)122.2 → (2/4)1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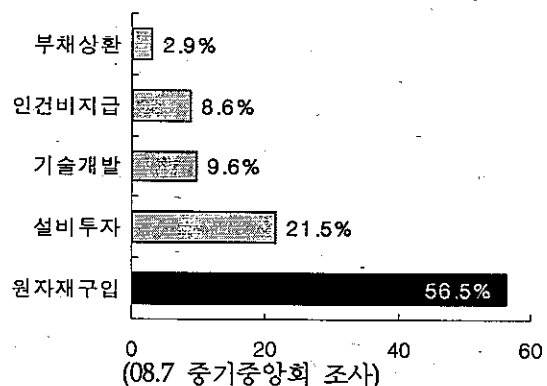
* 판매대금 현금결제율(%) : (07.3/4)63.3 → (4/4)63.6 → ('08.1/4)63.7 → (2/4)61.9

○ 실제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자금사정(BSI)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



< 차입자금 주요 사용처 >



□ 이에 비해 자금의 공급측면은

- '08.8월말 현재 은행의 중기대출이 총 413.8조원에 달해
금년들어 43.8조원(11.8%) 증가하고 있으나,

- 그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불안이 본격화된 8월이후 더욱 두드러짐

(단위 : 조원, %)

	'05년	'06년	'07년	'08년			08.8월 잔액
				상반기	7월	8월	
중기대출(증가율)	12.4(5.1)	45.3(17.7)	68.2(22.6)	35.1(9.5)	6.1	2.6	413.8(11.8)
개인사업자(증가율)	1.8(2.1)	13.7(15.0)	19.1(18.1)	5.6(4.6)	0.9	0.3	131.4(5.6)

* 은행의 中企대출태도지수(한은) : (07.1/4)25→(4/4)-28→(08.1/4)-22→(2/4)-22→(2/4)-19

- 아울러,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2.0조원수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5,973억원(22.6%) 감소
하는 등 하반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보다 심화될 전망

* 직접금융조달실적 : ('07.1~7월) 26,375억원 → ('08.1~7월) 20,402억원

□ 또한, 최근 KIKO로 인한 손실기업이 확대*되는 등 일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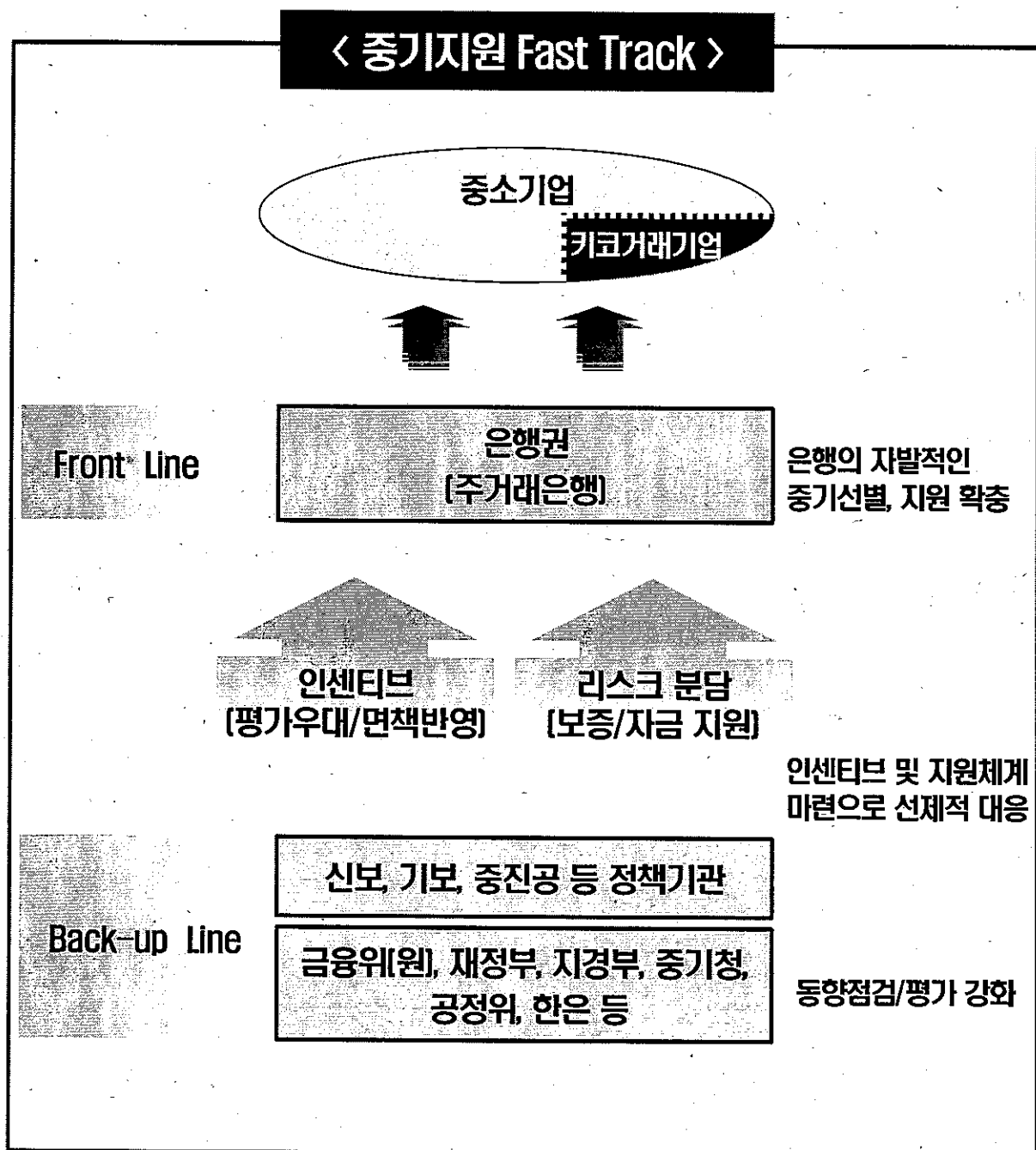
* '08.8월말 기준(환율 1,089원) KIKO 거래손실은 1조 6,943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거래손실은 1조 2,846억원(실현손실 5,062억원)

⇒ 따라서, 시중은행 등 민간과 정책금융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중기자금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 이례적으로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KIKO 등 파생상품
손실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

II.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방안

1 기본 방향



〈중기 자금공급의 Paradigm Shift〉

□ 중전에는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확대 및 보증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도

○ 동 방안은 보증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 강화차원에서 무차별 대출축소를 진행해 중기지원의 과도한 위축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 노정

* (예) 08.8월 청년창업특례보증(3,000억원)을 도입→ 9.17일 현재 20억원 지원

⇒ 따라서, 경기위축기에도 민간부문의 중기지원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발적인 중기 선별·지원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① 은행이 자체적인 중기선별기능을 활용하여 회생가능한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및 지원체계 구축*

* 민간의 중기지원 역량을 최대한 활용

②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구조조정 비용을 감축하고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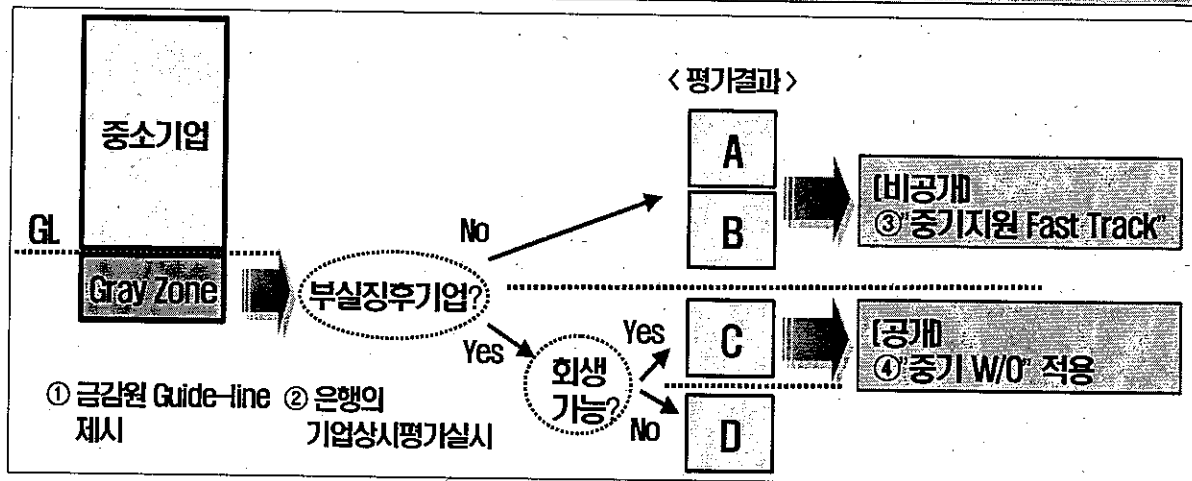
③ 실제 자금집행실적을 대상으로 점검과 평가를 집중적으로 강화

2

은행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

가. 기본방안

◇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중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1 금감원이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신용평가등급이 정상하위등급~요주의등급이고 일정한 요건 충족기업

2 은행들의 상시평가결과 4개 그룹으로 구별*

* A(정상), B(C·D등급 될 가능성 큼), C(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 D(부실징후기업이며 회생불가)

3 A/B등급* 기업에는 "(비공개)중기지원 Fast Track"을 마련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신규유동성 공급을 지원

* 정상기업으로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은행들이 평상시처럼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조절적 프로그램 마련

4 C등급 기업에는 종래 "(공개)중기 Work-out" 프로그램* 적용

* i)기축법상 구조조정협약, ii)채권은행협약, iii)대주단협약, IV)법정관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신속한 회생을 지원

나.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 (~09.6월)

① **[지원대상]**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 은행의 상시기업 평가 결과 A/B등급 기업

② **[지원방식]** 주채권은행별로 '비공개' 자율지원 프로그램인 "중기지원 Fast Track"으로 지원(채권분산시 공동프로그램 추진)

* 주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심사시 신·기보 '특별보증' 심사도 함께 진행

○ 금감원, 주채권은행이 보증기관과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원프로그램을 유형화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은행들은 이를 개별 사례별로 일부 보완하여 적용 → 주채권은행에 대한 구속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

○ 경기조절을 위해 한시적(~09.6월)으로 실시하여 은행들의 위축된 대출성향을 전환하고, 사후 평가 실시

③ **[추진방식]** 경기위축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여건 조성

① **(인센티브 확충)**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시 中企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비중 확대

* (예) ①경영관리부문(M)에 中企대출비율 준수실적비중(現12.5%) 상향조정
② 中企대출을 유동성지원/기타대출로 구분하고 유동성대출 비중 상향조정

- 불공정거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지원 중소기업과 은행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성과공유상품 유형(例)

- ① 대출에 따른 이자수취 외에 신주인수권을 부여
- ② 대출(연장)시에는 이자율을 감면하되, 장래 기업이 성과시현시 공유
- ③ 대출채권을 전환사채(CB)로 전환(금리조건 등 유지)

② (負責감 완화) 고의·중과실이 없는 담당 임·직원은 면책되도록 각 행 내규 및 금감원 검사결과에 반영

- Fast Track상 신규취급여신은 은행 경영성과평가(KPI) 대상(영업점 및 임원·본부 성과평가)에서 제외*

* 동 기업 신용등급 하락시 총당금 추가적립 및 금리손실 등이 감점요인이 되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각 은행의 실무책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③ (특별보증 지원) 은행의 신규여신지원과 관련한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신·기보에서 특별보증 지원

※ 특별보증 지원의 주요내용

- (보증한도 및 보증금액 사정시 우대) 기보증 지원금액에 불구하고 최고 1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보증금액 사정시 매출액 한도 등을 일부 상향조정
- (신속한 보증지원)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및 전결권 하향조정 등
- (임·직원 면책) 특별보증취급관련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다. 중기 Work-out의 원활한 추진

① [지원대상] 상시기업평가 결과 C등급 기업

② [지원방식] 종래 (공식)워크아웃절차*에 따라 지원방안** 모색

* W/O절차 : 기촉법상절차,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 법정관리 등 활용

* 지원방식 유형(例) : 손실규모 크기에 따라 (大)출자전환, (中)대출지원, (小)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

③ [추진방식]

① (인센티브 및 負責감 완화) Fast Track과 동일하게 지원
(~09.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② (정책기관 지원 확대) 구조조정과정에서 희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중진공의 「희생특례자금」을 지원

* 중진공이 주거래은행과 현장실사(종합진단) 등을 통해 선정

③ (W/O참여율 제고) 신·기보 구조조정 결정권한을 본점에
집중*하여 보다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4.7.7)」 이후 신·기보 업무방법서
개정으로 구조조정기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도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負責감 문제로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문제 개선

- “대주단 협약”에 증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 대주단협약의 실효성을 제고

* 협약 가입률(9.26일 현재, %) : 전체(70.5), 은행(100), 저축은행(94.4),
증권업(4.4), 자산운용사(6.5)

<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절차 비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01.6월~)	채권은행협약 (‘04.7월~)	대주단협약 (‘08.4월~)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 부실징후기업 ‘대기업’이 주요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부실징후기업 ‘중소기업’이 주요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건설기업 신용공여액 제한없음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가입 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협약(가입 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협약(가입 자율)
협약가입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보험, 증권, 여전 등 全 금융기관 예보, 캠코, CRV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은행 등 23개기관 신·기보, 수출보험공사, 캠코, 중진공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全 금융기관 중 70.5% 은행(100%), 저축은행(94.4%), 증권(4.4%), 자산운용(6.5%) 등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자 75%동의시 출자전환, 채무재조정 경영정상화 계획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촉법절차와 거의 동일 채권행사 자동유예 공동워크아웃추진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행사 1년 유예 신규자금 지원은 개별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자전환, 채무재조정x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아웃추진현황(기업수) (01.9~07.12) 71개 기업희생률 :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아웃추진현황(기업수) (05)2,120~(06)1,416~(07)952 기업희생률 : 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4월 1건 시행 (채무기한연장)

라. KIKO 거래기업 지원방안

(1) 기본방향 :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에 KIKO의 특성을 반영

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 발생

- * KIKO는 장외파생으로 타은행과의 거래내역을 모름(정보비대칭성) → KIKO가 이슈화됨에 따라 기업은 "거래사실"만으로 불이익 볼까 봐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은행은 정보불확실로 자금지원에 더욱 소극적

②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집중되어 대부분 종료되는 한시적 구조

- * '08.8월말 KIKO계약잔액 중 78.5%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KIKO 만기도래 현황('08.8월말 현재)

구분	08년					09년					10년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이후
금액(억\$)	7	8	8	7	30	18	14	7	5	44	5
구성비(%)	8.9	10.1	10.1	8.9	38.0	22.8	17.7	8.9	6.3	55.7	6.3

③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버헤지 등으로 인한 미실현손실의 대거 반영으로 '흑자도산'이 우려

⇒ KIKO의 특성을 반영한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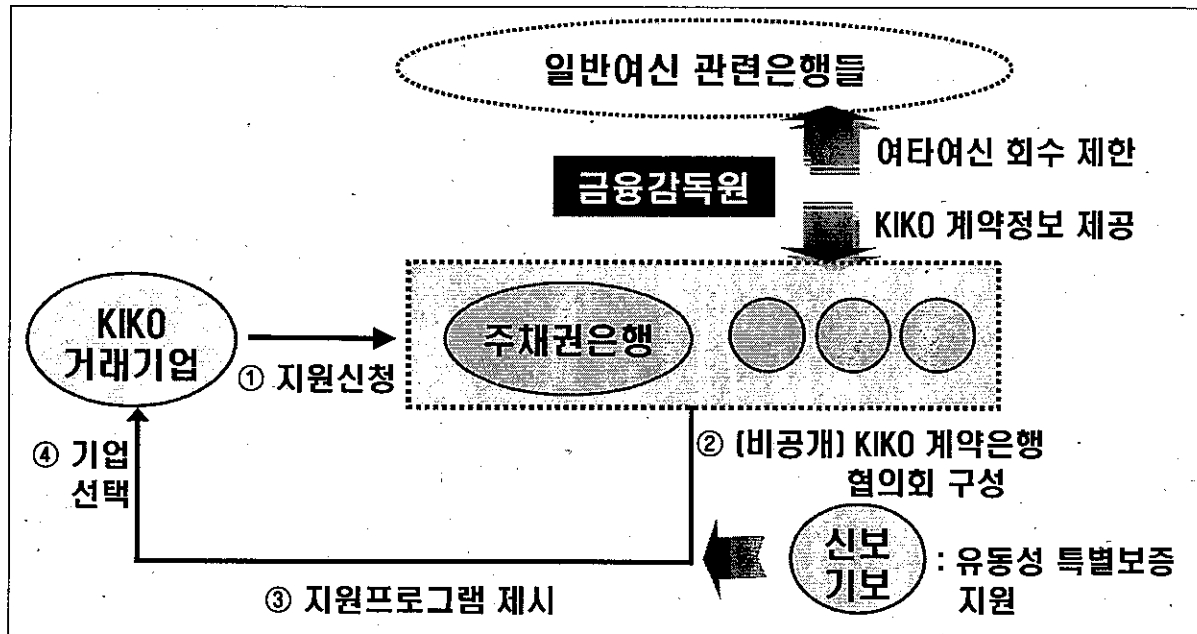
- ① 금감원을 중심으로, KIKO채권은행들간 「공동」·「비공개」 프로그램인 "KIKO거래기업 Fast Track"을 마련하여 시장실패 보정

- ② KIKO사태를 방지할 경우 태산LCD(주)의 사례*처럼 은행·기업 모두 큰 손실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Win-Win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태산LCD(주) 법정관리 진행으로 하나은행은 2,800억원손실

- ③ KIKO손실부분만을 우선적으로 떼어내서 조정함으로써, 보다 간명한 처리 추진

[2] 유동성 지원 추진방안



- ① 기업이 "Fast Track"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감원을 중심으로 비공개 대상인 「KIKO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

* KIKO관련 정보집중으로 KIKO 거래기업별 KIKO 계약은행 파악 지원

- ② 협의회(주채권거래은행)가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의 선별기준인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지원방법 등을 제안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구조

* KIKO손실만 대상으로 하고, 은행들이 여타 여신을 회수할 수 없도록 제한

③ 구체적인 지원방안(사례)

- ① (일괄청산) 현 시점에서 손실액을 확정짓고 동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 여신* 공급(또는 출자전환)

* 기업의 영업이익 흐름을 감안한 채무상환 일정·금리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보증기관간의 협력상품을 개발

- ② (만기까지 분할상환) 만기까지 환위험을 헷지하는 상품을 추가 제공하거나, 매월 정산시점에 신규 여신을 공급

* 매월 정산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credit-line”형 보증지원

- ③ (상환일정 연장) 은행·기업간 상환일정 연장 등 KIKO 거래구조 변경을 통해 일시 정산부담 경감

- ④ (손실규모가 미미) 수수료 감면 및 이자율 할인 등 지원

⇒ 원칙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금감원, 채권은행 협의회(국채은행 포함) 및 신·기보가 공동으로 각 회사에 가장 적합한 회생프로그램을 제공

- ④ KIKO만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술한 「중기 워크아웃」 절차에 의하여 지원

[3] 정책적인 지원방안

- ① (Fast Track 프로그램 적용) 인센티브 및 負責감 완화,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지원 등에서 “중기지원 Fast Track” 지원을 적용

* 일시 정산금 해소를 위한 신규여신 지원규모가 큰 경우 보증기간(장기 보증), 보증한도 등에서 KIKO손실의 특성을 반영

- 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KIKO 기업피해 사례 접수·처리 및 지원상황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운영

* 금융위 주관으로 중기청·금감원·은행권을 포함해서 구성

- 주 1회 손실기업의 유동성 지원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③ 은행의 불완전·불공정 판매에 대한 감독 강화

○ 금감원, 중기청·중소기업 중앙회와 피해사례 접수·조사

* 9.30일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KIKO 관련 민원은 29건
: 계약재조정 등 조정유도 11건, 기업주장 기각 12건, 조사중 6건

○ KIKO거래은행(13개) 특별점검 실시(금감원, 8.21~9월말)

- 금감원의 민원 조사·은행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측의 잘못 입증시 기관조치·관련자 문책 요구 등 제반조치 예정*

* 은행-기업간 최종적인 손해배상은 법원 판결로 가능

④ KIKO 손실기업과 은행간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소송 지원

⑤ 파생상품 거래제도 정비 등 추진

○ 은행간 파생거래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판매시 은행의 설명의무 강화방안 마련

○ 파생상품관련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주식으로만 기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검토

○ 환헛지 교육 강화, 파생상품 설명자료 개선 등으로 상품구조, 손실 가능성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파생상품의 위험에 대한 인지 강화

3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 방안

가. 신규 유동성 지원 확대

- ◇ 전술한 은행 중심 지원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유동성을 다음과 같이 공급·지원해 나갈 계획
 - 한은 총액한도대출 및 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P-CBO 신규발행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약 4.3조원 이상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 확대

(1) 자금지원 확대

- ① (한은 유동성 공급)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적기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금통위 의결사항)
- ② (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산은(2.5조→3.3조)·기은(2.4조→2.6조)·수은(6.5조→7조)의 중기자금 공급액을 3.3조원 확대
 - 5개 국책기관 中企 자금지원의 조기집행

- * (산은·기은·중진공) KDF 간접지원방식의 pilot-test 등을 위해 2,500억원 간접지원(10월초)
- * (산은·기은/신·기보) 산은 자금(2,000억원)과 신·기보 보증을 결합하여 기은이 저리 긴급운영자금 지원(10월초)

- ③ (정책자금지원 확대) 일시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자금 지원(200억→500억원*)

- * 회생특례자금(10억원 한도, 3년 만기, 7.49%)은 현재 약 70%가량이 집행이 완료되어, 재해복구자금(500억원)의 일부 전용 추진

[2] 보증지원 확대

① (보증배수 확대운용) 기타 중기대출 지원규모 확대지원과 관련하여 보증규모(배수) 확대 운용*

* 08.8월말 현재 신보 10.9배(유동화보증 포함시 7.5배), 기보 6.5배, 지신보 3.6배

○ 신보·기보·지신보의 보증여력을 감안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4조원 확대

* 신보 28조→29.5조원, 기보 11조→12.5조원, 지신보 5.3조→6.3조원

② (영세자영업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규모 확대 (1조원→1.5조원) 및 업체당 지원한도 상향(1→2천만원)

* '08.4월~자금(총 1조원) 소진시까지 지원, 업체당 1천만원 한도

'08.9.26일 현재 66,824개 업체에 6,572억원 지원

③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신보에 '공사계약체결~공사대금 결제기간'간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리지론보증" 도입*

* 보증한도 확대(30억원→70억원) 및 부분보증비율·보증료 우대

- 보증규모는 '08년 2천억원, '09년 5천억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보증료부담 완화를 위해 신보 "이행담보금 보증"의 보증상대처를 한시적(09년말) 확대*

*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투법상 시행사업자 → (확대) 유가증권 시장상장·코스닥등록법인, 신보 기준을 충족 민간기업

④ (장기보증 감축속도 조절) 신·기보의 하반기 장기보증의 감축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일시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 강화(보증한도 일부 유예 등)

(3) 中企 회사채발행 지원 등 대체 유동성 공급

① (中企 회사채발행 지원) 금융위 지침을 통해 신보에서 연말까지 신규 "P-CBO" 1조원 발행

* 신보 유동화계정 재원(약 1.2조원) 활용, 리스크관리대책 함께 강구

- 中企회사채발행 지원을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 도입도 병행 추진(신·기보법 국회제출, 08.12월)

②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가용재원 1,000억원*을 조기 집행하여 민간 벤처펀드 투자재원 확충

* 민간 투자재원 약 3,000억원 결성 효과 유발

** 既결성 모태펀드 출자조합(약 2.5조원)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확대
(현재 모태펀드 6,785억원을 출자하여 95개 조합, 24,856억원 결성)

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11월중 국회 법안제출)

-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계약시 납품단가 조정 조항과 분쟁 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명문화

□ 대기업-협력중소기업간 '파트너십 협약' 강화

- 현금결제 확대, 협력기업의 원자재 구입자금지원 등
- 네트워크론 결제(0.3→0.4% 세액공제) 및 대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 출자(수익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면제)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9.29일, 기사행)

□ 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단가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서면실태조사업체 수 : ('00) 4천개→('03) 3.5만개→('06) 9만개→('08) 10만개

다. 既발표된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既발표된 중기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책기관간 협력상품을 출시하는 등 협력을 보다 강화

- ① (원자재 구입자금지원) 산은(2조원)·기은(1조원)·수은(0.6조원)의 특별자금지원 확대 및 신·기보 특례보증 1조원 지원

* 산은 1조 244억원, 기은 1조 9,174억원, 수은 7,441억원
신보 1,192억원, 기보 133억원 지원(9.26일 현재)

-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기은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3,000억원(08.8월)*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신보에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보증 도입(08.10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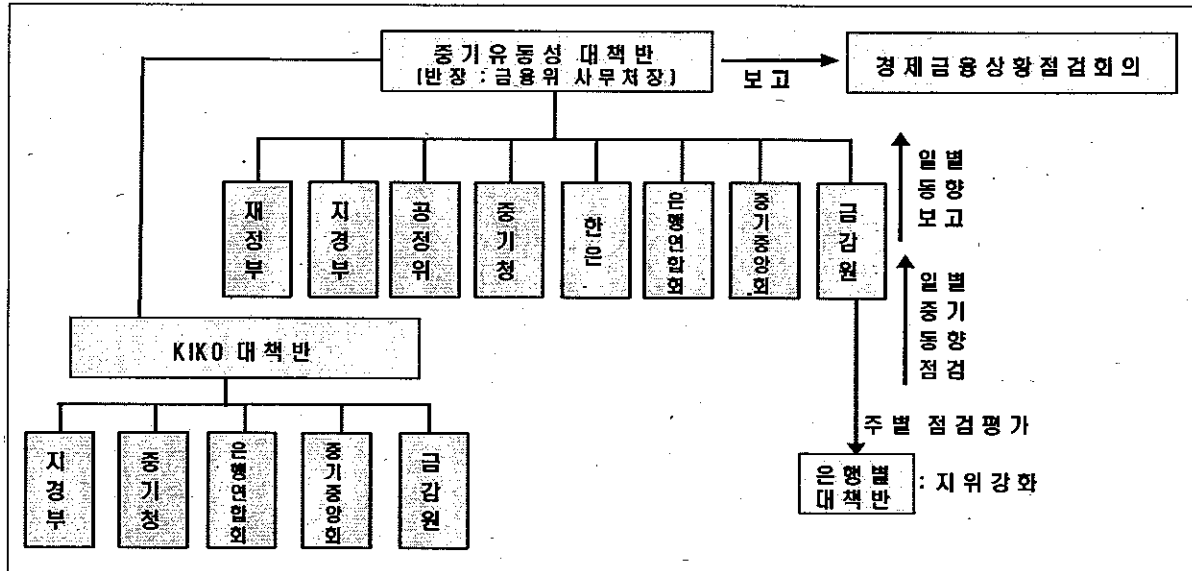
* 기은 7억원(9.26일 현재)

- ③ (창업·고용창출지원) 신보 창업보증공급을 2조원 확대*(5조원→7조원)하고, 청년창업특례보증 1,000억원 지원** 관련 기은에 “청년창업기업대출” 도입**(08.9.2)

* 4.7조원(9.23일 현재), ** 166억원(9.26일 현재), *** 45억원(9.26일 현재)

- ④ (기술기업 지원강화) 기보 “R&D과제 성공기업 특례보증”(500억원) 및 기은 “R&D사업화대출(Success Biz Loan)” 도입(9.25)

III. 기업자금 사정에 대한 점검·평가 강화



□ 금융위 산하에 관계부처 등으로 “중기유동성 대책반*”을 설치하고, 각종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평가

* 반장(금융위 사무처장), 관계기관(재정부·지경부·중기청·공정위·한은·금감원)국장급, 중기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 ‘KIKO 대책반’은 산하에 별도 구성(향후 건설·조선부문 대책반도 추진)

○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 금감원은 기업자금사정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은행들의 중기 유동성 지원현황을 집중적으로 평가

○ 각 행별 “중소기업 대책반” 지위를 강화(은행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 금융위/금감원에 직접 보고)

○ 금감원은 일단위로 중기대출 동향점검 및 금융위(대책반)에 보고하고, 은행별 유동성 지원대책 추진현황을 주단위로 평가

* CAMELS 등 은행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은행에는 금감원 감사 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별첨〉

KIKO만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의 현실적 제약

□ 9.16 태산 LCD등이 KIKO 손실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KIKO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 집중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할 때, 'KIKO 피해기업 구제대책'만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

① 최근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은 환헤지 거래 손실 뿐 아니라, 원자재가격 상승·매출부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

②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환헤지 거래 손실도 KIKO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수출기업들은 환변동보험, 일반 풋옵션·선물환, KIKO, 피벗, 스노우볼 등 수많은 형태의 환율 관련 헤지 계약을 체결

※ 태산 LCD도 복수의 금융기관과 KIKO, 피벗, 선물환 등의 계약 중복체결 (수출금액의 500% 규모의 통화파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금감원))

③ KIKO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별로 환차익 규모, 과도한 계약여부·은행의 불완전 판매여부 등 복잡한 변수 내재

- KIKO 계약비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정도 상이

* 전체(517개 기업)적으로는 KIKO 손실을 제외하고도 2.45조원의 환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평균 KIKO계약비율(콜옵선매도금액/수출금액) 40.4%)

< KIKO 손익 현황(금감원, 8월 말기준) >

(단위 :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잔액 (억달러)	총 손실(A)			환차익 (B)	총 손익 (A+B)
			실현손실	평가손실			
중소기업	471	59	△ 12,846	△ 5,062	△ 7,784	29,580	16,734
과도계약	56	13	△ 2,771	△ 1,053	△ 1,718	2,320	△ 451
대 기업	46	20	△ 4,097	△ 1,372	△ 2,725	11,890	7,793
과도계약	7	10	△ 1,837	△ 451	△ 1,386	1,015	△ 822
합 계	517	79	△ 16,943	△ 6,434	△ 10,509	41,470	24,527
과도계약	63	23	△ 4,608	△ 1,504	△ 3,104	3,335	△ 1,273

주 1) 과도계약은 수출금액을 초과하여 KIKO 계약(콜옵션 매도금액기준)을 체결한 경우

2) '08년 상반기 중 실현손실

3) 연수출액×환율상승액[환율상승액(추정)=현재환율(1,089원)-가중평균행사환율(944원)=145원]

- 또한 기업 피해 원인이 기업자체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인지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의한 것인지도 개별 건별로 규명 필요*

* 현재 민원접수·조사(27건), KIKO거래 은행 일제점검 등을 통해 조사
중에 있으며, 최종적인 권리구제는 법원의 판결(민사소송)로 가능

➔ **KIKO 피해 기업만을 따로 구제하는 것은 여타 기업·
거래와의 형평성 및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

*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KIKO 거래로 '부당'하게 '실질적인 피해'를
본 기업만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것이 사실상 곤란

□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

- ①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기준으로 우량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마련·추진
- ② KIKO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기업의
부당한 손실이 없도록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17-1. 외부기관으로부터 금융위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현황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파견기관에서의 직위 및 담당업무, 금융위에서의 배치부서 및 담당업무, 비용지급기관 등)

17-2. 민간인의 정부기관 파견 법적 근거

□ 외부기관으로부터 금융위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2008. 8. 31 현재)

근무부서	파견근무자			원소속 기관 담당업무	파견 기간	파견 사유 (담당업무)	비용지급 기관
	원소속	직위(급)	성명				
자문관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	금융회사 금융전략변화 연구	08.4.7~ 09.4.6 (1년)	위원장 자문업무	원소속기관
"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이○○	금융 관련 경영분석 및 건전성감독	08.4.21~ 09.4.20 (1년)	경제동향, 자료수집	"
"	"	"	한○○	금융 관련 경영분석 및 건전성감독	08.5.15~ 09.5.14 (1년)	경제동향, 자료수집	"
법률 자문관실	"	"	장○○	금융 관련 경영분석 및 법규적용	08.6.23~ 09.6.15 (1년)	경제동향, 자료수집	"
"	자산 관리공사	대리	이○○	유가증권 및 채권관리전반, 공매업무	08.4.21~ 09.4.20 (1년)	일정관리, 회의준비, 자료수집	"
혁신 행정과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정○○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	정부업무평가, 혁신업무수행	"
"	자산 관리공사	과장	오○○	국유재산관리 담보채권관리	"	과장급 과태료 징수 및 관리	"

(2008. 8. 31 현재)

금무부서	과 결 군 무 자			원소속 기관 담당업무	과결 기간	과결 사유 (담당업무)	비용지급 기관
	원소속	직위(급)	성명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조○○	법률자문 소송업무수행 감독규정심사	08.4.21~ 09.4.20 (1년)	법률자문, 소송업무 수행	원소속기관
"	예금 보험공사	과장	장○○	부실기관정리 송무업무	"	법률자문, 소송업무 수행	"
의사운영 정보팀	금융결제원	과장	박○○	금융정보공유 분석센터운영 정보보호기획	"	정보보안	"
"	예금 보험공사	과장	박○○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통신망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
금융 정책과	중소 기업은행	대리	이○○	외환여신취급 업무,종합기획	"	금 융 회 사 여신관련 통계	"
"	한국 증권금융	과장	정○○	우리사주 주가 지 수 개발,관리	"	외환 및 자본시장 관련 통계	"
금융시장 분석과	농협중앙회	"	황○○	자금운용 관련업무	"	금융시장 동향분석	"
"	한국 증권금융	대리	이○○	금융리스크 관리	"	금융시장 동향분석	"
산업 금융과	산업은행	과장	박○○	산업은행 경영전략, 경제분석	"	국 책 은 행 민영화 관련 업무	"
금융구조 개선과	예금 보험공사	과장	김○○	예금보험 제도 연구	"	공적자금 및 예 보 관 련 업무	"
"	"	주임	황○○	정리금융 공사 관련 업무	"	공적자금 및 예 보 관 련 업무	"
글로벌 금융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박○○	신 BIS협약 도입업무	08.6.23~ 09.6.15 (1년)	금 융 회 사 진 · 출 입 지원	"
"	산업은행	과장	이○○	기업금융 업무	08.4.21~ 09.4.20 (1년)	금 융 클 러 스터 지원	"

(2008. 8. 31 현재)

근무부서	과 전 근 무 자			원소속 기관 담당업무	과전 기간	과전 사유 (담당업무)	비용지급 기관
	원소속	직위(급)	성명				
은행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윤○○	은행법규 은행건전 경영 지도	08.6.23~ 09.6.15 (1년)	은행 산업 동향 파악	원소속기관
"	예금 보험공사	주임	한○○	불공정거래 관련통계 자료 작성	08.4.21~ 09.4.20 (1년)	금융 시장 동향 파악	"
보험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박○○	외국계 원수사지점 검사업무	"	보험 산업, 보험 시장 관련 업무	"
중소서민 금융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정○○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사 인·허가	08.4.21~ 09.4.20 (1년)	상호저축 은행 관련 업무	"
"	"	"	장○○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 검사	08.6.23~ 09.6.15 (1년)	여신전문 금융업, 상호금융	"
자본 시장과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이○○	제도개선 종합기획 업무	08.4.21~ 09.4.20 (1년)	유가증권· 코스닥규정 제·개정	"
"	증권업협회	과장	허○○	분쟁자율 조정업무	"	증권산업 자율규제	"
자산 운용과	증권예탁 결제원	과장	신○○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업무	"	자산운용업 통계 조사 및 관리	"
공정 시장과	증권선물 거래소	과장	박○○	불공정거래 심리, 심의 조정	"	증조심안건 검토, 사감위 현안 검토	"
"	공인 회계사회	감리위원	전○○	기업공시 시스템구축, 회계연구 위원회 운영	"	회계감사기준 검토, 회계 법인등록	"
FIU 제도운영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김○○	금융회사 인·허가 감독업무	08.6.23~ 09.6.15 (1년)	검사 지원 및 사후관리	"
FIU 심사기획팀	"	수석검사역	이○○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업무	08.4.21~ 09.4.20 (1년)	금감위·금 감원 요청 거래 분석	"

□ 민간인의 정부기관 파견 법적 근거

□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거 민간전문가 파견 가능

- (금감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금감원의 업무범위중 금융위에 대한 업무지원이 명시
- (기타기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에서 국가적 사업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외 단체 등의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관련 법률 별첨

<별첨> 관련 법률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18-1. 키코(KIKO) 관련 손익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08.8월말 현재 기업들의 KIKO 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KIKO 손익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잔액 (억달러)	총 손실(A)		
				실현손실 ²⁾	평가손실
중소기업	471	59	△12,846	△5,062	△7,784
과잉계약	56	13	△2,771	△1,053	△1,718
대 기업	46	20	△4,097	△1,372	△2,725
과잉계약	7	10	△1,837	△451	△1,386
합 계	517	79	△16,943	△6,434	△10,509
과잉계약 ¹⁾	63	23	△4,608	△1,504	△3,104

주1) 과잉계약은 수출금액을 초과하여 KIKO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08년 1~8월중 실현손실

18-2. 키코(KIKO) 관련 그 동안의 회의내용, 보고 자료 및 대책 등에 대한 자료

□ 금융당국에서는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금년 3월경부터,

- 금감원을 통해 은행들이 고객의 위험을 고려한 통화파생 거래를 하도록 유도(08.3월 전 은행에 공문하달)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환리스크 관리 설명회(08.4월) 등을 개최하고,
- KIKO 관련 민원 조사·처리 및 개별 은행 점검시 KIKO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음

□ 그러나, KIKO 거래와 관련한 보다 광범위한 점검 및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 7.22 관계기관 회의 개최, 8.1일 종합대책 발표·합동 대책반 구성(금융당국·중기청·중소기업중앙회·은행연합회 등) 등을 통해

-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협조*를 얻어, KIKO 취급 전체 은행에 대한 일제점검** 및 관련 민원 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중기중앙회에 접수된 피해사례(205건)를 은행점검시 참고자료로 활용
☞ 다만, 해당 기업들의 반대로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조사는 미진행

** KIKO 취급 은행 13개 중, 거래가 미미한 3개은행은 서면조사, 10개 은행은 실지조사 진행 중(8.21~)

- 은행간 파생거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은행연합회), 상품설명서 개선(금감원), 환헤지 교육 강화(중기청, 은행연, 중기중앙회) 등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추진 중(10월초)

□ KIKO 관련 대응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KIKO 등 통화옵션 관련 민원 접수·처리('08.3~)

※ 08.9.30 현재 29건 접수 : 자율조정 11건, 각하 12건, 조사 중 6건

② 금융회사에 대해 '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 통보('08.3)

※ 통화옵션 거래시 고객의 위험 관리 능력 고려 및 과도한 경쟁 지양 강조

③ 중소기업 대상 환리스크 관리 등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08.4)

④ 장외 통화옵션 거래 관련 일제 조사 실시('08.5)

⑤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공유시스템 구축 착수('08.6 ~)

⑥ 국책은행 담당자 회의 개최('08.6)

※ 국책은행 주도의 환헤지·컨설팅 강화 방안 논의(6.18), 교육계획 접수(6.27)

⑦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의회 ('08.7.9)

※ 은행들에 대해 파생상품의 신중한 취급 및 KIKO 피해기업 등에 대한 대출전환 등 자율적 유동성 지원 당부

⑧ KIKO 관계기관 회의 개최('08.7.22)

※ 금융위·금감원·기재부·중기중앙회·무협·은행연·기은·신한은·산은 참석

☞ KIKO 관련 공동 대책 추진 방안 협의, 종합대책 사항 논의

⑨ KIKO 거래 관련 일제 조사 실시('08.7, 6월말 기준 자료)

⑩ KIKO 종합대책 발표('08.8.1)

⑪ KIKO 대책반 1차 점검 회의 개최('08.8.13)

※ 관계기관별 추진 대책 추진현황 점검, 기관간 협조방안 논의

☞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민원·피해사례 공유방안 논의

구 분	처 리 방 향
분쟁조정 희망건 (중기중앙회가 기업동의를 거쳐 금감원에 요청)	· 기업명 등 구체적인 정보 노출을 전제로, 금감원 분쟁조정국 에서 사실관계 조사·분쟁조정 추진
점검 참고자료건 (중기중앙회→금감원 으로 기초자료 제공)	· 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금감원 은행국의 은행 검사시 중점 조사대상 은행(지점)·조사분야 선정에 활용

⑫ 금감원-중소기업중앙회 협의 개최('08.8.19~20)

※ 금감원 은행 일제 점검(8.21~), 민원조사 관련 협조방안 구체화

☞ 은행일제 점검 참고자료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접수
민원 기초자료·피해사례 진술서 내용을 금감원과 협의

⑬ KIKO 취급 은행 일제점검 착수('08.8.21~)

※ KIKO 취급 은행 13개중, 거래가 미미한 3개은행은 서면조사, 10개
은행은 실지 방문조사

⑬ KIKO 대책반 대책 추진 현황 점검(2주마다 계속, 현재까지)

※ 1차 점검 : 8.29일, 2차 점검 : 9.12, 3차 점검 : 10.1 (예정)

⑭ KIKO 거래 관련 일제 조사 실시('08.9, 8월말 기준 자료)

⑮ 우량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 마련 거시정책 협의회 및 관계
부처 실무 협의 ('08.9.23)

※ KIKO를 포함, 복합적인 원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 마련 협의

☞ 이후 실무 작업반을 구성, 10월초까지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 중

□ KIKO 대응 관련 각종 회의, 대책, 보고 등의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KIKO 등 통화옵션 관련 민원 접수·처리 현황(08.9 현재)

붙임 2. 금융회사에 대한 '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 통보내용(08.3)

붙임 3.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공유시스템 구축 경과

붙임 4. 국채은행 담당자 회의 결과(08.6)

붙임 5.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의회(08.7.9) 안건 중 관련내용

붙임 6. KIKO 관계기관 회의 결과(08.7.22)

붙임 7. KIKO 종합대책 주요 내용(08.8.1)

붙임 8. KIKO 대책반 1차 점검회의 결과(08.8.13)

붙임 9. 대책반 추진 현황 점검 주요내용(08.9.30 기준)

【붙임1】 KIKO 등 통화옵션 관련 민원 접수·처리('08.3~)

□ 2008.9월말 현재 KIKO옵션계약과 관련한 민원 29건을 접수받아 자율 조정 11건, 각하 처리 12건, 사실관계 조사중 6건임

- 자율조정 : 업체의 손실금액을 대출로 전환, KIKO거래내용 재조정, 수출대금 입금시까지 결제기한 연장 등 은행과 민원인의 자율적 합의로 민원이 해결되었음
- 각하 사유 : 쟁점사항인 은행의 위험고지 불충분 여부 등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민원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 증거가 없어 사실 판단이 곤란한 실정임
 - 은행은 위험고지서 및 거래확인서에 고객의 서명·날인을 받는 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환율도 KI환율 이상으로 상승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민원인과 상반되게 주장함
 - 민원인의 KIKO 거래 경위, 과거 동일상품 거래 경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민원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한 면도 있음
- 사실관계 조사중 : 당사자간 대면조사 등을 통해 거래 경위, 거래위험의 적정 고지 여부 등을 확인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의 처리할 예정임

□ 주요 민원사유는 통화옵션거래 관련 은행의 위험고지 불충분, 오버헤지 권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요청 또는 계약 무효 주장임

- 가입의사가 없었는데도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가입 권유
- 은행이 환율하락이 대세라며 KI환율 이상 상승으로 인한 손실(2배 매도옵션 적용)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설명
- 은행이 환헤지 필요 규모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오버헤지) 유도, 거래기간 일방적 결정 및 중도헤지 요청 미수용 주장 등

키코옵션 거래 관련 민원 처리 내역

구 분	건수	처리 내역
자율조정	1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금액의 대출지원 또는 대출전환 및 향후 외환거래시 우대환율 적용(4건) ○ 수출대금 입금시까지 손실금액 결제기한 연장(2건) ○ 은행과 손실최소화 노력 합의(3건) ○ 신청인과 합의하에 거래조건 재조정(2건)
각하처리	1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민원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 미비(8건) ○ 과거 동일상품 거래경험 및 입증자료 미비(3건) ○ 민원인의 소송제기(1건)
처 리 중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코거래 재조정시 거래기간 부당연장(1건) ○ 충분한 위험고지 없이 가입 권유(4건) ○ 민원인 요청으로 처리 보류중(1건)

【붙임2】 금융회사에 대해 '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 통보(08.3.24)

※ 통화옵션 거래시 고객의 위험 관리 능력 고려 및 과도한 경쟁 지양 강조

<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 지도내용>

- ☐ '06.12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상 중요정보 고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을 고객에게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 ☐ '06.12월 파생상품 거래조건의 표시방법 및 공시방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거래조건 공시시 손실위험, 유동성위험 등 관련위험, 거래목적 및 거래에 적합한 고객, 수익구조 및 중도해지 등 거래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공시
- ☐ '06.12월 거래상대방의 적법성 확인 등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
 -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대한 적법성, 거래상대방 적법성,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법적권한에 대한 유효성 등을 확인
- ☐ '08.3월 제3단계 은행리스크관리 선진화 추진계획 시행
 - 파생상품거래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 ☐ '08.3월 “통화옵션거래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관련 유의사항” 통보
 - 고객의 거래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판매(over hedge) 지양, 거래한도 등 승인심사 및 리스크 분석 강화 유도

【붙임3】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공유시스템 구축('08.6 ~)

- 수출업체의 과도한 계약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해 은행간 기업의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시스템 구축

※ KIKO 계약을 다수의 은행과 체결함으로써 전체 KIKO 계약금액이 수출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 (기업 정보 공유 필요)

☞ 08.11.1 가동 목표

- 정보공유 T/F 회의 총 6회(6.30, 7.9, 7.24, 8.7, 8.21, 9.11) 개최

< 정보공유 T/F 구성 및 향후 일정 >

□ 구 성

- 감독기관(1) :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
- 협회(4) : 은행연합회 2, 증권·선물협회 1, 생·손보협회 1
- 금융회사(8) : 은행 3(외은 1), 증권 1, 선물 1, 보험 2, 수출보험공사 1

□ 향후 일정

- T/F 구성·운영 : 6 ~ 7월 중
- 전산시스템 구축 : 8월 ~ 10월 중순
- 시범 운영 : 10월 중순 ~
- 시스템 가동(목표) : '08. 11. 1.

【붙임4】 국책은행 담당자 회의 개최('08.6.18)

□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주도의 환헤지·컨설팅 강화 방안 논의 ☞ 국책은행 교육·홍보계획 접수(6.27)

□ 참석자

- 금융위 자본시장과, IBK 이주홍 자금운용부 팀장, 수출입은행 손영수 여신총괄부 부부장, KDB 민인환 외환/파생상품팀장

□ 교육·홍보계획(6.27 접수 내용)

수출입 은행	<p>◆ 환위험 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업 요청시) : 신청기업에 대해 환위험관리 전문업체의 종합 컨설팅 제공 (수출입은행에서 비용 전액 부담, 08.4월부터 운영)</p> <p>◆ 중소기업 수출금융아카데미 운영 : 환위험 관리 필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교육 (08년중 10회 실시 예정)</p>
기업 은행	<p>◆ 인터넷을 통한 환리스크 관리 지원 솔루션 제공(홈페이지) ① 거래정보 입력시 i) 외환 포지션 정보 조회 기능, ii) 환리스크 측정 기능 등을 제공 ② 21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통화별 변동성, 통화간 상관 계수 등을 제공</p> <p>◆ 유선/방문을 통해 환헤지 컨설팅 제공(기업 요청시) : 환위험 노출액, 적정 헤지방법 및 수준에 대한 컨설팅</p>
산업 은행	<p>◆ 유선/방문을 통해 환헤지 컨설팅 제공(기업 요청시) : 환위험 노출액, 적정 헤지방법 및 수준에 대한 컨설팅</p> <p>◆ 기존 파생거래 계약구조에 대한 자문 제공(기업 요청시) :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로 전환 유도, 타 은행(금융기관)과 체결한 파생계약에 대해 위험요인 분석·커버방안 자문 등</p>

【붙임5】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의회(08.7.9) 중 관련내용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신중한 취급 요청 (은행에 요청)

- 최근 파생금융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거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파생금융상품(KIKO, CMS)으로 인해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큰 손실이 발생
 -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예상하여 통화옵션상품(KIKO)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큰 피해가 발생
 - * 예) KIKO 등 통화옵션상품은 일정 환율이하에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반면에 일정 환율이상이면 2~3배 상환 의무 부과
 - * 환해지 피해기업 접수결과(중소기업중앙회) '08.6월말현재 KIKO 등 통화옵션 피해접수업체(158개)의 평가손실 총액 4,472억원, 기업당 평균 약 28억원(전체 중소기업 평가손실은 1.8조원이라는 의견도 있음)
 - 장·단기 금리와 연계된 금리스왑 연계대출(CMS*)을 받았으나, 최근 장·단기 금리역전으로 이자부담 가중
 - * 예) 장단기 금리차 유지시 대출이자 연1.5% 절감 → 금리역전(장기 < 단기금리)시 연 5% 이자 손실발생
 - *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약 1조원 내외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
-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파생금융상품 판매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 투기목적이 아닌 피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규대출 또는 환차손의 대출전환 등 은행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붙임6】 KIKO 관계기관 회의 개최('08.7.22)

□ 금융감독당국 · 은행업계 · 수출업체 등 관계기관이 KIKO 관련 공동 대책 추진 방안 협의, 종합대책 사항 논의

□ 참석자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주관), 자본시장과 · 은행과 · 산금과 사무관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서기관, 금감원 일반은행감독국장
- 한국무역협회 김재숙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강남훈 본부장
- 은행연합회 조억연 상무, 기업은행 윤병국 부행장, 신한은행 서태원 부장, 산업은행 김갑중 센터장

□ 주요 논의 내용

(1) KIKO 거래 손실 현황 및 원인

□ 무역협회 · 중기중앙회는 KIKO 거래에 참여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거래의 손실로 도산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

- 이에 대한 원인으로 ① KIKO 상품의 불공정한 손익구조, ② 은행들의 부실한 위험고지 및 적극적인 계약 유도* 등을 제기

* 특히, 환율전망치에 대한 은행-기업간 비대칭성을 은행이 악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은행은 신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미리 예견하였다는 주장)

- 은행연합회·은행 등은 현재의 손실은 평가손실이며, 적정 헤지 업체의 경우 수출대금의 환차익이 더 크다고 주장
- 또한 ① KIKO 손익구조는 계약당시 환율전망에 따른 손익 확률에 기반하며, ② 은행들은 대부분 충분한 상품설명을 했다는 입장
- 다만 일부 업체들의 대규모 손실은 ① 오버헤지, ②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예상 매출·수익 미달성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

➡ 다음과 같이 논의 내용 정리

- ① KIKO 거래는 기본적으로 수출대금 환차손 헤지 등을 위한 파생거래이므로, KIKO 거래 손실과 수출대금 환차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
- ② 기업들의 피해 현황 및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판단할 필요
- ※ 무역협회·중기중앙회측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제시하고, 관련 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

(2) 추가 손실 방지 대책

- 무역협회·중기중앙회는 ① 손실금액의 대출금 전환, ② 계약 중도 해지 또는 손익 구조 변경(손실 탕감) 등을 요청

□ 은행 등은 이미 계약 건별 심사를 통해 우량 고객에 대해 대출금 전환·계약 구조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일반적인 KIKO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이미 은행들도 반대매매를 체결한 상황 등)

➡ 다음과 같이 논의 내용 정리

- ① 당사자간 계약에 정부가 일반적으로 관여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변경토록 하는 것은 곤란하나,
- ② 무역협회·중기중앙회 등에서 은행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은행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



(3) 향후 추진 대책 논의

□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관간 협조 당부

- ① KIKO 관련 거래·손실 현황 지속 모니터링
- ② 개별 민원·분쟁 조사, 은행 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
- ③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관행 개선

※ 통화파생상품 거래정보 공유 체계 구축, 상품설명서 개선, 한해지 컨설팅 강화 등

【붙임7】 KIKO 종합대책 내용 (8.1 보도자료 배포)

	<h2>보 도 자 료</h2>	
금융위원회	'08. 8. 1. (금) 14:00부터 보도 가능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			
책 임 자	이 명호 과장(2156-9870) 김 광연 국장(3786-8020)	담 당 자	이 수영 사무관(2156-9874) 이 강용 팀장(3786-8022)	
배 포 일	2008. 8. 1.(금)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6매

제 목 :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I KIKO 거래규모 및 손익현황

1. 거래규모

- ☐ '08.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대고객 KIKO 계약잔액*은 101억 달러이며 거래업체는 519개사임

* 계약잔액은 기업이 은행에 매도해야 할 콜옵션 금액 기준

- 이중 중소기업의 KIKO거래규모는 75억달러(전체 74.3%), 480개사임
- ☐ KIKO거래업체의 수출규모는 연간 287억달러로 KIKO를 이용한 평균 헤지비율은 35.2% 수준
- 이중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연간 190억 달러로 평균헤지비율은 39.5% 수준
- ☐ KIKO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Over-hedge)한 업체는 71개로 평균 헤지비율은 166.7% 수준
- Over-hedge한 중소기업은 68개사로 평균 헤지비율은 193.8% 수준

수출기업의 KIKO거래규모
('08.6월말 현재)

(단위 : 개,억달러)

구 분	업 체 수	계약잔액(A)	연수출액(B)	헤지비율(AB%)
중소기업	480(68)	75(31)	190(16)	39.5(193.8)
대 기 업	39 (3)	26 (9)	97 (8)	26.8(112.5)
합 계	519(71)	101(40)	287(24)	35.2(166.7)

* ()내는 over-hedge 업체

II KIKO거래에 대한 평가

1. 과도한 KIKO 거래 기업에서 피해 발생

- ☐ KIKO거래로 인한 피해의 근본원인은 계약금액(콜옵션 매도금액 기준)이 수출대금 규모를 초과하여 과도한 거래(Over-hedge)를 한데서 비롯
 - Over-hedge한 기업의 경우 KIKO거래자체의 평가손실이 수출대금 환차익을 초과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
- ☐ KIKO계약금액이 수출대금 범위내인 기업의 경우, KIKO평가손실보다 수출대금의 환차익이 더 커 전체적으로는 이익 발생
 -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환차익을 고려하지 않고 KIKO 거래 자체로부터의 손실만을 인식하고 있는 측면

2. 계약 건별로 불완전 판매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 ☐ 기업측은 은행이 잠재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KIKO거래를 권유하였다고 주장
 - 이에 대해 은행은 위험고지서 및 거래확인서에 고객의 서명·날인을 받는 등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업들도 환율하락 전망과 그간 KIKO거래를 이용한 이익실현 등으로 KIKO거래를 선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있는 상황

※ KIKO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7.24 공정위에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 개별 계약건별로 은행이 위험고지 등 적정한 판매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III KIKO거래 관련 대책

※ 그 동안의 조사·검사 및 주요 후속조치 현황

- ☐ KIKO거래관련 민원상담 및 민원조사 처리(22건) (08.3월~)
- ☐ 금융기관검사시 KIKO거래실태를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영 (08.6월~)
- ☐ 각 금융기관 앞 KIKO거래관련 유의사항 통보('08.3.25)
- ☐ 중소기업에 대한 외환 및 파생상품 리스크 설명회('08.5.21)
- ☐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공유 T/F 구성('08.6.30) 및 운영

1.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 확대운영

- ☐ KIKO관련 기업피해 사례 접수·처리 및 후속대책추진을 위해 금융위, 중기청 및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 확대 운영

2. 은행의 KIKO거래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 KIKO 거래 은행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KIKO계약 과정에서의 판매의무 이행여부를 현장조사
 - 거래 잠재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여부 등을 중점 확인

3. 파생상품 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 구축

- ☐ 기업이 복수은행을 거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헤지(Over-hedge)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 구축
 - 파생상품 정보집중 및 공유방안을 '08.8월까지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을 거쳐 '08.11월부터 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을 가동 예정

4. 파생상품 설명자료 개선

- ☐ 파생상품 설명자료(핵심설명서)를 개선하여 상품구조, 손실 가능성 등을 더욱 알기쉽게 전달함으로써 위험 고지 강화
 - 현재 설명자료 개선안을 마련 중으로, 하반기 중 확정·추진
 - * 기존 설명자료에 시나리오별 손익 그래프, 최대손실액 등을 포함

5.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유도

- ☐ 은행이 자율적으로 손실발생 거래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자체대응방안을 마련 수립·시행토록 유도
 - 환율이 일정수준으로 안정되는 시점에서 기업-은행간 협의하여 조기정산(unwinding)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강구토록 유도
 - 일시적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및 기존대출의 만기연장(restructuring) 등

(참고)

KIKO 옵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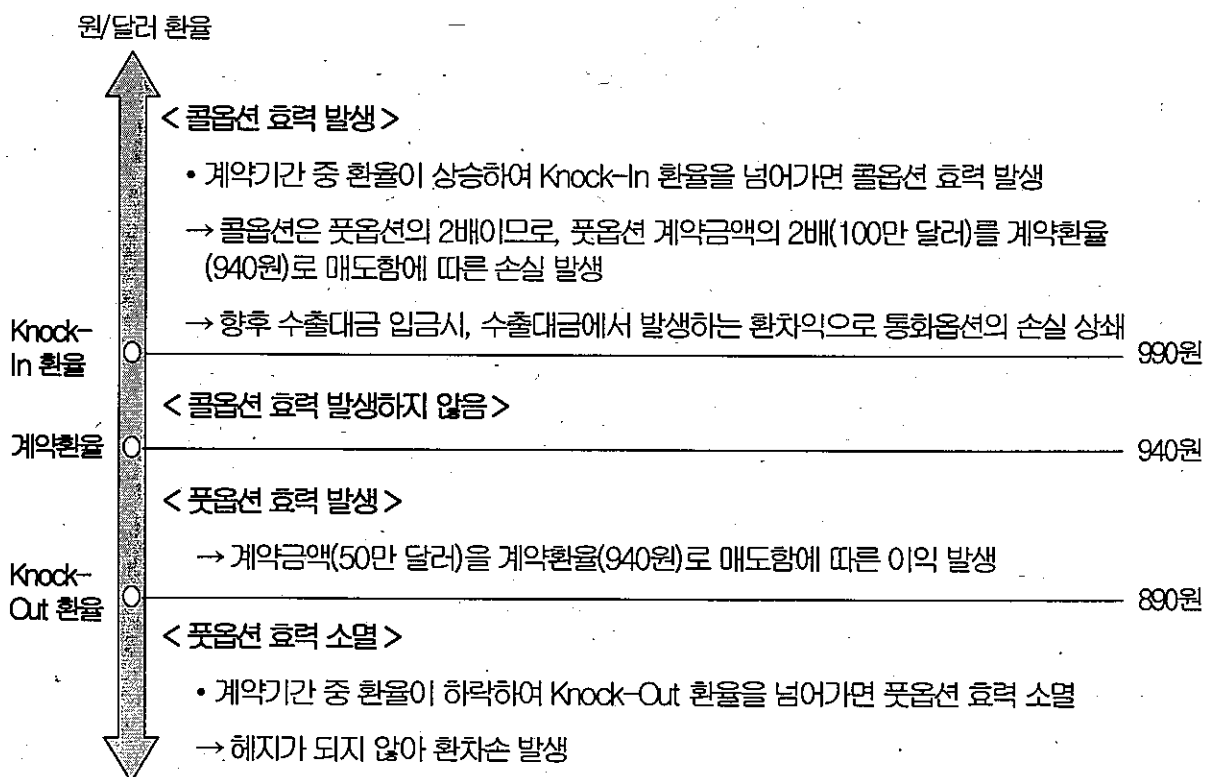
□ KIKO(knock-in, knock-out) 옵션은 수출대금(헤지대상)의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헤지수단으로 배리어(barrier)가 있는 풋옵션 매입·콜옵션 매도를 주로 1:2 비율로 결합

- 계약기간 중 환율이 상·하한 barrier 내에서 제한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유용

< 수출기업의 KIKO 옵션거래 예시 >

※ A사(월수출액 200만달러)가 수출액의 50%에 대하여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B은행과 KIKO 옵션계약 체결

- 풋옵션 매입 1계약(50만달러) 및 콜옵션 매도 2계약(100만달러) 체결
- knock-out 환율 : 890원, knock-in 환율 : 990원, 계약환율 : 940원



【붙임8】 KIKO 대책반 1차 점검회의 결과(08.8.13)

□ 관계기관별 KIKO 관련 대책 추진 현황 점검 및 기관간 협조 방안 논의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① 은행검사, ② 민원·분쟁조사, ③ 환해지 교육·컨설팅 추진 등에 있어 중기중앙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 체계 명확화

□ 참석자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주재), 자본시장과·은행과 사무관
-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 분쟁조정국장, 담당 팀장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 담당 사무관
-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환 부장
- 은행연합회 조억연 상무

□ 주요 논의 내용

(1) 은행 검사, 민원·분쟁조사 관련 협조

□ 중기중앙회에서는 기업들의 KIKO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금감원 조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제공에는 소극적

- 반면 8.13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2건에 불과하고, 은행 일제검사*를 위한 기초 자료도 부족하여 효과적인 검사에 애로

* 금감원은 다음주(8.20)부터 KIKO 취급은행을 대상으로 2~3주간 실시 예정

⇒ 중기중앙회에서는 접수된 피해사례(205개사)를 금감원에 제공, 검사·조사자료로 활용토록 협조

- 다만 중기중앙회에서 해당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i) 적극적인 분쟁조정 희망건과 ii) 검사 참고자료 활용건을 구분·제공

구 분	활 용 방 식
분쟁조정 희망건	· 기업명 등 구체적인 정보 노출을 전제로,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사실관계 조사·분쟁조정 추진
검사 참고자료건	· 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금감원 은행국의 은행 검사시 중점 조사대상 은행(지점)·조사분야 선정에 활용

(2) 환해지 컨설팅·교육 강화 관련 협조

- 그 동안 국책은행(기은·산은·수보) 주도의 환해지 교육 강화를 독려하였으나, 전체 은행·기업 참여도 제고에 한계

⇒ 중소기업청(총괄)·은행연합회·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환해지 교육·컨설팅 강화 계획을 수립·추진

- 특히 중소기업청의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등 파생 거래 수요가 많은 기업들에 대한 순회 교육 등도 적극 검토

(3) 기타 후속대책 추진 일정 점검

- (은행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11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은행연)
- (파생상품 설명서 개선) 4/4분기 중 설명자료 개선안 확정(금감원)

◆ 향후, 관계 기관에서는 KIKO 관련 대책 추진 현황을 2주마다 금융위에 보고기로 합의 (필요시, 회의 소집)

【붙임9】 대책반 추진 현황 (08.9.30 기준 점검결과)

◆ 종합대책 발표이후, 대책 추진 현황

1. 합동 대책반 구성·운영

① (구 성) 금융위·중기청·금감원·은행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담당 임원

② (활동내역) 8.13 총괄반 회의 개최 및 기관간 협조방안 협의,
이후 2주마다 추진 현황 점검 중(서면 보고)

※ 추진현황 서면 점검 : 1차 8.29, 2차 9.12, 3차 10.1(예정)

③ (주요 활동성과)

i) 중소기업중앙회가 접수한 피해사례를 금감원과 공유토록
협약하여 금감원의 은행 일제점검, 민원·분쟁 조사시 활용

※ 중기중앙회 접수 민원(205건)에 대한 기초자료(85건 피해사례진술서)를
금감원이 전달(8.19~20간 협의)받아, 은행 일제검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다만, 개별기업의 피해사례를 금감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하는 것은 해당기업의 반대로 미추진(중기중앙회-해당기업간 협의 진행중)

ii) 환해지·컨설팅 교육시, 중기청/은행연/중기중앙회/거래소간
협조 체계 구축·현재 추진 중

※ 지방중기청, 거래소 주관 교육에 은행연·중기중앙회에서 참가자
모집 등을 지원

2. 은행 일제 점검 실시

① (현황 및 성과)

- KIKO 거래실적이 있는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8.21부터 일제 점검* 실시 중, 현재 실지조사 마무리 단계

* 거래가 미미한 3개 은행은 서면조사, 10개 은행은 방문조사

☞ 중기중앙회 제공(8.20) 기초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검사 효율성 제고

② (향후 계획)

- 10월까지 점검결과를 정리, 은행의 귀책사유 인정시 필요 조치 예정 (기관조치, 담당자 징계요구 등)

3. 민원·분쟁 처리 실시

① (현황 및 성과) 9.30 현재 금감원 접수 민원 조사건은 총 29건*

* 합동대책 발표(8.1)후 설치된 KIKO 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7건

☞ 해당 기업들의 반대로 중기중앙회 접수 민원(200여건)에 대한 조사는 미추진

i) 11건은 당사자간 계약 재조정 등을 통해 자율조정

ii) 12건은 민원인(기업) 주장의 입증자료 부족으로 각하

iii) 6건은 현재 조사 중

② (향후 계획) 당사자(기업) 신청시 민원·분쟁 조사 지속 실시

4. 당사자간 자율 조정(기업부담 완화) 유도

① (현황 및 성과)

○ 은행 일제 점검, 민원·분쟁 조사 과정에서 은행이 자발적으로 거래기업과 협의하여 기존 대출 만기연장, 신규대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유도

i) 9월 현재, KIKO 거래 업체에 대해 신규대출 6,864억원,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1조 4,728억원 실시(188개 업체)

ii) 대출 금리 할인 56개사, 각종 수수료 감면 30개사 지원도 병행 실시

* 거래가 미미한 3개 은행은 서면조사, 10개 은행은 방문조사

② (향후 계획) 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요청 추진

※ 별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책' 마련·추진 예정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 가운데, '희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 추진

* KIKO 관련 기업만 지원하는 문제는 부적절(환차익, 기업 귀책, 여타 거래와의 형평성 등)하므로 (유동성 위기 원인을 불문하고) '희생가능성'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중기 유동성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금융당국·지경부·중기청·중기중앙회·신보·기보·은행연합회·시중은행 등으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 조속히 세부 방안 마련

5. 기업의 파생거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 (개 요) 기업의 KIKO 등 통화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은행간 공유하여 수출기업의 과도한 헤지를 예방

※ 현재로서는 기업이 다수 은행과 중복하여 거래하는 경우 과도한 헤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

- ☐ (추진 현황) 정보 집중·공유 방안 마련 TF 구성(6.30), 11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추진 중

6. 파생상품 설명자료 개선 (금감원)

- ☐ (개 요) 기업들이 파생 상품계약 체결시 손익현황 등을 보다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설명자료 개선

※ 기업들이 파생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 피해가 확산 되었다는 문제점이 대두

- ☐ (추진 현황) 설명자료(핵심설명서) 개선안* 마련중(하반기 중 완료)

* 기존 설명자료에 ① 시나리오별 손익 그래프 및 matrix, ② 최대손실액 등을 포함 (☞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중)

7. 환헤지 교육·컨설팅 강화 (중기청,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 (개 요) 중기청·은행연·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헤지 교육 등을 실시

- ☐ (추진 계획) 중기청에서 주관하여 지역조직(지역청)을 활용한 지역별 순회교육 계획 등을 수립·실시 중

※ 은행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교육내용·참가자 모집 등을 지원

※ 중기청(지역조직 활용) 주관 교육 일정 : 중소기업 임원(CFO 등) 대상

지 역	날 짜	장 소
서 울	11. 18(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강당
부산·울산	10. 23(목)	부산울산중기청 대강당
대구·경북	9. 26(금)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광주·전남	9. 24(수)	광주전남중기청 대강당
경 기	9. 25(목)	경기중기청 대강당
	11. 13(목)	경기북부지역(미정)
인 천	10. 16(목)	인천중기청 대강당
대전·충남	10. 15(수)	대전충남중기청 대강당
강 원	10. 15(수)	강원중기청 대회의실
충 북	10. 09(목)	충북중기청 대회의실
전 북	11. 20(목)	전북중기청 대회의실
경 남	9. 18(목)	경남중기청 대강당
제 주	10. 22(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 거래소(산업단지공단 협조) 주관 교육 일정 : 중소·벤처기업 대상

일 시	산업단지	교육장소
9/ 9 14:00~17:00	남동(인천)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세미나실
9/10 14:00~17:00	반월·시화(안산)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대강당
9/22 14:00~17:00	구미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세미나실
9/23 14:00~17:00	대구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9/25 14:00~17:00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6층 회의실
10/8 14:00~17:00	수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
10/9 14:00~17:00	창원	경남무역회관 국제회의실
10/15 14:00~17:00	녹산(부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 6층 회의실

19. 금융선진화 관련 21개 법률 제, 개정안 주요내용, 관련 기관 의견 및 금융위원회가 검토한 의견

□ 금융위 소관 21개 법률 제·개정 추진 현황

연 번	법안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진행 상황	국회 제출
1	예금자보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보험료율 상한(0.5%) 적용기한 연장(3년) ◦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관련 사항 <p>※ 이중에서 예금보험료율 적용기한 연장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국회 기 통과('08.9월)</p>	국회 제출 완료	'08.7.21 (제출)
2	여신전문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부금융사의 할부금융 대출범위 확대 ◦ 여전사의 자금차입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한 영업효율성 제고 ◦ 신용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허위·과장 설명 등)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	'08.9.4 (제출)
3	공인회계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 신설(국제적 회계 제도 자문으로 한정) ◦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규율 ◦ 외국공인회계사의 한국 회계법인 출자(5년 이후부터 1인당 10%미만, 총 50%미만) 	"	'08.10.10 (제출)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 '09년부터 적용이 허용('11년 상장회사 의무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기준 구분근거 마련(상장기업 적용 국제회계기준 vs. 비상장기업 적용 Local회계기준) - 재무제표의 명칭 및 종류 조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및 보고 회수 조정 	법제 심사	'08. 10.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본인의 동의 제도 강화 ◦ 금융기관 등의 신용정보 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법제 심사	'08. 10.

연 번	법안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진행 상황	국회 제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도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드 제도 도입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 (45일 → 60일) 자사주 취득 등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재무특례 규정 이관 	"	'08. 11.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자 등의 관리·감독 강화 - 대부업 등록 관리 강화, 영업현황 정기보고 의무화 등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대부계약시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화, 상호에 대부업 명시 등 	"	'08. 11.
8	한국개발펀드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개발펀드(KDF)의 조직 및 업무 범위 규정 - 조직을 최소화하고, 자산 관리 업무는 산업은행에 포괄 위탁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은 간접적인 On-lending 방식으로 추진 	규제 심사	'08. 11.
9	산업은행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은행 업무범위 확대 및 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산업은행의 지주회사화 근거규정 신설 	"	'08. 11.
1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 금융위 승인하에 주식·회사채 매입 허용 업무점사 대상기관 확대 	"	'08. 11.
11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권자본금 규모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현재 자본금 4조원) 업무방법서 작성변경을 금융위 승인 → 보고로 	"	'08. 11.

연 번	법안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진행 상황	국회 제출
		가능하도록 함		
12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신협의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금 제도 개선 - 조합원당 최대 출자좌수 상향조정 등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 중앙회장의 비상근화 등 	입법 예고	'08. 11.
13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의 임면·임기,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 감독권으로 전환 	입법 예고	'08. 11.
14	보험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상품 심사 체계를 사전규제 ⇒ 사후 감독 체계로 개편 등 업무 자율성 확대 보험판매 전문회사를 도입하는 등 판매채널 제도 혁신 * 다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책임성은 강화 	부처 협의	'08. 11.
1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은행지주회사(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규제 수준 보다 완화 동일업종 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임원겸직 허용범위 확대 - 예: 이종업종간 임원겸직 허용 	"	'08. 11.
16	은행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소유규제 합리화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의 겸영 허용 등 은행 업무범위 확대 	"	'08. 12.
17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저축은행"외에 "저축은행"이라는 명칭 사용 허용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허용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상근임원의 겸업 금지 추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 저축은행의 거액여신한도 비율확대 등 	"	'08. 12.
18	불법 추심행위 방지에 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법 등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채권 추심관련 규제를 단일법에서 통일적으로 	입안 중	'08. 12.

연 도	주요내용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진행 상황	국회 제출
	법률 (제정)	규제하여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저신용·서민층에 대한 보호강화		
19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의 허가제 ⇒ 등록제로 완화 해킹, 추심이체 출금 등의 등과 관련한 금융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	'08. 12.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신용파생상품과 연계한 유동화 (합성 CDO) 등 새로운 유동화 기법 반영 ABS 거래의 건전성 제고·인프라 정비 	〃	'08. 12.
21	증권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증권제도 도입 - 전자등록의 효력, 등록기관의 요건, 등록의 절차, 기발행 실물증권의 전환, 투자자 보호 등 	〃	'08. 12

20.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

- 최근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 산은 민영화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측에 대한 금융위의 견해, 찬성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반대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 첫 번째 지적사항 관련 >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향후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등 금융정책 추진에 있어, 최근 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 규제와 감독강화 등도 유념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의사항 관련 >

☐ 수정·보완은 필요할 것이나, 기존 민영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① 우선, 산은이 지향하는 IB발전 모델은 이러한 미국식 투자은행 실패사례와는 목표와 방식 등에서 차별화된 측면

- 단순한 Monoline IB가 아닌, 지주회사 형태의 Universal Banking모델로 기업금융과 증권부문 대표주자인 산은과 대우증권을 묶어 기업금융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금융 분야(IB 부분)에 경쟁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을 지향

② 최근 美 투자은행 실패사례는 IB Model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운영 및 건전성 규제의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

- 리먼브라더스의 경우, 자문이나 인수, 중개 등 IB의 고유 업무보다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자기자본 투자에 집중하다 도산위기에 봉착
-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미국 IB들도 자기자본의 30배에 이르는 무리한 레버리지 추진 등 과도한 고수익·고위험 투자 추구와 느슨한 규제·감독이 주된 이유

□ 이런 측면에서 최근 미국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서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高위험자산, 高레버리지 등 리스크 관리 취약점을 극복하고, 산은이 기 보유한 기업금융관련 노하우, 조직·인력 등의 강점은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고
- 아울러, 금융당국은 건전성규제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위기방지 및 관리능력 강화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21. 06년~08년 8월말 현재, 연구용역 내역(용역명,
기관, 금액, 용역기간, 계약방식

□ 연구용역 내역은 첨부와 같음

- 06년~07년 용역내역은 舊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연구용역을 취합한 것임

*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08년 3월 출범

□ 2006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제목	기간	금액	수행기관 (연구자)
1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방안 연구	2006-07-26 ~ 2007-03-19	43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규업)
2	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2006-12-11 ~ 2007-02-28	28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3	주요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 점 연구	2006-10-18 ~ 2006-12-27	25.5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4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2006-09-08 ~ 2006-12-15	20	보험개발원 (이태열)
5	주요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2006-09-29 ~ 2006-12-15	22.5	한국금융연구원 (이병훈)
6	금융규제 인식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	2006-03-24 ~ 2006-12-01	30	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
7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제도 설 계방안에 관한 연구	2006-05-22 ~ 2006-11-30	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종진)
8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 제개선 방안	2006-10-10 ~ 2006-11-27	30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9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2006-08-28 ~ 2006-11-27	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형도)
10	갈등사례분석-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2006-08-22 ~ 2006-09-21	9.5	한국조세연구원 (홍법교)
11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 방안 연 구	2006-06-12 ~ 2006-09-11	28.5	한영회계법인 (국균)
12	서민금융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006-05-30 ~ 2006-08-29	25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13	성과관리 시스템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용 역	2006-05-04 ~ 2006-07-04	26	(주)다산이앤이 (김영훈)
14	금융집적지역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03-30 ~ 2006-06-30	29.5	한국채권연구원 (박동규)
15	신용정보인프라 종합개선방안 마련을 위 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2006-04-17 ~ 2006-06-16	40	한국금융연구원 (강경호)

□ 2007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제목	기간	금액	수행기관 (연구자)
1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07.10.19~ 08.03.04	45	한국증권 연구원 (노희진)
2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	07.12.18~ 08.02.17	3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충열)
3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31	30	한국금융 연구원 (이병윤)
4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07.11.19~ 07.12.28	29	한국금융 연구원 (이상제)
5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조사	07.10.01~ 07.12.24	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준)
6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방안	07.09.07~ 07.12.20	21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신인석)
7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07.11.05~ 07.12.20	33	BHP 코리아(주) (한국회)
8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07.09.21~ 07.12.20	28.5	한국법제 연구원 (박찬호)
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07.10.05~ 07.12.20	3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상일)
10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20	28.5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 이저리 (강동원)
11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07.09.05~07.12.20	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형도)
12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현황 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07.10.26~ 07.12.17	38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13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07.11.02~ 07.12.17	19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14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07.07.30~07.12.14	33.2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15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07.11.07~ 07.12.07	10	케이티지엘에스(주) (위명숙)
16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07.07.24~07.10.08	22	한국증권연구원 (엄경식)
17	어음제도 개선방안	07.02.01~07.04.30	14.25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 2008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제목	기간	금액	수행기관 (연구자)
1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04~ 08.10. 3	3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2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용역	08.7.21~ 08.12.20	40	아주대학교 (이진국)
3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 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01~ 08.12.24	40	법무법인(유)태평양 (정의중)
4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감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08.8.13~ 08.12.12	37	언스트앤영어브바이 저리(주) (정태수)
5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구용역	08. 09.02 ~08.11.21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강흠)
6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 템 개선 연구용역	08.8.0 6 ~08.11. 4	46	(사)국제금융센터 (오창석)
7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연 구용역	08.7.28~ 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환김명도)
8	외환시장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11~8.29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22.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과도한 자산유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 상호저축은행은 PF대출 등 대출자산을 담보로 자산을 유동화한 실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3. 현재 유동화증권 공시제도의 현황, 문제점, 대책

-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자산 양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등록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산보유자, 유동화자산, 유동화 구조, 유동화 증권의 금액 및 발행조건 등 유동화 관련 주요정보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공시
- 아울러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 자산보유자·자산관리자·업무수탁자 파산 등 유동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금감원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감독규정 제19조)
 -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 공시 의무가 없어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할 우려도 존재
- 이에 따라 금번 자산유동화법 개정시 상기 유동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를 의무화하여 유동화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도모할 계획

24.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과점체제로 인한 문제점, 현황, 대책

□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 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 회사가 영업중

- 현재 상위 3개사가 전체 매출액(625.1억원)의 99%를 차지
하나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할 때 과점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전세계 신용평가시장에서도 Moody's, S&P, Fitch 3개 회사가 전체 Market Share의 95%이상을 차지

국내 신용평가회사 현황

구 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설 립 일	'98.8.18.	'83.12.29.	'07.11.7.	'92.4.23.
자 본 금	50억원	245억원	50억원	178억원
신용평가 매출액('07)	193.9억원	218.8억원	207.3억원	5.1억원
최대주주	Moody's (50%+1주)	Fitch사 (54.4%)	한국신용정보 (100.0%)	SB파트너스 (19.2%)

□ 다만,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고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 평가담당자가 대상 유가증권 보유금지, 평가부분과 영업 부분의 엄격한 분리 등

- 신평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산운용협회 등 수요자를 통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08.5)

25. 공매도와 대차거래의 관계

□ '08.9월말 현재 공매도 규모(유가증권시장 기준)는 32.3조원으로, 대차거래 규모(96.7조원)의 1/3 정도를 차지

○ 나머지 2/3 정도는 공매도 이외에 대차수수료 스프레드 수입을 위한 재대여 등 다양한 목적에 기인

< 공매도와 대차거래 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06년	07년	08.1~9월
공매도(A)*	9.5	21.1	32.3
대차거래(B)**	34.9	76.1	96.7
A/B	27.2%	27.7%	33.4%

* 유가증권시장 차입공매도 기준

** 증권예탁결제원 중개분

26.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

□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는 공매도시
호가 제한 및 무차입공매도 금지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에 따라 호가 제한
및 무차입 공매도 금지가 모두 적용되고 있음

① 공매도시 호가 제한 (Up-tick Rule)

- 공매도를 통해 연쇄적으로 낮은 호가를 제출하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음

⇒ 공매도시 직전가 이하로 호가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

②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 금지

-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사전에 대차계약 없이 증권을
매도할 수 있어 시장 불안시 매도물량이 집중되면서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우려 존재

⇒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사전에 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ale)만 허용

※ 최근 증시불안에 대응하여 10.1일부터 한시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

27.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 가격결정의 효율성 제고 등 순기능도 있으나, 시장 불안시 주가변동성 확대, 불공정 거래 우려 등 역기능도 존재
- 우리 위원회는 공매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및 주요국 규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음
 - 공매도 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검사(1차 : 7.15~7.25, 2차 : 8.26~9.19)를 실시하였으며,
 -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9.24)

※ 9.24일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① 증권사의 확인의무* 강화

*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공매도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

② 대차거래시 담보비율*을 상향 조정

* 현행 담보비율(90~110%)보다 상향 조정

③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한도 규제

* 20거래일간 공매도/총 거래금액이 일정비율(유가 5%, 코스닥 3%)을 초과하는 종목에 대하여 10거래일간 공매도 정지

④ 공매도·대차거래 관련 공시 강화

○ 아울러 美 구제금융법안 부결(9.29)의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 (9.30)

- 10.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하여 기존에 금지되던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뿐만
아니라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ale)까지 금지

김 동 철 의원

1. 신 BIS 협약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 신BIS협약 도입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 이에 따라, 신BIS협약 시행 전 규정을 조정하여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일정규모*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100% → 75%)조정하였고,
 - * 여신규모 10억원 또는 매출액 600억원 이하
 -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현행과 동일(100%)한 위험가중치 적용하도록 하였음
 - * 무등급 여신의 경우, 감독당국이 100%~150% 이내에서 위험가중치 결정
- ☐ 그 결과, 신BIS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 축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중기대출 축소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보·기보 등을 통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 최근 3년간 금융위 간부 퇴직자중 금융회사, 로 펌취업현황

□ 퇴직 직전직위와 담당업무, 재취업 업체 및 직위

성 명	퇴직당시 직위	퇴직일자	재취업 업체	직 위
석00	기획행정실장	06. 2.15	하나금융지주	상근감사위원
양00	부위원장	06. 9.11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문00	상임위원	07. 2.28	금감원	감사
송00	일반계약직4호	07. 6. 7	금융보안연구원	팀장
정00	기획행정실장	07. 7.27	보험개발원	원장
이00	FIU원장	08. 4. 3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김00	혁신행정과장	08. 5. 15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첨부 : 별첨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2008. 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II.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III.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 총 괄

2. 인 건 비

3. 기본경비

4. 사업경비

5. 기금간거래

<별 첨> 사업별 설명자료

I.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1 목적 및 기능

가. 설립경위

- ☐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금융행정시스템을 전면 재조정('08.2)
- ☐ 재정부 금융정책기능과 금감위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 금감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나. 설립목적

- ☐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다. 주요기능

-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조직 및 정원

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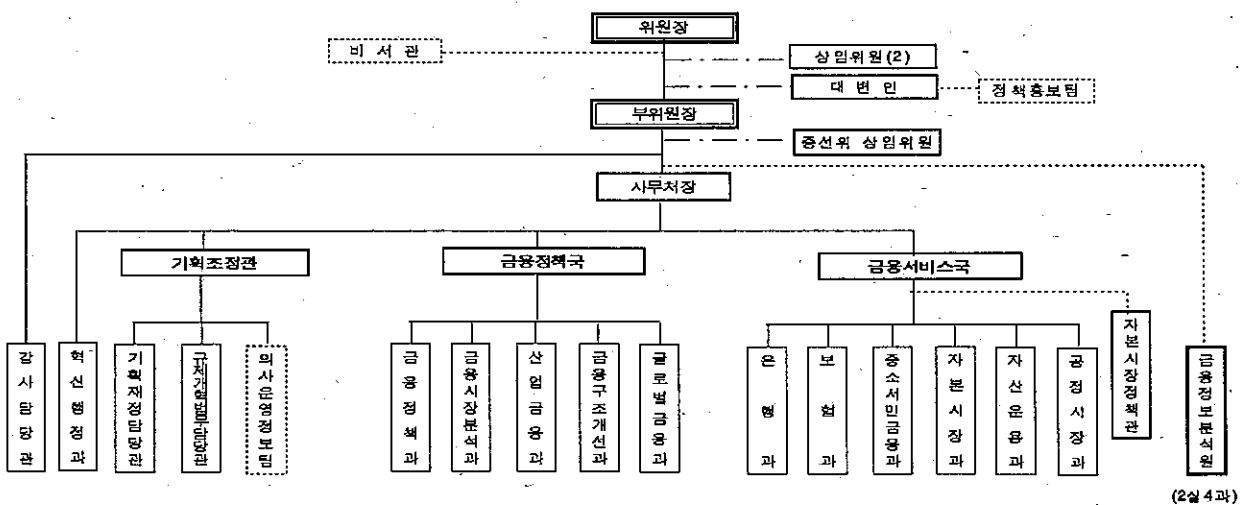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사무처] 본부에 1관 2국 1대변인 1심의관 15과를 두고,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



나. 정 원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합 계	2	182	4	7	14	209
본 부	2	136	4	—	13	155
금융정보분석원	—	46	—	7	1	54

II.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0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3억 13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억 6백만원 증가(3.1%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12,907	13,313	406	3.1
전대차관 이자수입	316	197	△119	△37.7
전대차관 원금회수	831	895	64	7.7
벌 금 및 물 수 금	11,667	12,130	463	4.0
가 산 금	93	91	△2	△2.1

□ 증감 주요내역

- 전대차관 이자 수입('08년 대비 1억 19백만원 감)
 -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은행에 재전대한(\$17,791,387)차관과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에 재전대한(\$129,020)차관에 대한 이자상환수입('04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
- 전대차관 원금 회수('08년 대비 64백만원 증)
 - 기준환율 변동(920원→1,000원)으로 증액
- 벌금 및 물수금('08년 대비 4억 63백만원 증)
 - 과징금 징수결정액 평균치에서 세외수입 증대노력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
- 가산금('08년 대비 2백만원 감)
 - 최근 5년간('03년~'07년) 가산금 수입액 평균치 적용

Ⅲ.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 총괄

□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41억 26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3,540억 46백만원 증가(235.9% 증)

(단위 : 백만원)

구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합계	150,080	504,126	354,046	235.9
□ 금융위원회 운영	127,038	201,208	74,170	58.4
○ 인건비	14,223	14,313	90	0.6
○ 기본경비	4,397	4,798	401	9.1
○ 사업비	108,418	182,097	73,679	67.9
□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23,042	302,918	279,876	1,215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0,000	300,000	280,000	1,400
○ IBRD차관 원금 상환	2,204	2,396	192	8.7
○ IBRD차관 이자 상환	838	522	△316	△37.7

2. 인건비

□ 2009년 인건비 예산(안)은 143억 13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90백만원 증가(0.6% 증)

(단위 : 백만원)

구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합계	14,223	14,313	90	0.6
○ 인건비	13,314	13,437	123	0.9
○ 직무수행경비	909	876	△33	△3.6

□ 증감 주요내역

○ 직제상 정원(본부 155명 + FIU 54명) 등에 대한 예산 반영

3. 기본경비

- 2009년 기본경비 예산(안)은 47억 98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4억 1백만원 증가(9.1%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4,397	4,798	401	9.1
○ 관 서 운 영 비	2,671	2,575	△96	3.6
○ 비 정 규 직 보 수	326	457	131	40.2
○ 직 무 수 행 경 비	279	283	4	1.4
○ 여 비	250	430	180	72.0
○ 업 무 추 진 비	494	794	300	60.7
○ 기 타 유 형 자 산	179	180	1	0.6
○ 용 역 비 ¹⁾	170	-	△170	-
○ 민 간 이 전 ²⁾	19	57	38	200.0
○ 기 타	9	22	13	144.4

1) 정책연구개발 사업경비로 통합됨

2) 비정규직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 증감 주요내역

- '08.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위는 신설된 조직으로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 폐지, 상임위원 1명 증원, 사무처장 및 2개과(감사담당관실, 규제법규담당관실) 신설 등에 따라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증액 및 일용직 증원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증가

* 금융위는 정원 209명의 소규모 부처이나 『금융지주회사법』 등 소관 법령 45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산하기관 19개사,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8개(기금운용액 36조원)관리, 출입기자 120명 등 다른 대규모 부처 못지 않은 업무량임

4. 사업경비

□ 2009년 사업경비 예산(안)은 1,820억 97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736억 79백만원 증가(67.9%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108,418	182,097	73,679	67.9
○금융업법체계개편	80	79	△1	△1.0
○금융허브	369	300	△69	△18.7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500	500	0	0
○금융관련국제협력	159	373	214	134.6
○금융전문인력양성	2,000	1,500	△500	△25.0
○저축의날행사및저축장려	80	72	△8	10.0
○대부업법관리·감독체계개편 ¹⁾	70	0	△70	순감
○공인회계사실무수습지원	24	0	△24	순감
○모지론이차보전	1,639	3,903	2,264	138.1
○역모기지론출연	7,000	3,000	△4,000	△57.1
○농어기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89,206	65,000	△24,206	△27.1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0	100,000	100,000	순증
○금융정보분석원운영	1,122	1,102	△20	△1.8
○FIU전산망구축운영	4,182	4,757	575	13.7
○에그몽총회	700	사업종료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38	127	△11	△8.0
○정보화지원	556	604	48	8.6
○정책연구개발	592	500	△92	34.4
○금융정책알리기	0	280	280	순증

1) 사업경비에서 기본경비로 조정됨

□ 증감 주요내역

- 저소득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 확대를 위해 모기지론 이차 보전사업비 증가('08년 대비 22억 64백만원 증)

- '08. 6월 금융위원장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 위원회 의장 당선에 따라 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FTA 금융분과장으로 금융협상 업무 수행 및 우리지주 등 매각을 위한 해외 IR 활동 등을 위해 금융관련 국제협력 사업비 증가('08년 대비 2억 14백만원 증)
- 주택금융공사 법정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50배)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에 신규 출자('09년 신규 1,000억원 증)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은 저축장려금 소요액 감소 전망치를 고려하여 감액 편성('08년 대비 242억 6백만원 감)
- 역모기론출연사업은 연금보증료 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를 감안하여 감액 편성('08년 대비 40억원 감)
- 금융전문인력양성 사업은 금융전문대학원 자체 등록금 수입 증가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08년 대비 5억원 감)

5.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09년 내부거래 예산(안)은 3,029억 18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2,798억 76백만원 증가(1,215%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23,042	302,918	279,876	1,215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0,000	300,000	280,000	1,400
○ IBRD차관 원금 상환	2,204	2,396	192	8.7
○ IBRD차관 이자 상환	838	522	△316	△37.7

□ 증감 주요내역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은 '02년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른 재정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09년도에 3,000억원을 반영
- IBRD차관 원금 상환은 예산편성 기준 환율(920→1,000원)을 반영하여 증액
- IBRD차관 이자 상환은 '04년부터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 감소 및 예산편성 기준 금리 인하(6.5%→4.5%)를 반영하여 감액

〈별 첨〉 사업별 설명 자료

I. 세 입

1. IBRD전대차관 원리금 수입
2. 벌 금
3. 가 산 금

II. 세 출

【금융정책국】

1. 금융업법체계개편
2. 금융허브
3.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4. 금융관련 국제협력
5. 금융전문인력양성

【금융서비스국】

6. 저축의날행사 및 저축장려
7. 모기지론이차보전
8. 역모기지론활성화출연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10.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금융정보분석원】

11. FIU운영
12. FIU전산망구축운영

【본 부】

13.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4. 정보화지원(정보화)
15. 정책연구개발
16. 금융정책 알리기

【회계기금간 거래】

17.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18. IBRD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세 입

1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수입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수납액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146	1,147	1,092	△55

나. 세입개요

- '98년9월 IBRD로부터 도입한 전대차관자금 중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은행에 재전대한 금액(\$17,791,387.84) 및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전대한 금액(\$129,020.86)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수입(5년거치 10년간 균등분할 상환)

다. 예산(안) 내역

☐ 이자 수입

은행에 재 전대 금액 (원금의 1/2상환조건)에 대한 이자수입	○ 상반기 $\$4,447,846.90 \times 4.5\% \times 1,000\text{원} / \$ \times 183 / 360 = 102\text{백만원}$
	○ 하반기 $\$4,003,062.20 \times 4.5\% \times 1,000\text{원} / \$ \times 183 / 360 = 92\text{백만원}$
한국공인회계사에 재 전대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상반기 $\$64,510.86 \times 4.5\% \times 1,000\text{원} / \$ \times 183 / 360 = 1.5\text{백만원}$
	○하반기 $\$58,059.86 \times 4.5\% \times 1,000\text{원} / \$ \times 183 / 360 = 1.3\text{백만원}$

☐ 원금 회수

은행 재전대 금액의 1/2을 균등분할 상환	○ $\$444,784.70 \times 1,000\text{원} / \$ \times 2\text{회(반기별상환)}$ = 889백만원
공인회계사회에 재전대 금액을 균등분할 상환	○ $\$6,451.00 \times 1,000\text{원} / \$ \times 2\text{회(반기별상환)}$ = 13백만원

* 환율조정액 : -7백만원

2 별 금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수납액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2,974*	11,667	12,130	463

* 12,629(구 금감위) + 345(구 재정부)

나. 세입개요

-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다. 예산(안) 내역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증권거래법 등 위반 과징금 : 11,872백만원
 - 과징금징수결정액¹⁾(26,270백만원)×수납율(49%)²⁾-1,000백만원³⁾
 - 1) '04년 ~ '07년 과징금징수결정액 평균
 - 2) '04년 ~ '07년 평균수납율(46.6%)에 '07불납결손 및 세외수입 증대 노력분 반영
 - 3) 소송 패소 환급액 예상분 계상<상고심이 진행중인 삼일회계법인 관련 소송(2건)>
-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과태료 : 233백만원
 - '04년 ~ '07년 징수실적의 평균증감율
 - * (284+345+132+149)/4년*1.03 = 233백만원
-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과태료 : 25백만원('08년 예산수준 반영)

3 가 산 금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수납액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	93	91	△2

* '07년 가산금 세입실적은 88백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에이디칩스와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기 납부한 가산금(89백만원) 환급처리함에 따라 △1

나. 세입개요

-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전날까지 연 100분의 6의 가산금 부과

다. 예산(안) 내역

- '03~'07년간 수납 가산금 평균 : 91백만원

< 연도별 가산금 수납내역 >

(단위 : 백만원)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20	286	71	79	△1

세 출

1

금융업법 체계개편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44	80	79	△1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현행 업종별 금융법 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개편,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업의 효율성 제고, 투자자보호 강화 등 선진 금융제도 확립

□ 사업내용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의 지속적 추진
- 금융업법 통합작업의 초기단계인 자본시장통합법에 이어 여타 금융업법 통합 및 하위법령 정비
 - 통합작업을 계획수립을 위한 T/F회의, 토론회 개최 및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참 고>

< 금융업법 체계개편의 단계 >

① 업권별 통합법 제정(1단계)	② 기능별 법 통합 작업(2단계)	③ 단일 금융통합법 제정(최종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법 제정(자본시장 관련 법 통합) - 은행법·보험업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진입·퇴출에 관한 법 등 제정 	

2 금융허브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288	369	300	△69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지속·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견인코자 함

☐ 사업내용

- 금융허브사업은 금융산업 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사업임
- '07년까지 7대 추진과제 실행을 통해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한 후 2015년에는 아시아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 목표
- '07년 제정된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 금융클러스트 지정 등 금융인프라 정비 를 통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 증가 유도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	500	500	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해외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지원할 종합적 민간지원기관으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립·운영

- *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경우도 별도의 금융기관 지원 기구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제공

☐ 사업내용

- 근거 :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

- 금융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금융 관련 전문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국정과제인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설립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 일부 지원

-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 및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여타 산업과 차별화된 별도의 지원조직이 필요

4 금융관련 국제협력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	159	373	214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금융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국제금융기구 활동 및 긴밀한 국제협력, 해외 IR 활동 등을 통한 해외 홍보 노력 강화

☐ 사업내용

- 현 정부는 글로벌코리아를 지향하면서 FTA체결 다변화를 통한 실용적·능동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FTA·WTO 등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은 국정과제 사업임
- 적극적인 국제금융기구 활동,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무형의 자산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적극적인 이해관계 반영 필요성
- FTA·WTO 협상을 위한 여비 등을 반영

5 금융전문인력 양성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2,000	2,000	1,500	△5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실무중심의 교육·연구를 통해 금융전문인력 양성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

□ 사업내용

- 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융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금융전문교육기관 확충을 통해 금융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국정과제 금융산업 발전방안(Ⅱ-3-6)]
- 고급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설립된 KAIST내에 「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지원 지속
- 자통법시행 등에 따라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현장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비학위 전문교육기관의 핵심금융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6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	80	72	△8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저축의식을 고양하고, 개인의 신용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신용카드·신불자 사태 등 과소비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

□ 사업내용

- 한국은행이 적자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이관을 요청해옴에 따라 '08년부터 동 업무를 우리위원회에서 직접 수행
- 건전한 소비문화와 더불어 건전한 저축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금융자원의 원활한 유통 증진
- 단순 예금중심의 저축문화에서 탈피하여 간접투자시장, 보험 상품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대국민 이해향상을 유도

<참 고>

- 저축의 날 기념행사(10월 마지막 화요일)는 국민저축 정신을 양양 등을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부기념일로 지정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841	1,639	3,903	2,264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모기지론의 이차를 보전

☐ 사업내용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하여 모기지론 금리를 차등(0.5~1.0%p) 우대
 - 05.10.31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출시(1년간 한시 판매)
 - 07.8.27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재개

【 소득수준별 금리우대 내역 】

	차입자 연소득		
	16백만원 이하	16백만원 초과 ~ 18백만원 이하	18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모기지론 기준금리	단기별 기준금리		
이차보전금리	1.0%	0.75%	0.5%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0,000	7,000	3,000	△4,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

☐ 사업내용

- 주택연금보증 제도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업무비용 등으로 30억원 출연 (사업시행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참 고>

- ☐ 주택연금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장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택연금 보증 공급확대 및 장기간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하여 자본금 성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부출연 필요

- 사업초기 일정기간은 자체수입 실적이 미미한 반면, 주택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경비 등 관리업무비 필요

-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함에 따라 보증잔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며, 일정 수준의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운용배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법정 운용배수(30배) 초과 우려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79,120	89,206	65,000	△24,206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장려금* 지급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출연

* 일반농어민 : 연 1.5 ~ 2.5%, 저소득농어민 : 연 6.0 ~ 9.6%

☐ 사업내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에 의거 정부는 매년도마다 저축장려금 예상소요액의 1/2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
 - '09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예상소요액을 감안하여 예산규모를 산정

<참 고>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도시근로자와 농어민간의 형평성 문제*, 농어민 소득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과 중복**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 도시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 94.12 폐지

** FTA, DDA 협상 등에 대비 농업·농촌에 향후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계획

- 동 저축의 근거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폐지를 추진
 - 동 저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는 만기(최장 5년)까지 법정장려금을 지급

10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50,000	0	100,000	100,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부 모기지론의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의 유동화증권(MBS, SLBS)을 발행함으로써 장기 채권시장의 육성·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
 -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함
 - * 납입자본금 : 4,766억원(정부 600, 국민주택기금 1,066, 한국은행 3,100)
- 법정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50배) 유지를 위해 자본금 확충 필요
 - 매년 유동화증권 잔액이 4~5조원씩 증가함에 따라 보증자리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09년 1,000억원 수준 정부출자

< 지급보증배수 추정 >

(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 지급보증 추정잔액(A)	141,696	197,101	249,835
▪ 년도말 자기자본(B)	4,603	4,090	5,090
▪ 지급보증배수(A/B)	30.8배	48.2배	49.1배

11 금융정보분석원(FIU) 운영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888	1,122	1,102	△2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9.11테러 이후 테러자금조달 억제와 관련한 국가간 공조체제 강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 및 국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예산 필요
- 비정규직보수 : 88백만원
- 관서운영비 : 454백만원
- 여비 : 210백만원
- 업무추진비 : 62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 155백만원
- 해외경상이전(국제분담금) : 113백만원
- 비정규직 보험료 및 자산취득비 : 20백만원 등
- 사업경비 합계 : 1,102백만원

12 FIU 전산망 구축·운영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3,982	4,182	4,757	575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시스템 보완·운영

☐ 사업내용

- 금융기관과 연계된 자금세탁방지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FIU에 입수되는 대량의 금융거래자료를 활용하여 혐의성이 높은 거래 및 거래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6천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FIU 전산망의 기능개선
 - 장비 임차료 : 2,850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비 : 695백만원
 - 위탁사업비 : 782백만원
 - 연구개발비 : 398백만원
 - 전산운영비 및 전산장비 구입 등 : 32백만원

* FIU 전산망은 보안유지 필요성 등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대상이 아님

13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06	138	127	△11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조직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창의 혁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능력개발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창의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행정효율성 및 능력 개발을 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 사업내용

- 위탁전문교육, 금융전문가 강의 및 혁신강의, 권역별 금융포럼 개최, 정책품질제고를 위한 정책 만족도 조사, 혁신학습단 운영
-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 및 정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 젊고 유능한 인재에 대해 우리위원회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기구 등에서 시행중인 YP(Young Professional)제도를 도입·운영

14 정보화 지원(정보화)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583	556	604	48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내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추진

☐ 사업내용

- 금융통합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사업(130백만원) : 금융위·금감원의 전자민원창구를 일원화한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금감원 정보시스템과 연계 등을 위한 고도화 사업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241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선 및 장애에 즉시 대처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 금융법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45백만원) : 금융위 소관 법령 및 감독규정, 각종 규정 및 지침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 디스크 증설, 조달수수료, 전용회선 사용료,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기타 운영 경비(88백만원)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167*	592	500	△92

* 구 금융감독위원회 결산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정책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및 정책현안에 대한 용역 수행을 통하여 정책수립·집행의 객관성을 도모

☐ 사업내용

- 금융규제개혁 과제 지속 발굴 및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담보대출중 고정금리 대출의 비율 확대 방안 연구
- 금융상품판매법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EWS모형의 설명력 및 속보성 제고 방안
-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 금융회사 통합법 제정을 위한 저축은행법 개정방안 연구
-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연구
- 공시·불공정 제도 개선 방안 등

— <참 고> —

- ☐ 금융정책에 대한 수요가 날로 다변화·고도화되고 있어 고품질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필요

16 금융정책 알리기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0	0	280	28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새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정책·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금융위의 주요 정책을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 등 시장 참가자들에게 적극 홍보

* 조직개편(舊재경부 금융정책국+舊금감위)으로 인해 '08년의 경우 동 사업 관련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아 정책 및 부처 홍보에 애로

□ 사업내용

- 금융위 출범 이후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기타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고객들의 알권리 충족
- 금융의 국제화·글로벌화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정책고객들을 위해 영문 홍보 강화
- 금융 문맹 및 소외자 등의 금융교육을 위해 정책 블로그 및 정책 알리미 도입을 추진하여 알기 쉬운 눈높이 맞춤 홍보 실시
- 세부 사업 내역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2명 채용 : 70백만원
 - 정책 블로그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 45백만원
 - 정책 알리미 도입 : 50백만원
 - 영문 홈페이지 개편 및 개발 : 50백만원
 - 금융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개발 : 40백만원
 - 자산취득비 : 25백만원

17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20,000	20,000	300,000	280,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위기 이후 집행된 공적자금의 채무상환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제고

☐ 사업내용

- 정부보증채(예보채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 만기도래액*중 재정 부담분 49조원('02말 기준)을 국채로 전환**하고

* 공적자금 부채 97조원('02말 기준)중 회수 가능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은 재정과 금융권에서 각각 49조원 및 20조원 분담

** 국채 전환(49조) : (03년) 13조, (04년) 12조, (05년) 12조, (06년) 12조

-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2조원('02년말 현재가치 기준) 수준을 지원받아 25년(2003년~2027년) 이내에 상환
- 적정수준의 일반회계 출연이 안될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을 예탁받아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25년간('03-'27)일반회계(재정)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전출)할 예정

18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7결산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3,040	3,042	2,918	△124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98년 IBRD로부터 전대차관자금을 도입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 조정지원 및 증권시장 선진화,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기술지원차관의 원리금 상환

□ 사업내용

- 원금상환 : 2,396백만원
- 이자상환 : 52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원금(\$)	2009년도 상환규모		
		계(A+B)	원금(A)	이자(B)
합 계	23,959,720	2,918	2,396	522
① 기업 및 금융구조 조정 지원	23,542,703	3,063	2,354	512
② 증권시장발전연구	168,737	22	17	4
③ 회계감사제도개선	248,280	32	25	6

4.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붙임 참조

〈공정시장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일정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 *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05.6.30	
		<input type="checkbox"/> 회계 부정행위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추가 <input type="checkbox"/>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인 자산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외부감사대상에 포함	2006.3.10	
		<input type="checkbox"/> 사전예방적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 리감리업무를 직접 수행		
		<input type="checkbox"/>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부담 완화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발행인으로 부터 받은 분담금 중 한국회계기준 원에 지원하는 비율을 그 분담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 정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의무적 립비율을 지원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	2007.4.27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 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2.29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구정비*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주권 상장법인	2008.7.29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외하고 주석을 추가 <input type="checkbox"/> 지배·종속의 관계범위를 국제회계 기준과 일치 <input type="checkbox"/> 외부감사대상 자산기준 상향조정 ○ 7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단축 ○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정기주총 4주전	입 법 예고중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규모가 큰 금융기관(8천억원 이상)에 대하여 일부 대형 회계법인만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 <input type="checkbox"/>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건별 기재사항을 총애만 기재토록 하는 등 작성부담을 완화	2006.3.10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3.3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취득 소명 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제한의 완화 ○ 감사 또는 증명업무의 독립성과 관련이 없는 채권·채무관계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정 ○ 감사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감사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당해회사의 자산매도실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2006.3.10	

구분 (제정, 개정, 폐지)	법명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타
		<input type="checkbox"/>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2006.6.12	
		<input type="checkbox"/>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외부기관 대체 시험(토플·토익·텡스)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처리되는 바, ○2006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험 형태인 토플 IBT(Internet Based Test) 시험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토플 시험의 실시방식에 IBT시험을 추가	2007.2.12	
		<input type="checkbox"/>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2007.3.27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2.29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정비	2008.7.29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2006.3.10.)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의 제출 방법을 정함	2006.3.10	
		<input type="checkbox"/>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2006.7.5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3.3	

〈글로벌금융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령	금융중심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 차등을 규정한 법 령으로 금융중심 지의 지정절차, 금 융중심지추진위원 회의 구성 및 운 영방법 등에 관해 규정	2008.3.22 시행	

〈금융정책과〉

구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담금 산정방법의 개선(영 제12조제1항) ○분담금의 한도 및 반환금액의 산정방법 개편(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예산 및 결산 공시제도 마련(영 제12조의2 신설) 	2007.5.16	
개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7.29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06.3.29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07.10.23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으로서 자산총액 기준 신설(영 제3조의4 신설)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설정요건 신설(영 제5조의4부터 제5 	2007.11.12	

		조의7까지 신설)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요건 구체화(영 제13조 제1항제4호나목 신설, 영 제15조 제1항제1호 등)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2.29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7.29	
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할 목 적으로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8572 호, 2007. 8. 3. 공 포, 2007. 11. 4. 시 행)됨에 따라 부실 징후기업의 구조조 정을 주도하는 채 권금융기관의 범위 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 및 한국수출 보험공사 등을 추 가하고, 주채권은 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하려 는 경우에는 회의	2007.10.31	

		<p>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하도록 하며, 채권 금융기관 간의 이 건 조정을 위하여 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p>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p>○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2008.2.29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p>○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2008.7.29	

보험업법령 최근 3년간 개정현황

〈보험업법 시행령〉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가.보험계약의 청약자 가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 험회사의 의무사항 나.보험회사의 자 회사 범위 확대 다.보험회사 주요 출자자 요건의 합리적 보완	2007.8.17	
"	"	가.사외이사 및 감사 위원의 요건 신설 나.대주주가 발행 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 조치 사유 신설	2008.1.20	
"	"	2008년 4월 1일부 터 금융기관보험대 리점 등에서 개인 보장성 보험, 자동 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삭제 등	2008.3.28	
"	"	가.보험회사 업무 범위의 확대 나.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 다.자산·손익 구분 계리 방식 마련	2008.6.15	

〈보험업법 시행규칙〉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61호, 2005. 3.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종전에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인·허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05.3.31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	2008.3.3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에 따른 일부개정	2008.8.4	

〈산업금융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완화 - 100분의 15이하→100분의 20이하 ○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의 예외인정범위 확대 - 부품·소재전문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 결산순이익금의 현물배당 방법 규정 	'06. 1. 1	
개정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여신한도를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 30으로 완화 	'06. 6.22	
개정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기금관리기본법→국가재정법 	'06.12.29	
개정(안) 입법예고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15% → 금융위가 정한 요건 충족 및 금융위 승인시 은행 자기자본의 30% 	'08. 9.12 (입법예고)	

구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타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05. 8.26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비율 상향 조정 및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시 차등요율 적용	'06. 1.24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하는 것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	'06. 2.22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대출금의 명확화 및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 중 기준요율을 하향조정	'07. 7. 1	
개정	기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대출금의 명확화 및 출연금액 개정	'07. 6. 4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농협·수협중앙회) 출연요율 상향 조정	'06. 1.24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금융기관 확대 (농·수·산림 회원조합 출연개시)	'06.10. 1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농협·수협중앙회 출연대상 대출금 조정 및 출연요율 상향 조정	'07. 7. 1	

〈은행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 일자 [폐지 일자]	기 타
개정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추심이체의 경우 출금 동의의 방법을 추가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08.7.9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회사·증권금융 회사·선물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 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 하여 증권업 등 고유업무의 부수업무 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자자금이체업 무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은행 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 모하고 증권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려는 것임	07.7.1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 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 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 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 사항을 마련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07.1.1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대상연령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사유 및 보증요율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7.4.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2로 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요율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0.125퍼센트를 적용하되, 그 밖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연 0.260퍼센트를 적용하고, 차등요율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	07.5.3	

		<p>위변제받는 금액이 출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연 ± 0.04퍼센트 이내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p>		
--	--	--	--	--

〈자본시장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상장법인의 우리 사주조합에 관한 요건을 근로자복지 기본법과 일 원화	'05.12.9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증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제 도의 도입에 따른 승인대 상, 승인절 차 등을 규 정	'06.1.27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상장법 인의 임직원 이 금감위로 부터 해임권 고, 고발 또 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스톡옵 션 취소 근 거 마련	'06.3.30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금감원이 증권사 또는 유가증 권 발행인으 로부터 징수 하는 분담금 의 한도, 초	'07.5.16	

		과분의 처리 등을 규정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전자자금이체업무 를 증권사의 업무로 명시	'07.6.28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대주주가 증권사 에게 위법행 위를 요구하 거나 부당한 조건의 거래 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등 대 주주의 부당 행위를 금지	'08.1.18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규칙	정부·예보로부터 취득한 자사 주를 대상으 로 교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을 배제한 것 외에, 기타 용어 및 규 정체계 정비 등으로서 특 기 사항 없 음	'06.11.8	
개정	선물거래법시 행령	현물시장에서 이 득을 얻기 위해 선물시 장에서 시세 조종을 하는 역방향 시세 조종을 불공	'07.12.20	

		정 거래 행 위 로 명시하는 등 규제 정 비		
개정	선물거래법시 행령	대주주가 선물업 자에게 위법 행위를 요구 하거나 부당 한 조건의 거래를 요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주주의 부 당행위를 금 지	'08.1.18	
개정	선물거래법시 행령	일반상품 선물거 래의 대량보 유 보고기 준, 보고사 항, 보고시 한 등을 규 정	'08.4.30	

〈자산운용과〉

구 분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개정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령 (‘06.1.27)	<input type="checkbox"/>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 주주의 범위 및 요건 신설 등	‘06.1.30
	상동(‘06.2.9)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06.2.9
	상동(‘06.4.27)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 도입 등	‘06.4.27
	상동(‘06.12.29)	<input type="checkbox"/>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7.1.1
	상동(‘07.6.28)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확대	‘06.7.4
	상동(‘07.12.28)	<input type="checkbox"/>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위한 요건을 완화 등	‘07.12.28
	상동 (08.1.18)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08.1.20
	상동(‘08.2.2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2.29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규칙 (‘06.5.9)	<input type="checkbox"/>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 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국내대리 인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 정함	‘06.5.9
	상동(‘08.1.8)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외국에서 설립한 간접투자기구(Mutual Fund)의 임원 겸직 허용 등	‘08.1.8
	상동(‘08.3.3)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3.3
	신탁업법 시행 령(05.11.25)	<input type="checkbox"/>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이 신탁 업을 겸영시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배제 적용할 근거 마련	‘05.11.25
	상동(‘08.2.2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2.29
폐지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자통법시행에 따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폐지	‘09.2.4
	간접투자자산운 용법 시행규칙	상 동	‘09.2.4
	신탁업법 시행령	상 동	‘09.2.4

〈중소서민금융과〉

구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여신전문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확대	2008.1.18.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의 활성화와 자본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	2006.5.3.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2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한도를 조정	2008.1.18.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 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 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 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05.5.26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평가업자간의 경쟁이 촉진 되고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업의 진입요건을 완 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 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의 조회방 법을 다양화	2006.7.1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서면이나 공인전자 서명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신 용카드 비밀번호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동의하는 방식 등을 추가	2008.3.22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 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 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 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05.5.27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p>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이나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매입 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조합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조합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으로 중앙회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을 2007년 11월 4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중앙회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p>	2007.11.22.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p>신협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이 지급불능 상태로 되는 경우에는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인 5000만원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 별단예금을 보유하고 있는</p>	2008.6.25.	

		중앙회 타 회계에 대하여도 신탁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도록 함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523호, 2005. 5. 31.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5.9.1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2007.10.4.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00호, 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대부업 등록 및 등록갱신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2008.3.28.	

5.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및 조치 내역

□ '06.1.1일 이후 '08.8.31일까지 舊재정경제부·舊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총4690건의 민원 처리를 완료

※ 舊재정경제부 2673건(57%), 舊금융감독위원회 316건(7%), 금융위원회 1701건(36%) 처리 완료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연 도	기 관	건 의	상담안내	질 의	정 원	소 계
'06	재경부	32건	256건	259건	655건	1202건
	금감위	9건	26건	16건	64건	115건
'07	재경부	117건	357건	276건	548건	1298건
	금감위	12건	35건	15건	108건	170건
'08.1~2	재경부	25건	8건	73건	67건	173건
	금감위	1건	5건	9건	16건	31건
'08.3~8	금융위	301건	123건	286건	991건	1701건
총 계		497건	810건	934건	2449건	4690건

6.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

1. 국내 자격증 제도 현황

□ [붙임1], [붙임2], [붙임3] 참조

[붙임1] 국내 보험관련 자격증 제도 및 정비연혁

자격증 명칭	취득조건 및 절차	시험 과목	연간합격자수	주관 기관	실시시기	관련법	정비연혁
보험 계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실무수습*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 * 보험수리 업무에 대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실무수습 면제	붙임 참조	<p><2007년 선발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리사 : 80명 ▪ 손해사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40명 - (2종) 4명 - (3종 대인) 204명 - (3종 대물) 60명 - (4종) 101명 <p>※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단,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p>	금융 감독원 및 보험 개발원	매년 변동 ※ 2007년도의 경우 1차 : 3월 2차 : 7월에 실시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 칙 등	1988년부터 시험에 합 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 에 등록하도록 변경
손해 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실무수습*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 *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실무수습 면제						
보험 중개사	시험합격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		<p><2007년 선발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중개사 : 42명 ▪ 손해보험중개사 : 11명 ▪ 제3보험중개사 : 23명 <p>※ 매 과목(대분류)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p>		매년 변동 ※ 2007년도의 경우 10월에 실시		1997년 도입되어, 199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2003년 보험중개인에서 보험중개사로 명칭 변경

[붙임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보험계리사 시험과목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1)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중 택일 (2) 보험수학 (3) 외국어(영어 및 일어중 택일) (4)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1) 보험이론 및 실무 (2) 회계학 (3) 보험수리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종 목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제1종(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1) 보험업법 (2)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이론 (3) 회계학 (4) 영어 (5)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1) 손해사정이론 (2)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2종(해상·항공·운송보험 등)	(1) 보험업법 (2) 해상보험이론 (3) 회계학 (4) 영어 (5)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해상편)	(1) 손해사정이론 (2)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3종 (자동차보험)	대인 (1) 보험업법 (2) 자동차보험이론 (3)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 의학이론	(1) 손해사정이론 (2)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손사고편)
	대물 차량 (1) 보험업법 (2) 자동차보험이론 (3)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1) 손해사정이론 (2)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제4종(상해·질병·간병보험)	(1) 보험업법 (2) 제3보험이론 (3)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 의학이론	(1) 손해사정이론 (2)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대 분 류	소 분 류
생 명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행동규범
	(2)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3) 생명보험 1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4) 생명보험 2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생명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손 해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및 해상편(제5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행동규범
	(2)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3) 손해보험 1부(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4) 손해보험 2부(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 적하·선박·운송보험, 항공·우주보험, 재보험
제 3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사행동규범
	(2)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3) 제3보험 1부(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4) 제3보험 2부	제3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

[붙임3] 증권관련 자격증

자격증 종류	목적	주관
증권투자상담사	일반고객을 상대로 주식, 채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권유 및 투자상담을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한국증권업협회
선물거래상담사	일반고객을 상대로 선물시장에서 선물·옵션거래의 위탁권유 및 투자상담을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협회
금융자산관리사 (자산설계전문인력)	고객의 재무설계와 투자규모 및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고객별로 종합적인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의 투자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한국증권업협회
재무위험관리사	주식, 채권, 선물·옵션 및 기타 장외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을 측정, 평가, 통제하여 당해회사의 재무위험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한국증권업협회
증권분석사	증권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업가치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한국증권업협회
펀드판매인력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 판매 업무 및 취득을 권유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 검증	자산운용협회연수원 증권연수원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운용전문인력	일반운용전문인력, 부동산전문인력, SOC전문인력 등이 있으며, 신탁재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정의 교육 또는 시험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	자산운용협회
판매인력	판매회사(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선물사, 종금사 등)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임직원등에게 소정의 교육 및 시험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	자산운용협회

7. '07년부터 '08.8월 현재까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07년도	161	82	55	9	18	-	79
'08년8월말 현재	126	73	46	7	20	1	52

*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된 건수 포함

김 영 선 의원

1. 금산분리 정책(은행소유규제의 합리화)의 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년도·단계별 진행 현황(회의,
위원회, 보고서, 정책산출)

□ “은행소유규제의 합리화”는 대선공약으로서

-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08. 3말) 등을 통하여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 확정

□ 이후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세미나 등을 통하여 방안
마련후 관계부처 협의 중

-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별첨 :

1. 은행주식 보유규제의 변천
2.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자료
3. 최근 관련 정책세미나 보고서(금융연구원, '08.7월)

< 별첨 1 >

은행주식 보유규제의 변천

구 분	주 요 내 용
'82.12 이전	<p>□ 소유제한 없음(단, 의결권행사는 10%로 제한*)</p> <p>* '61.5.16 이후 「부정축재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재벌이 소유한 시중 은행 지분을 일부 환수하였으며 금융기관에관한임시조치법('61.6)을 제정하여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까지 10% 제한</p>
'83.1	<p>□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시 대주주에 의한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국회 심사보고서)하기 위하여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제(8%) 도입</p> <p>○ 동일인의 은행주식 8% 초과보유 및 사실상 지배를 금지하고 8%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p> <p>* 지방은행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소유 한도 적용을 배제</p> <p>※ (8%로 제한한 이유) 당시 정부안은 10%였으며,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0%는 책임경영 유도, 당시 5~6대 주주까지 보유한 은행지분의 합이 평균적으로 40% 수준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소위 논의과정에서 8%로 하향조정</p>
'92. 5	<p>□ 은행주식 소유의 분산을 위하여 지방은행에 대한 동일인의 소유 한도(15%) 도입 및 동일인 범위 확대*</p> <p>* 친인척 위주로 되어 있던 동일인 개념을 확대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동일인의 범위에 추가</p>
'95.1	<p>□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다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수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p> <p>○ 은행주식보유한도를 축소(8%→4%)하되 금융전업가*는 12%까지 보유 허용(단, 전환은행** 및 기관투자가***는 8% 허용)</p> <p>* 금융업만 영위하고 대기업집단(30대계열)과 동일인 관계가 아닌 개인으로 은감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p> <p>**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舊 금산법)에 따라 은행으로 전환한 금융회사</p> <p>***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상장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은감원장이 지정한 자</p> <p>※ (4%로 축소한 이유) 8%한도는 과점주주간 답합가능성이 크고 당시 상법상 5% 이상을 소유하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4%가 적정 (국회 심사보고서)</p> <p>* 주총소집청구권 및 이사해임청구권 등</p>

'97. 1	<p>□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은행소유제한 제도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전업가 : 12% 한도 폐지(은감원장 승인한도까지 허용) ○ 합작은행* : 4%를 초과하여 은감원장이 승인한 한도까지 소유가능 <p>*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舊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과 국내인(법인포함)이 합작으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단, 동일 외국인이 은행 주식의 8%이상 50%이하, 외국인 전체가 은행주식 25% 이상 소유할 것)</p>
'98. 1	<p>□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실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의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전업가제도 폐지(대기업집단(30대계열) 관련자 제외, 자기자금 한도내에서의 주식매입 등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제도의 유명무실화) <p>[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초과시 : 금감위 신고 ○ 10%, 25%, 33% 초과시 : 금감위 승인 <p>* 영위업종을 은행·증권·보험업 및 그에 준하는 업으로 제한</p> <p>[내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외국인의 은행주식 소유 지분을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경우와 동일한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소유 <p>* 대기업집단(30대 계열)의 경우 1개 은행에 한하여 초과보유 가능 ** 내국인에 대하여는 영위업종을 제한하지 않음</p>
'02. 7 이후	<p>□ 내국인에 대한 시중은행 주식소유한도를 확대(4%→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를 위하여 은행주식 4% 초과 보유시 의결권 제한 및 감독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10%까지 보유 가능 <p>□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따른 대주주 감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은행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한도, 은행과 대주주 간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감독당국 보고·공시 의무 등 신설 및 위반시 과징금·벌칙 신설

< 별첨 2 >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자료 中 발췌

2008년 업무계획

신성장 금융산업 섬기는 금융행정

2008. 3. 31



금융위원회

목 차

I. 왜 금융인가?

II. 한국 금융의 현주소

- 1.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 2. 한국 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III. 금융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1. 금융정책의 비전**
- 2. 금융정책 방향 및 주요추진과제**

I. 왜 금융인가?

◇ 금융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Decent jobs)를 창출할 수 있는 新성장동력 산업

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成長潛在力을 보유

○ 금융산업의 GDP성장 기여율이 8.2%('00~'05년중)로 영국(15.5%), 미국(11.1%)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06년, 7.5%)도 영국('05년, 8.2%), 미국(7.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② 經濟 全般에 대한 높은 附加價值 창출 효과

○ 금융업의 부가가치율은 71.1%('06년)로 여타 산업(전 산업 평균 38.5%, 서비스업 57.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

③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輸出産業으로 성장가능

○ 해외 선진은행의 해외자산 비중이 대부분 50%이상*이나 국내은행의 경우 2.5%('06년)에 불과

* 미국 Citi : 51%, 영국 HSBC : 56%, 스위스 UBS : 91%

④ 임금수준이 높은 良質의 일자리 제공 가능

○ 금융업의 평균임금 수준은 전체산업에서 2위에 해당

⑤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자금을 유도해 경제의 역동성 제고

○ '위험을 관리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산업으로 자금을 유도

〈해외 성공사례〉

① 호주는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 시현

- 1997년 존 하워드 수상이 '성장을 위한 투자 (Investing for Growth)' 전략을 발표하면서 경제개혁 추진을 본격화
 - 특히, 금융제도의 개혁과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Invest Australia 설립을 통한 금융서비스 확대를 추진
- 그 결과 금융산업의 GDP 성장 기여율이 금융허브정책을 개시한 1997년 5.8%에서 2004년 7.6%로 지속적인 증가세 시현

<호주의 산업별 GDP 성장 기여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융	4.1	4.2	5.8	6.4	6.6	6.6	6.6	6.7	7.2	7.6
제조업	15.6	13.9	13.6	13.2	12.5	12.1	11.7	11.0	10.8	10.9

- 이에 따라 호주는 2000년 초 세계적인 동반 경기침체 하에서도 세계 여러 선진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 시현

< GDP 성장률 (%)>

	2001	2002	2003	2004	2005
호주	2.7	3.3	2.4	3.7	4.0
OECD권	0.9	1.8	2.0	3.0	3.1

② 아일랜드는 틈새시장을 특화하는 금융허브 육성 전략을 통해 신흥 금융강국으로 부상

- '87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더블린 북부지역을 국제금융 서비스센터(IFSC)로 지정하여 런던, 에딘버러 등을 근거로 한 금융회사의 후선업무(Back Office) 기능에 특화
- 아일랜드는 자산운용시장이 세계 6위 규모로 성장한데 힘입어 1인당 GDP가 영국을 상회*하는 등 고소득 국가로 급성장

* 1인당 GDP('06) : 아일랜드 5.2만불, 영국 4.0만불

II. 한국 금융의 현주소

1.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 금감위·금감원의 「세계 10대 금융강국」 조사('07.10)에 따르면 우리의 금융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에 해당

* 세계 10대 금융강국(OECD기준):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 우리 경우 금융시장 규모^{*}(9위)나, 성숙도^{**}(11위)는 상위권이나

* 은행산업·자본시장·보험산업 규모

** GDP중 금융산업비중, 금융연관비율, GDP 대비 시가총액비중

○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감독역량^{*}(21위), 금융산업의 국제화^{**}(25위), 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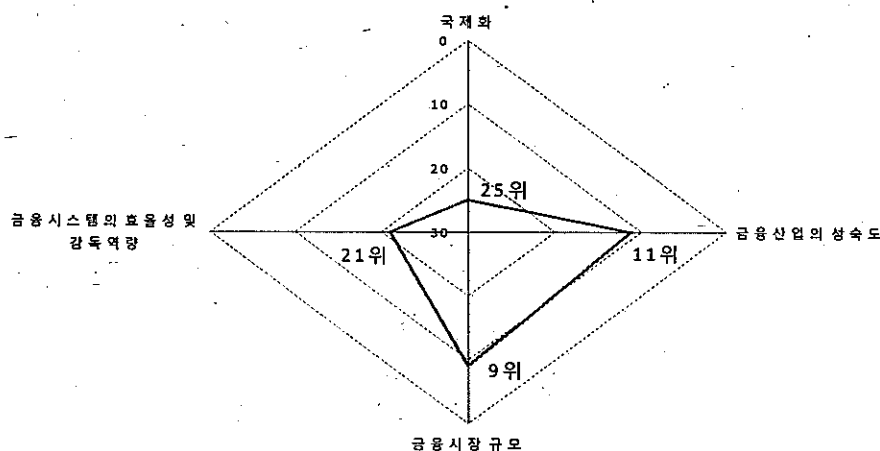
☞ 세계적인 금융강국의 조기진입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화폐가치 안정성, 금융자유 및 투명성, 책임성 지수, 금융전문인력

** TNI(TransNationality Index), 금융개방도,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 수

※ $TNI = [(해외자산/총자산) + (해외수익/총수익) + (해외인력/총인력)] \times 100/3$

우리나라의 평가부문별 현황



2. 한국 금융에 대한 現場의 목소리 [설문결과 등]

① 국내 金融業界의 금융당국에 대한 평가

- 그간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체감 규제완화는 미흡
 - * 수시로 내리는 구두지시와 공문, 유권해석, 인·허가에 대한 답변 지연 등 감독관행상의 그림자 규제 잔존
- 「문제해결」을 돕기보다는 창의적 영업활동을 방해
 - * 지나치게 경직된 법규 해석·운용과 위법성 적발 위주의 감독·검사
- 업무전문성이 미흡하고 서비스보다는 '甲'의 위치에서 군림하는 태도

② 金融利用者의 금융산업에 대한 평가

- 개인정보 유출, 과장광고 등 消費者 保護에 무관심
- 유사한 상품, 유사한 영업전략 ⇒ 차별화 노력 미흡
-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영업행태

③ 外國의 국내 금융에 대한 평가

- 대외 경쟁력이 미흡하고, 금융허브 실현가능성도 낮음
 - * 교육·의료 등 생활환경·언어·법률·세제 등 기반시스템 미비, 경직적 규제감독 시스템을 지적
- 「反외자정서」가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

Ⅲ. 금융의 新成長動力産業化를 위한 政策方向과 課題

1. 금융정책의 비전

가. 5년 후 우리 금융의 비전

①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 출현

- 활발한 인수·합병 통해 대형 금융회사가 출현하고 경영권 시장 활성화로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도 제고
- 은행지주회사 외에 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 다양한 지주회사 출현으로 금융산업 시너지 극대화

② 글로벌 금융회사가 활발하게 영업하는 금융중심지 정착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금융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여건 개선
- 글로벌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해외 우수 금융회사 들을 적극 유치해 한국을 '금융산업의 전시장'으로 자리매김

③ 아시아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 해외기업 상장 유치, 기업가치 증대 등을 통해 우리 자본 시장을 동경, 홍콩과 겨룰 수 있는 선도 자본시장으로 육성

* 아시아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07말, 십억불)

: 동경(4,330), 상해(3,694), 홍콩(2,654), 한국(1,122), 대만(664)

④ 「금융도우미」가 된 금융정책·감독당국

- '관리·감독자'가 아닌 '문제 해결자'로서의 위상 확립

나. 비전 달성 가능한가? (우리의 潛在力)

① 금융산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

- 일반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MBA 유학생 수 등 질 높은 잠재 금융인이 풍부

* 교육관련 지표 국제순위(IMD)

25~34세 인구 고등교육 이수율(4위), 수학·과학 성적(3위)

- 다만, 금융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은 과제

* 금융전문가/전체금융인력(% , '06말): 한국(8.9), 홍콩(43.8), 싱가포르(51.3)

② 기업의 풍부한 유동성 보유 등 경제 내 잉여자금 축적

-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기금 적립액, 펀드 설정액도 크게 증가

* 자금운용규모: 기업('05:57조→'07:104조), 개인('05:90조→'07:122조)

펀드 수탁고: 218조('05) → 320조('07)

③ 아시아로의 「富의 이동」에 따른 주변국들의 금융수요 증가

-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빠른 경제 규모 확대 및 대규모 자금수요 등 거대 시장 존재

< 08년 신흥시장 자금 유입 전망(억\$) >

남미	신흥유럽	아프리카/중동	신흥아시아	합계
1,293	3,329	411	2,275	7,308

④ 금융을 독자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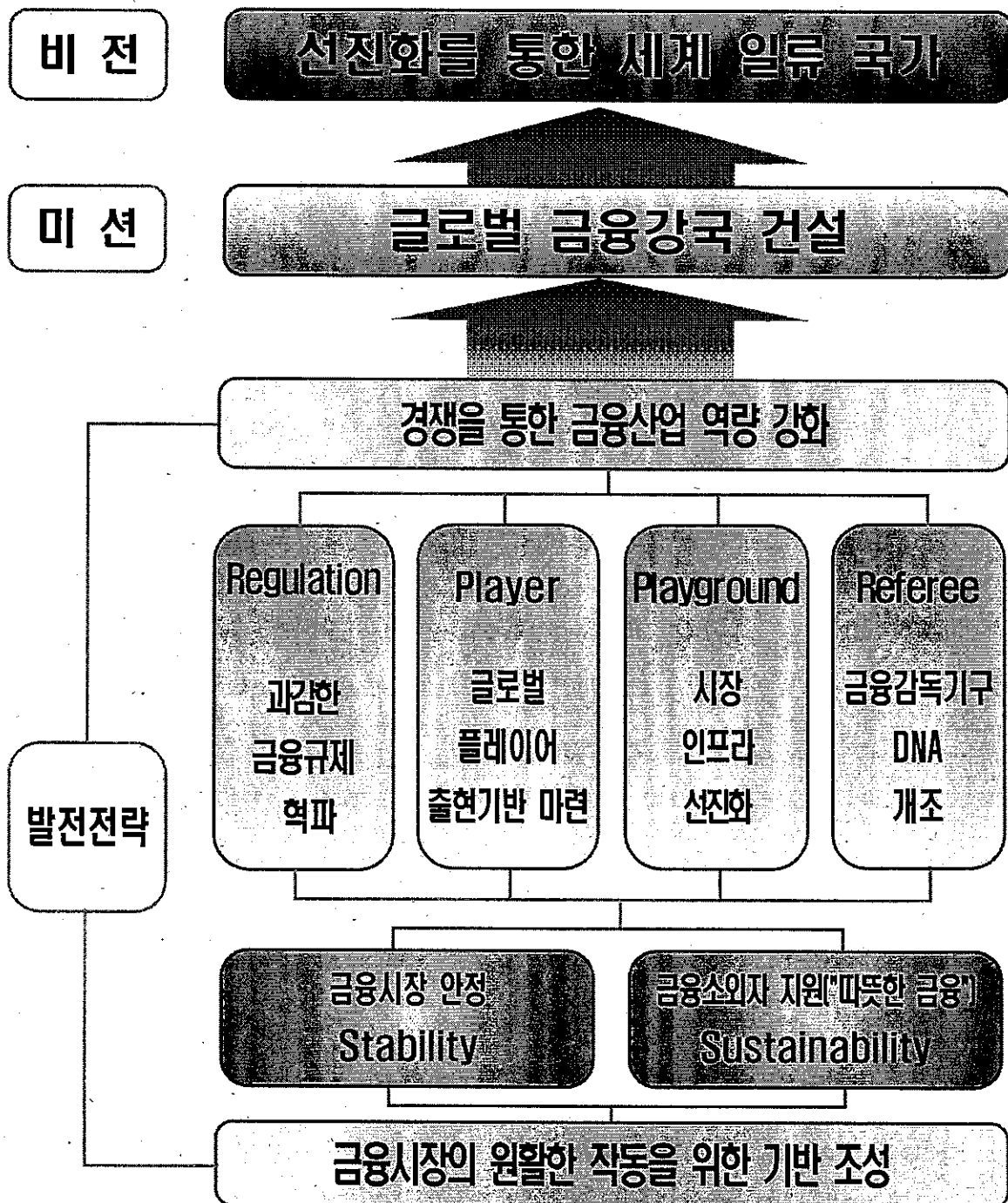
- 외국 경우 리완유(싱가포르), 하워드(호주) 등 최고책임자의 관심과 의지가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유도

* 리완유 총통: 「돈되면 뭐든 개방」, 경제개발청 설립

Howard 총리: 「Investing for Growth」 전략 발표, Invest Australia 설립

2. 금융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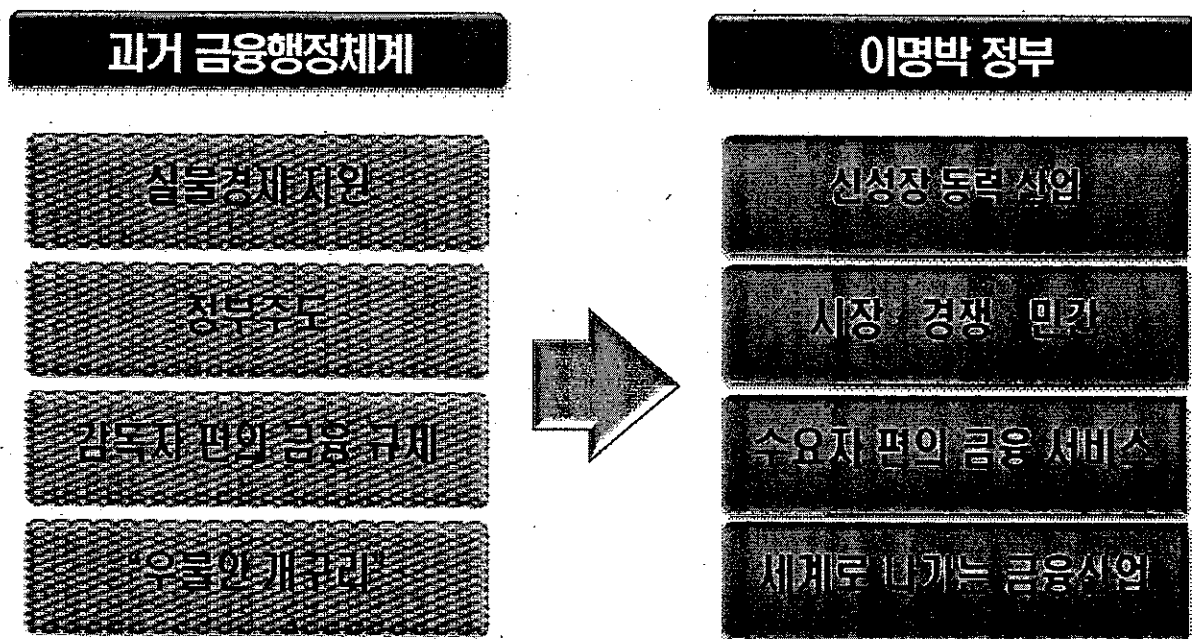
- ◇ 과감한 금융규제의 효과를 통해 금융산업내 경쟁 촉진
→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
- ◇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
 -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 금융소외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 또한,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금융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

- '실물경제 지원'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독자산업화
- '정부주도'에서 '시장·경쟁·민간'주도의 금융정책
- '감독자 편의의 금융규제'에서 '수요자 편의 금융서비스'로 전환
- '우물 안 개구리'로서 금융산업을 '세계로 나아가는 금융산업'으로 발전

〈참고〉 이명박 정부의 새 금융정책 패러다임



가.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1] 규제혁파의 전략적 추진

[가] 비명시적 규제 등 금융규제 전면 재검토

◇ 민원 불만이 가장 많은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단행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1) **全 금융규제에 대한 妥當性 전면 재검토 ('08.6월말)**

① 모든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존치 · 완화* · 폐지 3등급으로 규제를 분류하고, 폐지로 분류된 규제는 즉시 제도개선 추진

* 현시점에서는 존치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폐지될 수 있는 규제를 포함

② 업계 · 전문가 등 民間으로 구성된 '(가칭)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설치

- 同 위원회가 존치 · 완화로 분류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의하고, 규제당국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③ 존치 규제에 대해서도 週期的으로 존치 필요성을 再심사하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 체계 구축

2) 非明示的 規制 효과

(전수조사 '08.6월말, 개선방안 마련 '08.12월말)

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지도공문·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조사 후 법규화 또는 폐지 등 정비

② 비명시적인 규제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위법·부당한
비명시적 규제 행위에 대한 불이익 부여 체계를 구축

① 재량의 여지가 지나치게 부여된 불분명한 법령 및 감독
규정을 명확화

② 외부 전문가 확충 등 규제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

* 신상품 개발이나 새로운 방식의 영업 시도시 감독당국 담당자의
이해가 부족하여 인허가가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사례 방지

③ 위법·부당한 비명시적 규제 집행 등을 적발하기 위해
민간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

- 비명시적 규제 집행자에게 **Penalty 부과**(인사, 성과급 등)
검토

* 위법·부당한 비명시적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수요자들의
건의를 접수·처리

④ 주기적인 외부평가 및 평가결과를 인사 등에 활용하는 등
규제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나) Quick Hit 과제의 신속한 추진

◇ 규제개혁 과제중 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Quick Hit)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추진

1) 민원사항에 대한 On-line One stop 모듈 다양화

(개선방안 마련 '08.4월말, 시스템개발 및 운영 '08.6월말)

①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한 곳을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방문(One stop)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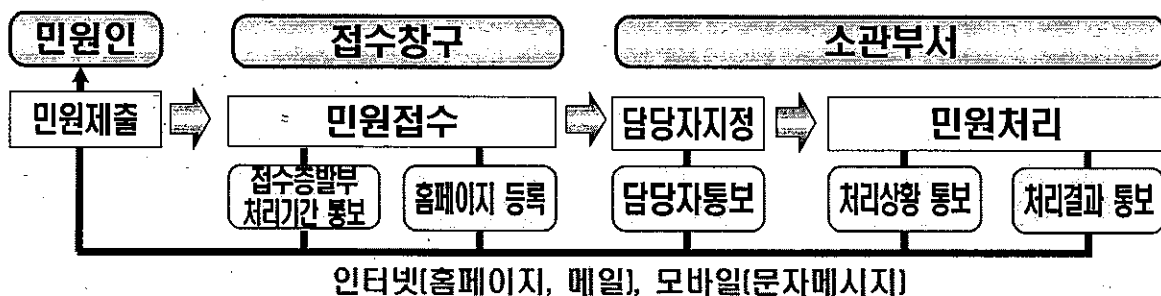
○ 인·허가 신청, 등록, 신고, 유권해석의뢰, 정보공개청구, 단순 민원 등 다양한 민원종류별로 처리시스템 구축

○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인이 금융당국을 한 번만 방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내부의 민원관리 프로세스를 개선

② 민원 제출이후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는 전과정을 금융당국이 On-line으로 통보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민원접수/담당자/처리시한/처리상황/자료보완사항/처리결과 등을 금융당국이 인터넷, e-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세히 제공

On-line One stop 민원처리시스템 체계도



2)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民願性 規制의 優先的 해소

① 금융회사 종류별 인가기준 다양화로 설립의 용이성 제고

-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와 시스템 리스크가 적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신규진입요건 대폭 완화
(자통법시행령 제정, '08.7월말)

②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적극 검토 ('08.7월말까지)

- 증권사 (13개), 자산운용사 (9개) 신설 인가여부 결정

③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 보험상품에 대한 Negative 규제 도입, 상품개발·심사 절차 간소화 추진('07.5월말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

* 현재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또는 사후제출을 의무화
→ 보험사에서 개발·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상품 허용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 허용

④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신속 정비

- 사전협의·신고 사항이던 해외점포 설치를 사후보고로 통일

* 은행: 금융위와 사전협의, 보험·증권: 사후보고

[다] 금융규제의 Paradigm을 근본적으로 전환

◇ Quick Hit 과제 추진과 함께 금융규제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① 은행·증권·보험 3대 권역별 법령정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 자통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금년 중('08.7월) 마무리

○ 은행법 및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금년 중 국회 제출

② 3대 권역을 유지하되, 업권간 규제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아 통합이 용이한 기능*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

*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판매, 지배구조 등

③ 장기적으로 칸막이식 규제를 機能別로 통합하는 가능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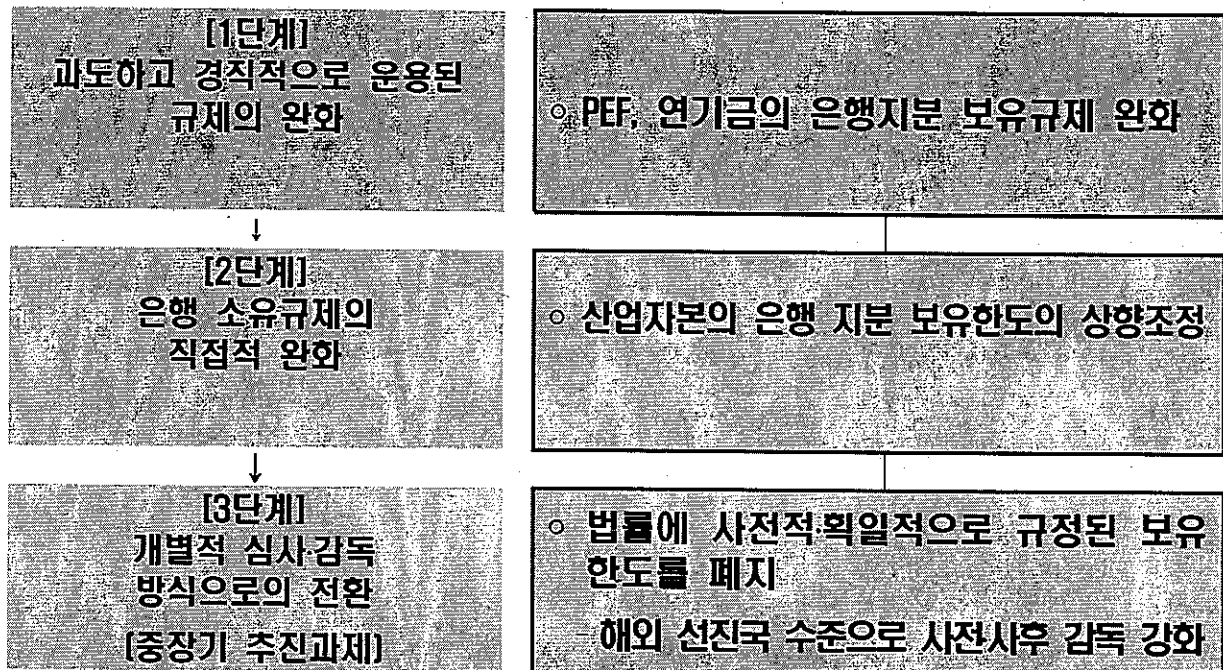
나.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1) 금산분리 완화

◇ 지나치게 경직적인 은행소유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소유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국책은행 민영화를 지원

□ 현재 사전적·획일적인 銀行 所有規制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감독 강화」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

○ 다만, 현실 여건 등을 감안,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금융 감독의 기능·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도 철저



[이하 생략]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이 상 제

2008. 8.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머 리 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에 관한 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이다. 규제에 따른 비용과 규제를 완화했을 때의 예상되는 장단점은 분석이 거의 끝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계량적 검증이 어렵고 또 같은 현실을 보는 시각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논의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 소유 은행들의 민영화 추진과 금융산업 내에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행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가 바람직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과 산업은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우려되는 부작용은 소유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규제 대신 행위 규제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10일 현행 은행 소유규제가 바람직한지,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소유 규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본 연구원의 이상제 박사가 발제를 담당하였고, 여섯 분의 토론자가 나서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본 연구원은 이러한 토론 내용이 향후 정책 당국이 은행 소유규제를 합리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제 및 토론 내용을 묶어 「정책조사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책세미나의 사회를 맡아주신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강명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님,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님, 이인실 서강대학교 교수님, 조기욱 하나금융지주 부사장님, 최공필 우리금융지주 전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은행 소유규제 문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정책당국이 마련하는 은행 소유규제 체계에 유용하게 반영되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우리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책세미나 준비에 애쓴 본 연구원의 여러분들과 토론 결과를 정리하는 데 애쓴 박희섭 과장, 그리고 자료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금융위원회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연구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8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 동 걸

목 차

요 약

I. 서 론

II. 은행 소유규제의 변천

1. 우리나라 은행 소유규제
2. 주요국의 은행 소유규제

III. 은행 소유규제 관련 논점

1. 경제력 집중 측면
2. 이해상충 가능성 측면
3. 금융회사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측면
4. 대리인 비용과 기업 모니터링 측면

IV. 은행 소유규제 개선 방향과 논점

1.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2. 국민연금 등 연기금 관련
3. PEF 관련

V.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은행·은행지주회사별 주주 현황(07년 12월말 기준)

토 론

Abstract

표 목 차

- 〈표 1〉 우리나라 은행 소유규제의 변천
- 〈표 2〉 주요 국가들의 산업자본-금융자본 간 결합규제
- 〈표 3〉 현행 우리나라 은행 대주주 감독제도
- 〈표 4〉 대주주 사후 감독체계 강화 방안
- 〈표 5〉 미국의 은행 및 은행관련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 〈표 6〉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제도 현황
- 〈표 7〉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비교
- 〈표 8〉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
- 〈표 9〉 일반 사모펀드·사모M&A·PEF 비교
- 〈표 10〉 PEF의 미국 은행에 대한 최근 투자동향
- 〈표 11〉 PEF(SPC)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경우

그림 목 차

- 〈그림 1〉 규제와 감독의 상호 보완

요 약

I. 서 론

■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일정 지분을 초과할 때 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이를 허용했을 때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론 자금고화를 부추기고 경제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등 폐해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근거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기존 자본의 교체나 필요 시 자본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인 현행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
- 과거에 비해 경제력 집중과 이해상충을 방지할 감시체계가 개선되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줄었다고 보는 입장

- 우리나라 산업자본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지배구조 및 경영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소유한도를 지금보다 완화할 경우 다수 주주군에 의한 상호 견제보다는 단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도 팽팽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은행 소유규제의 변천과정과, 소유규제의 찬반 논쟁 및 소유규제 방식의 장단점을 고찰

II. 은행 소유규제의 변천

1. 우리나라 은행 소유규제

-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는 순수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천
 - 1982년 12월 이전에는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는 없고, 다만 의결권만 10%로 제한
- 2002년 7월 시행된 현행 개정 은행법에서는 내국인의 시중은행 주식 소유 한도를 4%에서 감독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10%로 확대하였으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방지를 위하여 은행 주식을 4% 초과 보유 시 의결권을 제한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한도, 은행과 대주주 간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감독당국 보고·공시 의무 등 신설 및 위반 시 과징금·벌칙 등을 제정

- 현재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은행법 제15조제1항 제2호)까지 허용(은행법 제15조제3항제1,2호)
- 외국인이 국내 은행의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까지는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10%(지방은행은 15%), 25%, 33% 초과 시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유 가능(은행법 제15조제2,3항)

■ 한편 동일인이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되며, 금융위원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 명령 가능(은행법 제16조)

■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지방은행은 1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 가능

- 한편 비금융주력자가 사원으로 참여한 PEF가 은행주식을 보유한다면
 - 1) 비금융주력자가 PEF의 GP인 경우, 또는 LP로서 10% 초과 출자하거나 4% 이상 최대출자자인 경우
 - 2)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합계액이 30%를 초과하는 PEF인 경우 등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규제

2. 주요국의 은행 소유규제

1) 영국

■ 영국에서는 '산업자본'을 특별히 지칭하여 은행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금융업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Financial Services and Financial Markets Act of 2000, FSMA 2000)에 따라 은행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청(FSA)의 승인 필요(동법 제 178-192조)

- 구체적으로는 10%, 20%, 33%, 50% 초과 취득 시마다 각 단계별로 서면으로 신고하여 FSA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동법 제179, 180조)
- 사전 규제보다는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 제한,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 유지 관점이라는 사후 감독 차원에서 대주주를 관리, 감독

2) 미국

■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BHCA)에 따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

- BHCA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저축은행 및 신탁은행(any national banking association or state bank, savings bank or trust company)을 모두 은행으로 정의
- 1987년 Competitive Equality of Banking Act of 1987에서 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거나 또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
-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또는 타은행지주회사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3) 독일

■ 영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출자자 적격성을 심사

- 은행법(KWG; KreditwesenGesetz)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지분율이 20%, 33%, 50%를 각각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방은행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동법 제1조제9항 및 동법 제2조의b제1항)

4) 일본

■ 은행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비금융회사의 활발한 은행업 진출에 대응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도입

- 법인이나 개인이 은행(은행지주회사)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 필요(「은행법」 제52조의 9)
-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한도를 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낮추고 은행주식을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는 금융청장관에게 사후 신고의무(「은행법」 제52조의 2)

- 또한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する法律)은 일반회사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동법 제10조제1항)
- 일반회사가 금융기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Ⅲ. 은행 소유규제 관련 논점

- 은행 소유규제가 경제 전체, 소비자 및 다른 정책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으로는 1) 경제력 집중과 독점력 증대, 2) 이해 상충, 3) 금융회사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4) 대리인 비용과 기업 모니터링 등

1. 경제력 집중 측면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 확대를 찬성하는 근거로는 새로운 자본의 유입,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등

- 은행의 자본이 부족할 경우 건설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공적 자금을 이용한 은행 구제나 자본확충 방식보다 국가 재정이나 사회후생에 보탬
-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이 없어지면 자본시장에서의 금리 상승 압력도 줄어 구축효과나 투자 저해 우려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며 미래 납세자로부터 현재 예금자나 채권자로의 세대간 부의 이전(wealth transfer) 문제도 해소
- 산업자본과 은행이 결합하면 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서비스 생산 비용도 하락할 수 있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비용 절약이 수요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면 은행과 소비자도 혜택

■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지배력 행사,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을 우려

- 상당한 경제력(substantial amounts of economic power)을 가진 거대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이들 기업집단이 특정 지역의 은행시장 등을 지배하면 이들 시장 소비자들의 은행서비스나 대출접근에 영향
- 경제력 집중은 기업의 규모만으로 판단하고 억제할 것이 아니라 개별 시장에서의 지배력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

2. 이해상충 측면

1) 신용공여 제한 또는 우대금융 제공

■ 기업에 대출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특별한 역할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금 흐름이 차별적 여신활동으로 교란받고 불안해지면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

■ 그러나 금융시장이 경쟁적일 경우는 특정 은행의 신용공급 제한만으로 해당 산업자본 경쟁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존재

• 신용도를 갖춘 기업은 한 은행이 여신을 거부해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쟁적 시장이며, 차별적 여신 등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려면 은행법(제35조의 4 및 시행령 제20조의 7)이나 공정거래법(제23조)을 어겨야만 가능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 방지는 사전·사후적 감독과정을 통해 소유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

•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공시,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대주주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따른 문제점 보완 가능

-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나 감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이 기대 수익보다 크도록 유인부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 필요

2) 상품 연계판매

- 은행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산업자본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경쟁을 제한할 우려
- 하지만 결합판매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고, 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다른 경쟁시장의 상품을 연계 판매하는 전략은 오히려 전체 수익이 감소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

3) 부당 지원

-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가 독립적인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주주의 자금원천으로 전락하는 자금고화의 가능성
 -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첨단 금융기법 이용이나 우회지원 등 감독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경영권 유지 등에 운용될 가능성
- 이러한 불법 행위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금융전업기업 내 계열 금융회사들 간에, 그리고 일반적인 계열기업 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

- 일반회사가 꼭 금융회사보다 실패나 부도가 날 개연성이 더 높다는 증거도 약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움을 강조
- 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도산해도 은행이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례, 모기업이 도산해도 자회사가 높은 가격에 매각되는 사례

3. 금융회사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측면

-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 또한 이전 가격, 배당금, 손실 및 불량 자산 이전, 계열사 위험의 은행 전염(contagion risk) 등도 잠재적인 건전성 저해 요인
-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금산결합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금융그룹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성이며 가능성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복합금융그룹이 더 높다는 반론
 - 제조업 등 다른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업활동이 은행의 공공성 및 역할 등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은행에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은행 소유주의 활동으로서도 부적절한지 의문을 제기

4. 대리인 비용과 기업 모니터링 측면

■ 효율적 자원배분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주체인 은행을 그 대상인 산업자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게 되면 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

-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 또는 지배할 경우 계열은행이 부실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것인지는 의문

■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제한은 자본의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한함으로써 더 넓은 의미에서 자원배분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론도 제기

- 또 인위적 분리는 기업통제권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여 산업이든 은행업이든 비효율적인 경영진을 보호하고 우수한 경영능력의 상호 진출을 방해하여 대리인 비용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

IV. 은행 소유규제 개선 방향과 논점

■ 규제에 따른 비용과 이를 완화했을 때의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은행 소유규제 수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 어느 정도의 소유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바람직한 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금융 수준에서는 은행 소유를 아예 금지해야 경제가 더 발전한다는 견해부터, 부작용은 금융회사의 영업 행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유 규제는 철폐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존재

■ 2008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은행 소유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공표

- 먼저 PE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인정받기 위한 산업자본의 투자비중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산업자본 비중이 증가한 PEF가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그리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상한을 국제적 사례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상기한 PEF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추진
- 장기적으로는 사전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 감독 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후 사후적·개별적 감독 체제로 전환

1.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 조정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10% 초과 보유를 금지

- 제2금융권에서 '주요주주' 판단기준은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을 감안

- 금융회사의 대주주 감시·감독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관련 조치, 감독 역량 제고 노력 및 시장규율의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 조정을 '즉시 시행'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
- 소유규제 상한을 조기에 확대시행할 경우 기관투자자의 은행업 투자 기회 확대 및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의 조속한 추진 등에 기여한다는 주장

■ 그러나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역량 및 시장규율 수준 등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소유규제 완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 대안으로는 시행을 2~3년 후로 미루고 금융위의 1단계 규제완화 이후 2~3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감독 역량을 제고한 후 시행하는 방안

- 이 경우 일반 산업자본보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PEF의 은행지분 소유 확대를 유도하고 감독당국의 사전심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

■ 소유규제 완화는 이에 따른 이해상충 등 부작용 방지와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역량 제고를 위해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및 사후감독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것을 전제

-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고 최대주주(또는 은행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비금융주력자 대상

- 재무건전성과 이해상충 가능성 등에 대해 반기별로 적격성 심사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보유주식 매각명령 등을 통해 제재

■ 현재 우리나라의 적격성 심사제도는 주로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사후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회사를 우회적으로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등을 규제하기 곤란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고도의 실효성을 갖춘 적격성심사 제도를 갖추거나 미국과 같이 지배주주에 대한 철저한 감사의 실시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

■ 대주주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대주주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재처럼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머물지 않고 임점검사 권한 보유 필요

- 1) 은행주식을 10% 초과보유한 금융주력자, 2) 은행주식을 4% 초과보유한 최대주주(또는 은행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는 주주)인 금융주력자 또는 비금융주력자 등을 대상
- 또한 「보험업법」(§111)을 원용하여 대주주의 타회사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및 당해 보험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신용공여 등을 금지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조항 등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
 -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 요건의 개선을 통해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경영감시 기능 활용도 방법

2. 연기금의 은행소유 허용

- 국민연금을 비금융주력자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 국민연금은 기금 적립규모 증가 및 기금운용상 주식투자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비금융 상장회사에 최대주주로서 경영참여할 가능성 증가
 - 먼저 BTO, BTL 등 관련회사의 자산 규모를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시 제외하는 경우 상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 될 가능성
 - 다른 대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한적 검사권 허용, 국민 연금의 은행과 비금융회사 등을 동시 보유하는 데 따른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의결권 행사지침 등에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국민연금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
- 연기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형은행의 경영권 확보가 득보다 실이 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
 -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유동성 확보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대형은행의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한 유동성은 높지만 경영권에 대한 유동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가능성

- 이에 따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연기금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할 유인 부족
- 따라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이는 이들 기관의 적극적 자본 참여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는 견해

3. PEF 관련

■ 산업자본의 직접적인 은행소유에 비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PEF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분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 우선 PEF에 대한 감독강화를 전제로 산업자본인 LP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
- GP의 경우 현재 GP가 PEF(SPC) 운용과정에서 타 PEF 등을 통해 자산규모 2조원 비금융회사를 지배하여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GP가 운용하고 있는 은행투자 PEF(SPC)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
- 동 GP가 운용하고 있는 은행투자 PEF(SPC)와 비금융회사 지배 PEF(SPC)의 LP들이 각각 서로 다른 경우 동 GP 및 은행투자 PEF(SPC)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

■ 그러나 대형 투자자인 LP가 PEF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비금융주력자에서 제외된 PEF가 은행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산업자본인 LP가 GP의 업무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 GP가 대형LP들로부터 독립적·중립적인 PEF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
- 또한 GP와 LP 간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인 LP가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후감독 강화가 전제

- 정상적인 상황에서 은행의 경영권 확보에 관심을 가질 특수한 목적의 PEF에 대한 시장수요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의견도 존재
- 근본적으로 PEF는 본질적으로 대형은행의 장기적인 책임경영에 대한 유인
 - 기본적으로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높은 가격에 재매각하는 수익 창출이 목적
 - 또 PEF가 은행 주식을 소유할 때 경영자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시안에 빠지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

I. 서론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일정 지분을 초과할 때 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이를 허용했을 때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론 자금고화를 부추기고 경제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등 폐해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존 자본의 교체나 필요 시 자본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인 현행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 진출이 늘어난 외국계 펀드 등 외국 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이를 대신할 마땅한 국내자본이 부족한 현실과, 과거에 비해 경제력 집중과 이해상충을 방지할 감시체계가 개선되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줄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자본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지배구조 및 경영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소유한도를 지금보다 완화할 경우 다수 주주군에 의한 상호견제보다는 단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도 있어, 은행 소유규제 완화의 타당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연기금이나 PEF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2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은행 소유규제의 변천과정과, 소유규제의 찬반 논쟁 및 소유규제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은행 소유규제의 변천

1. 우리나라 은행 소유규제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금융을 이용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게 되고, 이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은행 소유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많았다.¹⁾

1982년 12월 이전에는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는 없고, 다만 의결권만 10%로 제한하였다. 1961년 5.16 이후 「부정축재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재벌이 소유한 시중은행 지분을 일부 환수하고, 금융기관에관한임시조치법(61.6)을 제정하여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을 10%로 제한한 결과이다.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위하여 1983년 1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대주주에 의한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제를 도입하여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8%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8%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당시 1982년 10월의 정부안에서는 10%였으며, 11월의 재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은행의 책임 경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군소주주들에 의한 부당한 경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5~6대 주주까지 보유한 은행지분의 합이 평균적으로 4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10% 수준의 제한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다. 그 후 12월 재무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10% 상한이 8%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1) 한국은행(2006), p.172 참조

그러나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소유 한도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 후 10여년간 은행 주식소유에 대한 별다른 규제 변화가 없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방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금융자유화와 함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1990년대 들어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92년 5월 은행주식 소유의 분산을 위하여 종전까지 친인척 위주로 되어 있던 동일인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여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체를 동일인의 범주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소유규제가 없었던 지방은행 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15%로 설정하였다. 이어 1995년 1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을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순수금융자본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제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업만 영위하고 대기업집단(30대계열)과 동일인 관계가 아닌 개인으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인 '금융전업가'는 12%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전업기업가가 아닌 동일인의 주식 보유 한도는 8%에서 4%로 축소하였다. 다만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舊 금산법)에 따라 은행으로 전환한 금융회사와 기관투자가²⁾는 8%까지 허용하였다. 이는 1994년 11월의 정부안에서 제안한 4% 초과 보유 및 사실상 지배 금지를 따른 개정이었다. 12월의 재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금융자유화의 진전으로 당시 8%의 소유 한도하에서도 과점주주의 담합

2)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상장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은감원장이 지정한 자

등에 의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가능성과 상법상 5% 이상을 소유하면 주총 소집청구권 및 이사해임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은행경영을 주도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4%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12월의 재무위 심사보고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동일한 의견이었다.

1997년 1월에는 대외 개방에 대비하여 은행소유 제한 제도를 완화하여 금융전업가의 경우 12% 한도를 폐지하고 은행감독원장의 승인 한도까지 허용하고, '합작은행'³⁾의 경우도 4%를 초과하여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한 한도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 1월에는 금융전업기업가제도가 지나친 자격요건 규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30대 계열 관련자가 아닌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주식 매입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로 금융전업기업가는 출현하지 못했고, 은행 소유규제만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는 가운데 외자 유치를 통한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은행, 증권, 보험업 및 그에 준하는 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4%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4% 초과 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고 10%, 25%, 33% 초과 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내국인은 동일 외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 지분을 범위 내에서 외국인의 경우와 동일한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소유할 수 있고, 내국인에 대하여는 영위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다. 30대 계열 대기업집단의 경우 1개 은행에 한하여 초과 보유할 수 있었다.

3)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舊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과 국내인(법인포함)이 합작으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단, 동일 외국인이 은행주식의 8% 이상 50% 이하이고, 외국인 전체가 은행주식 25% 이상 소유

2001년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내국인의 시중은행 주식 소유 한도를 4%에서 감독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10%로 확대하였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방지를 위하여 은행 주식을 4% 초과 보유 시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 확대에 따라 대주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한도, 은행과 대주주 간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감독당국 보고·공시 의무 등 신설 및 위반 시 과징금·벌칙 등을 신설하였다.

2002년 7월 시행된 은행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2001년 12월의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산업자본에 대한 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형평성 문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산업자본의 의결권 제한 조항은 삭제하되, 보유 지분 한도율을 4%로 할지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과 완화를 반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양자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어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서의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의결권 포기각서를 스스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어 10% 정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는 의견이 있었다. 2002년 3월의 재경위 심사보고서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은행 소유규제를 보면 은행별로는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은행법 제15조제1항제2호)까지 허용하고 있다(은행법 제15조제3항제1,2호).

소유 주체별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규모가 큰 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지원 등이 용이하도록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은행주식 보유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으며(은행법 제15조제1항제1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은행주식 보유가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 또 외국인이 국내 은행의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까지는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유하고자 할 때는 10%(지방은행은 15%), 25%, 33% 초과 시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은행법 제15조제2,3항).⁴⁾ 한편, 동일인이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 4)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예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예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전문개정 2002.4.27]

범위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되며, 금융위원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은행법 제16조).⁵⁾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지방은행은 15%) 초과하여 보유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한 한도까지 보유할 수 있다.⁶⁾

- 5)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7>
 ②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6)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④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⑥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⑦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4. 27]

한편, 비금융주력자가 사원으로 참여한 PEF가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 비금융주력자가 PEF의 GP인 경우, 또는 LP로서 10% 초과 출자하거나 4% 이상 최다출자자인 경우, 2)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의 출자합계액이 30%를 초과하는 PEF인 경우 등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은행 소유규제의 변천

구 분	주 요 내 용
'82.12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제한 없음(단, 의결권행사는 10%로 제한) * 1961.5.16 이후 「부정축재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재벌이 소유한 시중은행 지분을 일부 환수하였으며 금융기관에관한임시조치법(61.6)을 제정하여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까지 10% 제한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시 대주주에 의한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국회 심사보고서)하기 위하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제(8%) 도입 - 동일인의 은행주식 8% 초과보유 및 사실상 지배를 금지하고 8%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 당시 정부안은 10%였으며,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0%는 책임경영 유도, 당시 5~6대 주주까지 보유한 은행지분의 합이 평균적으로 40% 수준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소위 논의과정에서 8%로 하향 조정 - 지방은행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소유 한도 적용을 배제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주식 소유의 분산을 위하여 지방은행에 대한 동일인의 소유한도(15%) 도입 및 동일인 범위 확대 * 친인척 위주로 되어 있던 동일인 개념을 확대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체를 동일인의 범위에 추가
'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다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수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 -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축소(8%→4%)하되 금융전업가는 12%까지 보유 허용(단, 전환은행 및 기관투자가는 8% 허용) *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는 8%한도는 과점주주간 담합 가능성이 크고 당시 상법상 5% 이상을 소유하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4%가 적정하다고 평가

10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구분	주요 내용
'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개방에 대비하여 은행 소유 제한 제도 완화 - 금융전업가 : 12% 한도 폐지(은행감독원장 승인한도까지 허용) - 합작은행 : 4%를 초과하여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한 한도까지 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舊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과 국내인(법인포함)이 합작으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단, 동일 외국인이 은행주식의 8% 이상 50% 이하, 외국인 전체가 은행주식 25% 이상 소유할 것)
'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실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의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 - 금융전업가제도 폐지(30대계열 대기업집단 관련자 제외, 자기자금 한도내에서의 주식매입 등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제도의 유명무실화) - 외국인은 4% 초과 시 금감위 신고, 10%, 25%, 33% 초과 시 금감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위업종을 은행·증권·보험업 및 그에 준하는 업으로 제한 - 내국인은 동일 외국인의 은행주식 소유 지분을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경우와 동일한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계열 대기업집단의 경우 1개 은행에 한하여 초과보유 가능 * 내국인에 대하여는 영위 업종 제한 없음
'02.7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에 대한 시중은행 주식소유한도를 확대(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를 위하여 은행주식 4% 초과 보유 시 의결권 제한 및 감독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10%까지 보유 가능 -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따른 대주주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은행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한도, 은행과 대주주 간 일정규모 이상 거래 시 감독당국 보고·공시 의무 등 신설 및 위반 시 과징금·벌칙 신설

2. 주요국의 은행 소유규제⁷⁾

은행산업의 소유규제는 금융산업의 하나의 정책 문제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 경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은행 간의 관계설정 문제이다. 따라서 시장경쟁구조, 기업지배구조, 하도급구조, 노사관계, 파산법 절차 등 하위

7) 김동환(2008), 이병윤·이석호(2006), 김광목(2001) 참조

경제부문 각각의 특성 및 상호관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김상조 2008). 그러나 한편으로 각국의 국경간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산업의 국제적인 경쟁과 혁신이 거듭되고 어느 정도 동질적인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어, 각국간 규제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국의 은행소유 규제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1) 영국

영국에서는 '산업자본'을 특별히 지칭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금융업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Financial Services and Financial Markets Act of 2000, FSMA 2000)에 따라 은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SA)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78-192조). 즉, 10%, 20%, 33%, 50% 초과 취득 시마다 각 단계별로 서면으로 신고하여 FSA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179, 180조).

사전 규제보다는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 제한,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 유지 관점이라는 사후 감독 차원에서 대주주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영국의 적격성 심사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해 통제기능⁸⁾을 수행하는 자(controller)⁹⁾ 및 책임자(approved person)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전·사후 심사(dynamic

8) 27개 업무 기능을 FSA 규정집(Handbook)에 명시하고, 동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FSA로부터 승인(approve)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 업무는 Governing functions(7개), Required functions(5개), Systems and controls functions(3개), Significant management functions(5개), Customer functions(5개) 등 금융기관의 대부분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fit and proper test)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신청인이 대주주로서 적합한(fit and proper) 인물이 아니거나 소비자의 이익(interests of consumers)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FSA는 주식매수계획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86조). 승인 후에도 기준에 미달하여 적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주식매각,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15%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지배주주 등에 대해서는 일종의 의정서에 해당하는 comfort letter를 FSA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지배주주가 유한책임 이상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수용토록 하는 동시에, 지배주주에 대한 FSA의 적격성 심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주요 승인 기준으로는 ① 청렴성(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② 전문성(competence and capability) 및 ③ 건전성(financial soundness)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을 FSA 규정집(Handbook)에 명시하고 있다.

청렴성(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과 관련해서는 13개 항목으로 1) 민형사상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2) 투자, 금융관련 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FSA 혹은 여타 규제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FSA로부터 감독상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4) 감독규정 등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여부, 5) 부도, 청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있어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할 적이 있는지 여부, 6) 파면, 해임권고 또는 해임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성(competence and capability)과 관련해서는 통제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FSA의 교육 및 역량 규범(Training and Competence Sourcebook)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과거 경력 및 교육·연수 경험 등을 근거로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

9)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금융회사 모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 비율 이하 이더라도 금융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controller로 규정

하고 있다.

건전성(financial soundness) 측면에서는 확정채무 혹은 확정채권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파산 선고 혹은 파산 관련 법정소송에 계류되어 있는지, 자산 압류 여부, 혹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FSA는 주식매수계획 승인을 거부하기 전에 관련자에게 거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식매수계획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없음을 통보한 경우나 동 기간 내에 거부통보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83.184조).

2) 미국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BHCA)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of 1864)에서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은 기업이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였다. 또 글래스-스티갈법 20조(Section 20 of Glass-Steagall Act)에 의해 투자은행업에 주로 참여하는(principally engaged) 기업은 회원은행(member bank)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을 분리하는 정도의 규정이 있었을 뿐이다. 즉, 은행과 산업자본은 미국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분리되어 왔지만, 은행의 소유 문제만 본다면 1956년부터 실제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Haubrich and Santos 2003).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BHCA에서

는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정의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한 개의 은행만 지배하는 회사(unitary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가 많이 설립되었으나 1970년 법 수정으로 이러한 허점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이들 규제에 있어서는 은행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1956년 BHCA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저축은행 및 신탁은행(any national banking association or state bank, savings bank or trust company)을 모두 은행으로 정의하였다. 1966년 BHCA 수정법안에서는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을 받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하였으나, 1970년 BHCA 수정법안에서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상업적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해 예금만 받거나 대출만 하는 기관(non-bank bank)은 은행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자 1987년 경쟁평등은행법(Competitive Equality of Banking Act of 1987)에서 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거나 또는 요구불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기관을 은행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1991년 은행과 산업자본의 연계를 허용하자는 행정부의 제안으로 입법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FDICIA(FDIC Improvement Act)로 마무리되어 주법은행(state banks)의 영업범위를 국법은행(national banks)에 허용된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1999년 Gramm-Leach-Bliley Act(GLBA) 이후에는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제도가 추가되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증권업과 보험업 등 본질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금융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할 수 있고, 회사의 안전성,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 금융업도 겸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각 과정에서 이미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grandfathered

credit institutions)은 계속 남아 있게 됨으로써 현재도 끊임없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2003년 이후로는 ILC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지다가 산업대출은행지주회사법(Industrial Bank Holding Company Act of 2007)이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경제개혁연대 2007, 전성인 2008, RP Financial LC 2008 참조).

현재 은행주식의 매수나 은행간 합병을 규제함으로써 은행의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은, 상업은행들의 합병을 규제하는 은행합병법(Bank Merger Act, 12 U.S.C. §1828(c)),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합병을 규제하는 은행지주회사법(BHCA, 12 U.S.C. §1842(c)), 개인에 의한 은행주식취득을 규제하는 '은행지배의 변동에 관한 법률'(The Change in Bank Control Act, 12 U.S.C. §1817(j)) 등이 있다. '은행지배의 변동에 관한 법률'(1978)은 동일인(개인 또는 그룹)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12 U.S.C. §1817(8)(b)).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주식매수가 독점적 지위 또는 경쟁제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상되는 경우, 경쟁제약으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수자의 재무상태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이 저해되거나 예금자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인수자의 능력, 경력, 성실성 등이 공공의 이익이나 예금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식매수계획을 거부할 수 있다(12 U.S.C. §1817(7)(j)).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승인 처분이 없을 때는 매수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12 U.S.C. §1817(j)(1)).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은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또는 타은행지주회사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12 U.S.C. §1842(a)).

3) 독일

영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출자자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다. 은행법(Gesetz über das Kreditwesen, KWG)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지분율이 20%, 33%, 50%를 각각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방은행감독청과 독일연방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제9항 및 동법 제2조의b제1항).

한편 연방은행감독청은 ① 자본참여 기업의 소유주, 법률상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신중한(sound and prudent) 경영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② 소유주가 금융기관 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신고내용 및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그리고 ④ 금융기관이 자본참여자와 결합되어 있거나 자본참여자와 다른 기업과의 결합관계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33조제2항). 그리고 연방은행감독청은 ① 자본참여기업의 소유주, 법률상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영향력에 의해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자본참여기업의 소유주, 법률상 대표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신중한 경영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연방은행감독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자본참여를 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그리고 ④ 금융기관이 자본참여자와 결합되어 있거나 자본참여자와 다른 기업과의 결합관계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본참여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2조의b제2항).

이렇게 연방은행감독청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경우에는 의결권행사를 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금융기관, 그 자본참여자 또는 연방감독청

의 신청에 의하여 금융기관 소재지의 법원이 선임한다.

한편, 1957년 7월 공포된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획득하는 경우, 콘체른을 형성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방카르텔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제2항). 그리고 결합한 두 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5억 마르크 이상인 경우에는 실현된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동법 제23조제1항), 결합한 두 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10억 마르크 이상이거나 한 참가기업이 20억 마르크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4조의a).

한편, 연방카르텔청은 기업결합을 통하여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는데(동법 제24조제1항), 다만 연방경제성장관이 당해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이 그 기업결합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이익에 의해 상쇄되거나 공공의 우월적인 이익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4조제3항).

4) 일본

은행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비금융회사의 활발한 은행업 진출에 대응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4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도입하였다. 즉, 법인이나 개인이 은행(은행지주회사)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은행법 제52조의 9).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한도를 은행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표 2〉 주요 국가들의 산업자본-금융자본 간 결합규제

	비금융회사의 상업은행 소유	상업은행의 비금융회사 소유
EU 2nd Banking Directive	비금융기업이 은행에 대한 적격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적합성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함. EU에서 금융회사를 10%, 20%, 33%, 50%를 초과하도록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 당국에 보유하고자 하는 보유규모를 사전 신고해야 함.	은행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여 개별 비금융 기업에 대한 적격투자를 할 수 없으며 비금융기업 총투자는 60%를 초과할 수 없음. 적격투자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경영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
오스트리아 (Austria)	EU 2nd Banking Directive	EC 2nd Banking Directive
벨기에 (Belgium)	EC 2nd Banking Directive에 따름. 그러나 Banking and Finance Commission이 은행자본의 5% 이상 주주에 대해 "fit and proper" 심사를 함.	단독 주주의 경우 은행 소유 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들을 합한 것이 소유 자금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과도기에는 EC 2nd Banking Directive보다 엄격함.
캐나다 (Canada)	어떤 주주도 은행지분의 10% 이상을 가질 수 없음.	은행은 어떤 비금융회사 지분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총지분 합이 은행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덴마크 (Denmark)	EC 2nd Banking Directive에 따름. 그러나 기업은 은행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음.	EC 2nd Banking Directive에 따르지만 은행이 비금융회사에 영속적이고 결정적인 참여를 할 수 없음.
핀란드 (Finland)	EC 2nd Banking Directive에 따름. 그러나 기업은 은행의 연차 이사회에서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행사할 수 없음.	EC 2nd Banking Directive
프랑스 (France)	EC 2nd Banking Directive	EC 2nd Banking Directive
독일 (Germany)	EC 2nd Banking Directive	EC 2nd Banking Directive
그리스 (Greece)	EC 2nd Banking Directive	EC 2nd Banking Directive
아일랜드 (Ireland)	은행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하려면 미리 공시해야 하고, 이사를 지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정도인 10% 이상의 은행 의결권이나 소유권을 가지려면 사전 승인 필요	EC 2nd Banking Directive
이탈리아 (Italy)	은행 또는 금융 이외의 다른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합하여 총 보유지분이 은행 의결권의 15%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됨.	대부분 은행의 경우 자기자금 15% 이상의 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비상장 기업의 경우 7.5%) 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3% 이상 지분보유 금지. 몇몇 대형 및 안전성이 검증된 은행은 제한이 다소 완화(리딩뱅크의 경우 전체 50%, 개별 6%, 특수은행의 경우 60%, 15%로 제한)

II. 은행 소유규제의 변천 19

	비금융회사의 상업은행 소유	상업은행의 비금융회사 소유
일본 (Japan)	기업의 자본이나 순자산 금액에 따라 총투자 한도가 있음. 반독점법은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요 업무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	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독점금지법).
룩셈부르크 (Luxembourg)	비금융회사는 법률적으로 은행의 주요 주주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정책은 비금융그룹 또는 개인이 은행의 주요 주주가 되지 못하게 함.	EC 2nd Banking Directive
네덜란드 (Netherlands)	EC 2nd Banking Directive에 따름. 그러나 은행자본의 5%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있어야 함.	EC 2nd Banking Directive를 따름. 그러나 기업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은행의 투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있어야 함.
포르투갈 (Portugal)	EC 2nd Banking Directive	EU 2nd Banking Directive를 따름. 그러나 은행은 비금융회사 의결권의 25%를 초과 보유할 수 없음.
스페인 (Spain)	EC 2nd Banking Directive를 따름. 그러나 비금융회사는 신규은행 설립초기 5년간 은행주식의 20% 이상을 가질 수 없음.	EC 2nd Banking Directive
스웨덴 (Sweden)	은행이 파산 위기에 있거나 외부자본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50% 이상 소유 금지. 이 특별한 경우에는 신규 소유자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은행주식의 50% 이상 소유도 허용됨.	은행의 총투자한도는 은행자본의 40%로 제한. 개별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은 이 한도의 5% 그리고 개별회사 의결권의 5%로 제한. 이 한도는 은행이 신용손실을 방어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시장상황이 허락되는 한 은행이 회사지분을 매각해야 함.
스위스 (Switzerland)	규제 없음.	회사지분에 대한 단독 참여의 경우 은행 자기자본의 20%로 제한. 그러나 Swiss Banking Commission이 이 한도 초과를 허용할 수 있음.
영국 (U.K.)	EC 2nd Banking Directive	EC 2nd Banking Directive를 따름. 그러나 20%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동 투자금액을 위험기준 자기자본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거나, 대출로 계산함.

자료 : 김동환(2006), 이병운·이석호(2006), Santos(1998) 참조

은행주식을 5% 이상 소유하는 주주는 금융청장관에게 사후 신고해야 한다(은행법 제52조의 2).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する法律)은 일반회사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0조제1항). 이 때 일반회사가 금융기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50%를 초과하는 주요 주주에 대해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은행법 제52조의 14).

Ⅲ. 은행 소유규제 관련 논점

은행의 소유규제 완화가 초래하는 비용과 편익은 이슈가 서로 얽혀 있는데다가 잠재적 우려, 위험 및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할 경험적 연구도 부족해 끊임없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을 비롯하여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 법률 규정과 관련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할 때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 여부가 항상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미국의 경우도 1990년대 초에 개발도상국 외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은행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절실해지자 산업자본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놓고 정계 및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 2002년 은행의 주거용 부동산 중개업(residential real estate brokerage) 진출 허용 논란이나, 2005년 대형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예대 업무와 카드 등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가능한 산업대출회사(industrial loan company)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서 1900년대 초부터 존재한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금융회사에 대한 향후 규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은행과 산업의 분리 또는 결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가열된 적이 있다. 예컨대 은행지주회사 등의 감독을 맡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규제 강화를 주장한 반면, 산업대부회사 감독을 맡고 있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은행 소유 규제가 경제 전체, 소비자 및 다른 정책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은 1) 경제력 집중, 2) 이해 상충, 3) 금융회사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4) 대리인 비용과 기업 모니터링 등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이슈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이므로 본고와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연기금 및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 및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조정에 대한 논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미리 밝혀둔다.

1. 경제력 집중 측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 확대가 시장의 경쟁 구조와 경제력 집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오래된 이슈이다. 찬성하는 근거로는 새로운 자본의 유입,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등을 들고 있다(이태규(2006), Halpert(1988), Saunders(1994), Shull and White(1998), Shull(1999), Krainer(2000), Blair(2004), Muckenfuss III *et al.*(2007) 등 참조).

은행의 자본이 부족할 경우 재무적으로 건실한 산업자본이 은행주식 소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공적자금을 이용한 은행구제나 자본확충 방식보다 국가재정이나 사회후생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이 없어지면 자본시장에서의 금리 상승 압력도 줄어 구축효과나 투자 저해 우려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또 미래 납세자로부터 현재 예금자나 채권자로서의 세대간 부의 이전(wealth transfer) 문제도 피할 수 있다.

또 산업자본과 은행이 결합하여 거대한 기업집단을 이룰 경우 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서비스 생산비용도 하락할 수 있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한 비용 절약이 수요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면 은행

과 소비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산업에 있어서 규모나 범위의 경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실증 결과가 자료(시기, 지역, 대상 은행 등)에 따라 엇갈리면서 오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¹⁰⁾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지배력 행사,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상당한 경제력(substantial amounts of economic power)을 가진 거대한 기업집단 형성을 촉진하게 되고(Kohn 2007), 이들 기업집단이 예컨대 특정 지역의 은행시장 등을 지배하게 되고 이들 시장 소비자들이 은행서비스나 대출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GAO 2005). 규모 자체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감독상의 애로를 가져올 수도 있다(Huertas(1988), Bair(2007)).

이에 대해 이태규(2006)는 경제력 집중은 기업의 규모만으로 판단하고 억제할 것이 아니라 개별시장에서의 지배력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개별 상품시장에서의 지배력 간에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자원배분의 비효율이나 소비자 피해는 개별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력 집중은 꼭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매우 엄격한 미국에서도 과거 규제가 심했던 일부 이종 산업간의 결합에 대한 규제가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폐지되었으며, 금융업에서도 예컨대 대형 은행지주회사가 대형 증권사나 대형 보험사를 소유하는

10) 역사적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엇갈린 다양한 실증 분석 문헌들의 소개는 Haubrich and Santos(2003), p.123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의 증권사 소유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문헌들의 소개는 이병윤(2006), p.30 참조. 은행업 자체에 규모나 범위의 경제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국내외에 상당한 많은 문헌이 있다.

데 제약이 없다. 이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결합에 따른 위험만 특별히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Wallison 2007).

그러면 왜 유독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만 규제되어야 하는가? 산업자본이 증권사나 보험사를 소유하는 데는 규모에 관계없이 별다른 제약이 없는데 은행의 경우는 무엇이 특별한가? 이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가장 큰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2. 이해상충 가능성 측면

이해상충과 관련한 우려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이다.¹¹⁾ 1) 은행이 산업자본의 경쟁자에게 신용공여를 제한하거나 계열기업에 우대금융을 제공, 2)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산업자본 제품을 연계하여 판매, 3)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또는 계열 소속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빠질 경우 은행 자산을 전용, 4) 은행 영업 과정에서 얻은 가치있는 사적 정보(valuable private information)를 계열기업에 제공 등이다.

1) 신용공여 제한 또는 우대금융 제공

기업에 대출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특별한 역할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금흐름이 차별적 여신활동으로 교란받고 불안해지면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11) 이해상충은 한 경제주체가 둘 이상의 이해를 추구할 때면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Edwards 1979)로 그 중 하나의 이해를 위해 다른 것이 희생될 때 이해가 상충된다. Mishkin(2003)은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정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정보를 감추거나 오도하려는 유인을 발생시키는 복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Saunders(1994)의 분류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는 입장의 시각은 또 다르다. 은행 대출이나 CP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다양한 대체재 시장들이 경쟁적일 경우는 해당 은행의 신용 공급 제한만으로 해당 산업자본 경쟁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은행이 고객을 잃고 수익 창출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명현·백용호(2006)는 외환위기 이후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적어도 대출시장만큼은 수요자 시장으로 변모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신용도를 갖춘 기업은 한 은행이 여신을 거부해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쟁적 시장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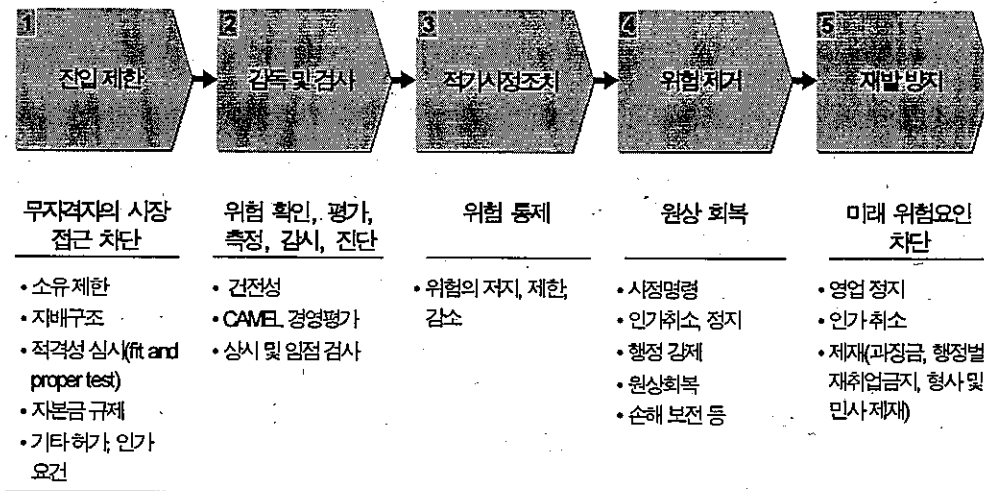
또 차별적 여신 등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려면 은행법(제35조의 4 및 시행령 제20조의 7)이나 공정거래법(제23조)을 어겨야만 가능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리스크는 사전적 소유 규제를 통해 양자를 분리함으로써 제거할 수도 있지만, 대신 사후적 감독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Mishkin 2003). 윤창현(2008)은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고,¹²⁾ 위기를 겪으면서 감독기관의 감독기법도 상당 부분 선진화되었음을 강조한다. 소유규제가 아니라도 적격성 심사 등 무자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다양한 수단의 강화, 경영상의 위험을 확인·평가·측정·감시·진단하는 감독 및 검사, 인식된 위험을 통제하는 적기시정조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 강제 등 원상회복, 미래에 재발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 등 감독당국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12)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결의 의무화 확대,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 한도 단계적 축소로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그림 1〉

규제와 감독의 상호 보완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나 감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이 기대 수익보다 크도록 유인부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규정을 어기도록 승인한 은행의 모든 직원은 하루에 1백만 달러까지의 금전적 제재(personal fine)와 형사 처벌 대상이다(12 U.S.C. §1818). 감독 당국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재취업도 금지(Prohibition Order)될 수 있다.

2) 상품 연계 판매

은행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산업자본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tying)할 경우,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이다. 결합판매가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될 경우 공정거래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겠지만 발전된 금융상품을 통한 우회적 지원을 모두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이병운 2006). 그러나 결합판매가 이른바 끼워팔기

(tie-in sale) 형태가 아니라 개별판매와 결합판매가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 결합 판매인 경우 비용절감, 가격인하, 선택권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 및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다른 경쟁시장의 상품을 연계 판매하는 전략은 오히려 전체 수익이 감소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점이 이론적으로 분명히 알려져 있다. 즉 이윤추구 목적으로는 그러한 행위 동기가 없다는 지적이다 (Posner(1976), Saunders(1994), Blair(2004) 참조).

3) 부당 지원

산업자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금융회사가 독립적인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주주의 자금원천으로 전락하는 자금고화에 대한 우려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쟁점이다.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첨단 금융기법 이용이나 우회지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열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경영권 유지 등에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이다. 역사적으로도 계열 소속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 금융회사 자산을 전용하여 피해를 준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¹³⁾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우 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도산해도 은행이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례, 모기업이 도산해도 자회사가 높은 가격에 매각되는 사례나(FDIC(2004), Leary(2007), Muckenfuss III *et al.*(2007)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5% 소유 지분을 허용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경우를 반례로 제시하기도 한다.

13) 예컨대, 외환위기 후 한남투신, 현대투신운용, 현대증권, 고려증권, 동서증권, 대우증권 등의 사례

〈표 3〉 현행 우리나라 은행 대주주 감독제도

<p>1. 감독대상 대주주의 범위(은행법 §2①제1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초과 주주(지방은행 15%)뿐만 아니라 4% 초과 주주로서 최대주주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대주주에 포함
<p>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은행법 §35의2, 시행령 §20의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 (은행자기자본×25%)와 (은행자기자본×지분율) 중 적은 금액 ◦ 전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25% ◦ 신용공여한도 회피를 위한 타은행 대주주와의 교차여신(cross-lending) 금지
<p>3.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은행법 §35의3, 시행령 §20의6, 규정 §16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자기자본의 1%(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정 취득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 주식 취득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0.5% - 취득한도 내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shadow voting
<p>4.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절차적 규제(은행법 §35의2④~6, §35의3③~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와 일정규모(은행자기자본의 0.1%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거래(신용공여, 대주주 발행주식취득) 시 이사회 의결(전원 찬성), 금감위 보고 및 시장공시 등 은행 내·외부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함
<p>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은행법 §35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이 보유한 미공개 정보(경쟁기업 영업정보 등) 제공요구 등 은행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p>6. 대주주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은행법 §35의5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금감원장은 대주주의 위법행위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능 ◦ 대주주의 재무구조 부실화 시 은행과의 금융거래제한 등 리스크 전염 차단을 위한 감독조치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신규취득 금지 등 ◦ 은행 또는 대주주의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 문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만 일어난다기보다 금융전업기업 내에서도 계열 금융회사들 간에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인 계열기업 간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은행 소유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불법행위는 해당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다른 한편으로 은행을 소유할 여력이 있는 산업자본이라면 자기신용으로 금융시장에서 직접 국내 은행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부실과 관련해서 일반회사가 꼭 금융회사보다 실패나 부도가 날 개연성이 더 높다는 증거도 약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움을 강조한다.

3. 금융회사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측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 이전 가격, 배당금, 손실 및 불량 자산 이전, 계열사 위협의 은행 전염(contagion risk) 등도 잠재적인 위협 요인들이다.

사실 이러한 사항들은 단순히 금산결합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회사 포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여러 형태의 금융업무를 한 회사 내에서 영위하는 전통적인 일반상업은행의 경우는 물론이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서도 불량자산의 거래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의 불량자산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자본과 관련 은행 간의 실물자산(공장, 기계설비 등) 거래는 상상하기 어렵고 불량금융자산의

직접적인 거래는 쉽게 노출되므로 감독에 용이하다(이태규 2006).

은행과 결합한 산업자본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관련은행에 대한 예금인출 등의 전염위험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출자만으로는 부실의 전이가능성은 낮다. 은행과 모회사(산업자본) 간에 상호지급보증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 쪽의 부실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어 그 피해가 크지만 이도 현재 제한되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과 은행의 경영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법인격이 독립적인 상황에서 소문 등에 의해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전염의 가능성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복합금융그룹에서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자회사들의 업무영역 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한 자회사의 손실에 대해 소비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다른 자회사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염위험의 경우 금산결합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금융그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성이라 할 수 있다(강명현·백용호 2006).

4. 대리인 비용과 기업 모니터링 측면

효율적 자원배분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주체인 은행을 그 대상인 산업자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게 되면 효율적 자원배분 및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시장경제의 적자 생존원리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자원의 낭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시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경제 및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제한은 자본의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한함으로써 더 넓은 의미에서 자원배분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는 반대론도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투자 제한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산업자본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저해하여 오히려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또 인위적 분리는 기업통제권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여 산업이든 은행이든 비효율적인 경영진을 보호하고 우수한 경영능력의 상호 진출을 방해하여 대리인 비용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거 독일이나 일본이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것처럼,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및 대형 금융회사가 필요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원집중에 의한 대기업집단 생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집단 소속의 세계적인 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소유 금융회사의 자금지원으로 초기 성장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굳이 대기업집단소유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여타 금융회사에서 동 기업에 자금지원을 했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IV. 은행 소유규제 개선 방향과 논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따른 위와 같은 장단점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규제에 따른 비용과 이를 완화했을 때의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유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바람직한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그 변경으로 인한 편익이 변경에 따른 비용보다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은행 소유규제 수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추진과 금융산업 내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간의 균형을 찾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 확충 문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행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가 바람직한 수준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조차 막지 못하는 우리나라 금융 수준에서는 은행 소유를 아예 금지해야 경제발전이 더 된다고 보는 견해에서부터, 우려되는 부작용은 소유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영업 행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소유규제는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는 규제 철폐 주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¹⁴⁾ 은행 소유 금지나 완전 자유화 등 양극단을 논외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이익 및 금융감독 수준을 감안할 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어느 정도까지가 합리적인 수준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2008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은행 소유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14) 다양한 견해에 대한 소개는 박중민(2006) 참조

먼저 연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자는 방안이다. PEF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인정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은 2008년 3월 26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PE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인정받기 위한 산업자본의 투자비중 한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임을 언급하고, 산업자본 비중이 증가한 PEF가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상한을 국제적 사례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상기한 연기금·PEF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사전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 감독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후 사후적·개별적 감독체제로 바꾸어 간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 수준 및 방식과 관련한 논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4%를 10%로 확대하고 10% 초과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이다. 제2금융권에서 '주요주주' 판단기준은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또한 사전적으로 은행 지분 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15%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이탈리아, 호주),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상 산업자본의 "5% 초과+사실상 지배"는 금지되나, FRB는 일반적으로 10%까지는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08.4월, U.S. Senate 보고자료)하고 있는 점 등을 근

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유 제한 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하되, 10% 초과보유는 금지하는 방안이다.

그간 금융회사의 대주주 감시·감독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관련 조치, 감독역량 제고 노력 및 시장규율의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 조정을 '즉시 시행'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쪽의 의견으로, 소유규제 상한을 조기에 확대시행할 경우 기관투자자의 은행업 투자기회 확대 및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의 조속한 추진 등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역량 및 시장규율 수준 등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소유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따라서 감독당국 역량에 대한 불신 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즉시 시행'에 따른 소모적·정치적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대안으로는 시행을 2~3년 후로 미루고 1단계 규제완화 이후 2~3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점진적 조정을 통해 감독역량을 제고한 후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비교적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연기금 및 PEF의 은행지분 소유 확대를 유도하고 감독당국의 사전심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 시행에 비해 소유 규제완화의 효과가 반감되며 다양한 주주군 형성을 통한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한계가 따른다.

소유 규제완화는 이에 따른 이해상충 등 부작용 방지와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역량 제고를 위해,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및 사후감독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Mishkin(2003)과 Saunder(1994)에서도 진입자의 자격심사(quality control)와 통합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비금융주력자인 대주주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강화이다.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고 최대주주(또는 은행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비금융주력자를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임원 선임으로 경영참여가 가능하고 제2금융권 대주주 심사 시 10% 이상 주주 이외에 최대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 주주도 심사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이다. 구체적으로 재무건전성과 이해상충 가능성 등에 대해 반기별로 적격성 심사 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보유주식 매각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식이다.

적격성 심사가 실효성 있게 강화될 수 있다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산업자본이더라도 은행소유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제만 적용받고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10%, 25%, 33%까지 소유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적격성심사 제도는 주로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사후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회사를 우회적으로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등을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고도의 실효성을 갖춘 적격성심사 제도를 갖추거나 미국과 같이 지배주주에 대한 철저한 감사의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영국 적격성심사제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지배력(controlled functions)을 행사하는 모든 자의 정직성, 청렴성, 명성, 재무적 건전성 등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부적절한 지배력에 대해 주식매각이나 의결권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감독당국은 지배력(지분비율)을 변경(획득, 증강, 감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서면 통보를 요구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제약조건 등을 부과한 후 지배력 변경행위를 허용(사전규제)하거나 기존 지배력에 대한 허용을 취소(사후규제)할 수 있다.

〈표 4〉 대주주 사후 감독체계 강화 방안

구 분		현 행	강화 방안
사전통제		- 산업자본이 아닌 동일인이 은행주식 10% 한도초과 보유 시 사전 적격성 심사	- 산업자본이 “4%초과+최대주주” 등이 되는 경우에도 사전 적격성 심사
사후 감독 및 제재	신용공여한도	- 개별 대주주 ○ (은행자기자본 × 25%)와 (은행자기자본 × 지분율) 중 적은 금액 - 전체 대주주 ○ 은행자기자본의 25%	-
	주식취득한도	- 상장주식 취득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1% - 비상장주식 취득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0.5%	-
	절차적 규제	- 대주주와 일정규모(자기자본의 0.1%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의결, 금융위 보고 및 시장공시 등 절차 준수	-
	대주주 부실권이 차단	- 대주주 재무구조 부실화 시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제한 등 (신 설)	- 대주주 부실징후 감시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재	- 대주주의 위법행위 시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 미흡 ○ 형사처벌 : 5년, 2억원 이하 ○ 과징금 : 위반액의 20% 이하	- 대주주의 위법행위 시 과징금부과 및 처벌 근거 보완 및 수준 강화 ○ 형사처벌 : 10년, 5억원 이하 ○ 과징금 : 위반액의 40% 이하
	대주주에 대한 자료 요청	-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 신용공여한도 위반, 은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 시 (신 설)	- - 대주주의 재무구조 부실화 등으로 은행의 경영건전성 저해 우려 시 *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대주주에 대한 검사	(신 설)	- 필요 시 대주주에 대한 임점검사 실시 * 검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대주주의 금지행위	(신 설)	- 대주주의 다른 회사 출자를 위한 신용공여 금지 - 은행에 대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 금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	- 허용	- 금지

대주주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대안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1) 은행주식을 10% 초과보유한 금융주력자, 2) 은행주식을 4% 초과보유한 최대 주주(또는 은행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는 주주)인 금융주력자 또는 비금융 주력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 대주주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재처럼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머물지 않고 임점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표 5〉 미국의 은행 및 은행관련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은 행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 과반수 이사의 선임을 통제하는 자, 경영 및 전략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은행지주회사법 및 연준법) · 경영자 또는 이사의 직을 맡고 있으면서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 주요 주주(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Code of Federal Regulation) · 주요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이해관련기업(Code of Federal Regulation) <p>〈검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대상자가 당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액, 채무조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 확인 · 이해 공유 여부 조사, 5% 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주주 명단 작성, 이해 관계자 및 내부자에 대한 거래 확인 및 특혜성 여부 심사 등
은행관련기관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은행을 지배하는 기업, 은행을 지배하는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 은행의 자회사, 은행 또는 은행을 지배하는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주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되는 기업 등) <p>〈검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관련기관 간 거래의 내용·성질·규모, 관련기관과 계열기업 간 관계, 동 관계가 은행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 조사 결과가 불투명할 경우 계열기업의 부채구조, 현금흐름 및 수익(과거 3개년), 자본적정성, 미래영업계획 및 실현가능성(향후 5개년) 등을 정밀실사

한다. 즉, 현재는 대주주와 은행 간 거래한도 위반 혐의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주주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경영 건전성 저해 우려 시에도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식 취득 시, 반기별, 수시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와 은행 간 불법 거래 혐의 포착 시 필요하면 대주주의 임점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은행을 이용한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하여 은행 대주주의 타 회사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신용공여 및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은행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은행과 대주주 간 매매·교환·신용공여를 금지해야 한다. 「보험업법」(§111)의 경우, 대주주의 타회사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및 당해 보험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도 자기자본이나 총자산의 일정 비율로 그 한도를 정하는 방법 외에 자기자본 비율 산정 시 계열 관련 신용공여 금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조항 등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현행 「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은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주요 주주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 온 소액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 요건을 개선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 외 시장의 다양한 모니터링 장치를 활용한 복수 모니터링(multiple agent monitoring)을 제안하기도 한다(Mishkin 2003). 예컨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상장회사로 제한할 경우 재무적 측면에서 상장 요건을 갖춰야 하고, 거래소 등

〈표 6〉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제도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시 행
지배주주 책임강화		▪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382조의3)	'98.12
		▪ 업무집행 지시자를 사실상의 이사로 규정(상법 §401조의2)	'98.12
		▪ 회사정리 원인제공 주주의 주식소각(회사정리법 §221)	'98.12
공 시		▪ 자기자본의 5% 이상을 타회사에 출자 또는 채무보증시 공시(증권거래법 §186, 발행공시규정 §69④,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7)	'98.4
		▪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 후 공시(공정거래법 §11의2)	'99.12
		▪ 유가증권 신고 시 예측정보 공시(증권거래법 §8②)	'99.2
		▪ 반기보고서제도 도입(증권거래법 §186의3)	'99.2
		▪ 전자공시제도 도입(증권거래법 §194의2)	'98.1
		▪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증권거래법 §206의11, §210)	'00.1
		▪ 공정공시제도(주요 경영정보를 거래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공개)	'02.11
		▪ 공시서류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의 인증 의무화	'04.4
전제 장치	내 부 통 제	▪ 사외이사제도 도입(증권거래법 §191조의16)	'99.12
		▪ 대형,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증권거래법 §191조의17)	'00.1
		▪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외감법 §4)	'98.1
		▪ 감사인, 회계관계인 책임 강화(외감법 §19, §20)	'98.1
		▪ 감사위원회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증권거래법 §191조의17)	'00.1
		▪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6년) 의무화	'04.4
	주 주	▪ 소수주주권 강화(상법 §363조의2, 증권거래법 §191조의13, 191조의14) - 주주대표 소송 제기권, 주주열람권, 주주제안권,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98.12
		▪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상법 §382조의2, 증권거래법 §191조의18)	'98.12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증권관련집단소송법)	'04.1
	회 계 제 도	▪ 30대 그룹 결함재무제표 작성(외감법 §1조의3)	'98.1
		▪ 감사인 등 회계법인의 부실회계 책임(외감법 §16, §17)	'98.1
		▪ 회계관계인의 민·형사 책임 강화	'98.1
	외국인 투자자	▪ 적대적 M&A 허용(외국인투자법 §8조의2)	'98.2
		▪ 의무공개매수제 폐지(증권거래법 §21조의2)	'98.2
	금 융 기 관	▪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 사외이사 선임의무는 대형상장사와 동일 - 소수주주권 요건은 상장법인의 1/2 수준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00.1

자율규제기관과 시장의 감시하에 놓이게 된다. 또 신용등급을 일정 등급 이상으로 제한하여 신용평가회사들을 외부 모니터링기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소액 주주권을 강화하여 대주주를 모니터링하고 견제할 수도 있다.

〈표 7〉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비교

구 분	상 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주 주 대 표 소 송 권	1.0%	0.01%	0.005%
이 사 해 임 청 구 권	3.0%	0.5%(0.25%)	0.25%(0.125%)
유 지 청 구 권	1.0%	0.05%(0.025%)	0.025%(0.0125%)
주 주 제 안 권	3.0%	1.0%(0.5%)	0.5%(0.25%)
회 계 장 부 열 랐 권	3.0%	1.0%(0.05%)	0.05%(0.025%)
주주총회소집요구권	3.0%	3.0%(1.5%)	1.5%(0.75%)
업무·재무상태 검사권	3.0%	3.0%(1.5%)	1.5%(0.75%)

주 : () 안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은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 국민연금 등 연기금 관련

국민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비금융주력자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문제는 최근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대규모 국책사업(BTO, BTL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REITs 자산 6,227억원('06년말 기준)을 제외하면¹⁵⁾ 자산기준으로 2007년 9월말 현재 5,700억원 정도 비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2043년에는 2,6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

15) 표준산업분류를 엄격히 적용하면 REITs는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Mutual Fund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업으로 분류함이 타당. 금산법(§24조)에 따른 출자 승인전(舊 금감위의 우리은행의 REITs 출자승인전, '07.8.24)에서도 승인요건 중 하나인 '파출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일 것'과 관련하여 REITs의 금융업 영위를 인정

금 적립 규모 증가 및 기금운용상 주식투자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비금융 상장 회사에 최대 주주로서 경영참여할 가능성 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먼저 BTO, BTL 등 관련회사의 자산 규모를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시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도 BTL·BTO 회사 주식의 소유는 '지배'로 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법 개정 없이도 은행 소유규제 완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2007년말 현재 국민연금이 상장회사의 3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사례가 없고, 최대 주주인 경우(KT, 3.4%)에도 임원파견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BTO·BTL 등 관련회사 자산만 제외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다.

다른 대안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한적 검사권 허용, 국민연금이 은행과 비금융회사 등을 동시 보유하는 데 따른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의결권 행사지침 등에 방지 장치 마련 등이 전제되는 경우 국민연금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배구조 및 자산운용규제 등 감독당국의 규제상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펀드나 PEF에 비해 오히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국민연금의 비금융 상장회사 지배가 당장의 현안도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해외연기금에 대해서도 10%까지는 국내은행 주식 취득을 허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연기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형은행의 경영권 확보가 득보다 실이 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건호 2008).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연기금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형은행의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한 유동성은

〈표 8〉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

구 분		현 행	정부안(07.12)	개편안(08. 4)
기금운용위		비상설	비상설	상설
소 속		복지부	대통령	민간독립
구 성	인 원	20인	7인	7인
	위원장	복지부장관	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
	위 원	정부위원 : 5인 재정부, 농림부, 지경부 노동부, 공단	정부위원 : -	정부위원 : -
		민간위원 : 14인 사용자 대표(3인) 근로자 대표(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민간전문가(2인)	민간위원 : 6인 금융·투자분야 전문가 (공사 사장 포함)	민간위원 : 6인 금융·투자분야 전문가
		-	-	3인(위원장 및 위원 2)
		2년, 연임(1차)	3년, 연임(제한없음)	3년, 연임(제한없음)
	임 면	각 단체 추천, 복지부장관 위촉	추천위(위원장 : 복지부장관) 추천, 총리제청, 대통령임면	추천위(위원장 : 복지부장관) 추천, 대통령임면
기금운용위원회 추천위원회		-	정부(5) 가입자 대표(3) 공익 대표(3)	정부(4) 가입자 대표(6) 공익 대표(1)
집행조직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법적성격		공단의 조직 일부	무자본 특수법인	무자본 특수법인
구 성	사 장	-	사장추천위 추천, 총리제청, 대통령 임면	사장추천위 추천, 대통령 임면
	이 사	-	사장추천, 위원회심의, 사장임면	사장추천, 위원회심의, 사장임면
	감 사	-	복지부장관제청, 대통령임면	위원회추천, 복지부장관임면
정부의 책임성		정부의 관리·감독	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출석 · 의견제시	기금운용장기성과평가권, 감 사요청권, 재의요구권, 최소 요구수익률 및 기간별 자금 전·출입 계획 제시
사무국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기금운용공사	기금운용공사

매우 높지만 경영권에 대한 유동성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기금 스스로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할 유인은 매우 적으며, 따라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이는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자본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큰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적이다.

3. PEF 관련

산업자본의 직접적인 은행 소유에 비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펀드 형태의 은행 소유를 확대하기 위해 PEF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PEF 이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간접투자기구, 컨소시엄, 간투법·자통법에서 정의된 것 이외의 SPC 및 조합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산업자본이 투자기구의 투자자(주주, 사원 등)로서 투자기구가 보유한 은행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기구의 재산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 이외에 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으로서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강화된 사전·사후적 감독 및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의 실익 및 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모펀드의 일종인 PEF가 그 속성상 안정적인 은행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에도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이유로는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정도의 의미있는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다양한 주주군을 형성하고, PEF 등 기관투자자의 은행 소유규제가 완화되어 투자대상이 확대되고 수익률이 높아져 잉여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내 금융자본이 육성되어 은행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PEF가 유상감자 및 배당 등으로 단기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경우 내부유보를 활용한 재투자가 어려워 장기 성장잠재력이 상실될 수 있고, 또 PEF의 인수·합병을 우려하여 사전에 경영권 방어 등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PEF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대출 금융회사와 전체 금융시스템이 건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표 9〉 일반 사모펀드 · 사모M&A · PEF 비교

구 분	일반 사모	사모M&A	PEF
투 자 목 적	단순투자	계열사 편입	경영권 참여(M&A)
법 적 형 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주식회사)	투자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자 산 운 용 자	자산운용사만 가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 탁 회 사	자산보관 및 감시	(좌동)	의무사항 아님(기밀유지 가능)
권 리 차 등	모든 투자자의 수익분배 권은 균등	(좌동)	통상 투자자간 수익분 배권은 차등
출 자 금 액	제한 없음	(좌동)	개인 20억원, 법인 50 억원 이상
자 금 차 입	원칙적 차입 불가	(좌동)	PEF 자산의 10%, SPC 자산의 200% 이내
출 자 방 식	가입 시 투자금 완납	(좌동)	Capital Call방식
의 결 권 행 사	의결권 행사 제한,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의결권행사 제한 및 공 시의무 없음	(좌동)
공정거래법·금융 지주회사법 적용	투자회사인 경우 지주 회사 규정 적용	지주회사 규정 적용	지주회사 규정 배제
출 자 제 한	제한 없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펀드 출자시 펀드자산의 10% 이내로 제한	(좌동)

따라서 PEF에 대한 대주주 사전적격성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의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와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PEF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PEF에 있는 자본의 풀이 규제와 유인부족(disincentives) 때문에 은행산업으로 가지 못하고 극적으로 불필요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Sarkozy and Quarles 2008), FRB도 은행의 자본 확충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PEF의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Enrich *et al.* (2008) 등 참조). Warburg Pincus, Carlyle Group, Kohlberg Kravis Roerts & Co. 등과 만나 10% 이상 지분의 의결권 제한과 이사 1인 선임 등을 제안하였으나, 투자 수익성 불투명으로 주요 PEF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

〈표 10〉 PEF의 미국 은행에 대한 최근 투자동향

회사명	Lead Investor	투자금액	일시
National City	Corsair Capital	\$7 billion	'08.4.20.
Washington Mutual	TPG	\$7 billion	'08.4.11.
Doral Financial	Bear Stearns	\$610 million	'07.7.
FC Holdings	JLL Partners	\$150 million	'07.11.

자료 : Wall Street Journal 2008.6.27.

우리나라의 경우는 PEF에 대한 감독강화를 전제로 산업자본인 LP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하자는 견해로 LP는 GP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GP 관련해서는 GP가 PEF(SPC) 운용과정에서 타 PEF 등을 통해 자산규모 2조원

비금융회사를 지배하여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GP가 운용하고 있는 은행투자 PEF(SPC)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동 GP가 운용하고 있는 은행투자 PEF(SPC)와 비금융회사 지배 PEF(SPC)의 LP들이 각각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의 PEF(SPC)의 LP간에 견제가 가능하므로 동 GP 및 은행투자PEF(SPC)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대형 투자자인 LP가 PEF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금융주력자에서 제외된 PEF가 은행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산업자본인 LP가 GP의 업무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GP가 대형 LP들로부터 독립적·중립적인 PEF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GP와 LP 간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인 LP가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후감독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 11〉 PEF(SPC)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i) 비금융주력자가 PEF의 유한책임사원(LP)인 경우로서 - PEF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 보유하거나 - PEF 출자총액의 4~10%를 보유 & 최대출자자인 경우 ii)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각각의 계열회사의 PEF 지분 합계액이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비금융주력자인 PEF 등이 SPC 지분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i) 비금융주력자가 PEF의 유한책임사원(LP)인 경우로서 - PEF 출자총액의 20%/30% 이상 지분 보유하는 경우 - (삭 제) ii) 50% 이상으로 확대 ※ 10% 이상으로 확대

그러나 근본적으로 PEF는 본질적으로 대형은행의 장기적인 책임경영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고(이건호 2008), 기본적으로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일정 기간(통상 5년~10년) 보유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높은 가격에 재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전성인 2008). 정상적인 상황에서 은행의 경영권 확보에 관심을 가질 특수한 목적의 PEF에 대한 시장수요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 PEF가 은행 주식을 소유할 때 경영자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시안에 빠지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통적으로 경영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를 위주로 하는 뮤추얼펀드 경우에도 산업자본의 투자 비중이 4%를 초과하기만 하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PEF에 대해 투자비중 한도를 다시 10~30%로 상향시키는 것은 기존의 규제 체제와 너무 상충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V. 맺음말

현행 4% 은행 소유 규제가 바람직한가 더 낮춰야 하는가, 아니면 아예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가, 또 철폐는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 한도를 높여야 하는가 등 합리적인 소유 규제 수준에 대한 논란은 고속도로 속도 제한 논쟁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¹⁶⁾

제한 속도를 소유지분 한도라고 보면, 현재 도로 여건이나 차의 성능,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등을 고려할 때 제한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속도를 높일수록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으므로 물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교통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또 사고 때마다 어떤 차종이 연루되었다고 해도 그 차종과 교통사고 간에 꼭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운전자가 주의 깊게 행동할수록, 차량이나 도로 여건이 그만한 속도에 맞게 설계될수록 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 차량이 문제라면 외국차를 써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 여건이 문제라면 인프라 투자를 통해 도로를 개선해야지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문제라면 운전자의 숙련도나 평판, 사려 깊은 정도를 꼼꼼히 따져 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앞차가 사고날 때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충돌할 우려도 있다. 에어백이나 신속한 구급차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오히려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감시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여 교통흐름이나 과속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많은 구간에 과속방지턱(speed bump)을

16) 이하 비유는 Frankel(2007)의 'car crash analogy'를 은행 소유규제 이슈에 원용

설치하여 사고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부주의한 운전이나, 차량 정비불량, 과속 등에 대해 무거운 제재를 한다면 미래 사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고속도로가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가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길도 잘 포장 안되고, 교차로 통제도 없고, 보행자 보호도 미흡한 시골마을 한 가운데로 고속도로 나들목 램프가 빠져 나온다면 교통 흐름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한속도를 바꿀 때 이 모든 요소들을 모두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면 합리적인 수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옆 도로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제한속도가 예컨대 110Km니까 이 도로에서도 110Km로 하자고 단순히 정할 수는 없다. 세계 금융환경 변화, 우리나라 금융산업 여건이나 향후 나아갈 방향, 금융감독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 강명현·백용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연구보고서」 2006.11,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6.
- 고동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문제의 검토」, 민간금융위원회, 2007.9.15.
- 곽정수, 「금산분리 원칙 폐기는 시기상조다」, 「월간하나금융」, 하나은행, 2007.
- 김광목, 「은행산업의 소유구조 규제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1-11, 한국법제연구원, 2001.
- 김동환, 「금산분리 현황과 논점」, 한국금융연구원, 2008.
- , 「산업·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6, No.1, 한국금융연구원, 2006.
- 김상조,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기업지배구조연구」 2008 Spring, 2008, pp.8~20.
- 김선웅, 「금산분리 원칙은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 2008.2, 전국은행연합회.
- 류근옥, 「산업자본(보험)의 은행소유 제한 정책의 타당성 검증」, 「보험개발연구」 제16권 2호, 2005.9.
- 박중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한 소고」, 「증권」 127호, 2006년 여름, 한국증권업협회.
- 윤창현, 「금산분리 원칙은 완화되어야 한다」, 「금융」 2008.2, 전국은행연합회.
- 이건호, 「새정부의 금융정책 : 평가와 과제」에 대한 논평, 「한국경제의 분석」 제14권 1호, 2008, pp.53~57.
- 이병윤·이석호,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정책연구보고서」 2006.12, 한국금융연구원.

- 이인실·남주하, 「금산분리 완화 : 논리적 근거와 정책 방향」, 한국금융학회, 2008.4.24.
-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완화」, 한국금융학회, 2006.6.
- 전성인, 「금융과 산업의 분리 : 이론과 정책과제」, 한국금융학회, 2008.4.24.
- , 「새정부의 금융정책 :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의 분석』 제14권 1호, pp.1~52.
- 최승재,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 은행과 산업 간의 상호 지배」, 법무법인 바른, 2008.4.
- 함시창, 「끊이지 않는 대기업집단정책 논쟁 : 금산분리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제2회 경제정의포럼, 2006.6.22.
- 경제개혁연대, 「미 저축은행지주회사법 추진의 의미」, 금산분리 특집 3호, 2007. 11.29.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6.
-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산업 분리의 한계 및 대안」, 이슈페이퍼 6, 2006.1.10.
- Bair, Sheila, "Three Waves of Change: Is this a Fourth?," *The Mixing of Banking and Commerce*, FRB of Chicago's 43rd Annual Conference on Bank Structure and Competition, May 17, 2007.
- Benink, Harald and G. Benston, "The Future of Banking Regulation in Developed Countries: Lessons from and for Europe,"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 Instruments* Vol.14 No.5, 2005, pp.289~328.
- Blair, Christine, "The Mixing of Banking and Commerce: Current Policy Issues," *FDIC Banking Review* Vol.16 No.4, 2004, pp.97~120.
- Edwards, F., "Comment on 'Implications of Growing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tock Market'," *Contemporary Studies of Economic and*

- Financial Analysis*, 1979, pp.197~202.
- Enrich, David, R. Sidel and D. Paletta, "Fed May Give Private Equity More Leeway to Help Banks,"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27, 2008. (<http://online.wsj.com/article/SB121450979069408179.html>)
- Frankel, Jeffrey, "New Perspectives on Financial Globalization," IMF Economic Forum, 2007.4.27.
- Halpert, Stephe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considered," *Journal of Corporation Law* Vol.13, Winter 1988, pp.481~533.
- Haubrich, Joseph and Joao Santos, "Alternative Forms of Mixing Banking with Commerce: Evidence from American History,"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 Instruments* Vol.12 No.2, May 2003, pp.121~164.
- Huertas, Thomas, "Can Banking and Commerce Mix?," *Cato Journal*, Vol.7 No.3, Winter 1988, pp.743~762.
- Krainer, Joh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FRBSF Economic Review* 2000, pp.15~25.
- Leach, Jim, "The Future of Banking: The Structure and Role of Commercial Affiliations," Symposium sponsored by FDIC, July 16, 2003.
- Leary, Edward, "Testimony before th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Committee, US Senate, October 4, 2007.
- Mishkin, Frederic S., "Policy Remedies for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System," *Macroeconomics,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Stability*, Bank of Canada Conference, June 19-20, 2003. <http://www.bankofcanada.ca/en/conference/2003/remedies.pdf>

- Muckenfuss III, Cantwell F. *et al.*, "The ILC Debate and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 Work Still in Progress," *The Mixing of Banking and Commerce*, FRB of Chicago's 43rd Annual Conference on Banking Structure, May 17, 2007.
- Posner, R., *Antitrust Law: An Economic Perspect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 Santos Joao, "Banking and Commerce: How Does the United States Compare to Other Countries?," *Economic Review* 1998 Q4, FRB of Cleveland.
- Saunders, Anthony, "Banking and Commerce: An Overview of the Public Policy Issu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18, 1994, pp. 231~254.
- Sarkozy, Olivier and Randal Quarles, "Private Equity Can Save the Banks,"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27, 2008. (<http://online.wsj.com/article/SB121443773450405313.html>)
- Shull, Bernard,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the United States: an Examination of Principal Issues," *OCC Economic Working Paper* 99-1, 1999.
- _____, "Banking and Commerc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18, 1993, pp.255-270.
- _____ and White, "The Right Corporate Structure for Expanded Bank Activities," *Banking Law Journal* Vol.15, May 1998, pp.446~476.
- Wallison, Peter, "The Right Policy for Industrial Loan Companies," Testimony, Senate Banking Committee, October 4, 2007.
- Wilmarth, Jr, Arthur, "Wal-Mart and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Public Law and Legal Theory Working Paper* No.271,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May 2007, <http://ssrn.com/abstract=984103>.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R. 698, The Industrial Bank Holding Company Act of 2007," Hearing, 110th Congress, April 25, 2007.

GAO, *Industrial Loan Corporations: Recent Asset Growth and Commercial Interest Highlight Differences in Regulatory Authority*, GAO-05-621, September 2005.

Kohn, http://www.house.gov/apps/list/hearing/financialsvcs_dem/htkohn042507.pdf, 2007.

RP Financial LC, "Industrial Loan Company Options for Mortgage REITs," 2008.

〈부록〉 은행·은행지주회사별 주주 현황('07년 12월말 기준)

(단위 : %, 억원)

은행	주요 주주(1% 이상 주주)	외국인 지분율
제 일	스탠다드차타드(100)	100.0
외 환	Lone Star(미국 : 51.02), 한국수출입은행(6.25), 한국은행(6.12), EURO-PACIFIC GROWTH FUND(3.71), 국민연금(1.42), NTC-GOV SPORE(싱가포르 : 1.40), GIS-PRUDENTIAL ASSURANCE LTD(영국 : 1.26)	80.51
국 민	EURO-PACIFIC GROWTH FUND(미국 : 5.46), 국민연금관리공단(4.45(위탁분 1.61포함)), ING BANK N.V(네덜란드 : 4.08), TEMPLETON GROWTH FUND INC(미국 : 1.40), CAPITAL WORLD GROWTH AND(미국 : 1.27), NTC-GOV SPORE(1.27), 미래에셋자산운용(위탁분 1.10),	81.32
한 국 씨 티	씨티그룹(99.95)	99.95
대 구	SSB-SMALL CAP(미국 : 8.00), 삼성생명(7.36), PL-ABDN GL(룩셈부르크 : 3.06), ABU DHABI INVESTMENT AUT(아랍에미리트 : 2.11), MSCOP-PLEDGE OF 12676(말레이시아 : 1.82), TEMPLETON GLOBAL SMALLER COMPANIES FUND(캐나다 : 1.79), MACQUARIE BANK LIMITED(호주 : 1.59), UBS AG-ASIA EQUITY(스위스 : 1.44), MSCOP-PLEDGE OF 12671(미국 : 1.42), VONTOBEL FUND(룩셈부르크 : 1.21), SSB-NEW ECNM(미국 : 1.10)	69.67
부 산	롯데제과(14.11), Small Capital World Fund Inc(미국 : 7.99), (주)파크랜드(4.45), New Economy Fund(미국 : 3.52), PL-ABDN GL(룩셈부르크 : 2.98), 국민연금(2.12), MSIL-MS CO INTL PLC(영국 : 1.96), 한국철강(주)(1.90), MSIL-SR GLOBAL FD(캐나다 : 1.83), TEMPLETON GLOBAL SMALLER COMPANIES FUND(캐나다 : 1.62), UBS AG-ASIA EQUITY(중국 : 1.52), OPPENHEIMER DEVELOPING(미국 : 1.29), TEMPLETON GLOBAL SMALLER COMPANIES FUND(미국 : 1.22)	64.21
광 주	우리금융지주(99.99)	13.69
제 주	신한금융지주(62.42), 예금보험공사(31.84), 부산상호저축은행(1.67)	36.53
전 북	삼양사(11.35), 국민연금관리공단(9.46), ABN AMRO BANK N.V.(네덜란드 : 7.87), OPPENHEIMER DEVELOPING(미국 : 5.42), 대한교과서(4.59), 호남식품(4.52), 신영투신(3.66), 그린화재(3.30), 우리사주조합(3.13), 메리츠화재(2.40), PL-ABDN GL(룩셈부르크 : 1.71), SSB-AM FD INS(미국 : 1.40), 알리안츠글로벌자산운용(1.30), 윤대섭(1.26), SSB-ABD AS SM(영국 : 1.13)	21.63
경 남	우리금융지주(99.99)	13.69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 시중은행 10%(단, 비금융주력자는 4%), 지방은행은 15%

** 개별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은행제출 기준(상위 50위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

※ 지주회사 소속 은행 외국인 지분율은 지주회사의 외국인 지분율 반영

(단위 : %, 억원)

지주회사	주요 주주(1% 이상 주주)	보유 현황	외국인 지분율
우리	예금보험공사	72.97	11.29
	Capital World Growth Fund	2.38	
	미래에셋	1.73	
	국민연금	1.63	
신한	BNP파리바	8.50	57.32
	국민연금	4.42	
	Citibank, N.A, DR	4.37	
	미래에셋	3.24	
	Capital World Growth Fund	3.02	
	Fidelity	2.33	
	EURO-PACIFIC GROWTH FUND	2.29	
	MIZUHO	1.50	
	(주)대교	1.42	
	신한금융지주우리스주조합	1.41	
	SSB-THBG INV	1.34	
하나	TEMASEK	9.65	75.38
	GOLDMAN SACHS	9.15	
	Tosca	3.86	
	Capital World Growth Fund	3.80	
	Templeton	3.53	
	한국지주	2.98	
	SLOANEANDROBINSON	2.40	
	국민연금	2.38	
	포스코	2.22	
	미래에셋	1.79	
	MATHEWS	1.77	
	TIGER	1.46	
	EURO-PACIFICGROWTHFUND	1.42	
	KTB자산운용	1.10	
	대한생명	1.07	
	TARGETAISA	1.03	
	삼성투신운용	1.00	

토 론

◆ 사 회 자 ◆

- 김병주 명예교수(서강대학교)

◆ 발 제 자 ◆

- 이상제 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 토 론 자 ◆

- 강명현 위원(금융통화위원회)
-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 김상조 교수(한성대학교)
- 이인실 교수(서강대학교)
- 조기욱 부사장(하나금융지주)
- 최공필 전무(우리금융지주)

〈가나다순〉

[인사말씀]

이동걸 원장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조명까지 있다 보니 실내가 훨씬 더운데요, 더운 날씨에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쇠고기만큼 뜨겁지는 않겠지만, 금산분리 문제, 은행 소유규제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은행 소유규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금융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논의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논의와 논쟁을 거치다 보니까, 은행 소유규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 다시 말씀드리면,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즉 장단점 등에 대해선 거의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 소유규제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나 업계 그리고 규제당국이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꾸준히 논의와 논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깨끗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쉽게 합의에 다다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론적 분석이나 검토가 미진하다거나 불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시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행, 금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똑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은 정반대로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금융선진국의 역사적 경험 등 실제 사례를 보고 내리는 해석이나 결론 또한 정반대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대로 보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해한 대로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보는 만큼

아는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은행 소유구조 문제는 단지 누가 은행을 소유하느냐 하는 단순한 차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과의 관계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경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우리 금융산업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시장에서 관리되고 경영되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금융산업 그리고 우리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그리고 건전성에 관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은행 소유규제 문제 나아가서는 재벌의 금융지배 문제에 대해 각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각자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역적인 결과, 즉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는 정책집행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효과는 예상보다 작아지는 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도 전형적인 정책실패의 사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가역적(reversible)이면 우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후적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불가역적인(irreversible) 경우라면 이를 회복시키는 데는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정책집행 결과의 불가역성이 클수록 기대비용이 커질 것이고, 따라서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비교衡量해서 판단해야 하는 정책결정이 그만큼 신중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해봤어' 하는 식이나 또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기본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은행 소유규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성과 취약성에 대한 반성이 크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은행산업이 그리고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모두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은행 소유규제 문제를 볼 때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에 얽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정에 얽매어서 이성을 잃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국가경제의 입장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입장에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우리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회를 봐주실 김병주 교수님, 토론자분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모두 발언]

김병주 교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감동깊게 읽었던 이야기가 『쌍무지개 뜨는 언덕』입니다. 무지개가 참 현란한 색을 가지는데, 그렇게 현란한 색을 제대로 보는 존재는 아마 생물 중에서 인간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오만함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동물들은 흑백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현실을 보는 데도 분명 여러 가지 다양한 색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백으로 보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은행의 소유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금융을 공부하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오늘까지 왔습시다마는 오늘은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의 좋은 발표가 있고, 좋은 토론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제발 이제는 흑백보다도 무지개 색깔을 제대로 보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이상제 연구위원

[토론]

강명현 위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자격이라기보다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산업 조직 전공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자임하여 토론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내용은 실증분석이나 개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슈를 제기한 것이라 봅니다. 저는 그동안 변화해온 세계 및 한국에 관련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 주제에 관하여 금과옥조인 금산분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주제인 소유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환경 변화를 보면, 제 생각으로는 IMF경제위기 전과 후는, 세계경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금융환경에는 상당히 변화가 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이후로 기업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소액주주권이 강화되고 그래서 일종의 혼히 우리가 말하는 주주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위주로 하는 단기경영에 치중하는 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제에서 영미식 시장형 직접금융체제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IMF경제위기 이전의 행태를 본받아서 일종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이라든가 금융지배에 대한 차단 같은 것을 현재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서 오히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시장왜곡을 아직도 걱정하고, 이를 계속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이에 연결하여 경제력 집중의 피해를 걱정하여 금

산분리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이 어찌보면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금산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금산분리는 주로 금융과 산업이니까 금융을 전공한 사람도 해야 하고 산업을 전공한 사람도 해야겠지만, 저는 산업조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거의 금융 쪽에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금융 쪽에서 왜 그런지는 몰라도 금산분리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금산분리에 저처럼 반대하는 논리, 예를 들면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경영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등의 반대 논리에 대한 여러 참고문헌을 보아도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그 외의 수많은 찬성논리,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경제력 집중이라든가 이해상충이라든가 또 건전성, 안전성 등 금산분리를 해야겠다는 찬성논리 또한 하나같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성논리 또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 생기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금산분리를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금융산업 규제의 세계적인 추세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사전적 규제 완화에서 사후적 감독 강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규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유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내 자본을 보다 활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을 배제하는 것은 즉, 우리나라의 자본과 경영능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을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어찌보면 그동안의 '금융전업기업가'제도

가 실패하였다는 데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제 내용 중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15%로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10%는 발제자께서 소유규제를 강화하기 이전의 10%였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5%는 지방은행의 소유규제입니다. 저는 지방은행과 일반 시중은행과의 차이를 둔다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대신 다른 나라에도 있는 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산업조직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모든 기업규제는 사전규제 대신에 타자위해의 원칙에 입각한 사후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자위해의 원칙은 일단 타자에 대하여 위대한 피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소유규제와 사전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대신에, 사후감독인 금융감독을 강화한다거나 경영투명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 내용 중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제자의 주장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 역량 및 시장규율의 수준이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완벽하다 봅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법, 증권거래법 등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 면에서 IMF경제 위기 이후는 그 이전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 면에서 보더라도 은행법, 보험업법, 자산운용업법 등에서 보면 제도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 봅니다. 단지 이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이지, 제도나 수준이 미흡하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발제 내용 가운데 연기금이라든가 PEF 사모투자펀드를 소유규제 완화의 일

환으로 이용하는 제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경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규모가 상당하지만 정부의 돈으로 생각하여 맘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또 국민 연기금에서 실제로 은행을 소유할 인센티브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 PEF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PEF가 은행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소유를 하겠느냐에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보면 우회전법인데, 우회하지 말고 정공법으로써 소유규제를 할 수 있는 대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의 고동원 교수입니다. 금산분리는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가 최대의 핵심 문제이겠습니다. 오늘 발제도 사실 금산분리 완화 차원에서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 봅니다. 우선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문제를 접근할 때 과연 금산분리가 완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합리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발제 내용 중 언급된 세 가지 방안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금산분리가 완화되어야 하느냐? 첫째 주장이 은행산업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다들 아시는 대로 2008년 3월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명확히 제시한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금산분리를 완화하였을 때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소유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은행의 수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경쟁력에서 나옵니다. IMF 위기 이후 기존의 예대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겸영업무를 허용함으로써, 펀드판매, 보험 대리점 업무 등의 겸영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꽤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은행산업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은행산업에 문제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산업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라고 하면 은행산업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서, 예를 들면, 투자 은행업무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배구조입니다. 공공성을 갖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면 분명히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은행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성을 다른 금융기관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주주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씨티은행이나 선진화된 은행을 보면 반드시 지배주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능한 경영진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은행을 경영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은행산업 경쟁력 향상을 이 논란이 많은 금산분리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산분리 완화 주장의 근거는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국내자본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론스타 같은 외국계 펀드가 우리나라 은행, 한국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은 은행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특별한 규정, 즉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 요건을 면제시키는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것이지, 금산분리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국내자본의 외국자본에 대한 역차별 때문에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사후감독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 강위원님께서도 누차 그 얘기를 하셨지요. 실제로 그걸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과 2006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금산법 24조 입안과 관련하여 실제로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비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후감독을 강화하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감독이라는 것은 백 퍼센트 완전하게 감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였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은행이냐?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보다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은행이 망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과는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산업자본이 10%까지 시중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요건에 따르면 10% 허용은 문제가 많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10%면 대주주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할 것입니다. 발제 자료에도 보면 은행지주회사의 소유규제 분포를 보면 10%만 소유해도 사실상 대주주입니다. 지배주주인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제 자료에서도 이를 전제로 해서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고, 사후 감독강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했을 때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10%도 제가 분석하기에는 사실상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산업자본의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임점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보완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10% 소유 허용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의 허용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소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와 PEF의 세 번째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국유은행의 민영화 시에 인수할 국내자본이 없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때, 일단 국민연금은 한 번 허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들이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강구를 하는 전제조건들을 충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국민연금 외에 연기금도 이러한 대상이 되는지 발표자료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발표자께서 언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EF 관련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PEF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PEF 즉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단기적인 투자자입니다. 단기적으로 투자대상처에 수익을 올려서 매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외환은행을 소유한 론스타펀드가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단기적인 투자수익 목적의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환은행이 문제도 커진 것 아닙니까?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독 한국외환은행 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단기적인 수익추구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행산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PEF의 속성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임원감축에 따른 수익증대, 이는 사실 은행산업의 전체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설령 PEF에 대한, 제시하는 것처럼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을 통해서 허용한다고 해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보다는 PEF의 은행소유는 금지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금산분리의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이지만, 한번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 제도를 잘 이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 세계적인 선도적인 은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욱 부사장

앞에서 발표하신 분과 달리,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가는 아닙니

다마는, 제가 업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소속되어 있는 하나금융그룹과는 관계 없는 것이며, 제 사적인 의견입니다.

발표 자료 가운데 제가 얹혀 있는 것이, 감독기관 적격성 심사 강화 문제, 국내자본과 해외자본 간의 역차별 해소, 어떠한 방법이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느냐, 산업자본과 은행 간의 이해상충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민영화를 촉진하거나, 민영화 경영 주체, 민영화할 때의 가격 등의 고민도 섞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요 요소인 사전·사후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를, 조금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기계적으로 하는 규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감독 규제를 적격성 심사 강화라는 쪽으로 전환해 간다는 발제 방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분명히 제가 현실에서 느껴보면, 그런 것이 의사결정을 해서 적격성 심사 강화하자, 사전심사를 강화하자고 해서 바로 강화될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역량이 강화되고 또 심사 내용이나 절차가 완비되는 데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 전에 이를 전제로 한 정책을 펼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적격성 심사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일반적으로 적격성 하면 투자주체 자체의 적격성을 따집니다. 이는 그 사람들 자격 같은 것인데, 이는 사전 증빙으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가능한 이해상충 발생 위험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을 문제에 대한 경제적 판단을 사전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적격성 심사체계가 반드시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독강화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시장에서 살아

보면, 감독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전예방 기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역량이 훨씬 앞선 미국에서도 그린스펀 전 위원장도 현 버냉키 위원장도 다 인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시장경제하의 금융시장에서 감독기능 강화가 사전적인 예방능력을 발휘한 적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기능 강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겠지만 우리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두 번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직접 소유하는 것을 얼마만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도의 완화가 자금공급이 더 원활화되고 다양한 주주를 구성하고 하는 면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해하고 싶고 동의하고 싶은 것은, 산업자본이 근본적으로 종국적으로 은행의 지배권을 갖는다는 사안들은 논의 대상이 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앞의 토론자는 다른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우 감독규정을 보면 약 25% 정도 소유하는 것을 지배권을 갖는 기준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것으로 한두 가지만 사소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 금융산업 전체에선 누구나가 다 크건 작건 간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다 투자은행(IB) 지향적입니다. IB 쪽으로 넘어가자 식입니다. 상업은행(commercial bank)도 IB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가 보자, IB가 뭐 굉장히 멋있는 미래 금융산업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맞기는 하지만, IB에는 또 다른 어두운 면(dark side)이 있는데,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씨티뱅크라는 세계 최대의 commercial bank가 IB를 같이 갖고 움직이는 commercial bank를 끼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정도에서 드러난 현상은 씨티뱅크는 사실상 생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미국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중동 자금이 수혈되고 해서 기사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IB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성이 심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았을 때, 그러한 변동성이 심해지는 금융산업 구조에서, 거기에다 대고 산업자본까지 깊게 결부시킬 경우 여하한 상황이 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한꺼번에 굉장한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갖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발제자나 토론자 한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례에서도 산업자본이 정말로 대표적인 금융자본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산업자본의 주도하에서? 저는 그러한 사례를 본 기억이 안 납니다.

또 하나 사소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어떤 기업이 하이테크놀로지를 근본으로 하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들처럼 로컬 커머셜 बैं킹(local commercial bank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른 사업주체의 경영주체자 입장에서 어떤 경영주체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상 많은 리스크와 또 아주 조급하고 시급한 상황들을 많이 겪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건 자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첨단 기술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훨씬 더 첨예한 위험과 경쟁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과 은행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현재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여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 주체가 힘의 역량이 분산될 것 아닙니까? 관심이 분산될 것입니다. 역량의 분산이 가지고 오는 것이, 역량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이, 현실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잘못하면 우리 경제 전체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글로벌 경쟁기업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위험한 것에도 집중을 하지 않고 거기서 조금 힘을 빼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은행경영에 치중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쟁을 버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전제하에서 발제자가 하신 말씀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분 소유한도를 완화하여 10%로 하는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지분 소유한도를 늘리는 것과 의결권을 똑같이 늘리는 것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의결권이라는 문제는 소유한도 자체에 대해서는 더 좋은 자금공급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주주구성이 다양화된다는 좋은 이유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이라는 것에는 그 이외에도 산업자본과 은행자본 간의 경제적 이해상충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회적 저항이라든가 하는 등, 다른 문제들도 같이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의결권에 대해서는 4.9% 정도,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이하에 대해서만 승인 없이 허용하는 선을 갖고 10%까지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초과 허용 여부는 강화된 적격성 심사, 이해상충, 이런 요소들을 따지는 적격성 심사하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선 이런 전제 가운데, 감독기능 강화가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 완화라는 것도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기금의 금융주력자 인정 문제입니다. 이는 본질적인 구조로 보면, 모두 다 아다시피 원천적인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은행의 다양한 소유구조의 주체세력을 만들어낸 의미에서, 왜냐하면 연기금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30년만 되면 고갈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는 일시적인(inter-temporal) 방안이

고 본질적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면,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보완책들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민연금을 금융주력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발제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물론 그런 보완책들이 있어야겠지요. 금융감독기관의 검사권하에 들어가야 된다면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PEF의 은행 소유규제 완화 문제, 이를 따질 때는 우리나라 끼리의 PEF만 따질 것이 아니라 론스타 등 우리가 따지고 있는 외국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소유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하신 기본적인 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주주군을 형성해 주고 잉여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발제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현행 4%의결권, 10%소유권, 이런 제안이 있는데, 그것을 완화하더라도 승인 없이 허용하는 수준은 의결권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와 똑같이 4.9% 의결권까지만 승인 없이 무조건 허용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PEF는 직접소유가 아니니까, 소유권은 15% 정도로 여유있게 늘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의결권도 10% 정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아까 케이스와 똑같이 감독기관의 강화된 적격성 사전심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글로벌스탠다드의 소스인 미국의 경우를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5%를, 10%를, 25%를, 대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5%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5% 이상을 특히 외국에서 들어가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을 보유하려고 할 때, 미국 내 은행이건 비은행이건, 금융주력자이건 비금융주력자이건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5% 이상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 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던, 은행과 은행 아닌 기관들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순히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FRB 승인 사항이긴 하지만, 사실상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상충 가능성을 강하게 규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승인 절차가 있다고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룰에 대하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를 이 사람들은 경영지배권 자체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지배권 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영향력의 기준을 10%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에 대한 마디만 더 한다면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특별한 다른 규제가 있습니다. 그 법 이름이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라고 하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의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추가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포괄적으로 해석됩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특별한 장치들이 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국계와 우리나라 국내계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지만, 약간은 외국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제의 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또 한편은 PEF에 대해서 행위 규제도 동시에 완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PEF규제 상황은 바이아웃(buy out)펀드로만 규정합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직접 가지고 구조조정을 직접 한다는 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PEF규제 상황에서는 현재 PEF는 은행에 투자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조 교수

많은 분들이 금산분리의 찬성이나 반대 입장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앞에 토론하신 분들이 각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또 그런 입장 차이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토론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위원회의 삼단계 완화방안과 발제자께서 정리하신 내용에만 집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위원회의 안으로 얘기하면 1단계에 PEF와 연기금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른바 금융지주회사법 GLB Act를 1999년에 만들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 왔던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원칙을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은행 자회사와 보험 자회사, 증권 자회사를 동시에 둘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데 미국의 입법자들이 십 년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증권회사든 우리가 아이비(IB)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머천트뱅크(merchant banking)을 합니다. 이게 PEF입니다. 이런 PEF 업무를 통해서 산업자본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에 어느 정도 충돌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미국의 주(州) 보험업법에서,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의 투자와 관련해서 금산분리원칙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업무의 어디까지를 금융업무로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미국의 입법자들이 십 년 동안 고민을 해온 것입니다. 그 기본에는 이런 활동은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 논의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에서의 논의는 금융지주회사의 허용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이냐, PEF와 보험회사의 투자를 포함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는 거꾸로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에 관해서 PEF와 연기금이라는 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에 소유를 허용할 것이냐입니다. 따라서, 차원은 다르지만, PEF와 보험 금융기관의 투자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시사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GLB Act에서는 현실적으로 절충을 하였습니다. 절충의 포인트는 PEF는 항구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turn around 하는 임시적으로만 지배한다, 영원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PEF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 routine management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법 코드, US Code로는 1843조 (k)(4)(H)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Code of Federal Regulation 225.1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시행령에 관련된 규정으로 예컨대 이사회와 임직원의 겸직(interlocking)을 금지하고, 일상의 경영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특수한 결정이나 감시활동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개입사실과 그 개입이유를 문서로 남기도록, 미국에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투자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판례집(casebook)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PEF나 보험회사 투자와 관련해서 금산분리 원칙에 많은 규제허점(loophole)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고민 사항이나 실제 법 집행 사례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PEF나 연기금들을 통하여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였을 때, 여기서부터 나오는, 미국

의 입법자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고민사항들을 한국의 현실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PEF는 임시적인 지배(temporary control)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 기존 PEF가 떠나게 되면, 또 새로운 대주주를 찾아야 하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산업자본이, 예컨대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30% 정도 산업자본이 출자한 PEF가 은행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이에 대해 이면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입법자나 감독기관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PEF의 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 행사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기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유는 연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이라는 최후의 안전판을 제공한다는 기능, 그리고 언젠가는 팔 수밖에 없다는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주총에서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이사 선임에 반대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의결권 더 나아가서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은행의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가 되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은행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이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기금, 국민연금은 일반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가 10% 이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투자자로만 남는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유한도의 10% 상향, 저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은행법에서도 4% 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만 포기하면 산업자본도 10%

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아도 포트폴리오 투자자로서는 10%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산업자본이 단순한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 10%는 별 의미 없는 구석해(corner solution)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자본을 포트폴리오 투자자로 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이런 제한 하에서 10%까지 주식을 사는 데 조 단위까지 돈을 쓸 산업자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규제허점을 만들어서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는 10%에 머물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10%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또는 10%씩 가지는 산업자본이 복수개가 존재하는 공동경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이 공동경영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더구나 은행의 경우에는 성공할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10%로 상향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많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소유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적격성 심사나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아까 조 부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는 너무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은행의 경우 지금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서 각종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당국이 그런 불법행위나 비금융주력자의 문제에 관하여, 론스타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2006년 말 기준의 적격성 심사 기준도 2년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나 하면, 비은행의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제도 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오늘 이견희 회장에게 7년이 구형되었

다고 합니다. 물론, 판결이 아직 남아 있지만, 만약 이런 정도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사실 특정가법상 배임혐의로 7년 구형을 받은 사람이 삼성생명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가능하냐? 우리나라 보험업법에는, 은행법과는 달리 대주주적격성 심사 dynamic fit and proper test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진희 회장만 그렇겠습니까? 정몽구 회장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3년형에 5년 집행유예입니다. 두산그룹이나 SK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재벌이 5년에 한번씩은 형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에 이런 dynamic fit and proper test를 미국이나 영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절대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끝으로 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진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얼마 전에 작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서,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특례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하게 되면, 상장지주회사의 비상장은 자회사 구조로 가게 될 것인데, 만약에 비상장 은행 자회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중대표소송제도와 같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강명현 위원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규율 또는 소액주주의 감시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저일텐데, 절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독기관도 시장에 의한 규율도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실 교수

지난 4월말 금융학회에서 오늘 한 것과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였고, 이 자리의 상당수는 그 때 당시에 오셨던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때 완화에 찬성하는 발제는 제가 하였고, 전성인 교수가 반대하는 발제를 하였고, 토론자는 여섯 명이셨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각 3명씩 해놓기로 하셨다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넷이고 찬성하는 분이 둘이셨어요. 원래는 다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 전 식사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말하여, 두 명은 찬성으로 돌려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금융 문제에 대하여 예전에는 많이 참여하였는데, 잠깐 외도하면서 재정을 보느라고 이걸 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융학회장이 저더러 발제를 하라고 하여서, '왜 저를 시키십니까? 그동안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산분리는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지난 정권 10년간 다 돌아섰기 때문에 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발제하기 위해 그동안 나왔던 자료를 주욱 살폈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즐겨하는데, 저는 경제학자입니다마는, 경제학은 과학(science)의 영역이고요, 경제학 내에서 경제정책은 예술(art)의 영역입니다. 이 금산분리와 같은 경제정책 내 특정한 영역은 사이언스도 아니고 아트도 아니고, 신념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김상조 교수님이나 앞에 발언하신 분들의 얘기에 대하여 정확히 반대의견을 저는 얼마든지 날밤 세워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얘기를 금과옥조처럼 조문까지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똑같은 예로 미국은 영미법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유럽처럼 대륙법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대륙법을 하고 있는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처럼 금융이 산업을 뒤에서 보호하며 실물의 시녀라고 하며 뒷받침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정부 주도로 해오다가, 민영화

하면서 1980년대 들어서 그제서야 대주주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대주주를 견제하느냐, 그 때부터 금산분리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행 소유규제라는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나 규제라는 것이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제자께서 우리나라 은행 소유규제에 대한 역사를 죽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8%는 무슨 근거며 10%는 무슨 근거며 4%는 어디서 나왔다는 근거입니까? 미국처럼 5% 10% 15% 이런 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하나에 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 부분의 역사적 논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며, 거기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상조 교수님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되면 5년마다 감옥 가야 한다는데, 우리가 가진 법을 제대로 다 지켜갔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감옥 가야 합니다.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서 법 완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 준비하면서 쪽 들여다 보았습니다. 과거 10년분의 금산분리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5+3하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구조를 굉장히 강화하고 감독을 강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4년도 1월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로드맵까지 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나친 과잉규제로 보입니다. 지금 이 논의가 나온 것은 만약 국민연금이나 PEF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IB에 대해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금산분리를 무지하게 강화하였는데, 남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7대 시중은행의 73.6%가 외국계가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

직한 결과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best of best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절대명제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 금융이 가장 잘 나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 제2의 금융위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할 것이냐? 제조업은 한계에 이르렀고, 우리가 가져갈 것이 서비스업인데, 그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서비스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느냐의 문제이고, 그러한 명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발제자나 토론자들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보고 저 또한 동의합니다. 단지 그 방법론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은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 가면 은행이 잘 갈 수 있겠느냐? 고동원 교수가, 잘 가고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 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공적자금을 제2금융권은 아니고, 은행산업부터 들어부었기 때문에 은행산업이 좋아졌고, 그것의 반사이익으로 은행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은행산업을 볼 때 안심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뭐가 있습니까? 은행의 73.6%가 외국계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 해외 자산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균형이 있는 금융산업 발전입니까? 여전히 담보대출 위주의 안정성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유럽 이야기를 하었는데, 미국 사례만 들여다 보지 마시고, 유럽 사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이 우리랑 참 비슷한 대륙법 체계이고, 기업의 소유규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더구나 유럽 연합이 확대되면서 규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래서 미국의 사례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럽의 금융규제의 방향을 보면,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금융그룹의 형태를 인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유니버설 बैं킹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금

용그룹 내에서 금융회사들의 자본 적정성은 보장을 하고, 만약에 그, 큰 흐름, 봐야 될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큰 얘기를 해드리면은 - 나머지는 지난 번 발제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 시장실패의 문제가 금융산업 결합 이것 때문에 악화될 것이라는 것의 우려는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금융회사들의 자율권을 향상해서 자산의 분산투자를 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 이런 부분으로 가게끔 규제를 몰아가는, 그러니까 금산의 결합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현실에서 복합금융 그룹의 감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개선 과정에서 자산과 자본 규제에 대한 금융권역간의 규제나 감독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부분에 논제를 모아야지, 지금은 더 이상 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완화는 대세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텐데,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펀드 자본주의 시대인 것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금으로 갑니까? 투자개념입니다. 시중 아줌마들도 다 펀드를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처럼 이것하면 기업들이 사금고화한다? 자금이 남아둡니다. 부채비율 백%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외국계가 들어와서, 국부펀드시대에, 은행 가져갑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어디가 더 말을 잘 듣겠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주 자본주의, 우려되는 바는 많지만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바뀐 금융환경인데,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10년에 천지가 개벽하였습니다. 우리는 금산분리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10%까지는 해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되면 개선해 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인터넷, 촛불시위 보셨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통령도 물러나라고 하고 이견희씨도 감옥에 보내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감시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양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공필 전무

모두에 김병주 교수님께서 무지개 비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 생각합니다. 금산분리에 관한 논의는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고질적인 극단주의적 평가 기준의 현실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행 소유규제와 관련하여서 이분법적인, 극단적인 기준 중심의 논의에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환경도 흑백보다는 컬러의 선택이 주요 환경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투자 적격자를 비적격자로 격리해 버리는 1종오류(type I error),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타입원 에러와 연관된 어떤 사회적 비용보다는 지금 우리 정서상, 우리의 지나온 경험상 비적격자가 적격자로 간주되는 2종오류(type II error)에 대한 페널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엄격한 금산분리제도가 그동안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주체에 대한 이분법적 극단적인 구분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현재와 같은 금융 환경 속에서 분명히 과다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경직적 분류체계 때문에 소위 역선택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런 기준을 다 완전히 뒤엎어서 극단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방법도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의 행태를 감안하여서 최적의 결정을 가급적 시장의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노력에 모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다가 현업에 뛰어들 지 1주일도 안 되었습니다만, 이쪽 들어가 보니까 너무 법이 많습니다. 뭐 하나 보려면 법률자문부터 거쳐야 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한 경험인데요. 이러한 법체계도 결국은 목적이 공

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재벌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주어진 여건하고 앞으로, 이인실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금융발전의 대명제하에서 소유구조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고 시장에 활력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상조 교수님 얘기가 다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의 분석을 떠나서 앞으로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제자가 여러 가지 이슈를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시다만,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보면은, 일단 산업자본 은행 주식보유한도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할 일은 없다고 보고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를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살아보고 고쳐나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적격성 심사라든지 사후감독 장치 부분이 현재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도 금융 발전에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going forward 즉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촉발하는 차원에서도 소유한도를 늘려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적용이 너무 경직적이고 한도가 엄격하게 유지되는 그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초기 노력으로써 지난 3월달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자본의 PEF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 LP지분 보유한도 30% 상향 조정 같은 것들은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을 넓혀서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산업자본 시장유입을 통해서 금융자본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저래 어쨌든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금과옥조의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적격성과 관련된 기준 자체가 자본흐름이 상당히, 흐름이 있긴 있습니다만, 굉장히 흐름을 찾기가

값비싼 법률자문 서비스를 대가로 하지 않고서는 찾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찾는 그 정도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전향적으로 한 번 물꼬를 터주고 시장이 이래저래 굉장히 성숙한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님도 제시고 시장을 보는 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함부로 옛날같이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환경은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국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끼리의 틀 안에서 너무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현행 법체계의 개선 방향과 연관해서 현행 은행법 내지 금융지주회사법은 비금융주력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동일인 개념이라는 특수 관계자를 포함해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 기업을 컨트롤할 의사가 없는 연기금 같은 어떤 면에서 재무적 투자자까지도 비금융주력자를 규제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위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Holdings Pte Ltd.) 같은 것도 사실은 산업자본입니다. 비금융주력자로 규정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연기금 등 잠재적으로 재무적인 투자자에게 금융공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약하여서 은행산업 발전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라든지 공적자금회수 같은 여러 가지 일련의 장기과제에 대해서 움작달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적 목적 수행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되기 쉽기 때문에 재벌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금산분리 체제의 본 입법취지와는 다소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 은행법 내지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조항에서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를 목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로 보지 않는다는 일종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서

금산분리제도의 너무 경직적인 부분은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 은행 소유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하고 경직적인 적격성 심사로 인해서 시행 자체를 통한 다양한 견제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활력이 너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실제 민영화와 관련되어서 매입 주체를 사전 선택할 수 있는 매각주체의 적극적인 시그널링, 이런 것들은 전혀 제대로 시도도 되고 있지 않고, 시장 상황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책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법률자문 쪽에 너무 많이 쏠려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물론 그 쪽 산업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감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시장마찰 요인을 줄여가면서 시장의 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낙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발제자가 정리하신 것이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요약에서 금융회사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 대한 지적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오히려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위험관리 능력 차원에서 글로벌 위험 요인을 제대로 통제하고 식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

보시다시피 제가 상당히 경직되게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사실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4시30분에 다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기 때문에 플로어에 계신분들께, 짧게 하시면 여러 분들께 기회를 드릴 것이고, 길게 하시면 딱 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해주신다는 조건하에서 제가 세 사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시고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환(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이인실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하셨던 이박사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제해 주신 이박사님이, 책자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GP하고 LP부분 관련하여서 론스타는 김상조 교수께서 얘기하셨듯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핵심 쟁점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다, 거기에 GP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경실련에서 정보공개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민한 사안에 예민한 시기에 오늘 같은 이 세미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론스타 사건 앞에서 론스타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런 정책세미나를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나 하면, 외환은행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예민한 시기에 금산분리를 강화하자 완화하자 하는 것은 조금 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분한테 제 의견이면서 질문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고동원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론스타사태 앞에서는 금산분리라고 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왔지만, 론스타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런 세미나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또 다른 분 있습니까? ...

없으시면, 그러면 조기욱 부사장께서 30초 동안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욱 부사장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얘기하는데, 반면에 은행도 비금융기관에 대한 소유 규제가 굉장히 강한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는 이와 병행하여(parallel하게) 은행이 비금융기관에 대해서 갖는 규제도 풀어줘야겠다. 특히 눈앞에 문제되는 것이 금산법상에 보면, 은행들은 비금융기관에 대해서 구조적인 목적인 경우에만 초과지분을 허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융산업이 무엇입니까? 유비쿼터스 융합경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은행이건 무엇이건 통신, 유통 등이 같이 묶어져 돌아가는 쪽으로 가야 우리 금융산업이 더 발달한다는 말입니다. 경쟁력도 높아지고,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제도 같이 병행하여(parallel하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이 김상조 교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조 교수

아까 이인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참여정부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방지 로드맵, 2004년 1월4일날 발표했던 것, 그거 완전히 파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작년 7월달에 보험업법을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업

법을 개정할 때, 동태적 적격성에 대한 심사 등등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도조차도 도입을 하지 못하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미국이나 영국에서 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대주주로 들어올 만한 산업자본이 거의 없다. 이 현실을 염두에 두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인실 교수 역시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실 교수

금산분리는 제가 신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김상조 교수님은 다 망했다고 하는데, 저는 무지하게 강하게 나갔다고 봅니다. 원래는 더 완화하였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막게 되어서 전 금융산업 발전이 느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끝나고 얘기하지요.

사회

고동원 교수도 역시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고동원 교수

이인실 교수님하고 제가 견해가 대립이 되는데, 이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법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 대륙법이고 우리가 대륙법이니까, 우리가 유럽을 따라야 된다. 영미법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아니니까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김상조 교수도 말씀하셨던 조문들은, 미국이지만 성문법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법체계를 가지고 논란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계은행이 다 73.6%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외국계은행들이 갖고 있는 SC 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그러면 최공필 박사 부탁드립니다.

최공필 전무

제가 재벌이라면, 은행 소유에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논의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그러면 강명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현 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 부사장님 코멘트 중에서 금산결합으로 하면은 특화를 하더라도 제대로 경쟁능력이 없을텐데, 같이 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일본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일본의 6대 계열(けいれつ)의 경우를 보면, 그 계열의 중심에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열기업들이 상호 보유를 하면서 서로 상호보완을 하면서 아주 경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까 토론의 제일 첫 주자로서 말씀드린 것이 약간의 비전공자로서 어조를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금산 결합에 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환경이 변화하였으니, 금산분리같은 원칙을 금과옥조로만 여기지 말고 점진적으로 생각하여 발전적으로 시도를 해보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상제 박사께서 2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제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이 있었던 것은, 이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세미나를 했느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발제를 한 전체적인 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를 왜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찬성도 이런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도 이런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논의를 통해서 올바른 답을 찾아내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을 주셔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옛날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미국 10달러 짜리를 보면 해밀튼(Alexander Hamilton)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워싱턴 초대대통령 때 재무장관도 하신 분인데, Bank of New York의 창립자이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 분과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사람 중에서 뉴욕의 거물 중에 아론 버(Aaron Burr)라는 분이 있습니다. Manhattan Bank를 설립한 분입니다. Manhattan Bank는 Manhattan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회사인데, 자본이 너무 많다보니 बैंकि업까지 해서 지금 용어로 하면 산업자본과 은행이 붙어있는 데고요, Bank

of New York은 금융전업가입니다. 둘이 사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았습니다. 장인어른 지역구를 뺏어가고 하는 등 얹히고 얹혀서 결국은 보니까 나중에는 해밀튼이 버를 나쁜 사람이라고 언론에도 쓰고 말로도 한 것을 버가 확인을 하고 해밀튼이 인정을 하여, 둘은 뉴저지로 가서 그 당시 용어로 '인터뷰'(interview), 즉 결투(duel)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해밀튼이 죽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찬성·반대는 그 정도의 격렬한 '인터뷰'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금산분리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측면이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은행이 또는 여러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측면입니다. 발제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만 국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은행에 돈이 없을 때 자본이 부족할 때 이 이슈가 미국이고 어디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 상태는 돈이 필요한 단계이나 하는 데는 보는 사람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아서 은행이 어려워졌을 때 돈이 들어가야 될, 옛날처럼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은행이 성장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장사 잘하여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은행산업 발전은 대개 M&A입니다. M&A를 하려다 보니까 은행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자, 내지는 지금 있는 주인의 손이 바뀔 때 원활하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새 돈을 찾으려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깨끗한 돈이 오면 좋겠다 하는 게 적격성 심사고, 금융이론적으로 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으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감독을 통해서 이를 막아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이해상충이 없는 깨끗한 돈이 무엇이 있을까 보면 국민연금에 눈이 가게 되고, 이해상충이 조금 적게 만들어진 구조의 PEF에 눈이 가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비대칭성이 있더라도 가장 문제가 없는 수준이 4이냐 5이냐 6이냐 쪽 같
 때, 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가역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비가역적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는 수준은 4에서부터 계속 심사를 통해서, 아까 영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상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깨끗한 돈이 들어오게끔만 만들어가는 데 투자하면 되지 굳이 못 들어오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논의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사회

아직도 이 이슈는 신앙의 영역에 있고, 아직은 이성의 영역에 있지 않는 것 같
 습니다. 서양사에도 보면 종교가 지배하던 때를 암흑시대(Dark Age)라고 그러
 고, 그것이 깨져서 계몽주의가 열리는데, 아직 우리도 계몽주의 여명시대에 있
 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지구는 돌고 있고 우리는 아직 현재에 머물
 러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우리 국
 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가? 우리가 신앙을 접고 그 점에 초점을
 뒹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Abstract

Discussions in Search of the Best Ownership Model for Commercial Banks in Korea

One of the most important public policy issues regarding commercial banks is their ownership by companies primarily engaged in non-financial activities. As a way to protect against the potential risk of mixing banking and commerce, most leading countries are adopting some regulatory limits to bank equities that non-financial firms can own with voting rights. In Korea, non-financial firms are prohibited from owning more than a four percent stake of banks with voting rights. However, given the dominant presence of foreign capital in the banking sector in Korea and the struggle to find domestic capital to help privatize government-own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tensify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restrictions are too strict to improve the mobility of ample liquidity accumulated in the industrial sector has resurfaced recently.

The debates have been heated up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 policy to progressively deregulate the strict rules in three prudent steps: to allow private equity funds and pension funds to own banks in the first stage, to raise the bank ownership limit with voting rights to as high as ten percent in the second stage, and to shift the focus of regulation from ex ante ownership restrictions to ex post supervision with an intensified dynamic fit and proper test of prior screening for qualified capital.

In this policy seminar, various participants discuss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deregulation and recommend the best ownership model for commercial banks in Korea.

한국금융연구원 자료판매 코너

총판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

지 역	서 점 명	전 화 번 호	위 치
서 울	본사 직영서점	(02) 734 - 6818	한국언론재단빌딩 www.gpcbooks.co.kr
	교보문고(본점)	(02) 397 - 3628	광화문사거리 www.kyobobook.co.kr
	영풍문고(본점)	(02) 399 - 5632	종각 www.ypbooks.co.kr
	(강남점)	(02) 6282 - 135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리브로 올지	(02) 757 - 8991	을지로 입구 www.libro.co.kr
	서울문고 (반디앤루디스)	(02) 6002 - 6071	삼성역(무역센터내)
부 산	영광도서	(051) 816 - 9500	서면로타리
	동보서적	(051) 803 - 8000	태화백화점 옆
인터넷서점	yes 24	www.yes24.com	
	알라딘	www.aladdin.co.kr	

※ 위 코너 외에 교보문고 및 영풍문고는 각 지방 분점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이 상 제(李 相 禎)

■ 약력

- 서울대학교(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
- 콜럼비아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 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 주요 논저

- 신용정보업의 현안과 정책 과제(공저 :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6.6)
- 채무면제 · 채무유예 금융 서비스와 정책 과제(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6.2)

정책조사보고서 2008-02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2008년	8월	29일	인 쇄
2008년	9월	5일	발 행
	발 행 인	이	동
	발 행 처	한	국

금융연구원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 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ISBN 89-503-0379-5 93320

값 7,300원

2. 2000년~2008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적발	식재료종	61	152	131	102	103	106	59	64	21
	비공개정보이용	22	15	25	27	40	59	43	57	27
	대량소유주식권동보고	18	32	29	41	42	65	42	44	19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121	170	69	28	41	29	21	37	13
	무혐의	52	42	36	16	21	18	21	16	8
계		274	411	290	214	247	277	186	218	88
조치	검찰의첩	94	160	166	133	166	186	132	138	60
	단기매매차익반환	28	40	25	33	51	56	24	50	17
	경고 등	100	169	63	32	9	17	9	14	3
	무혐의	52	42	36	16	21	18	21	16	8
계		274	411	290	214	247	277	186	218	88

3. 채무유예서비스(DCDS) 관련 금융당국의 입장과 향후 정책방향

-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는 보험사가 취급중인 신용
보험과 유사하므로 보험업법내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
할 필요
 - 보험업법·령을 개정('08.12)하여 DCDS 서비스를 보험
상품 범위에 포함할 예정
 - 다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촉진
등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 동 서비스를 신용카드회사에
허용하기로 함
- 신용카드사가 DCDS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DCDS 서비스를 전업·겸영 카드회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 DCDS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재 마련된 DCDS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여전업 감독규정에 반영
(‘08.12)할 계획임

4.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

- ☐ 2008년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현황 자료는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제출)

5.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8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및 그 실적”

2008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008. 10

금 융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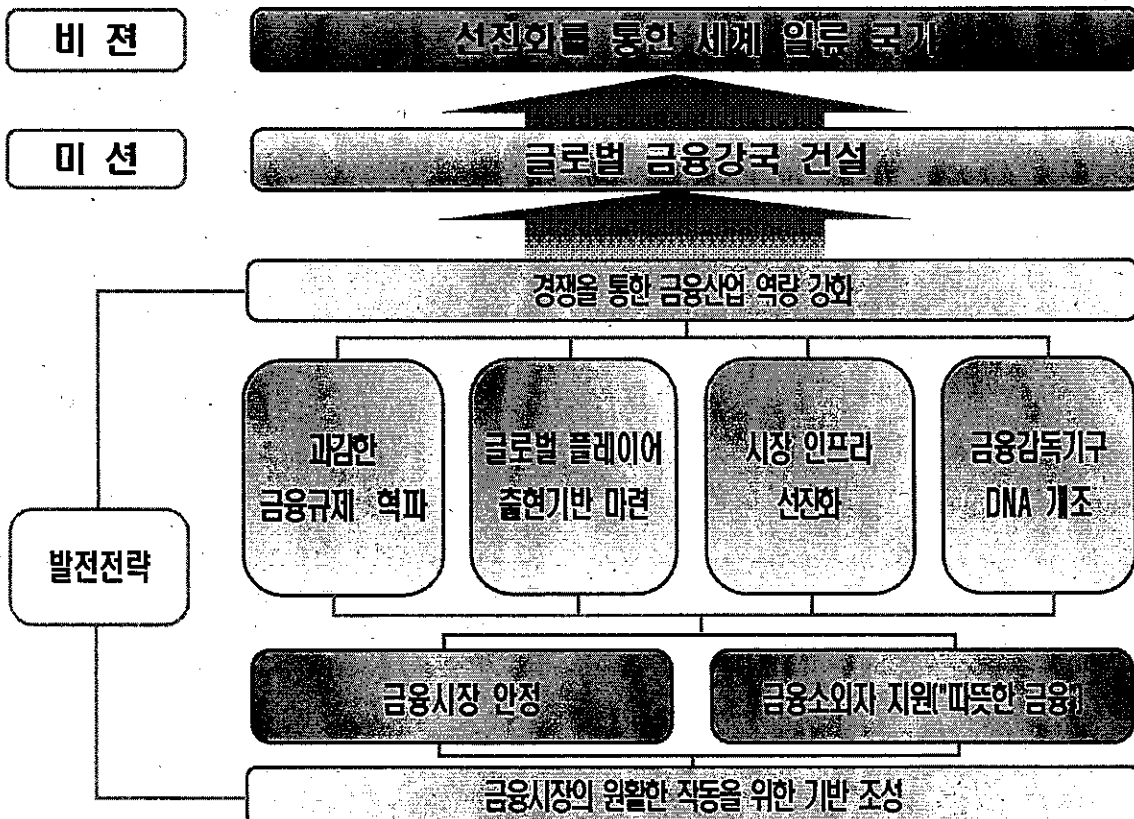
목 차

I.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II.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III. 향후 중점 추진 과제

- 새 정부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
- 금융산업은 新성장동력으로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선진화정책 수립, 금융시장 안정, 따뜻한 사회 구축을 위한 섬기는 금융행정,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착실하게 추진



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

금융시장 동향

- 작년 중순 이후 서브프라임 문제, 글로벌 침체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리먼 등 주요 IB 도산과 7,000억불 구제 금융 등 시장 불안 수시로 반복되면서 큰 폭의 조정

* 서브프라임 관련 총손실 : 4,000억~5,000억불 추정(Fitch 4,010억~5,500억불, IMF 9,450억 불)

- 이러한 해외시장의 충격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

- 최근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 지속등의 영향으로 1,300대 후반까지 조정
-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도 연중 최저치 4.88%(4.30일)를 기록한 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82bp 상승(10.2일 5.7%)

정책적 대응

- 서브프라임 여파로 발생한 글로벌 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금감원·금융회사 등과 시장상황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자금흐름,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철저히 점검

* 금융위·금감원 합동 conference call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수시로 점검

- 거시경제정책협의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협의제도 구축

* 신정부 출범 이후 거시경제정책협의회(17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11회) 등

□ 적극적인 정보 전달 및 감독 강화로 시장 불안을 완화

○ 정확한 정보전달로 시장내 불안 심리의 무분별한 확산 차단

* 例 : KIKO 거래현황(8.1), 9월 위기설 관련 기자 간담회(9.2), 리먼·메릴린치 관련 익스포저 파악(9.15) 외화유동성등 금융현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10.6) 등

○ 은행권의 시장성 수신 PF 대출, 외화 유동성 등 시장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例 : 시장성 수신,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변동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하반기 건전성 감독 방향 수립·발표(7.15일) 등

□ 주요 점검 지표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체제 가동과 조기 정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상시 점검

○ 중점 리스크 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재정부, 금감원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샵(7.15) 개최, 금융위·금감원간 하반기 리스크 점검(7.25) 등을 통해 시장불안 요인 대응방안 모색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

* 例 : 공매도 금지(10.1)

□ 규제금융법안 하원 통과에도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

○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체제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 리스크 요인별 금융위험의 전이 경로 분석 등을 통해 파급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 노력 강화

○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②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추진 실적

□ 규제당국이 주도하였던 이전의 금융규제개혁과 달리 수요자(민간)가 주도하는 금융규제개혁 추진

○ 지난 3월말부터 5월초까지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약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을 통해 총 477건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

- 또한,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약 300여건의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금융규제 혁파

* 총 14인 : 민간 전문가 11인, 금융위 2인, 금감원 1인 (단장 : 민간전문가)

<주요 개선사항>

- 금융회사 업무위탁 범위 확대(총무·인사 등의 후선업무, 전산설비 등)
- 외부감사 대상 축소(자산 70억원이상 → 자산100억원 이상)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폐지
- 신용카드 결제대상범위 확대(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허용
- 은행에 투자자문·투자일임업 겸영 허용
- 보험회사에 신용스왑거래(CDS)를 허용
- 집합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범위를 헤지목적 또는 정형화된 형식의 스왑거래까지 확대 등

향후 조치계획

□ 규제개선사항 중 법률 제·개정사항은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제·개정과 연계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경우에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 또한, 금융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 감독 강화 및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도 함께 마련 추진

* 과징금제도 확대

3]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추진 실적

□ '반도체분야의 삼성전자'와 같은 금융섹터 Global Player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을 발표('08.6.3)하여 산업은행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

* 추진일정 : 산은법 개정 및 KDF 설립 입법안 마련('08.8) → 산은의 기업분할('08.12) →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사 지분(49%) 매각(2009~2010) → 산은지주사 지배지분 매각(2011~2012)

-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혼재되어 시장마찰이 확대되고 민간금융의 발전도 제약하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 국책은행에서 민영화된 산은지주회사 체제로 탈바꿈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의 성장 발판 마련

□ 또한, 신설되는 KDF는 민영화되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하여 정책금융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On-lending방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선진형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향후 조치계획

□ 연내에 산은법 개정과 KDF설립법이 국회통과 등을 통해 확정된 후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

-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산은지주 지분(49%) 매각을 완료하고, 임기내 지배지분 매각 및 민영화 완료

4 금융투자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성과

- 선진국 수준의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

※ 8개 증권회사 및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허가

- 자본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차질없는 시행(09.2 시행)을 위하여

- 기존 투자금융업자의 인가·등록갱신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추진완료(08.8.4)
- 자통법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9편 442개 조문)을 조기에 제정(08.8.4)하여 업계 사전준비를 지원

향후 계획

- 기존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의 재인가·재등록업무(450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금융위·금감원 및 관련기관 공동으로 전담 T/F구성·운영, One-stop 서비스로 처리

- 자통법에 따라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협회를 금융투자협회로 통합(09.2.3까지)하고 자율규제 기능 강화

< 주요국 자본시장 현황 >

(07년 말 기준, 조, 개)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장사 (수)	기업공개 규모(신규)	유상증자 규모	채권시장**			
					국채	금융채	회사채	총계
한국	1,051.7	1,767	2.3	14.3	404	377	112	893
미국	18,690.8	5,965	71.9	71.9	5,930	13,267	2,671	21,868
영국	3,613.9	3,307	46.9	30.8	824	393	22	1,239
일본	4,374.8	3,870	0.8	17.2	6,436	841	643	7,967

* 한국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 미국 : NYSE+NASDAQ+AMEX / 일본 : TSE+JASDAQ+OSAKA

** 국채(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통안채, 은행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ABS 포함)

5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실적

- ☐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구축중
 - 다양한 투자·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위해 주식선물(15종목)을 상장(5.6)하고 돈육선물 상장(08.7.21)
 - * 돈육선물의 상장초기 양돈농가 등의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 강화
- ☐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산업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등 상장·퇴출제도 개선(08.9월)
-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편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 펀드상품 유형별로 펀드 판매보수·수수료의 비교공시(자통법시행령) 의무화
 - *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자율적 판매보수·수수료 인하 유도
 -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 절감 유도
 - * 수수료 20% 인하(08.5.13, 인하효과 1,110억원), 수수료 면제(9.22~12.31, 면제효과 1,026억원)

향후 조치계획

- ☐ 자통법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를 단계적(09하반기부터)으로 도입(금년중 개정법안 국회 상정 예정)
- ☐ 중요 불공정사건은 공동조사(금감원·거래소간)를 실시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를 강화하는 등 금년중 불공정거래·공시제도 개선

6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추진 실적

-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추진

* 신정부 출범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자는 약 780만명으로 추정: 신용등급 7~10등급(약 720만명) + 사금융만 이용하는 자(약 57만명)

-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을 통해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출범(3.27일)하여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

* 08년 하반기 6개 복지사업자를 통해 총 200억원 지원

-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성실 이행자* 30.7만명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조기에 삭제(6.2)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활동 및 취업이 가능토록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자

- 대출기관 채무자의 채무재조정과 사금융 채무자의 저금리 환승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지원방안을 발표(7.24)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의 기부 또는 출연금 등 최대한 민간재원을 활용 (약 7,000억원)

향후 조치계획

- '08년 하반기중 신용회복기금 시범사업(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을 실시하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을 개시

- 악성 추심행위 근절 서민금융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채권추심 방지법도 연내 국회 제출 예정(법무부와 공동발의)

7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

주진 실적

□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일반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08.7.1~)

○ 인허가 등 민원종류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민원인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금융당국 관련 민원을 신청

※ 불필요한 방문·탐색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목적

□ 인허가·등록신고 민원인에 대해 SMS, 이메일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진행상황 정보를 제공

○ 각종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업무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유권해석·인허가 상담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회신

< 08.7.1 시스템 개통후 접수·처리 실적('08.9.30 현재) >

구 분	인 허가		등록신고		유 권 해 석	합 계
		상담신청		상담신청		
건 수	317	36	370	34	169	926

향후 조치계획

□ 민원인 등 수요자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보완

※ (예시) 다수의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SMS 서비스 등

□ 유권해석 해석사례를 공개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관리하는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 노력을 추진

8] 적극적인 금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금융 위상 제고

추진 실적

□ 금융위원장은 美國 FRB·SEC(4.17~18), 英國 FSA(5.30) 등 전세계 금융당국과의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구축

○ 또한, 증권분야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 및 정보교환 확대 등을 결정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APRC) 의장으로 선출

※ IOSCO APRC 의장국 진출로 국제금융계에서의 한국정부의 발언권 제고 기대

□ 지난 '08.5월 대통령 訪中 후속조치로 금융위원장 중국방문 (6.12~13)시 양국 금융당국간 금융협력방안 구체화

○ 중국 해외투자적격 은행(QDII)*의 對韓 투자를 허용하는 협약체결 및 한국 기관투자자의 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시장 자격(QFII**) 승인

* QDII(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의 기관투자자 중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회사에 대하여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

**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중국 내국인 거래전용의 A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외국 기관투자자를 의미

- 중국 적격 은행의 투자허용으로 중국 자본자본 총유입액은 향후 2~3년간 60억달러로 전망(국제금융센터 추정)되고, QFII 승인(미래에셋 : 8.1일)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다양화

향후 조치계획

□ IOSCO APRC회의(10월, 발리) 주관 등 금융외교 적극 추진

□ 중국 현지에서 중국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IR)를 개최하여 적격 은행 유치활동을 전개

○ 금융당국간 정례회담 등을 통해서 한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확대에 대한 중국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9] 에그몽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투명한 금융거래 기틀 확립

추진 실적

-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테러자금조달·부패 방지를 위한 FIU의 역할을 제고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기틀 확립

- * 10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전세계 자금세탁방지기구(FIU) 협의체
- * 2008.5.25(일)~5.29(목),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 91개국·262명 참가, 아시아 최초 개최, '역대 가장 성공적 총회' 평가(그룹 의장)

①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의지 대내외 천명

- * 총리님의 개회식 참석과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의지를 천명

②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 * 금융위원장, FIU 원장 등의 언론기고(동아, 한경, 매경),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제고

③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IT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홍보

- * 터키, 싱가포르 등이 공유 요청, 자금세탁방지 IT시스템 견학

④ 우리나라의 FATF가입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의 지지 확보 및 문화·사교행사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향후 조치계획

- 에그몽 총회 개최를 통해 형성된 국가 이미지를 활용,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

- *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 11월 중 우리나라에 대한 가입심사 예정

① 은행소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추진 현황**

① 현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와 관련하여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금융감독기능의 강화를 추진

①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②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② 증권·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면서, 시너지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추진

③ 동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입안과정에서부터 관련 전문가·교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중

향후 계획

□ 시행방법·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조만간 확정된 후 금년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② 신중 금융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창출기반 마련

추진 현황

- 그동안 신중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시장 창출 기반 마련 추진
 -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및 CD, ATM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6.26발표)
 -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서로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6.26발표)
 -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범위를 확대* 추진(5.23발표)

*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향후 계획

- 향후 소규모 특화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등 관련규정을 정비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 금융기관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 정비

③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추진 현황

-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유도
 -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창업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中企자금지원방안*(6.11)의 차질 없는 추진
 - * 합성CDO 및 유동화회사 보증도입, 펀드신용평가제도 도입 등
- ☐ 중소기업 지원TF를 구성(08.5월)·운영하여 개편방안 논의
 - KDF 신설 및 보증부문 운영방안, 자본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개선의 일부 내용을 발표
 - “산은 민영화 및 KDF 신설방안(6.2)”에서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기관인 KDF의 설립·운영방안을 마련
 -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6.11)”에서 4대 부문 18개 과제를 설정·발표하고 세부내용을 추진 중
 - KDF 신설 등에 따른 신·기보 등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을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7.28, 8.12)

향후 계획

- ☐ 추후 공개토론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을 확정
 - ※ 필요시 「신·기보법 개정안」 등 연내 국회 제출 추진
- ☐ 또한,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4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현황

- ☐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를 조성을 추진
- ☐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법을 제정·시행('08.3)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
 - 두차례(6.30, 7.28) 회의를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의 기본 계획안을 심의 및 금융중심지 평가기준 등 마련 지자체 통지
- ☐ '08.9월 설립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관련 인·허가등 애로사항에 대해 One-stop Service 제공

향후 계획

- ☐ 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08.11월중)하면 금년중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계획
 - 지역 선정은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가능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계획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평가단을 구성하고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08.11월 지자체 신청전)
- ☐ 금융회사의 금융클러스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내 입주 금융회사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 시행('09년이후)
 - 금융중심지의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클러스터 내의 생활·경영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

5 금융개혁법안의 성공적인 입법화 추진

추진 현황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 현재 상반기중 마련한 개혁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금융입법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

향후 계획

- '08년 하반기중 21개 관련 법안 마련 후 국회 제출 계획
 - 제정 : 한국개발펀드법(KDF 조직 및 업무 등), 불법추심방지법(심야방문 및 전화 금지 등),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전자증권제도 도입 등) 등 3개
 - 개정 : 금융지주회사법(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한국산업은행법(대외채무 지급보증 근거 등), 은행법(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등 18개

<입법추진 대상 21개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소기업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개발펀드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자산유통화법,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불법추심방지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6.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불임 참조

〈공정시장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일정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 *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05.6.30	
		<input type="checkbox"/> 회계 부정행위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추가 <input type="checkbox"/>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인 자산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외부감사대상에 포함	2006.3.10	
		<input type="checkbox"/> 사전예방적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 리감리업무를 직접 수행		
		<input type="checkbox"/>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부담 완화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발행인으로 부터 받은 분담금 중 한국회계기준 원에 지원하는 비율을 그 분담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 정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의무적 립비율을 지원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	2007.4.27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 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2.29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구정비*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 주권 상장법인	2008.7.29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외하고 주석을 추가 <input type="checkbox"/> 지배·종속의 관계범위를 국제회계 기준과 일치 <input type="checkbox"/> 외부감사대상 자산기준 상향조정 ○ 7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단축 ○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정기주총 4주전	입 법 예고중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규모가 큰 금융기관(8천억원 이상)에 대하여 일부 대형 회계법인만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 <input type="checkbox"/>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건별 기재사항을 총애만 기재토록 하는 등 작성부담을 완화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6.3.10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취득 소명 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제한의 완화 ○ 감사 또는 증명업무의 독립성과 관련이 없는 채권·채무관계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정 ○ 감사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감사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당해회사의 자산매도실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2006.3.10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input type="checkbox"/>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2006.6.12	
		<input type="checkbox"/>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외부기관 대체 시험(토플·토익·텡스)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처리되는 바, ○ 2006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험 형태인 토플 IBT(Internet Based Test) 시험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토플 시험의 실시방식에 IBT시험을 추가	2007.2.12	
		<input type="checkbox"/>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2007.3.27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2.29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정비	2008.7.29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2006.3.10.)됨에 따라 ○ 동 시행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의 제출 방법을 정함	2006.3.10	
		<input type="checkbox"/>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2006.7.5	
		<input type="checkbox"/> 정부조직 개편(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 금융위원회)에 따른 조문정비	2008.3.3	

〈글로벌금융과〉

구 분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령	금융중심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 차등을 규정한 법 령으로 금융중심 지의 지정절차, 금 융중심지추진위원 회의 구성 및 운 영방법 등에 관해 규정	2008.3.22 시행	

〈금융정책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담금 산정방법의 개선(영 제12조제1항) ○분담금의 한도 및 반환금액의 산정방법 개편(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예산 및 결산 공시제도 마련(영 제12조의2 신설) 	2007.5.16	
개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7.29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06.3.29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07.10.23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으로서 자산총액 기준 신설(영 제3조의4 신설)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설정요건 신설(영 제5조의4부터 제5 	2007.11.12	

		조의7까지 신설)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요건 구체화(영 제13조 제1항제4호나목 신설, 영 제15조 제1항제1호 등)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2.29	
개정	금융지주회사 법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08.7.29	
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할 목 적으로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8572 호, 2007. 8. 3. 공 포, 2007. 11. 4 시 행)됨에 따라 부실 징후기업의 구조조 정을 주도하는 채 권금융기관의 범위 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 및 한국수출 보험공사 등을 추 가하고, 주채권은 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하려 는 경우에는 회의	2007.10.31	

		<p>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하도록 하며, 채권 금융기관 간의 이 견 조정을 위하여 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p>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p>○ 금융 위원 회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2008.2.29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령	<p>○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2008.7.29	

보험업법령 최근 3년간 개정현황

〈보험업법 시행령〉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가. 보험계약의 청약자 가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 험회사의 의무사항 나. 보험회사의 자 회사 범위 확대 다. 보험회사 주요 출자자 요건의 합리적 보완	2007.8.17	
"	"	가. 사외이사 및 감사 위원의 요건 신설 나. 대주주가 발행 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 조치 사유 신설	2008.1.20	
"	"	2008년 4월 1일부 터 금융기관보험대 리점 등에서 개인 보장성 보험, 자동 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삭제 등	2008.3.28	
"	"	가. 보험회사 업무 범위의 확대 나.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 다. 자산·손익 구분 계리 방식 마련	2008.6.15	

〈보험업법 시행규칙〉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61호, 2005. 3.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종전에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인·허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05.3.31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	2008.3.3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2008.8.4	

〈산업금융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완화 - 100분의 15이하→100분의 20이하 ○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의 예외인정범위 확대 - 부품·소재전문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 결산순이익금의 현물배당 방법 규정 	'06. 1. 1	
개정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대한 여신한도를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 30으로 완화 	'06. 6.22	
개정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기금관리기본법→국가재정법 	'06.12.29	
개정(안) 입법예고	기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15% → 금융위가 정한 요건 충족 및 금융위 승인시 은행 자기자본의 30% 	'08. 9.12 (입법예고)	

구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타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05. 8.26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비율 상향 조정 및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시 차등요율 적용	'06. 1.24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하는 것을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	'06. 2.22	
개정	신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대출금의 명확화 및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 중 기준요율을 하향조정	'07. 7. 1	
개정	기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대출금의 명확화 및 출연금액 개정	'07. 6. 4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금융기관(농협·수협중앙회) 출연요율 상향 조정	'06. 1.24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출연대상 금융기관 확대 (농·수·산림 회원조합 출연개시)	'06.10. 1	
개정	농신보법 시행규칙	○ 농협·수협중앙회 출연대상 대출금 조정 및 출연요율 상향 조정	'07. 7. 1	

〈은행과〉

구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 일자 (폐지 일자)	기 타
개정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추심이체의 경우 출금 동의의 방법을 추가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08.7.9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회사·증권금융 회사·선물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 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 하여 증권업 등 고유업무의 부수업무 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자자금이체업 무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은행 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 모하고 증권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려는 것임	07.7.1	
	전자금융거래 법 시행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 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 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 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 사항을 마련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07.1.1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대상연령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및 보증요율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7.4.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2로 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요율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0.125퍼센트를 적용하되, 그 밖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연 0.260퍼센트를 적용하고, 차등요율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	07.5.3	

		<p>위변제받는 금액이 출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연 ± 0.04퍼센트 이내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p>		
--	--	--	--	--

〈자본시장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상장법인의 우리 사주조합에 관한 요건을 근로자복지 기본법과 일 원화	'05.12.9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증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제 도의 도입에 따른 승인대 상, 승인절 차 등을 규 정	'06.1.27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상장법 인의 임직원 이 금감위로 부터 해임권 고, 고발 또 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스톡옵 션 취소 근 거 마련	'06.3.30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금감원이 증권사 또는 유가증 권 발행인으 로부터 징수 하는 분담금 의 한도, 초	'07.5.16	

		과분의 처리 등을 규정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전자자금이체업무 를 증권사의 업무로 명시	'07.6.28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령	대주주가 증권사 에게 위법행 위를 요구하 거나 부당한 조건의 거래 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등 대 주주의 부당 행위를 금지	'08.1.18	
개정	증권거래법시 행규칙	정부·예보로부터 취득한 자사 주를 대상으 로 교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을 배제한 것 외에, 기타 용어 및 규 정체계 정비 등으로서 특 기 사항 없 음	'06.11.8	
개정	선물거래법시 행령	현물시장에서 이 득을 얻기 위해 선물시 장에서 시세 조종을 하는 역방향 시세 조종을 불공	'07.12.20	

		정 거래 행 위 로 명시하는 등 규제 정 비		
개정	선물거래법시 행령	대주주가 선물업 자에게 위법 행위를 요구 하거나 부당 한 조건의 거래를 요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주주의 부 당행위를 금 지	'08.1.18	
개정	선물거래법시 행령	일반상품 선물거 래의 대량보 유 보고기 준, 보고사 항, 보고시 한 등을 규 정	'08.4.30	

〈자산운용과〉

구 분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개정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령 (‘06.1.27)	<input type="checkbox"/>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 주주의 범위 및 요건 신설 등	‘06.1.30
	상동(‘06.2.9)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06.2.9
	상동(‘06.4.27)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 도입 등	‘06.4.27
	상동(‘06.12.29)	<input type="checkbox"/>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7.1.1
	상동(‘07.6.28)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확대	‘06.7.4
	상동(‘07.12.28)	<input type="checkbox"/>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위한 요건을 완화 등	‘07.12.28
	상동 (08.1.18)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08.1.20
	상동(‘08.2.2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2.29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규칙 (‘06.5.9)	<input type="checkbox"/>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 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국내대리 인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 정함	‘06.5.9
	상동(‘08.1.8)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외국에서 설립한 간접투자기구(Mutual Fund)의 임원 겸직 허용 등	‘08.1.8
	상동(‘08.3.3)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3.3
	신탁업법 시행 령(05.11.25)	<input type="checkbox"/>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이 신탁 업무를 겸영시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배제 적용할 근거 마련	‘05.11.25
	상동(‘08.2.29)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8.2.29
폐지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자통법시행에 따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폐지	‘09.2.4
	간접투자자산운 용법 시행규칙	상 동	‘09.2.4
	신탁업법 시행령	상 동	‘09.2.4

〈중소서민금융과〉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법령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폐지일자)	기 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여신전문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확대	2008.1.18.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의 활성화와 자본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	2006.5.3.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2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한도를 조정	2008.1.18.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 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 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 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05.5.26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평가업자간의 경쟁이 촉진 되고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 록 신용평가업의 진입요건을 완 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 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의 조회방 법을 다양화	2006.7.1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서면이나 공인전자 서명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신 용카드 비밀번호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동의하는 방식 등을 추가	2008.3.22	
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 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 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 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 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05.5.27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p>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이나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매입 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조합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조합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으로 중앙회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을 2007년 11월 4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중앙회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p>	2007.11.22.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p>신협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이 지급불능 상태로 되는 경우에는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인 5000만원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 별단예금을 보유하고 있는</p>	2008.6.25.	

		중앙회 타 회계에 대하여도 신탁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도록 함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523호, 2005. 5. 31.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5.9.1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2007.10.4.	
개정	대부업법시행령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00호, 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대부업 등록 및 등록갱신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2008.3.28.	

7.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실태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태

지시일자	지시제목	이행실태
2008.3.3	신기술 담보제도 개선 관련	정상추진
2008.3.10	예산 10% 절감	정상추진
2008.3.10	규제개혁의 조속한 추진	정상추진
2008.3.11	금년도 사업 조기발주 추진	정상추진
2008.3.31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정상추진
2008.3.31	금융허브 관련	정상추진
2008.3.31	개혁입법 추진관련	정상추진
2008.3.31	금융기관 감사 관련	정상추진
2008.6.5	금융위원회 인력관련 개선사항 검토	정상추진
2008.9.2	9월 위기설 관련	정상추진
2008.9.16	보험사 주택재개발 참여관련	정상추진

8. 최근 3년간 민원업무 처리 및 조치 내역

□ '06.1.1일 이후 '08.8.31일까지 舊재정경제부·舊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총4690건의 민원 처리를 완료

※ 舊재정경제부 2673건(57%), 舊금융감독위원회 316건(7%), 금융위원회 1701건(36%) 처리 완료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연 도	기 관	건 의	상담안내	질 의	청 원	소 계
'06	재경부	32건	256건	259건	655건	1202건
	금감위	9건	26건	16건	64건	115건
'07	재경부	117건	357건	276건	548건	1298건
	금감위	12건	35건	15건	108건	170건
'08.1~2	재경부	25건	8건	73건	67건	173건
	금감위	1건	5건	9건	16건	31건
'08.3~8	금융위	301건	123건	286건	991건	1701건
총 계		497건	810건	934건	2449건	4690건

김 용 태 의원

1. 각 부처간 문서 수발신 대장(2006.1.1.- 2008. 8.31.)과 위원장 결재문서 목록(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터 현재)

☐ 금융위원회 기록물등록대장 별첨(별도제출)

☐ 위원장 결재문서 목록 별첨(별도제출)

2. 2006.1.1~2008.7.31 민원 접수현황과 내용, 처리결과 (관련 부처로 이첩시 이첩일자, 이첩부처, 이첩내용 포함)

□ '06.1.1일 이후 '08.8.31일까지 舊재정경제부·舊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총4690건의 민원 처리를 완료

※ 舊재정경제부 2673건(57%), 舊금융감독위원회 316건(7%), 금융위원회 1701건(36%) 처리 완료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연 도	기 관	건 의	상담안내	질 의	청 원	소 계
'06	재경부	32건	256건	259건	655건	1202건
	금감위	9건	26건	16건	64건	115건
'07	재경부	117건	357건	276건	548건	1298건
	금감위	12건	35건	15건	108건	170건
'08.1~2	재경부	25건	8건	73건	67건	173건
	금감위	1건	5건	9건	16건	31건
'08.3~8	금융위	301건	123건	286건	991건	1701건
총 계		497건	810건	934건	2449건	4690건

□ 기타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중 타 기관 담당 민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업무담당 기관에 재분류·이첩

3.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사업 관련 대부업체와의 협의 상황

- 현재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들과 협의 중
 - 대부업체들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사업설명회 ('08.8.29, '08.9.18)를 개최하였고
 - 현재 '대부업체 협의회'와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 중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부업체 및 이들로 부터 매입하게 될 채권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협의회가 완료되어야 확정될 예정

4.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사업 관련 대부업체와의 협의 상황

- 현재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들과 협의 중
 - 대부업체들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사업설명회 ('08.8.29, '08.9.18)를 개최하였고
 - 현재 '대부업체 협의회'와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 중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부업체 및 이들로 부터 매입하게 될 채권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협의회가 완료되어야 확정될 예정

5. 증권선물거래소 상품선물관련 자료(양돈상품 등록 관련 방침 및 계획서, 상품선물 거래량 자료, 상품선물거래 활성화 대책 및 계획, 향후 상품선물 등록계획)

1) 최근 양돈 상품(돈육선물) 상장 관련 방침 및 계획서

□ 돈육선물 상장 추진 경과

- 2005. 8 : 선물업계(협회, NH투자선물) 돈육선물 도입 요구
- 2005. 12 : 돈육선물 상장타당성 외부연구용역 발주
- 2006. 6 : 돈육선물 상품명세 설계(안) 마련
- 2007. 2 : 양돈농가 대상 갤럽 여론조사 실시(첨부1 참조)
- 2008. 6. 27 : 거래소 업무규정 등 규정개정(안) 승인
- 2008. 7. 21 : 돈육선물 상장

□ 돈육선물 상장 추진 배경

- 국내 양돈산업 생산규모는 연간 3조 6천억원으로서 전체 축산업의 30% 비중을 차지

※ 돼지가격의 연간변동성은 '07년 기준으로 27.2%(전국평균)

○ 돼지는 계절적 수요 및 질병 등에 의한 가격등락이 심해
- 업계 및 학계에서 꾸준히 헤지 상품선물도입 필요성 제기

- 돈육선물 상장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에서도 시장규모,
가격공신력 등에서 상장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 돈육선물 상장 기대 효과

○ 돈육선물은 양돈시장 참가자에게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수단을 제공

- (양돈농가) 돈육선물을 이용하여 돈육가격변동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
- (돈육가공업자) 선물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이용하여 재료
구매시기 및 생산량 조절 등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
- (일반소비자) 돈가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
안정적인 가격으로 돈육 소비가 가능하게 되어 물가
안정에 기여
- (자본시장) 파생상품시장을 일반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업 이외의 산업에 대한 헤지수단 제공으로 자본
시장 선진화

2) 상품선물거래의 거래량 자료

- ☐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선물은 금선물('99.4.23)과
 돈육선물('08.7.21)이 있음

< 상품선물 거래 현황 >

상 품 명	월평균	일평균	최근 2개월**
돈육선물	2,272	145	6,815
금선물	804*	39	166

* 금선물의 경우 최근 5년간 자료('03.8 ~ '08.8)

** 돈육선물 상장일자 이후 거래량 누적(7.21~9.26)

3) 상품선물거래 활성화 대책 및 계획

돈육선물

☐ 거래활성화 대책 및 계획

o 돈육선물 교육 및 홍보강화

- 양돈업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이 선물거래 위험성등을
충분히 알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강화

- 축산관련 전문매체에 대한 광고 및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홍보

- * 육류유통업체 및 축산물 공판장 순회설명회
- * 양돈농가 방문교육(양돈협회 지부 및 지역축협조합)

○ 선물회사의 마케팅 강화

- 선물회사는 9.22(월)부터 2개월간 돈육선물 실전투자 대회를 개최 중이며 추가적인 돈육선물 투자정보 제공확대를 추진

금선물

□ 거래 활성화 대책

○ 금선물 수요자 대상 유용성 홍보 및 교육 강화

- 홍보책자 발간, 금선물 관련 교육 및 귀금속 관련 매체 광고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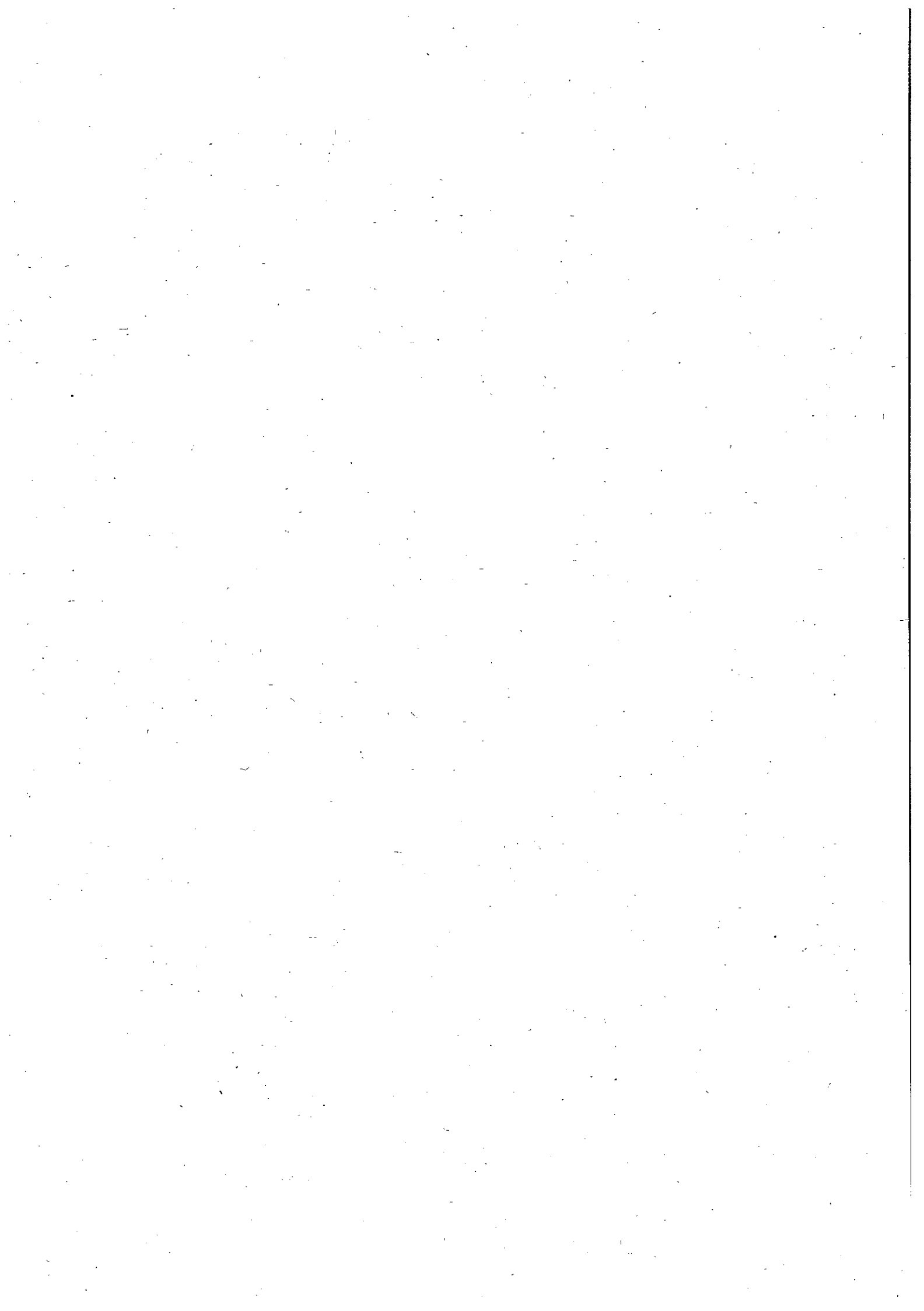
○ 자통법 시행 후 증권회사 등 신규회원사 대상 교육 강화

○ 금 현물시장 거래양성화 및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 유통관리기구」 설립* 등 추진 필요

*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 발표(재정부·지경부·예산처·국세청 등, 2007.7.16)

4) 향후 상품선물 상장 계획

- ☐ '09년 중 석유제품선물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상품선물의 상장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박 상 돈 의원

1. 최근 5년간 연도별 여성, 보훈대상자, 장애직원의 명수 및 비율 (고용의무 목표 미달시 부담금 납부 현황)

□ 균형인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9
정원		71	74	74	81	205
여성	인원	7	10	10	12	28
	비율	9.9	13.5	13.5	14.8	13.7
장애인	인원	1	1	2	2	7
	비율	1.4	1.7	2.7	2.5	3.4

* 보훈대상자의 기능직 채용인원은 없음

○ 부담금 납부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자료

☐ 직급별 정·현원 (운영정원 기준)

(단위 : 명, 08.9.19 현재)

구분	정무직	고위 공무원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경찰	연구 사	계
정원	2	10	5	14	17	90	43	2	14	7	1	205
현원	2	9	3	17	20	94	44	0	16	7	1	213
결원	0	△1	△2	3	3	4	1	△2	2	0	0	8

*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 비공무원 현황(계약직원 등)

○ 정규직 : 12명, 비정규직 : 22명

3. 직급별 급여, 성과급 현황

□ 금융위 직원 직급별 급여 현황(2008년 9월 기준)

(단위 : 천원)

직종	세부직종	계급	평균보수월액
합계			3,748
정무직	소계		9,207
		장관급	9,423
		차관급	8,992
일반직	소계		3,753
	1급내지9급	소계	3,758
		고위공무원	7,243
		3.4급	5,851
		4급	5,158
		4.5급	3,914
		5급	3,505
		6급	2,695
		7급	2,164
		9급	1,055
	연구직	소계	2,753
		연구사	2,753
별정직	소계		6,577
		고위공무원	7,685
		5급상당	3,254
계약직	소계		3,686
		5호	4,151
		6호	2,910
		7호	2,142
기능직	소계		2,330
		기능8급	2,703
		기능9급	2,154
		기능10급	1,644

□ 직급별 성과급 현황(2008년 전체)

(단위 : 원)

직급	금액	대상자수
기능10급 운전원	2,027,360	1
기능8급 사무원	11,776,440	4
기능8급 운전원	2,415,680	1
서기관	25,604,240	7
서기관 팀장	2,560,420	1
전산사무관	2,218,820	1
통계주사	1,601,070	1
행정사무관	130,729,460	37
행정주사	24,324,150	8
행정주사보	23,467,170	9

4. 08년 임직원의 해외출장/연수 경비내역

□ 2008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출 장 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집행액
1. Global Public Policy Symposium 참석	뉴욕, LA	정완규과장	1.13~19	3,511
2. 'Emerged Market 증권감독자 최고회의' 참석 및 FRB, OCC등 참석	뉴욕, 워싱턴	이승우 부위원장의외 1	2.7~14	11,569
3. 제13차 한-캐나다 FTA 금융협상 참석	캐나다	이종화서기관	3.25~29	2,682
4. 제10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석	뉴델리	이종화서기관	4.1~4.4	1,768
5. 제4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	노르웨이	김경률주무관	4.7~13	3,126
6. VIP 미국 순방 수행출장	뉴욕, 워싱턴	전광우 위원장의외 4	4.15~4.21	16,874
7. 제3차 아주지역보험감독자회의 참석	싱가포르	윤상기사무관	4.23~26	1,331
8. WTO DDA 및 제7차 한-EU FTA 협상 참석	제네바,브뤼셀	이종화서기관	5.5~5.15	3,949
9. 제33차 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APRC 의장 출마	파리, 런던	전광우 위원장의외 6	5.25~5.30	48,202
10. 방중 정상회담 지원	베이징,칭다오	이명호과장	5.27~30	1,457
11. 한·영 미래포럼 '참석	런던	김용환 상임위원의외 1	6.1~5	8,547
12.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국 금융당국과의 회담	베이징,상하이	전광우 위원장의외 6	6.12~13	8,293
소 계				111,309

(단위 : 천원)

출 장 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집행액
13.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뉴욕	임승태 사무처장	6.17~6.22	2,447
14. Asian Banking and Finance Conference 참석	샌프란시스코	박재훈 사무관	6.17~22	3,268
15.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여비 지급	런던, 프랑크푸르트	이종구 상임위원	6.18~6.22	1,988
16. OECD 보험 및 사적연금회의 참석	파리	유재훈 사무관	6.25~29	1042
17. 한-EU FTA 서비스분과 회의참석	홍콩	이종화 서기관	6.27~6.29	1,226
18. 제11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여	뉴델리	오화세 사무관	7.29~7.31	2,798
19.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룩셈부르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김현수 주무관	8.24~9.2	4,205
20.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전태원 사무관	8.25~9.1	3,059
21. 주요국 금융산업육성 및 금융산업 선진화노력 현지조사	호주, 싱가포르, 홍콩	김건영 사무관	8.23~8.30	1,399
22. 증권연수원의 GCMA 프로그램 해외연수 참가	홍콩	오유정 사무관	8.28~9.5	3,146
23. 영국 ICMA Centre의 Investment Banking Program 참석	영국	김선문 사무관	8.30~9.7	3,857
소 계				28,435

5.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현황

□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3	672	-	-	-	672	600	-	72
2004	450	-	-	-	450	401	-	49
2005	475	-	-	-	457	383	-	92
2006	362	-	-	-	362	330	-	32
2007	324	-	-	-	324	324	-	-
2008 (9월말 현재)	417*	-	49**	-	368	256	-	112

* '08. 2. 29 정부조직개편 후 금융위로 이체된 관서업무비 예산액

** 예산절감액 49백만원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이전비(시설비)로 전용

6.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7. 기업은행, 우리은행 민영화 계획

- 정부는 원칙적으로 既 발표된 민영화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되, 금융시장 불안전성 등 매각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부소유 은행을 민영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은행) 금년중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소수지분(22.97%) 매각을 우선추진하고 09년부터 지배지분(50%) 매각 착수
- (산업은행) 既 발표한 민영화 방안에 따라 09~10년까지 소수지분(49%)을 매각하고, 2012년까지 지배지분(51%)을 매각
- (기업은행) 소수지분(15.7%)을 08년~10년 사이에 매각하고, 지배지분(51%) 매각은 그 이후 추진할 예정

8.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 관련 계획

- 신·기보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 추후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통합여부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9. 금융공기업(국책은행)의 IB은행으로의 계획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IB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8.6.2 민영화방안 발표)

가. 필요성

□ 지속적인 경제성장, 경제 글로벌화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IB산업의 중요도와 함께 IB사업기회가 증대

* 특히, 동북아지역은 빠른 발전과 함께 IB 사업기회가 더욱 커질 것이며 사업기회 선점이 중요

○ 이미 日, 中 등은 동북아 금융중심지 선점을 위하여 투자은행 육성, 국영은행의 민영화 등을 야심 차게 추진 중

- 한국도 IB분야에 既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산은 등을 활용, 고부가가치 금융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

□ 주식모집·매출, 기업공개(IPO), M&A Deal 등 국내 고부가가치 기업금융업무의 외국계 IB의 시장지배력이 심각한 수준

* '08년 국내 주식관련 투자은행(IB) 시장의 외국계 IB 점유율은 76.5%

나. 육성 방안

□ 국내은행 중 발전 가능성면에서 산은의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 기업금융전문은행(CB: Corporate Bank)으로서의 역량 보유

- 산은은 설립목적에 부응하여 장기설비자금 공급을 주도

* '07년말 시설자금 대출 규모(잔액기준)는 25.9조원으로 국내시장 전체 시설자금의 23.8% 점유

○ DCM*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 IB 노하우 보유

* DCM(Debt Capital Market) : PF, 신디케이트론 주선, M&A, 파생금융 등

- '95년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하여 PF방식에 의한 금융주선 등 국내 PF시장 선도

* PF(Project Financing)시장 점유율은 '06년 32.5%로 선도적 지위 유지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M&A업무를 적극 추진하면서 대형 외국투자은행에 필적할만한 경쟁력 보유

* '06년 국내 M&A시장에서 147억달러 주선으로 국내시장 1위 차지

- 기업금융 관련 Risk 헤지 등을 위한 파생상품업무 강화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 유지

* '06년도 3년 연속 Asia Risk誌로부터 국내 최우수 파생금융 기관으로 선정

□ 산은이 보유한 역량과 국내 선도 증권사인 대우증권과의 결합시 경쟁력은 배가

- 산은의 강점인 기업고객 네트워크, DCM(Debt Capital Market)과 대우증권의 강점인 ECM(Equity Capital Market)을 결합한 CIB(Corporate & Investment Bank) 체제를 구축시 국내 수위의 경쟁력 확보 가능

< 부문별 국내 IB시장 점유율 순위(07년) >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제여신 주선	산은	우리은행	Calyon	국민은행	BNP Paribas
PF주선(아태지역)	ICICI Bank	산은	국민은행	Bank of China	China Const- -ruction Bank
파생금융상품 거래잔액	SC제일은행	산은	한국씨티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M&A자문	Citi group	UBS	HSBC	Goldman Sachs	Credit Suisse
국내 회사채 주선	한국 투자증권	굿모닝 신한증권	우리 투자증권	대우증권	한누리 투자증권
국내 IPO	한국 투자증권	Merrill Lynch	굿모닝 신한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 산은지주사의 CIB 발전 전략

- ◇ 産銀을 오랜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주사 형태의 CIB 체제로 전환하고 국내외 M&A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확보

☞ 신흥 글로벌IB 사례를 감안할 때,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변환”(Quick & Strategic Turnaround) 여부가 성공적 투자은행화의 관건

□ (1단계) 투자은행으로 신속하게 전환한 후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강점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민영화이행기)

- 민영화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유치 방안을 활용하여 글로벌 IB의 노하우 및 경영기법을 전수
- 지주회사 전환, 사업구조 재편, 국내외 M&A 등을 통해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은행(CIB) 체제 구축
-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PF 업무, 파생거래, Cross-Border M&A 부분의 역내 진출 추진

□ (2단계) 핵심역량의 확산과 Global 경쟁력 확보(민영화이후)

- M&A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해외 수익 비중을 확대
- 국내 소매금융전문 은행과 차별화된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업무를 확대하는 “Blue Ocean”전략 추진

<참고> 産銀이 가진 주요 IB Track Record

PF	95년 국내 최초 PF금융 취급 07년 PF주선 SOC 민간투자사업부문 세계 1위, Dealogic社 04년~06년 3년연속 「Deal of the Year」 수상, Euromoney誌
파생상품	06년 국내은행 최초 상품파생업무 취급 06년 국내 파생상품 거래잔액 1위 06년~07년 2년 연속 아시아 10대 파생금융기관, Asia Risk誌
M&A	07년 Cross-Border M&A 성공(두산인프라코어의 밥캣인수) 06년 국내 M&A 주간사 점유율 1위, Bloomberg 05년 Best M&A Deal(하이트맥주의 친로인수), Finance Asia誌
PEF	05년 당시 최대규모 PEF설립(3,000억원) 06년 PEF 제2호(4,000억원), 07년 벤처M&A펀드(300억원) 설립
Syndication	07년 신디론 주간사 점유율 1위, Bloomberg 05년~07년 3년연속 외화신디론 주간사 점유율 1위, Bloomberg 06년 「South Korea Loan House」 선정, IFR Asia誌
Bond Underwriting · Borrowing	04년~06년 3년연속 「Best Borrower of Korea」, Finance Asia誌 05년~06년 2년연속 외자조달·주선 부문 「Best Quasi Sovereign」, IFR Asia誌 05년 「South Korea Bond House」, IFR Asia誌
벤처투자	98년 은행권 최초 벤처투자 취급

10. 환율정책 관련 기획재정부와 수발신된 공문서 사본

☐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수발신된 공문서 내역
없음

11. 서민금융정책 현황 및 계획

1. 기본방향

- ☐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
- ☐ 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서민 피해 예방
- ☐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

2.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1)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제고

-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신규업무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활성화 유도
 -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자기앞 수표 발행 허용 ('08.4),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 ('09 상반기 예정)
-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및 서민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상정 예정)

(2)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대부업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감독 강화

- 관계부처가 '대부업 정책협의회' 운영 중
- 대부업자의 부당·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 추진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

□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 추진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

(3)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성실 이행자(31만명)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기록을 삭제하여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08.6.2)
- 사금융 실태조사('08.3월~5월)를 토대로 「금융소외자지원 종합대책(7.24)」을 마련
- 신용회복기금을 설치(9.2일)하여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재조정하고

-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론)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

* '08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09년부터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

-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소외자의 자활능력 개발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 및 간이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 이외에도 소액서민금융재단('08.4)을 통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

12.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

용역자료, 지원액, 지원방안 및 절차 등 상세
자료

□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 별첨 보도자료 참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7.24 (목) 10:00부터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책임자	이상현 과장 (2156-9850)	담당자	유영준 서기관 (2156-9851)	
배포일	2008. 7. 24.(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8 매

제 목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I. 추진 배경

□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뒤쳐진 계층이 발생

*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감소 ⇒ 금융소외계층 확대 및 대부시장의 과도한 성장 ⇒ 고금리·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증가

○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는 사금융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자의 행태, 시장규모, 사금융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 등을 파악하고

○ 이를 토대로 금번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저신용층 (신용등급 7~10등급, '08.5월말 현재) : 720만명 수준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 (만명)

- ('05말) 297.5 → ('06말) 279.6 → ('07말) 258.3 → ('08.5) 248.3

II.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반영

□ 금융이용자의 사금융 이용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08.3월 ~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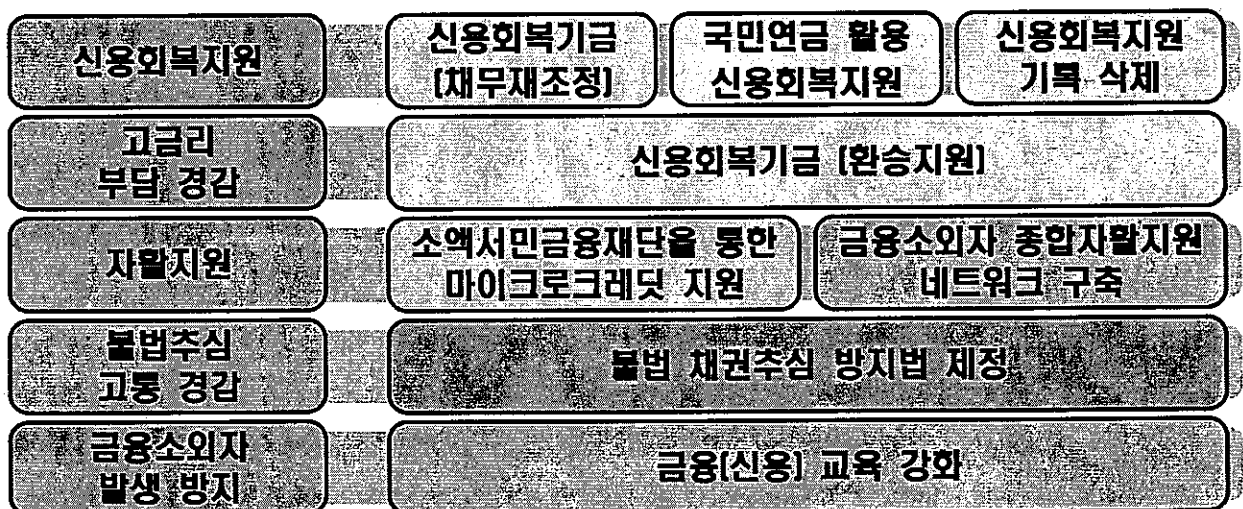
<클론 대책의 토대가 될 주요 조사내용>

- ①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대부업체 이용 128만명, 사인간 거래 61만명)
-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 (대부업체 대출규모 : 10.0조원)
- ③ (채무 규모)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대부업체의 경우 약 783만원,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약 2,341만원
- ④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연 72.2%
* 무등록 대부업체 및 사인간 거래 포함
- ⑤ (상환의지) 사금융 이용자들의 84.0%는 자력 또는 주변사람의 도움 등을 통해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응답
- ⑥ (요구하는 정부대책)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 '생계비 대출', '불법채권 추심의 최소화', '취업기회의 제공' 순으로 나타남

Ⅲ.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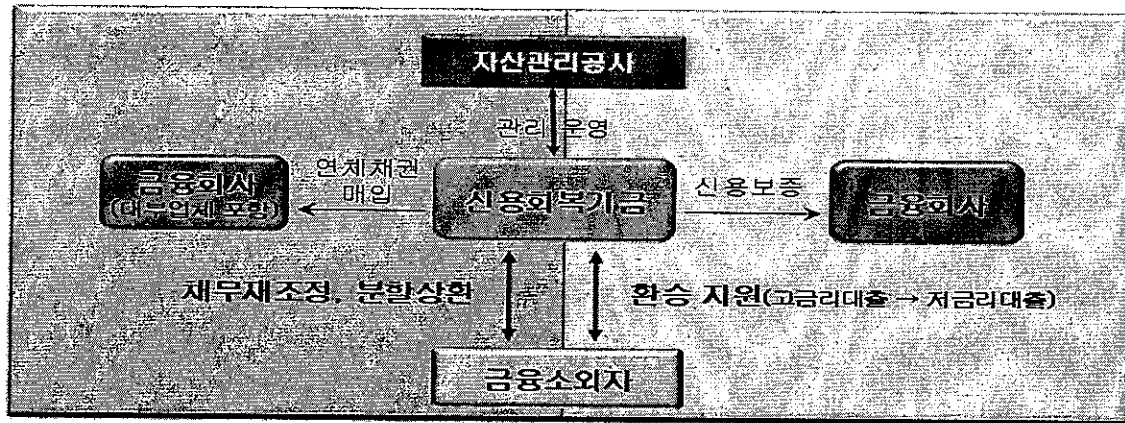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의 3대 원칙]

- 1) 원칙적으로 원금 탕감 없이 이자만 감면
- 2)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 (재정부담 최소화)
- 3) 금융소외자의 재활기회 제공을 기본으로 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



1. 신용회복기금 설치 ('08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09년중 지원규모 확대)

(1) 지원 방안



①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대출회사(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재조정

- (대상 규모)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3천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07.12말 기준)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함

* '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운용 방식) 원칙적으로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장기 분할 상환

* '신용회복지원증'으로 즉시 등록하되 2년간 성실상환시 동 기록 삭제

②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론)을 지원

- (대상 규모)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금리가 30% 이상인 3천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함

* '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환승지원 실시

- (운용 방식) 금융회사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 보증을 실시하되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2) 재원 조달 방안

-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토록 추진
- ☐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되기 전인 '08년 중에는 KAMCO 자체 자금 2,000억원*을 대여 형태로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정부 소유 은행 배분금이 투입되는 대로 우선 상환

(3) 기대효과

- ☐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및 환승 지원으로 대상자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08년에는 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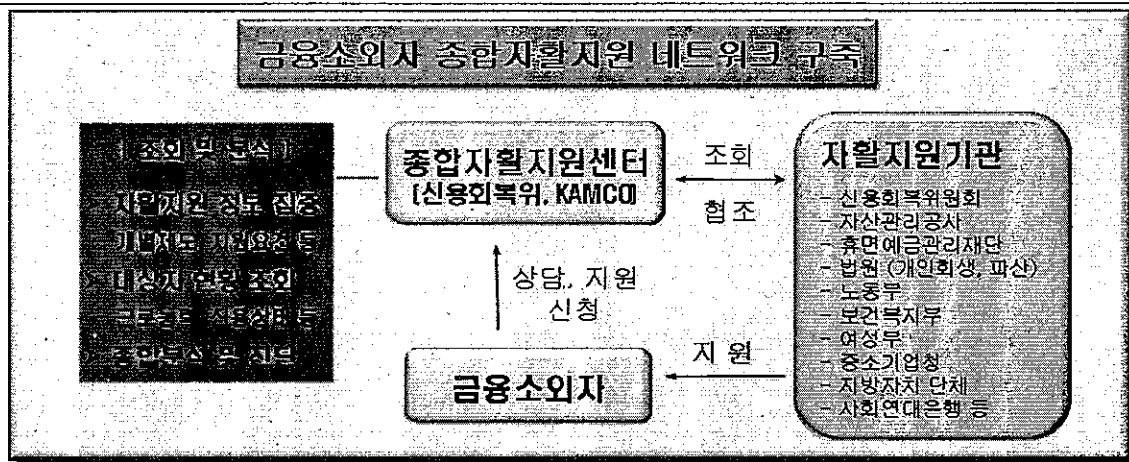
2.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08년 하반기 구축 개시, '09년중 본격 가동)

◇ 지금까지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에서 과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위주로 수행

⇒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 ① 각 기관에 산재한 자활지원 제도를 집중하여 지원내용·지원대상·자격요건에 대한 분석
- ② 금융소외자의 복지수급 및 자활제도 수혜현황 등을 종합 조회
- ③ 금융소외자의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제도 도출



3.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09년중)

- 휴면예금의 반환율과 운영 수익률이 안정되면, 소액대출채원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

* '08년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액은 280억원 수준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금융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가 과정'을 포함시켜 상설 운영을 추진

4. 민간부문의 금융소외자 지원 활성화

- ① 금융회사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도입 검토 ('09년중)
- ② 휴면예금의 기부절차 마련 ('08년 하반기)
- ③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한도 제공 체크카드 발급, 주택 임차료 보증 지원 등 방안 검토 ('08년 하반기)
- ④ 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마련 ('08년 하반기)

5.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추진 ('08년 하반기 국회제출)

- 채권추심행위관련 규제를 단일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

* 현재 채권 추심관련 규제는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에 상이한 내용으로 산재

13-1.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천, 억원)

	상담 및 접수		채무조정		
	상담	접수	건수	조정 전금액	조정 후 금액
‘05년	646,448	193,698	208,231	5,763	4,331
‘06년	305,037	85,826	86,890	2,490	1,422
‘07년	251,948	63,706	61,597	1,875	8,500
‘08년 1~8월	271,113	50,029	42,357	1,341	550
누 계	2,488,330	743,666	703,068	229,444	169,522


13-2.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대책’의 8월말 현재 사업 실적

□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08. 6월	'08. 7월	'08. 8월	합 계
신 청	2,168	1,019	2,062	5,249

※ 신청접수 후 심사→약정체결→대출실행의 단계로 진행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7.24 (목) 12:00부터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 (2156-9850)	담 당 자	유영준 서기관 (2156-9851)
배 포 일	2008. 7. 24.(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8 매

제 목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I. 추진 배경

- ☐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뒤쳐진 계층이 발생

*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감소 ⇒ 금융소외계층 확대 및 대부시장의 과도한 성장 ⇒ 고금리·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증가

-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 이에 정부는 사금융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자의 행태, 시장규모, 사금융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 등을 파악하고

- 이를 토대로 금번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저신용층 (신용등급 7~10등급, '08.5월말 현재) : 720만명 수준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 (만명)

- ('05말) 297.5 → ('06말) 279.6 → ('07말) 258.3 → ('08.5) 248.3

II.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반영

- ☐ 금융이용자의 사금융 이용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08.3월 ~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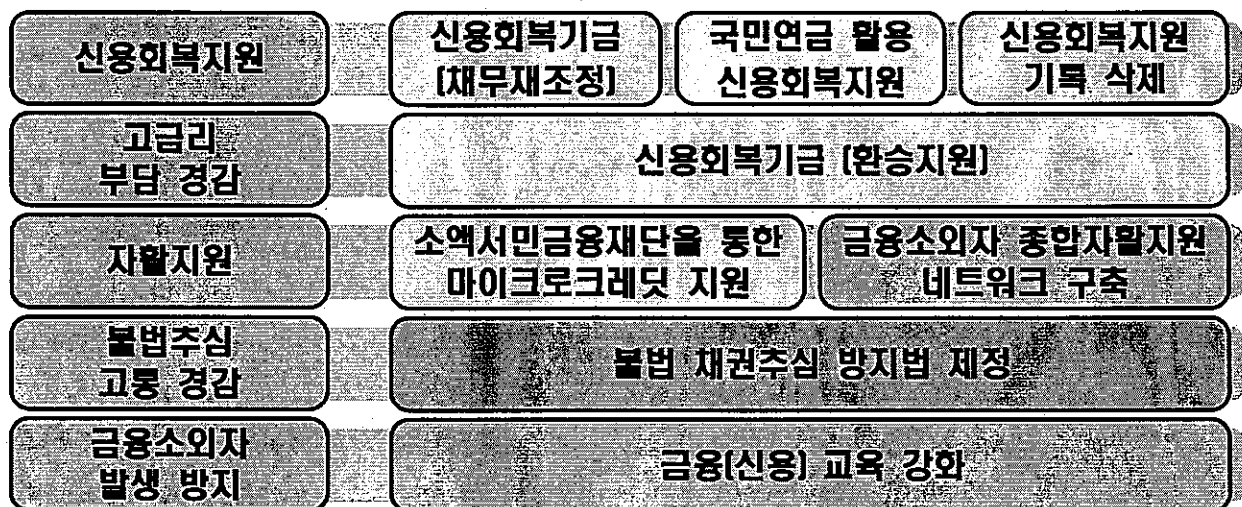
〈금번 대책의 토대가 된 주요 조사내용〉

- ①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대부업체 이용 128만명, 사인간 거래 61만명)
-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 (대부업체 대출규모 : 10.0조원)
- ③ (채무 규모)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대부업체의 경우 약 783만원,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약 2,341만원
- ④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연 72.2%*
* 무등록 대부업체 및 사인간 거래 포함
- ⑤ (상환의지) 사금융 이용자들의 84.0%는 자력 또는 주변사람의 도움 등을 통해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응답
- ⑥ (요구하는 정부대책)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 '생계비 대출', '불법채권 추심의 최소화', '취업기회의 제공' 순으로 나타남

Ⅲ.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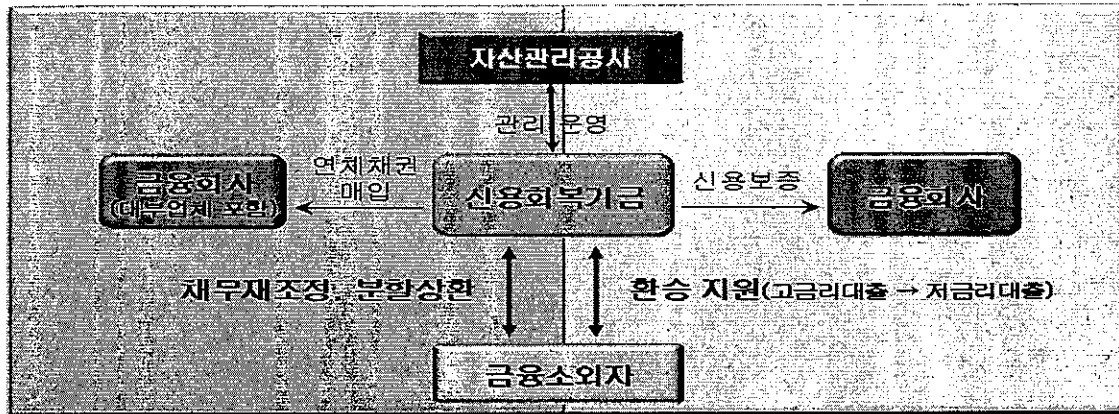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의 3대 원칙]

- 1) 원칙적으로 원금 탕감 없이 이자만 감면
- 2)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 (재정부담 최소화)
- 3) 금융소외자의 재할기회 제공을 기본으로 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



1. 신용회복기금 설치 ('08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09년중 지원규모 확대)

(1) 지원 방안



①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대출회사(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재조정

- (대상 규모)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3천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07.12말 기준)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함

* '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운용 방식) 원칙적으로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장기 분할 상환

* '신용회복지원증'으로 즉시 등록하되 2년간 성실상환시 동 기록 삭제

②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론)을 지원

- (대상 규모)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금리가 30% 이상인 3천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함

* '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환승지원 실시

- (운용 방식) 금융회사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 보증을 실시하되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2) 재원 조달 방안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토록 추진
-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되기 전인 '08년 중에는 KAMCO 자체 자금 2,000억원*을 대여 형태로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정부 소유 은행 배분금이 투입되는 대로 우선 상환

(3) 기대효과

-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및 환승 지원으로 대상자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08년에는 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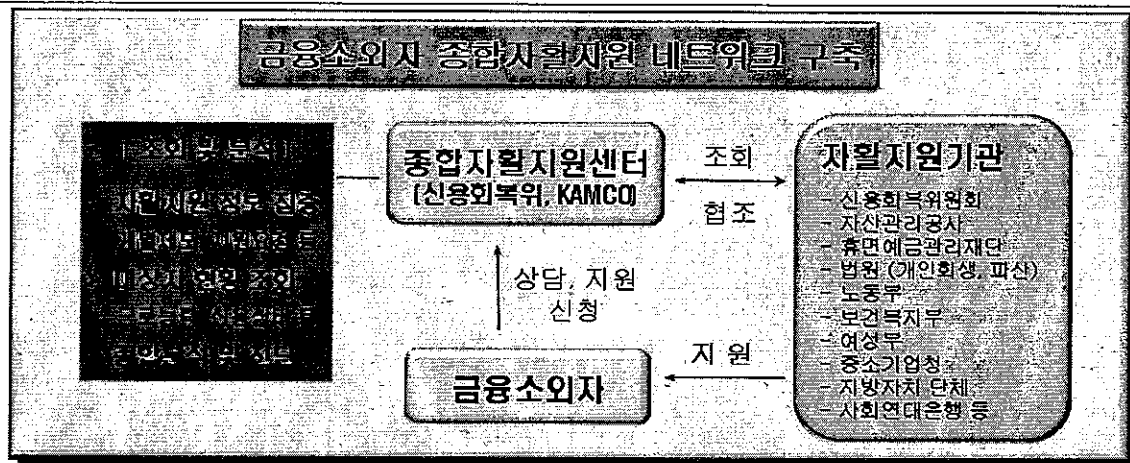
2.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08년 하반기 구축 개시 '09년중 본격 가동)

◇ 지금까지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에서 과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위주로 수행

⇒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 ① 각 기관에 산재한 자활지원 제도를 집중하여 지원내용·지원대상·자격요건에 대한 분석
- ② 금융소외자의 복지수급 및 자활제도 수혜현황 등을 종합 조회
- ③ 금융소외자의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제도 도출



3.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09년중)

- ☐ 휴면예금의 반환율과 운영 수익률이 안정되면, 소액대출지원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

* '08년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액은 280억원 수준

-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금융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가 과정'을 포함시켜 상설 운영을 추진

4. 민간부문의 금융소외자 지원 활성화

- ① 금융회사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도입 검토 ('09년중)
- ② 휴면예금의 기부절차 마련 ('08년 하반기)
- ③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한도 제공 체크카드 발급, 주택 임차료 보증 지원 등 방안 검토 ('08년 하반기)
- ④ 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마련 ('08년 하반기)

5.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추진 ('08년 하반기 국회제출)

- ☐ 채권추심행위관련 규제를 단일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

* 현재 채권 추심관련 규제는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에 상이한 내용으로 산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신용회복기금 유형별 지원 사례(예시)

사례 1. 재기 기회를 찾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A씨

성 명(연령)	A○○(40세)	직 업	임시직(청소용역)
채 무 현 황	00카드 1천2백만원	소득 및 특이사항	월 80만원(불안정) 기초수급자
<p><현 황></p> <p>□ A씨는 2001년경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병마에 시달리면서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곤궁한 생활 끝에 2003년 정부의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 아이들을 키우려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중 어느 순간 빚이 급증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 다니고 있는 직장도 불안정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 늘어나는 카드빚을 도저히 갚기 어려운 상태 			
<p><지원 내용></p> <p>□ A씨는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남에 따라 분할납부 계획을 수립하여 원금에 대해 5년에 걸쳐 납부기로 함 ○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한 긴급 생활 자금을 조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 건강이 회복됨 ○ 현재 직장에서 5년 넘게 청소용역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자활네트워드를 방문하여 취업 상담을 받고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청소업무 전문화 교육을 알선받아 정식으로 청소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됨 			

사례 2. 기존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B씨

성 명(연령)	B○○(27세)	직 업	방문교사
채 무 현 황	저축은행 400만원 대부업체 400만원	소득 및 특이사항	월 100만원
<p><현 황></p> <p>□ B씨는 대학 재학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4곳에서 각각 200만원씩 총 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및 연체 경력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져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게 되었음 ○ 아르바이트로 이자를 갚고, 졸업 후 취직을 하면 어렵지 않게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었음 ○ 어렵게 방문교사로 취직을 하여 연체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으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채무는 늘어난 연체이자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업체로부터의 야간 추심, 아내에 대한 채무 통보,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음 ○ 어쨌든 채무를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배드뱅크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대부업체 채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듣고 신용회복을 포기한 상태임 			
<p><지원 내용></p> <p>□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자에만 국한되었으나 금번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 채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B씨도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씨는 본인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채무를 인수한 신용회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매월 20만씩 40개월간 변제하여 채무를 모두 갚아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또한,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금지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의 유지가 가능해짐 			

사례 3. 환승론을 통해 딸아이의 교육비를 되찾은 C씨

성 명(연령)	C○○(35세)	직 업	직장인
채 무 현 황	캐피탈 1,500만원 대부업체1,000만원	소득 및 특이사항	월 200만원
<p><현 황></p> <p>□ C씨는 6살짜리 딸 및 가정주부인 아내와 함께 살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음</p> <p>○ C씨는 캐피탈사에서 1,500만원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 급전이 필요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용에 따른 대출 한도로 추가 대출이 거부되어 할 수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음</p> <p>○ 캐피탈사의 대출에 추가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이 1,000만원으로 늘어나자 C씨는 한 달에 70여만원의 이자를 감당하여야 하기에 선택적으로 딸아이 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었음</p>			
<p><지원 내용></p> <p>□ C씨는 종합 자활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 환승론을 신청하였고 신용회복기금은 C씨의 캐피탈 및 대부업체 채권 2,500만원에 대한 부분 보증을 지원하여 협약을 맺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게 됨</p> <p>○ 한 달 70여만원의 이자가 50여만원으로 줄어들어 따라 차액분으로 딸아이의 추가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음</p>			

14. 골프회원권 보유 및 매도 현황 등

☐ 해당 없음

15.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의 발탁 경위 및 배경

□ 정부는 산은 민영화 및 투자은행 전환에 대비하여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산은 총재후보를 물색하였음

□ 민유성 총재는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에서 다년간 IB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시장에서 검증된 금융전문가로서

* 시티은행 뉴욕본점 기업금융그룹 지배인('89~'90), 자딘플레밍증권 서울사무소 부소장('90), 리만브라더스 서울사무소 부소장('91),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사무소장('94~'96), 환은스미스바니증권 대표이사 사장('98~'01), 리만브라더스증권 서울지점 대표('05~'08)

○ 향후 산은을 경쟁력있는 투자은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혁마인드와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인사라고 판단하여 산은 총재로 선임한 것임

16. 휴면계좌의 규모 및 대책

□ 은행별 휴면예금 규모

- 첨부 1 참고 (자료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 휴면예금 처리 대책

- 은행권에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8.3, 시행 2008.2.4)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의 출연을 완료하였으며, (첨부 2)
 - 출연된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원권리자의 지급
요청시 지급
- 2008년 이후 발생하는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익년도 2월말까지
출연할 예정

<첨부 1>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십만건, 억원)

은행명	2005년		2006년		2007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산업은행	0.21	7.17	0.20	7.68	0.23	4.88
농협중앙회	21.98	289.42	9.29	153.49	8.77	151.97
신한은행	12.85	153.66	8.61	201.97	5.35	107.21
우리은행	9.23	105.83	11.45	127.96	5.94	107.01
SC제일은행	6.21	84.14	9.73	92.60	2.18	51.10
하나은행	6.15	93.91	2.81	88.53	3.61	90.40
기업은행	4.76	59.71	4.37	61.40	4.23	73.13
국민은행	20.26	302.64	15.60	115.15	12.99	71.93
외환은행	7.42	86.04	6.37	69.36	5.38	75.55
한국씨티은행	2.70	18.03	5.58	57.56	1.81	19.77
수협중앙회	0.45	6.96	0.55	10.26	0.41	10.09
대구은행	0.98	25.82	1.01	30.57	0.72	27.48
부산은행	5.08	29.91	2.64	27.65	2.46	31.03
광주은행	-	-	2.34	13.54	-	-
제주은행	0.07	3.33	0.10	0.47	0.09	0.39
전북은행	0.97	11.10	0.84	11.74	0.78	9.66
경남은행	1.28	9.16	1.03	6.55	1.29	9.55
총 계	100.60	1,283.83	82.52	1,076.48	56.24	841.14

주 1) 2008. 2. 4 현재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자료임

주 2) 고객 환급 실적은 미반영

<첨부 2>

은행별 휴면예금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현황

(단위:백만원)

은행명	출연금액	은행명	출연금액
국민	35,849	씨티	4,032
농협	27,213	부산	3,020
신한	24,221	수협	2,158
하나	20,226	전북	2,000
우리	16,578	경남	1,212
외환	12,911	산업	746
기업	11,487	광주	529
SC제일	9,630	제주	73
대구	4,641		
총 계		176,532	

17. 최근 3년간 금감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
(부과일시, 상대방,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 등)

□ 최근 3년간(06년 ~ 08년 8월말 현재) 과징금 부과 건수 및 금액
(단위: 백만원)

	건수	금액	비고
2006년	31	10,179	
2007년	54	10,683	
2008년 현재	27	7,214	

○ 세부 현황 : 별첨

최근3년간 금감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

부과일	채납사업자 명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일시	비고
2006-02-09	오토000(주)	5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4-14	
2006-03-10	000엔터프라이즈(주)	1,222,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5-15	00토건(주)	7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7-19	
2006-05-15	이00	1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7-19	
2006-05-15	대0(주)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7-19	
2006-05-15	㈜00로봇 [4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7-19	
2006-05-15	㈜00000네트웍스	159,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1-30	
2006-06-09	㈜00바이오텍	833,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3-29	
2006-06-09	000화재해상보험(주)	64,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08-09	
2006-06-22	(주)성0	268,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5	
2006-06-22	(주)코리아00	76,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2-22	
2006-06-22	㈜000네트웍스	39,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9-11	
2006-06-22	(주)아이000	37,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8	
2006-06-22	㈜000코드	2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5	
2006-06-22	㈜000이컴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5	
2006-06-22	(주)무0	1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8	
2006-08-24	㈜000앤아이	2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0-30	
2006-08-24	㈜0000테크놀러지	11,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0-30	
2006-08-28	000손해보험(주)	33,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11-01	
2006-09-11	00미디어(주)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6	
2006-09-28	㈜000테크놀러지	96,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2-04	
2006-11-09	00제지(주)	25,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1-12	
2006-11-09	㈜00테크	5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7-16	
2006-11-09	00정보통신(주)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1-15	
2006-11-23	㈜00000상호저축은행	36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1-26	
2006-12-08	00메카(주)	231,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2	
2006-12-08	00산업개발(주)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2	
2006-12-08	00인터랙티브(주)	1,112,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7-02	
2006-12-22	00000창업투자(주)	6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09	
2006-12-22	㈜000에너지	5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3-22	
2006-12-22	00기술금융㈜	3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23	
	2006년 31건 소계	10,179,300,000			
2007-02-02	㈜000이코프	247,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13	
2007-02-15	(주)큐0	25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0	
2007-02-15	(주)코스모000	25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5	
2007-02-15	㈜00엔터테인먼트	245,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3	
2007-02-15	김00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3	
2007-02-15	㈜0000홀딩스	12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12	
2007-03-16	00000파인앤스코리아(주)	50,000,0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07-03-27	
2007-03-19	(주)케이00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3	
2007-03-19	(주)케이00	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07	
2007-03-30	(주)씨00	44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04	
2007-04-02	0000생명보험(주)	18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6-07	
2007-04-13	큐00(주)	25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15	
2007-05-15	00보증보험(주)	645,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7-19	
2007-05-28	㈜00텔레콤	17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7-31	
2007-05-28	㈜00토토	9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1	
2007-05-28	㈜000코리아	2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5-28	㈜00기술	2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6-22	00관광개발(주)	156,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4	

2007-06-22	000선물(주)	7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3	
2007-06-22	000임플란트(주)	148,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08-27	㈜O안	359,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3	
2007-08-27	㈜OO네트웍스	2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07	
2007-08-27	고OO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주)나노OO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0	
2007-08-27	(주)모델OOOOO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주)모라OOO	6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0	
2007-08-27	(주)티에스엠OOO	8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09	
2007-08-27	OO창업투자(주)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2007-08-27	OO생명보험(주)	249,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10-30	
2007-09-11	㈜OO뱅크	244,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09-11	㈜OO웍스	2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09-11	OO기술산업(주)	14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4	
2007-09-11	이OO	2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0	
2007-10-12	(주)코아OOO	4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7	
2007-10-12	김OO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7	
2007-10-12	(주)유비OO	45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7	
2007-10-25	㈜엔OO	23,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7	
2007-10-25	(주)나노OO	48,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7	
2007-10-25	㈜티티OOO	324,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9	
2007-10-25	석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박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2	㈜OOOO에너지	560,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OO스트	43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8	
2007-11-22	김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5	
2007-11-22	㈜OOOO에너지	1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이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OOO웹이브(주)	14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OOOO코리아(주)	152,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OO전기(주)	31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OO네트웍스	144,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7-12-24	윤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주)한O	325,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OO식품(주)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7-12-24	㈜OO디앤피	45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09	
	2007년 54건 소계	10,683,600,000			
2008-02-22	OO은행	2,992,000,000	은행법 위반	2008-04-24	
2008-03-28	㈜모OO	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5-23	
2008-03-28	OOO코리아㈜	8,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5-30	
2008-03-28	OO건설㈜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2	
2008-03-28	OOOO공업㈜	441,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임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4-24	김OO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4-24	동아OOO	40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5-26	㈜OO소프트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조이OO	318,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조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오OO㈜	1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셀O	20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8-06-13	(주)네오OO	48,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8-06-17	OO약품공업㈜	994,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8	

2008-06-26	㈜엠OO	72,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OO중공업	11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류리OO	10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6-26	㈜알OOO	8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6-26	OO에스㈜	77,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6-26	㈜나OO	4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6-26	㈜파로스OOOO	1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6-30	㈜OOOO에너지	820,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4	OO피앤씨㈜	9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9	OO통신데이터㈜	49,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박OO	1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이OO	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년 27건 소계	7,214,500,000			

18. 최근 5년간 작성된 금산분리 문제에 관한 용역
보고서 목록 일체(작성기관, 제목, 요약내용 등
포함)

□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06.12, 금융연구원)」

< 요약내용 >

- 해외 주요국의 은행소유규제제도 현황
- 세계 주요 은행에 대한 주주 현황
- 영·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박 선 숙 의원

1. 금융위원회 현행 업무위탁 현황과 법적 근거

2. 금융위원회 예정 업무 위탁 내용과 관련 법 조항 (입법예고 포함)

- ① 현재 금융위원회 업무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은 관련 금융관련 법률(은행법, 자통법, 보험업법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현행 업무위탁 현황 및 법적 근거는 별첨

- ② 금감원장에게 위탁예정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바는 없으며

- 향후, 금융위 실무부서에서 법령 제·개정시 추가적으로 개정될 사안이 있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다른 금융권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반영될 것입니다.

- 참고로 금융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수행하되, 금융감독 집행적 성격을 갖는 업무는 최대한 금감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중소서민금융과〉

위탁사무명	근거규정(조항)	기 타
영업의 허가 · 등록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등록 말소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모집인에 대한 통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보고의 요구 및 접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보고서의 접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조합의 외부감사 의뢰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시정 요구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중앙회의 결산보고서 및 감 사보고서 징구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의 공시에 관한 사항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에 대한 조치요구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시임 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 정처분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조합의 경영관리 및 관리인 의 선임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채무의 지급정지, 임원의 직무정지 및 재산실사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경영관리인의 선임·해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철회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경영관리인의 해임 및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등에 관한 권한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촉탁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기금관리위원회 의견 요청 및 접수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계약이전 결정시 인수조합의 지정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인의 선임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부실조합 관리인 선임의 통지 및 등기 촉탁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경영관리 조합 또는 부실조합의 파산신청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공제규정의 제정·변경·폐지 인가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승인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의 수리	신협법시행령 제24조제1항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제정·변경·폐지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1조	
조합의 인가취소시 청문 업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1조	

지점등 설치인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업무종류·방법 변경, 영업일 부 양도 또는 양수 보고수리 및 시정·보완 권고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의2호	
금융위 승인없이 취득한 주 식의 처분명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의3호	
주주변경, 최대주주 변경, 대 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 임원 선임·해임보고 수리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의4호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의5호	
차입한도 예외 승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거래자 권익보호위한 감독명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임직원에 대한 문책(임원 직무 정지이상, 직원 면직 조치 제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 추진중인 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인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준법감시인 임면 수리 통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 공정시장과 〉

위탁사무명	근거규정(조항)	기 타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법인의 등록·신고·결산서류의 접수·처리 업무 및 등록취소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2호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법인 신청시 구비서류 규정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2호 발행공시규정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사업설명서 작성 세부기준 마련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2호 발행공시규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관련 각종 신고서 접수·수리·수리거부·수리통지·공시약식 신고서 작성 기준 마련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2호 발행공시규정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신고서 구비서류 규정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2호 발행공시규정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 발생실적보고서 작성 항목 규정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2호 발행공시규정 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보고서 작성항목 및 구비서류 규정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2호 발행공시규정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매수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관련 서류(경영개선계획서) 접수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2호 발행공시규정 제1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공시시스템(DART) 운영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5호 발행공시규정 제1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제출요령 마련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2호 발행공시규정 제1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5%Rule, 주요 경영사항 신고,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 위반사항 조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①·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①항1호·③항3호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1조~제35조	

【불공정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조사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1·2호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④항 및 시행령 제90조의2 ③항3호 선물거래법 제95조 ④항 및 시행령 제36조의2 ②항3호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1조~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제보 접수 및 포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선위가 정한 기준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관련사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15 ②항 및 제90조의2 ③항3호의2 증권불공정거래행위신고및포상등에 관한규정 제3조~제11조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재무제표 작성 관련 기업 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②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업무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②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재무제표 작성관련 신청서류 접수, 심사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외감규정") 제75조①항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 지정서류 접수, 관련자료 제출요구, 심사 	외감규정 제75조①항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 선임·해임보고 접수 등 	외감규정 제75조①항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보고서 및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 	외감규정 제75조①항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결과의 관련기관(금융기관 등) 통보 	외감규정 제75조①항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결과의 사후관리 집행 	외감규정 제75조①항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결과의 사전통지 업무 및 의견제출 접수 	외감규정 제75조①항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된 감리업무의 결과 보고수리 	외감규정 제75조①항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제·개정에 관한 사항 	외감규정 제75조①항12호	

< 글로벌금융과 >

위탁사무명	근거규정(조항)	기 타
해외직접투자 및 지점 설치 신고(수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3, 7, 8, 18	
외화 유동성 위험 관리 (자산·부채 범위 및 비 율 산정 기준)	은행업감독규정§64 증권업감독규정§2-44 보험업감독규정§5-19 종합금융업감독규정§38 조의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30	
중장기 외환대출 재원 관리	은행업감독규정§65	
외환 관련 금융기관의 내 부관리	은행업감독규정§67	
외환 관련 보고	은행업감독규정§72	

〈 보 험 과 〉

위탁사무명	근거규정(조항)	기 타
1.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심사	보험업법 제194조	
2.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적시설 유지의 예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심사	"	
3.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심사	"	
4.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심사	"	
5.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겸영가능업무가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심사	"	
6.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	
7.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비금 적립금액의 결정	"	
8.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허가취소사유 보고의 접수	"	

9.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의 잔무를 처리할 자에 대한 조치	“	
10.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에 대한 영업보증금 예탁 등의 조치	“	
11.법 제93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	
12.법 제107조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승인 여부의 심사	“	
13.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	
14.법 제111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 및 공시	“	
15.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16.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	
17.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신고의 접수	“	

18.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회사에 관한 서류의 접수	“	
19.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접수	“	
20.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	
21.법 제124조제6항에 따른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공시의 중단, 시정조치 등의 요구	“	
22.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신고의 접수	“	
23.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서류 변경신고 등의 수리 및 접수	“	
24.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	
25.법 제133조제1항(법 제17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	

26.법 제1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산처분 허가 여부의 심사	“	
27.법 제155조에 따른 정리계획서의 접수	“	
28.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	
29.법 제160조(법 제7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자산의 공탁 및 감독상 명령	“	
30.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자산의 관리 명령	“	
31.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	
32.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의 요구	“	
33.법 제164조에 따른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	
34.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확인	“	
35.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자금 차입 승인 여부의 심사	“	

36.법 제176조제4항에 따른 순보험요율의 신고 수리	“	
37.법 제184조제5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에 대한 의견제출 지시	“	
38.법 제191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자산 예탁 등의 조치의 요구	“	
39.법 제193조에 따른 공제업을 영위하는 차에 대한 기초서류 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의 요구	“	
40.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의 공고	“	
41.법 제195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고	“	
42.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 하기 곤란한 경우 의 승인 여부의 심사	“	
43.제22조제3항에 따른 법 령 위반의 경우 내부통 제기준의 변경 권고	“	
44.제23조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사실 통보의 접수	“	

45.제37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 험에 가입한 보험중개 사 영업보증금의 감액	“	
46.제63조제3항에 따른 재보험계약에 대한 책 입준비금의 계상지시	“	
47.제66조에 따른 재무 건전성평가	“	
48.제70조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	
49.제71조제3항에 따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 리하게 변경된 기초 서류의 변경 권고	“	
50.제82조제4항에 따른 세부기준 보고의 접수	“	
51.제87조제3항에 따른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검증보고서 제출의 접수	“	
52.제92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업자의 등록사 항 변경 신고의 접수	“	
53.제97조제3항에 따른 손 해사정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	
54.그 밖에 제1호부터 제5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 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업무	“	

〈 은행과 〉

위탁사무명	근거규정(조항)	기 타
금융위원회의 권한 위탁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금융위원회의 업무 위탁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0조	

〈 자본시장과 〉

위탁사무명	근거규정(조항)	기 타
금융위·증권위 결정의 집행 절차·방법	증권거래법 §206의2④ 동법 시행령 §90의2③ 선물거래법 §95⑤ 동법 시행령 §36의2②	수탁기관 : 금감원
처리기준이 명확한 신고·보고·등록	상동	상동
금융위·증권위가 정한 구체적 기준에 의한 진술서·장부 등 제출 요구, 증언을 위한 출석 요구	상동	상동
불공정거래 등의 신고 또는 제보 접수, 포상금 지급	상동	상동
기관경고,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치 *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조치 제외	상동	상동
금융위·증권위 소송 업무 수행	상동	상동
단순 사무집행	상동	상동
선물업자별·위탁자별 선물거래 제한	선물거래법 §95③ 동법 시행령 §36②	수탁기관 : 거래소

〈 자산운용과 〉

위탁사무명	근거규정(조항)	기 타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의 통 보접수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162조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유 가증권 매매 등의 승인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108조	
운용 수익률·수수료 공시	퇴직연금 감독규정 §21⑦	
퇴직연금사업자 검사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3④	
약관 변경·보완 명령	퇴직연금 감독규정 §19	
업무보고서 제출	퇴직연금 감독규정 §20①	
영업보고서 제출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5	
정관변경 등	신탁업법 시행령 §17조의 2	

3. 산업은행 리먼브러더스 인수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설명)한 날짜, 보고(설명)시 제출한 자료 일체, 금융위원회의 지시 혹은 건의 사항 일체

□ 보고 날짜 및 제출 자료 관련

- ① 7.27일 보고는, 별도 서면자료가 있거나 논의결과를 정리하거나 하지 않는, 리먼과의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진 상황이 있으면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구두보고로 관련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말씀 드립니다.
- ② 8.1, 8.13, 9.2일 설명자료는 의원님께 기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향후 미국측(美 정부 및 리먼 등)과의 분쟁소지나 국제 거래 관계에서의 관례("Confidential Agreement") 등을 감안, 비공개함이 바람직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금융위 입장

- 금융위는 산은에 대해 이런 종류의 딜은 민간이 주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전달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4.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①허용을 결정한 회의, ②법적근거, ③금융위의
후속조치 내용

- ①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방안은 금융규제 개혁심사단 논의(08.5.8일)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8.6.26일)에서 결정되었음
- ② 현재 지급결제와 관련한 일반법적 근거는 없음
- ③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업무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허용 방안 및 시기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

5.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한 은행권의 주장 및 그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

-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은행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유가증권 등 위험자산 보유규제, 자회사 관련 규제 등 각종 사전적·직접적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폐지'의 진행 상황

- 유가증권 등 위험자산 보유규제,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및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
- 리스크 관리 방안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 후, 은행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

7.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범위를 헤지목적 또는 정형화된 형식의 스왑거래까지 확대’ 진행 상황

□ 자본시장통합법령에 반영

시행령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계약서에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감독규정 제4-49조(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영 제79조제2항제8호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금리 또는 채권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

8. 고수익채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는 기초 시장인프라 구축방안의 진행사항

- 정부는 고수익채권시장이 중소기업의 장기·안정적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수익채권에 대한 시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펀드평가제) 펀드 자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 허용
 - 회사채 등으로 한정된 신용평가의 평가대상을 펀드 등으로 확대하고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 진행 중(현재 법제처 심사 중)
 - (부도율·회수율) 고수익채권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권의 부도율, 회수율관련 정보 인프라 개선 추진
 - 부도율, 회수율 산출을 위한 기초 정보의 수집·분석작업 진행 중

9. 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조사처리 절차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감시, 조사, 수사 및 재판절차는 「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 검찰 → 법원」 순으로 이루어짐

○ 거래소 : 이상거래를 적발·심리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원에 통보

○ 금감원·증선위 : 금감원 조사와 증선위 심의를 거쳐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에 통보

○ 검찰 : 증선위 통보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여부 결정

②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조사처리 기간

□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감원이 거래소로부터 접수하여 조사한 후 증선위에서 검찰통보 등 조치하는 데까지 약 4~6개월 소요

10. '신용회복기금 설치 및 운용' 과 관련하여 다음 사업의 진척 내용

- 연체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재조정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환승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08.7.24)에 따라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2)하여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사업을 시행할 계획

- '08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9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

□ 현재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들과 연체채권 매입 및 환승론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 중

- 금년말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기초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재조정 업무와 환승론 사업을
개시할 예정

11.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첨부 참고

휴면예금관리재단

문서번호 : 휴제 2008 11

시행일자 : 2008. 5. 6.

수 신 :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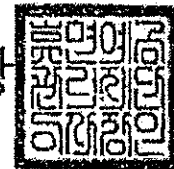
참 조 : 중소시민금융과장

제 목 : 휴면예금관리재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신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에 의거 이사회에서 의결(2008. 5. 2)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승인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휴면예금관리재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1부, 끝.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문서번호	휴제 2008 11	시	
수신일자	2008. 5. 07	간	
처리일자	392	제	
담당자	중소시민금융과	공	
심사자		단	
		신	사-원

410 (5)

사 업 계 획 안

2008. 5. 2

휴면예금관리재단

I. 사업 환경 및 제단 설립 배경

□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 확대 및 금융수요 증가에 비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감소

○ 이로 인해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사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고금리·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증가

· 전체 사금융시장 규모 : 12~18조원, 이용자 : 200~300만명 추정

□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사금융 시장에서마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 증가

* 최고이자율 : 30% ('07.6.30일 시행)

** 최고이자율 : 66% → 49% ('07.10.4일 시행)

□ 기존 국내 대안금융기관들은 사업내용, 규모, 조직 등의 한계***로 금융소외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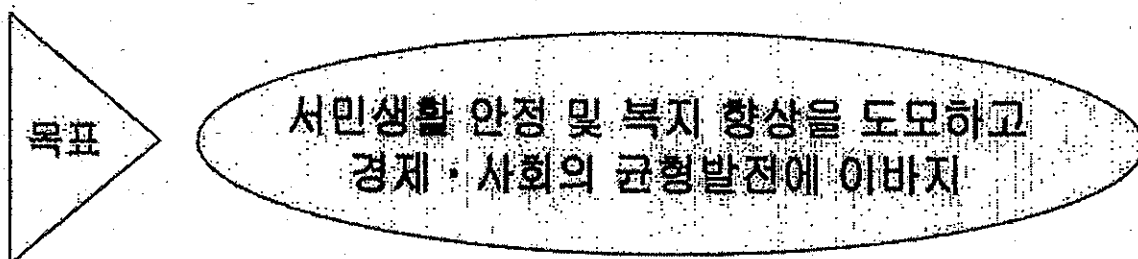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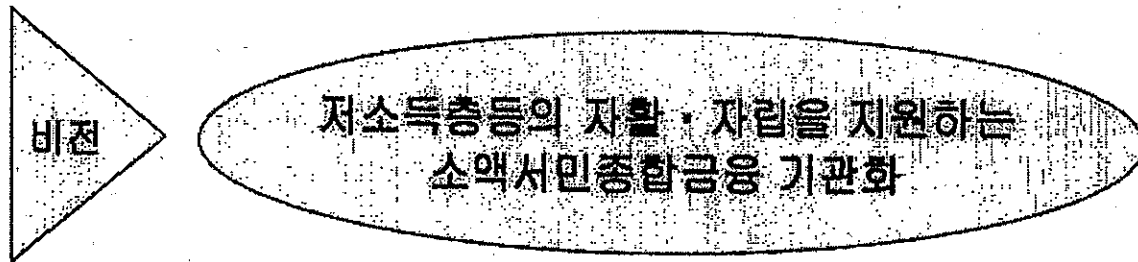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아름다운세상기금, 창원지역사회복지은행 등

** (사업내용) 창업자금 대출 위주로 운영되어 교육·의료비 등 생활자금 대출 미흡
(규모 '07.11. 기준) 4대 대안금융기관 기금규모 총 330억원, 134억원(683건) 지원
(조직) 전국단위 네트워크 부족

·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신용등급별로 구분할 경우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7등급 이하가 700만명에 달함 (한신평정, 07.9월)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금융소외자에게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활·자립을 촉진할 필요
⇒ 소액금융제단이 설립

II. 사업 목표 및 비전



주요 사업

복지사업 등 지원	원권리자 보호	휴면예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취업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회 및 지급 시스템 구축·운영 ○금융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 종합 고려

공익성과 재정적 지속성을 기반

III.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 및 방법

1 기본 방향

1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도모)

- 복지사업 지원이라는 공익성과 원권리자 보호라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필요

2 (소모형 복지 보다는 생산적 복지 추구)

- 자활·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지원

3 (사업의 투명성 확보)

- 복지사업자 선정·지원·관리·감독 등 전 과정을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2 추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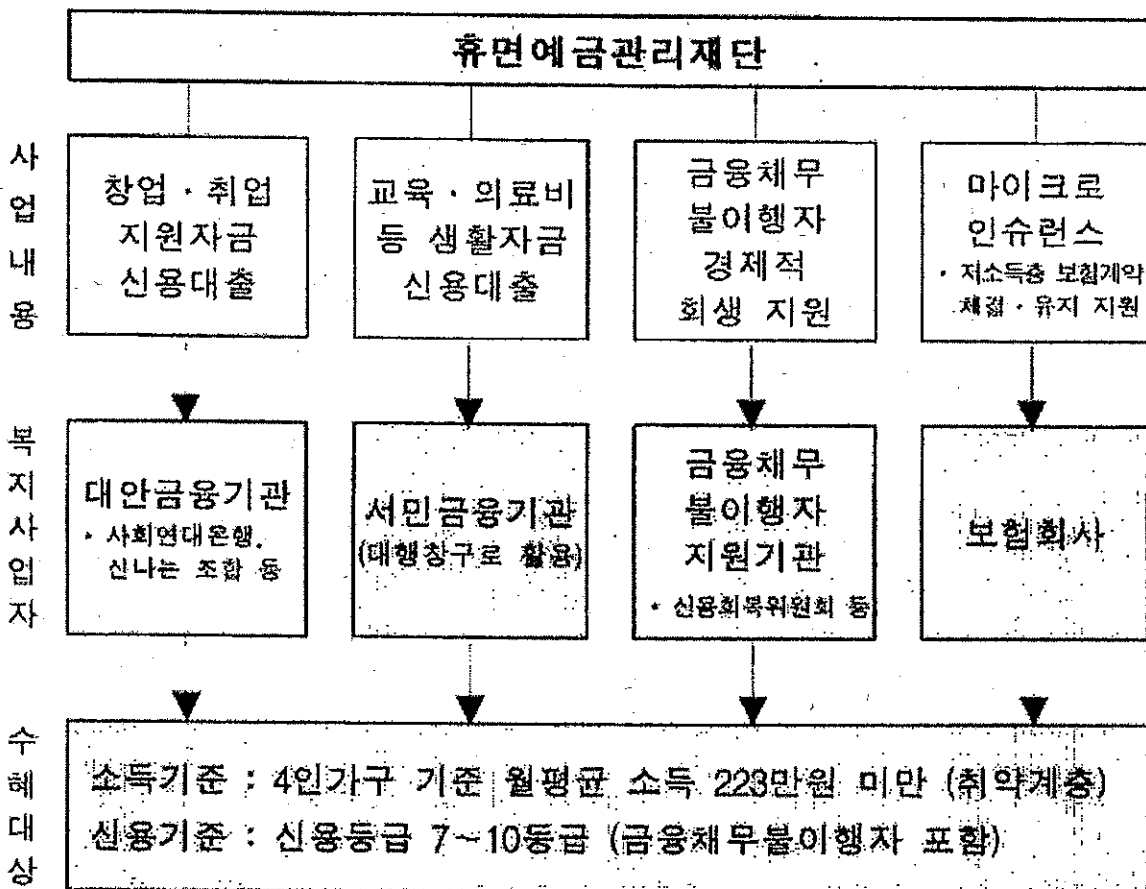
□ (점진적·단계별 사업 추진) 출범초기, 안정·정착기, 사업 확대기 등 단계별로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출범초기: 복지사업자의 사업능력,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시범 수준으로 추진
- 안정·정착기: 사업성과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 추진
- 사업 확대기: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직접 사업 위주 추진

IV. 사업 추진 계획

1 복지사업자 지원 및 감독

< 개 요 >



- 복지사업자는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수혜대상은 소득수준(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과 신용등급(7~10등급의 저신용계층)을 기준으로 설정
 - 개념상 저신용계층과 저소득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양자의 규모가 공히 700만명 수준이라는 점 등에서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가.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자활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활·자립을 촉진

□ 운용방향

- 창업지원은 사회연대은행 등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노하우 및 전문가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활용
 -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등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 창업을 극대화하고 원금 훼손을 최소화
- 취업지원은 실업극복국민재단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
 - 저소득층이 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중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생활자금지원과 연계)

□ 지원 방식

- 활동 중인 NGO형 대안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사업성과와 사업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선정·지원
 - 무자격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신청시 보건복지가족부(창업지원), 노동부(취업지원) 등 주무 부처의 추천을 첨부하도록 요구

□ 지원 규모

- 창업 지원 효과를 높이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
(1인당 5천만원 한도)
- 다만, 복지사업자별 지원 수준은 개별 복지사업자가 신규
인력·조직의 확대 없이 운용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
 - 창업·취업자금 이외의 복지사업자 자체의 인건비·운영비
별도 무상지원은 배제

□ 지원 금리

- 제단은 복지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동 재원에 수수료(운영비)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여 대출
 - * 현재 복지사업자(NGO형 대안금융기관)의 창업자금 대출금리는 0~
6% 수준

나 저소득층의 교육·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교육, 의료,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저소득층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이용자 흡수

□ 운용방향

- 서민금융기관을 대행기관으로 활용하여 일정액 이하의 표준화된 소액신용대출상품을 공급
- 대행기관 및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 병행

□ 지원 방식

①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방식

- 저소득층 대상 여신에 전문성을 지닌 서민금융기관을 재단의 지원 자금 대출창구로 활용
- 대행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단 자금을 무조건 지급하기 보다는 대행기관이 시행한 대출 포트폴리오의 일정부분을 매입하는 방식 채택
- 재단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서민금융기관이 대출하도록 하고 재단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채권일부를 선별 매입

② 신용보증제도 활용 방식

- 서민금융기관의 저소득층 대상 여신에 부분보증을 제공
 -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신용보증기관에 준하는 보증 수수료를 부과하고 서울보증보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 보증기금을 위탁하여 운용

※ 신용보증제도 활용시 직접대출에 비해 보증운용 배수에 비해 하여 수혜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증수수료에 따라 추가 이자부담 발생

⇒ 수혜대상 확대, 이용자의 편의성, 서민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등과의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방식을 병행

□ 지원 규모

○ 보다 많은 금융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인당 대출 규모를 500만원 이하로 제한

· 대부시장 이용자 1인당 평균 대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금융연구원 조사결과)

□ 지원 금리

○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은행 신용대출금리 수준(10% 내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금리 부과

○ 신용보증제도 활용 방식의 경우 20%의 금리상한을 설정 하되 신용등급별로 보증비율을 달리 적용

·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용등급 7~10등급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형 대부시장 금리가 49%에서 형성됨을 감안할 필요

□ (기타) 기존 정부 사업 수혜자, 제도 금융권에서 기 대출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 기존 정부지원 대출사업: 복지부의 응급의료대불제도, 교육부의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 등

· 사금융 이용자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은 인정

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신용회복 지원자의 예상치 못한 급전 수요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촉진

□ 운용방향

- 신용회복 지원자의 병원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5년에 걸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신용회복 지원자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지원 방안도 NGO형 대안금융기관과 연계 하여 추진

□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에 재원 지원
 - '07년말 현재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담당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유일하나 자산관리공사가 운영중인 한마음금융(주)도 유사 사업 추진 예정
-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재원 여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자 확대

□ 지원 규모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500만원 이하로 한정
- 창업 지원은 실질적 창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하되 재원의 여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사업수행시 대안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창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밀착 지원을 병행
 - * 상시적 채무재조정기관이 자활의지가 강한 신용회복지원자 중 선별하여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기관에 추천→ 대안금융기관의 자체 심사 후 창업·취업 지원

□ 지원 금리

- 재단은 신용회복지원 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
- 신용회복지원 사업자는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게 책정

라.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

□ 운용방향

- 보험회사가 재단의 수혜대상자 중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Microinsurance)을 개발하여 사업지원 신청 → 재단은 사업 타당성 심사 후 재원을 배분
 - 장애인, 여성, 소년·소녀 가장, 신생아 등 개인 뿐만 아니라, 보육원, 장애인복지단체 등 법인·단체 포함

□ 수혜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법·규모 등

- 수혜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급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기 보장성 상품을 우선적으로 지원
-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의 전부 지원보다는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 고려
 - 지원금액은 개인의 경우 최대 월5만원 미만으로, 지원기간은 개인은 최대 3년, 단체는 최대 5년까지로 제한
- 보험회사의 자의적 가입자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또는 대한금융기관 등 공익 단체의 추천을 요건으로 부과
- 지원 규모는 보험권 출연액(기부금 포함)의 이자 수준을 한도로 보험회사별 출연실적과 연계하여 배분하고 휴면 예금과 구분처리
 -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신용대출사업과 달리 자금의 회수가 전제되지 않은 무상 지원방식(가입자 보험료 대납 내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이므로 원금보전을 위해서는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피

다. 복지사업자 감독 (공동사업)

□ 기본원칙

- 복지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감독 기준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 주무관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 (사업의 중복성, 비효율성 방지)
- 사후처벌적 감독보다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

□ 감독방법

- 모니터링 : 복지사업자에게 분기별 지원실적 및 상환실적 (연체 등 포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위주로 감독
- 정기감독 : 복지사업자의 주무관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문감독 (연1회)
- 특별감독 : 복지사업자의 자료 요청 거부 등 특별감독을 시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문감독 (수시)

※ 재단은 복지사업자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복지사업자가 거짓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복지사업자의 자료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 제9조)

□ 지원금의 반환

- 복지사업자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해 교부 받은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청구(법 제26조)

2

원권리자 보호

가. 휴면예금 출연정보 조회의 신속·편의성 추구

☐ 휴면예금 출연 정보 조회시스템 마련

- 재단의 출연정보 DB와 현행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출연되기 전·후의 휴면예금을 동시에 일괄 조회토록 하여 편의성 제고
-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조회와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하는 방식을 병행

나. 휴면예금 지급의 원활화

☐ 원권리자 지급 유보금

- 원권리자 지급청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된 휴면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 유보금으로 확보
- 사업초기인 금년에는 출연금의 75% 수준을 유보하고, 이후 신규 휴면예금 출연 수준, 운용 수익금, 원권리자 상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보비율 조정

☐ 원권리자 요청시 신속·정확하게 지급

- 해당 금융기관(영업점)에서 철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원권리자 보호에 충실

- 금융기관은 인트라넷을 이용한 web방식(또는 온라인전문 방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요청자료를 재단에 송부
- 지급대행기관(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원권리자에 대한 지급업무 수행
 - 적정한 절차를 통해 출연 은행 중에서 선정 (이사회 결의)

<원권리자 지급 절차>

원권리자가 원 거래 금융기관에 휴면예금 지급 요청 →
 금융기관이 원권리자 확인 후 재단에 통보 → 재단(주
 거래은행)이 원권리자 계좌로 휴면예금 상당액 이체

□ 자산운용의 목적

- 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유보해 놓은 자금을 적절히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복지사업 지원의 재원등으로 활용

□ 기본원칙

- ① 안정성 위주 : 원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안정자산에 투자
- ② 유동성 추구 : 원권리자의 지급청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추구
- ③ 수익성 감안 :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익성 제고

□ 운용방법 및 운용기관 선정 기준

- (운용방법) 자산운용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안전성 위주로 외부자산운용기관에 위탁 운용
- (운용절차) 구체적 운용방법 및 절차는 재단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수행(이사회 보고)

□ 재단 사업성과의 투명한 공개

- 재단의 사업재원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지원성과를 투명하게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연보 발간)
 - 복지사업자별 지원 대상·규모, 상환율, 창업성공율 등을 포함하되 개인신용정보 등은 배제, 특기할 사례는 별도로 상세 소개
- 재단에 대한 출연기관 list 및 각각의 출연규모 등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출연 인센티브 제고
 - 금융기관외에 법인·단체·개인의 기부 실적도 포함

□ 원활한 재원 확충 (출연 및 기부금 모집 활동)

- 금융기관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제반 분위기 조성

□ 재단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

- 출연기관, 복지사업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결과를 점검하고 추가·보완 발전방안 모색
- 해외 유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성공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성공요인 및 Best Practice 도출
 - 방글라데시(그라민뱅크), 미국, 아일랜드 등

□ 필요성

- 재단업무의 효율적 수행(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원권리자 보호 중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필요
- 특히 재단의 핵심 사업은 기존 정보축적이 부족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파이낸싱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D/B 및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필요

□ 단계별 추진 방안

- (1단계) 출범초기에는 기본적인 재단 관리업무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만 구축하여 운용
 - 휴면예금 조회·지급 업무 시스템 위주로 구축하되 2단계 통합정보화 사업과의 연계성·확장성을 고려
- (2단계) 조직 및 사업운영의 안정화 단계에서 업무별 정보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기본관리(예산/회계/인사/급여/전자결재), 복지사업자 지원 및 감독(창업·취업 지원/생활안정자금 지원/신용회복 지원/보험계약 지원), 자산운용, 원권리자 보호(조회/지급), 정부 제정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 등

□ 추진시기

- (1단계) 재단 출범초기에 구축 완료 ('08. 5월)
- (2단계) 재단 출범 후 재단의 조직, 사업내용 분석 및 업무재설계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09년도)

V. 재원조달 규모 및 사업별 배분방안

◇ 재단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휴면예금관리재단법 제22조)

○ 설립초기에는 휴면예금 출연금만으로 운영될 전망

1 휴면예금 출연규모 (추정치)

- 은행권 : 약 1,400억원
- 보험권 : 약 600억원
- 계 : 약 2,000억원

※ 재단에 출연된 후 '08.12월말까지 원권리자에 대한 예상지급액(600억원 추정)을 감안한 잔액 규모 추정

- 은행권 : 약 1,000억원
- 보험권 : 약 400억원
- 계 : 약 1,400억원

2 사업별 재원 배분방안

□ (구분계리) 은행권 출연금은 소액금융지원 사업, 보험권 출연금은 소액보험지원 사업에 배정

□ (배분규모) 복지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자금신청 규모, 재단의 차년도 예상 운용수익 및 원권리자 상환 예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08년(하반기) 배분안

- 소액금융지원 사업 : 180억원
- 소액보험지원 사업 : 30억원

※ 사업별 배분액은 실제 출연규모 및 사업추진 추이를 보아가며 적의 대응

VI. 추진 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사회 의결 및 금융위 승인)												
2. 복지사업자 지원 및 감독												
○ 복지사업자 지원 규정 등 제정 (기준, 절차 등)												
○ 복지사업자 자격심사 및 지원계획 수립 (심사기준 및 지원계획안)												
○ 복지사업자 신청 접수·심사												
○ 복지사업자 지원												
○ 감독 규정 등 제정												
○ 복지사업자 감독												
3. 원권리자 보호 및 정보화 사업												
○ 조회 및 지급시스템 구축												
○ 휴면예금 지급												
4. 자산운용 및 관리												
○ 운용기관 선정 및 계약												
○ 자금운용												
5. 홍보												
○ 휴면예금 출연 및 지원 실적 보도												
○ 출연기관 등 대상 설명회 개최												

예 산 안

2008. 5. 2

휴면예금관리재단

I. 예산 총칙

제1조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2008년도 예산 중 수입예산은 은행출연금과 보험출연금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재단사업비[은행사업비(소액금융지원사업), 보험사업비(소액보험지원사업)]와 재단운영비로 구분한다.

제2조 재단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예산

- 금융기관 출연액 : 200,000,000천원

2. 지출예산(22,991,766천원)

- 은행사업비 : 18,000,000천원
- 보험사업비 : 3,000,000천원
- 재단운영비 : 1,991,766천원

제3조 예산 중 은행사업비와 보험사업비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구분처리하되, 재단운영비는 은행출연금과 보험출연금의 수입예산액 비율에 따라 각각 충당한다.

제4조 2008년도 예산의 집행기간은 2008. 4. 22부터 2008. 12. 31 까지로 한다.

II. 수지 예산

1.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관 항 목	'08년도 예산액	비 고
은행출연금	140,000,000	
보험출연금	60,000,000	
계	200,000,000	

2. 지출예산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관 항 목	'08년도 예산액	비 고
재단사업비	21,000,000	
(은행사업비)	(18,000,000)	
(보험사업비)	(3,000,000)	
재단운영비*	1,991,766	
(자산취득비)	89,000	
(인건비)	922,604	
(일반관리비)	885,316	
(예비비)	94,846	
계	22,991,766	

* 재단운영비는 은행출연금과 보험출연금의 수입예산액 비율에 따라 각각 총당
(은행 13.9억원, 보험 6.0억원)

나. 지출예산 세부내역

1) 재단사업비

(단위 : 천원)

항목	08년도 예산액	구성비(%)	세부내역
은행사업비	18,000,000	85.7	- 저소득층 창업, 취업 신용대출 - 신용회복지원사업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보험사업비	3,000,000	14.3	- 저소득층 보험계약체결 및 유지 지원사업
계	21,000,000	100.0	

2) 재단운영비

(단위 : 천원)

항목	08년도 예산액	구성비(%)	세부내역
I. 자산취득비	89,000	4.47	
비품	89,000	4.47	- 전산방화벽 구축, 냉난방기, 금고, 사무실 집기부품 등
II. 인건비	922,604	46.32	
급여	671,250	33.70	- 직원 23명 기준 (직원평균연봉 38,913천원)
제수당	154,004	7.73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전산·회계수당
성과상여금	20,250	1.02	- 성과급
잡급여	77,100	3.87	- 비서·운전원 급여, 파견수당, 이사장 등 업무활동비

(단위 : 천원)

구분	100억원당 예산액	예산비(%)	비고
III 일반관리비	885,316	44.45	
소모품비	18,113	0.91	- 사무용품, 복사기·전산·기타 소모품
인쇄비	29,500	1.48	- 규정집, 보고서, 봉투 인쇄 등
도서신문비	8,820	0.44	- 도서구입, 정기간행물, 신문구독료
수선비	5,000	0.25	- 사무실 보수공사 등
통신비	39,911	2.00	- 전화료, TV·인터넷 이용료
보험료	1,520	0.08	- 신원보증보험료, 동산(전산시스템, 전산기기)종합보험료
수수료	11,700	0.59	- 법률·세제자문수수료, 불용품운송비 등
용역비	10,300	0.52	- 공인회계감사 및 세부조정감사
홍보비	80,500	4.04	- 출원현황, 사업안내 등
세금과공과	74,303	3.73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급식비	28,980	1.45	- 야근, 휴일근무 식대
지급임차료	141,741	7.12	- 사옥 임차관리비(17,717천원×8월)
전산업무비	46,500	2.33	- 전산유지보수료, 업무용S/W구매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천원)	비율(%)	비고
차 량 비	30,998	1.56	- 이사장 및 업무용 차량리스비, 유류대 등
복리후생비	46,650	2.34	- 직원 건강진단비, 출퇴근비 보조, 중·고 자녀학비보조 등
사무처운영비	9,900	0.50	- 생수, 차 등
여비교통비	64,300	3.23	- 시내교통비, 출장여비, 해외출장비
업무추진비	72,000	3.61	- 유관기관 업무협의비 등 (8,000천원×9월)
조사연구비	50,000	2.51	- 소액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회의운영비	80,200	4.03	- 이사회, 자문위원회, 실무회의 등 (이사회 400천원×13인×8회, 자문위원 200천원×5인×8회)
행 사 비	780	0.04	- 종부식 행사
체육진흥비	11,000	0.55	- 임직원 체육행사 (식음료대, 체육복비, 장소임차료)
교육훈련비	13,600	0.68	- 임직원 워크샵 (전체 및 각 팀별워크샵 1회)
잡 비	9,000	0.45	- 수도광열비, 성수기, 환경정리원 등
IV. 예비비	94,846	4.76	- 지출예산의 약 5%
합 계	1,291,766	100.0	

12.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대책’ 의 8월말 현재 사업 실적

□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08. 6월	'08. 7월	'08. 8월	합 계
신 청	2,168	1,019	2,062	5,249

※ 신청접수 후 심사→약정체결→대출실행의 단계로 진행

13.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건, 억원)

	상담 및 접수		채무조정		
	상담	접수	건수	조정 전 금액	조정 후 금액
‘05년	646,448	193,698	208,231	5,763	4,331
‘06년	305,037	85,826	86,890	2,490	1,422
‘07년	251,948	63,706	61,597	1,875	8,500
‘08년 1~8월	271,113	50,029	42,357	1,341	550
누 계	2,488,330	743,666	703,068	229,444	169,522

14.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 이외에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교육 등의 실적

□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6.11.13~12.31	'07년	'08. 1~8월	합 계
상 담		1,620	12,713	7,939	22,272
접 수		38	1,507	2,635	4,180
대출	인원수	17	1,168	2,066	3,251
	금 액	54	3,468	6,637	10,159

※ 06.11.13일 업무개시

□ 취업지원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 1~8월	누 계
구직등록자	31,703	28,628	8,624	4,491	87,314
취업확정자	4,076	3,549	1,983	1,070	11,959

□ 신용관리교육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대 상	'05년	'06년	'07년	'08. 1~8월	누 계
이행관리교육	채무조정 확정자	233,862	90,942	61,010	38,512	686,696
신용관리특강	중·고등학생	113,027	76,073	71,226	27,392	355,825
	일 반 인	77,301	235,764	161,194	137,191	618,242
누 계		424,190	402,779	293,430	203,095	1,660,763

박 중 희 의원

1. 5년간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사용액
2. 5년간 맞춤형복지 규모와 사용액 및 사용내역
3. 5년간 업무추진비 등 기타경비 규모와 사용액 및 사용내역

□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현황

※ 법인카드 별도의 예산 구분은 없음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액 및 사용액을 기재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3	672	-	-	-	672	600	-	72
2004	450	-	-	-	450	401	-	49
2005	475	-	-	-	457	383	-	92
2006	362	-	-	-	362	330	-	32
2007	324	-	-	-	324	324	-	-
2008 (9월 말 현재)	417*	-	49**	-	368	256	-	112

* '08. 2. 29 정부조직개편 후 금융위로 이체된 관서업무비 예산액

** 예산절감액 49백만원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이전비(시설비)로 전용

□ 5년간 맞춤형복지 규모와 사용액 및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사용내역
2004	-	-	-
2005	37	36	맞춤형복지
2006	44	44	"
2007	50	48	"
2008 (9월 말현재)	126*	53	"

※ 맞춤형복지 제도는 '05년부터 도입

* '08. 2. 29 정부조직개편 후 금융위로 이체된 맞춤형복지 예산임

4. 5년간 국내외 석·박사과정 및 어학연수 신청자수 및 자격취득자 수

□ 5년간 국내외 석·박사과정 및 어학연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03	'04	'05	'06	'07
국내	석사	-	-	-	-	-
	박사	-	-	-	-	-
국외	석사	2	2	1	2	4
	박사	1	-	1	-	-
어학연수		-	-	-	-	-

* 해당 연도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개시자 수(금감위 기준)

□ 5년간 국내외 석·박사과정 학위 취득현황

(단위: 명)

구 분		'03	'04	'05	'06	'07
국외	석사	2	2	1	2	유학중
	박사	1	-	1	-	-

* 해당 연도 학위과정 개시자 중 학위취득자 수

** '07년 유학자는 '09년 복귀 예정

5. 5년간 임직원, 비정규직 수

☐ 공무원 정현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정원	71	74	74	81	205

* 재경부 금융분야 통합

☐ 비공무원 현황(계약직원 등)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정규직	0	0	0	5	12
비정규직	10	8	9	5	21
계	10	8	9	10	33

* 재경부 금융분야 통합

6. 3년간 업무관련 민원전수 및 주요내용과 사후조치

□ '06.1.1일 이후 '08.8.31일까지 舊재정경제부·舊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총4690건의 민원 처리를 완료

※ 舊재정경제부 2673건(57%), 舊금융감독위원회 316건(7%), 금융위원회 1701건(36%) 처리 완료

□ 주요 민원유형별 조치완료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연 도	기 관	건의	상담안내	질의	정 원	소 계
'06	재경부	32건	256건	259건	655건	1202건
	금감위	9건	26건	16건	64건	115건
'07	재경부	117건	357건	276건	548건	1298건
	금감위	12건	35건	15건	108건	170건
'08.1~2	재경부	25건	8건	73건	67건	173건
	금감위	1건	5건	9건	16건	31건
'08.3~8	금융위	301건	123건	286건	991건	1701건
총 계		497건	810건	934건	2449건	4690건

7. 2003 ~ 2008 내부감사자료

☐ 해당사항 없음

8. 최근 5년간(2003~2008.8) 금융위원회의 징계 퇴직현황과 그 처분사유

☐ 징계 : 해당사항 없음

☐ 퇴직내역 및 퇴직사유

성명	퇴직당시 직위(직급)	퇴직일자	퇴직내역/퇴직사유
이○○	위원장(장관급)	03. 3.17	의원면직
유○○	부위원장(차관급)	03. 3.21	의원면직/취업
이○○	상임위원(1급상당)	03. 5.10	의원면직/취업
박○○	기획과장(4급)	04. 5.28	의원면직/취업
이○○	위원장(장관급)	04. 8. 3	의원면직
이○○	서기관	05. 7.11	명예퇴직/취업
이○○	상임위원(1급상당)	05.12. 9	의원면직/취업
석○○	기획행정실장(1급)	06. 2.15	명예퇴직/취업
안○○	서기관	06. 2.27	의원면직/취업
양○○	부위원장(차관급)	06. 9.11	의원면직/취업
김○○	별정직 6급상당	06.10.25	의원면직/취업
이○○	별정직 5급상당	06.12. 4	의원면직/취업
문○○	상임위원(고위공무원)	07. 2.28	명예퇴직/취업

성명	퇴직당시 직위(직급)	퇴직일자	퇴직내역/퇴직사유
송○○	일반계약직4호	07. 6. 7	계약기간만료
정○○	기획행정실장(고위공무원)	07. 7.27	명예퇴직/취업
윤○○	위원장(장관급)	07. 8. 4	임기만료
윤○○	부위원장(차관급)	07.12.21	의원면직/취업
박○○	상임위원(고위공무원)	08.1. 2	명예퇴직/취업
김○○	위원장(장관급)	08. 3. 5	의원면직
이○○	부위원장(차관급)	08.3.13	의원면직
이○○	금융정보분석원장(고위)	08.3.28	명예퇴직/취업
전○○	FIU제도운영과장(4급)	08.4.30	명예퇴직/취업
김○○	혁신행정과장(3급)	08.5.15	명예퇴직/취업
윤○○	일반계약직5호	08. 6. 7	계약기간만료
하○○	일반계약직5호	08.8.1	의원면직/취업
장○○	일반계약직5호	08.8.20	의원면직
최○○	기획조정관(고위공무원)	09.9.2	명예퇴직/취업

9. 5년간 간부급 국외출장 내역

□ 5년간 간부급 국외출장 내역

<2003년도>

(단위 : 천원)

출 장 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집행액
2. 세계은행 주최 감독기관 국제회의 참가 및 미국 금융감독당국 인사 면담	미국	김석동 국장외 1	12.2~12.9	11,836
3. 제2차 한·일 고위급 회담 참석	일본	양천식 상임위원외 1	12.3~12.6	3,884

<2004년도>

(단위 : 천원)

출 장 목 적	출장지	출장자	출장일정	집행액
1.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와 업무협력약 정 체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우철 상임위원외1	3.15~3.19	4,325
2. 선진금융감독제도 및 운용실태 파악	미국·영국	양천식 상임위원외2	5.19~5.29 5.23~5.29	18,711
3. 선진금융감독제도 및 운용실태 파악	일본·호주	박대동 국장외1	5.29~6.5	10,527
4. 제2차 한·러 경제세미나 참석	러시아	이우철 상임위원외1	7. 6~7.11	11,645
5. IOSCO 고위급회담 참석	워싱턴	김용환 공보관외3	10.23~11.1	26,120
6. IOSCO 아태지역위원회 참석	싱가포르	윤용로국장	11.25~11.26	2,170
7. 개성공단 내 국내은행 지점개설 행사참석	북한	양천식 부위원장의외5	12.7	233
8. 한중 금융고위급회담 참석	중국	박대동 국장외1	12.14~12.17	2,985

<2005년도>

(단위 : 천원)

출 장 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집행액
1. 한일, 한중 금융감독 양자회의 참석	일본, 중국	김용환 공보관외 3	3.13~3.19	14,180
2. 제30차 국제증권감독자기구 참석	태국, 중국 스리랑카	양천식 부위원장의외 2	4. 3~4. 8	12,525
3. 한-중 보험산업발전 세미나 및 보험감독당국 교류회 참석	중국	양천식 부위원장의외 1	6.21~6.23	3,104
4. 스위스선물옵션협회(SFOA) 세미나 참석 및 미국 회계감독기구 방문	스위스, 미 국	문재우상임위원	9.6~9.15	9,223
5. 제12차 국제보험감독관회의(IAIS) 연차총회 참석	오스트리아	이우철 상임위원의외 1	10.15~10.23	11,977
6. 2005년 Global Financial Leadership Forum 참석	미국	윤용로국장	11.12~11.19	7,388
7. 제5차 한·일 고위급회담 참석	일본	양천식 부위원장의외 1	11.30~12.3	4,340

<2006년도>

(단위 : 천원)

출 장 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집행액
1. 제31차 국제증권감독자기구 연차총회 참석	홍콩, 베트남	양천식 부위원장의외 1	6.5~6.11	8,162
2. 제42차 국제보험회의(IIS) 연차총회 참석	미국, 캐나다	문재우 상임위원의외 1	7.15~7.22	12,219
3. 북유럽 금융감독기관 방문	러시아, 스웨덴	최수현국장	7.21~8.2	7,882
4. 동남아 금융감독기관 방문	태국, 싱가포르	정채웅 홍보관리관	9.3~9.8	3,357
5. 미국 회계감독기관(PCAOB)과 업무 협조 등	미국	윤용로 상임위원의외 1	10.21~10.29	10,631
6. MOU 체결등을 통한 금융감독당국간 협력확대를 위한 출장	독일, 헝가리 체코	문재우 상임위원의외 1	11.2~11.10	10,117
7. 제14차 한·중 금융협력 고위급 회의	중국	박대동국장	12.7~12.10	1,450

<2007년도>

(단위 : 천원)

출 장 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집행액
1. 미국 금융감독기관(SEC, FRB, FDIC)과의 MOU 체결 관련 실무협의	미국	최수현국장의 1	1.31~2.4	8,926
2. 세계은행 주최 세미나 참석	베트남	김용환국장의 1	3.1~3	1,187
3. 국제회계감사감독기관회의(IFIAR)참석	일본	김용환국장의 1	3.21~23	3,030
4. IOSCO 회의참석등	두바이, 인도 싱가포르	윤용로 상임위원의 2	4.8~15	15,478
5. The 10th KRX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07 참석	싱가포르, 홍콩	김용환국장	5.29~6.1	559
6.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이집트	최수현국장	10.6~21	8,127
7. 개성공단 진출 국내은행 운영현황 전학	북한	홍영만 홍보관리관의 4	11.8 11.13	394

<2008년도>

(단위 : 천원)

출 장 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집행액
1. Emerged Market 증권감독자 최고회의 참석 및 FRB, OCC등 참석	뉴욕, 워싱턴	이승우 부위원장의 1	2.7~2.14	11,569
2. VIP 미국 순방 수행출장	뉴욕, 워싱턴	전광우 위원장의 4	4.15~4.21	16,874
3. 제33차 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APRC 의장 출마	파리, 런던	전광우 위원장의 6	5.25~5.30	48,202
4. 한·영 미래포럼 참석	런던	김용환 상임위원의 1	6.1~6.5	8,547
5.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 국 금융당국과의 회담	베이징, 상하이	전광우 위원장의 6	6.12~6.13	8,293
6.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뉴욕	임승태사무처장	6.17~6.22	2,447
7.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런던, 프랑크푸르트	이종구상임위원	6.18~6.22	1,988

10. 5년간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2008.8)파견현황

- 성명, 파견근무지, 파견 전 직급 및 직무, 파견 후 직급 및 직무, 추진실적, 파견 전 연봉 및 업무추진비, 파견 후 연봉 및 업무추진비

☐ 민간근무휴직현황

성명	당시 직급	대상회사	기간	근무부서 (직위)
이○○	4급	삼성경제연구소	02.12.16~04.7.11	금융팀 (수석연구원)
김○○	3급	삼정회계법인	05.2.14~05.12.29	(고문)
고○○	3급	법무법인세종	06.7.3~07.7.2	금융파트 (선임연구원)
최○○	4급	법무법인태평양	06.1.9~07.8.2	금융제도 (전문위원)
정○○	3급	SK 텔레콤	07.7.3~08.7.2	경영경제연구소 (전문위원)
김○○	4급	삼일회계법인	07.8.2~09.7.31	감사회계자문본부 (senior manager)
한○○	4급	신영증권	06.7.10~09.7.9	IB본부 (부장)
임○○	4급	코너스톤	07.7.20~09.7.19	투자분석가


성명	휴직전 근무부서	복직후 근무부서	파견전 연봉	휴직회사 연봉
이○○	증권감독과	비은행감독과장	3,899만원	9천만원*
김○○	혁신행정과	홍보관리관	7,009만원	1억원
고○○	감독정책과	혁신행정과장	6,962만원	1억4천만원
최○○	감독정책과	의사운영팀장	5,288만원	1억원
정○○	감독정책과	휴직중	6,992만원	1억35백만원
김○○	감독정책과	휴직중	4,874만원	7천8십만원
한○○	재경부 서비스경제과	휴직중	4,595만원	9천9백만원 (당초 85백만)
임○○	재경부 국제금융과	휴직중	5,406만원	1억원

* 민간근무 휴직자의 연간 보수액은 휴직전 해당 공무원의 연간보수액의 2배 이내로 지도(중앙인사위 임용관리과, 06.7.3)

11.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

용역자료, 지원액, 지원방안 및 절차 등 상세자료

☐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 별첨 보도자료 참조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금융산업의 선진화
	7.24 (목) 12:00부터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책 임 자	우상현 과장 (2156-9850)	담 당 자	유영준 서기관 (2156-9851)	
배 포 일	2008. 7. 24.(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8 매

제 목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I. 추진 배경

- ☐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뒤쳐진 계층이 발생

*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감소 ⇒ 금융소외계층 확대 및 대부시장의 과도한 성장 ⇒ 고금리·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증가

-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 이에 정부는 사금융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자의 행태, 시장규모, 사금융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 등을 파악하고

- 이를 토대로 금번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저신용층 (신용등급 7~10등급, '08.5월말 현재) : 720만명 수준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 (만명)

- ('05말) 297.5 → ('06말) 279.6 → ('07말) 258.3 → ('08.5) 248.3

II.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반영

- ☐ 금융이용자의 사금융 이용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08.3월 ~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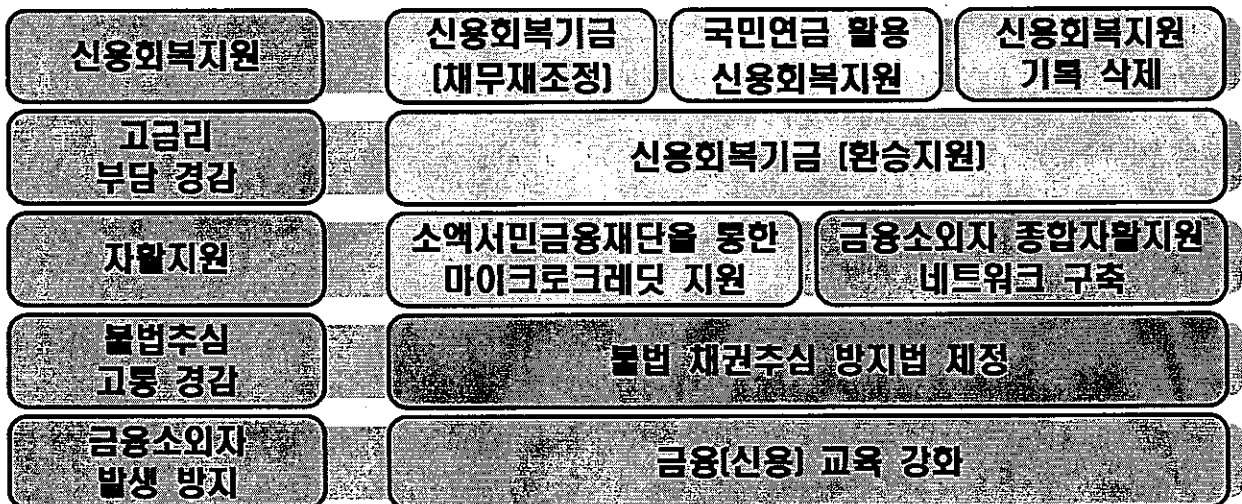
<급변 대책의 토대가 된 주요 조사내용>

- ①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대부업체 이용 128만명, 사인간 거래 61만명)
-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 (대부업체 대출규모 : 10.0조원)
- ③ (채무 규모)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대부업체의 경우 약 783만원,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약 2,341만원
- ④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연 72.2%*
* 무등록 대부업체 및 사인간 거래 포함
- ⑤ (상환의지) 사금융 이용자들의 84.0%는 자력 또는 주변사람의 도움 등을 통해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응답
- ⑥ (요구하는 정부대책)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 '생계비 대출', '불법채권 추심의 최소화', '취업기회의 제공' 순으로 나타남

Ⅲ.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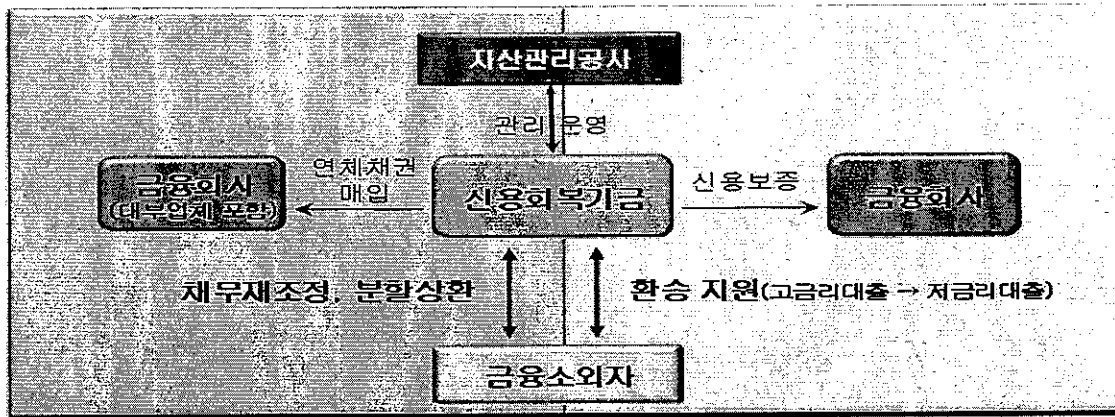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의 3대 원칙]

- 1) 원칙적으로 원금 탕감 없이 이자만 감면
- 2)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 (재정부담 최소화)
- 3) 금융소외자의 재할기회 제공을 기본으로 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



1. 신용회복기금 설치 ('08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09년중 지원규모 확대)

(1) 지원 방안



①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대출회사(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재조정

- (대상 규모)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3천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07.12말 기준)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함

* '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운용 방식) 원칙적으로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장기 분할 상환

* '신용회복지원증'으로 즉시 등록하되 2년간 성실상환시 동 기록 삭제

②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론)을 지원

- (대상 규모)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금리가 30% 이상인 3천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함

* '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천만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환승지원 실시

- (운용 방식) 금융회사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 보증을 실시하되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2) 재원 조달 방안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토록 추진
-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되기 전인 '08년 중에는 KAMCO 자체 자금 2,000억원*을 대여 형태로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정부 소유 은행 배분금이 투입되는 대로 우선 상환

(3) 기대효과

-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및 환승 지원으로 대상자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08년에는 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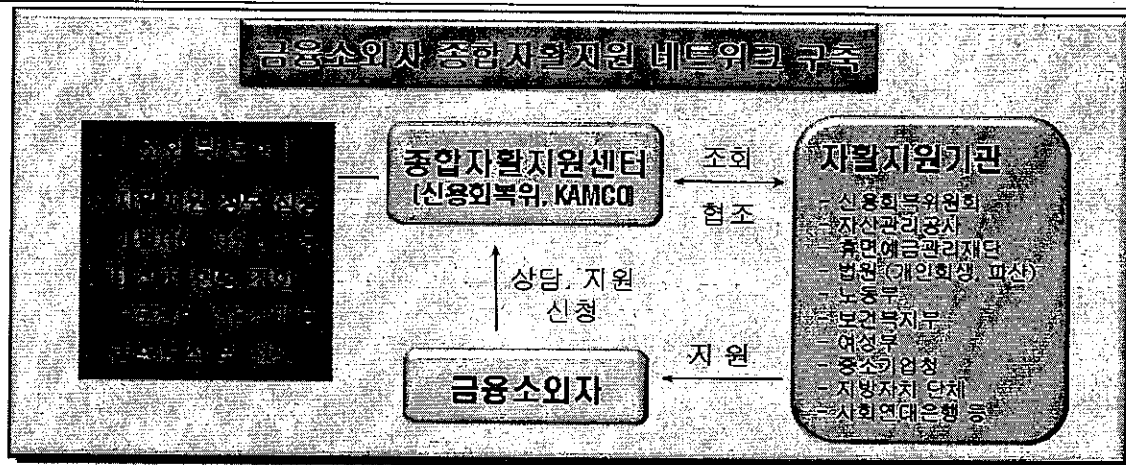
2.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08년 하반기 구축 개시 '09년중 본격 가동)

◇ 지금까지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에서 과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위주로 수행

⇒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 ① 각 기관에 산재한 자활지원 제도를 집중하여 지원내용·지원대상·자격요건에 대한 분석
- ② 금융소외자의 복지수급 및 자활제도 수혜현황 등을 종합 조회
- ③ 금융소외자의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제도 도출



3.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09년중)

- ☐ 휴면예금의 반환율과 운영 수익률이 안정되면, 소액대출지원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

* '08년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액은 280억원 수준

-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금융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가 과정'을 포함시켜 상설 운영을 추진

4. 민간부문의 금융소외자 지원 활성화

- ① 금융회사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도입 검토 ('09년중)
- ② 휴면예금의 기부절차 마련 ('08년 하반기)
- ③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한도 제공 체크카드 발급, 주택 임차료 보증 지원 등 방안 검토 ('08년 하반기)
- ④ 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마련 ('08년 하반기)

5.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추진 ('08년 하반기 국회제출)

- ☐ 채권추심행위관련 규제를 단일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

* 현재 채권 추심관련 규제는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에 상이한 내용으로 산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신용회복기금 유형별 지원 사례(예시)

사례 1. 재기 기회를 찾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A씨

성 명(연령)	A○○(40세)	직 업	임시직(청소용역)
채 무 현 황	00카드 1천2백만원	소득 및 특이사항	월 80만원(불안정) 기초수급자
<p><현 황></p> <p>□ A씨는 2001년경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병마에 시달리면서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곤궁한 생활 끝에 2003년 정부의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 아이들을 키우려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중 어느 순간 빚이 급증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 다니고 있는 직장도 불안정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 늘어나는 카드빚을 도저히 갚기 어려운 상태 			
<p><지원 내용></p> <p>□ A씨는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남에 따라 분할납부 계획을 수립하여 원금에 대해 5년에 걸쳐 납부기로 함 ○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한 긴급 생활 자금을 조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 건강이 회복됨 ○ 현재 직장에서 5년 넘게 청소용역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자활네트워드를 방문하여 취업 상담을 받고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청소업무 전문화 교육을 알선받아 정식으로 청소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됨 			

사례 2. 기존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B씨

성 명(연령)	B○○(27세)	직 업	방문교사
채 무 현 황	저축은행 400만원 대부업체 400만원	소득 및 특이사항	월 100만원
<p><현 황></p> <p>□ B씨는 대학 재학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4곳에서 각각 200만원씩 총 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및 연체 경력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져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게 되었음 ○ 아르바이트로 이자를 갚고, 졸업 후 취직을 하면 어렵지 않게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었음 ○ 어렵게 방문교사로 취직을 하여 연체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으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채무는 늘어난 연체이자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업체로부터의 야간 추심, 아내에 대한 채무 통보,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음 ○ 어떻게든 채무를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배드뱅크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대부업체 채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듣고 신용회복을 포기한 상태임 			
<p><지원 내용></p> <p>□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자에만 국한되었으나 금번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 채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B씨도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씨는 본인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채무를 인수한 신용회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매월 20만씩 40개월간 변제하여 채무를 모두 갚아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또한,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금지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의 유지가 가능해짐 			

사례 3. 환승론을 통해 딸아이의 교육비를 되찾은 C씨

성 명(연령)	C○○(35세)	직 업	직장인
채 무 현 황	캐피탈 1,500만원 대부업체1,000만원	소득 및 특이사항	월 200만원
<p><현 황></p> <p>□ C씨는 6살짜리 딸 및 가정주부인 아내와 함께 살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씨는 캐피탈사에서 1,500만원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 급전이 필요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용에 따른 대출 한도로 추가 대출이 거부되어 할 수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음 ○ 캐피탈사의 대출에 추가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이 1,000만원으로 늘어나자 C씨는 한 달에 70여만원의 이자를 감당하여야 하기에 선택적으로 딸아이 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었음 			
<p><지원 내용></p> <p>□ C씨는 종합 자활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 환승론을 신청하였고 신용회복기금은 C씨의 캐피탈 및 대부업체 채권 2,500만원에 대한 부분 보증을 지원하여 협약을 맺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 70여만원의 이자가 50여만원으로 줄어들어 따라 차액분으로 딸아이의 추가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음 			

12.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건, 억원)

	상담 및 접수		채무조정		
	상담	접수	건수	조정 전 금액	조정 후 금액
‘05년	646,448	193,698	208,231	5,763	4,331
‘06년	305,037	85,826	86,890	2,490	1,422
‘07년	251,948	63,706	61,597	1,875	8,500
‘08년 1~8월	271,113	50,029	42,357	1,341	550
누 계	2,488,330	743,666	703,068	229,444	169,522

13.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대책’의 8월말 현재 사업 실적

□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08. 6월	'08. 7월	'08. 8월	합 계
신 청	2,168	1,019	2,062	5,249

※ 신청접수 후 심사→약정체결→대출실행의 단계로 진행

14. 5년간 특별교부금 금액 및 지출금액, 지출사유,
지급처

15. 5년간 공관 및 합숙소 관리비 내역

16. 5년간 임차사택 및 주택자금 대여 지원 현황

☐ 해당없음

17. 06년~08년 8월말 현재, 연구용역 내역(용역명,
기관, 금액, 용역기간, 계약방식)

□ 연구용역 내역은 첨부와 같음

- 06년~07년 용역내역은 舊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연구용역을 취합한 것임

*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08년 3월 출범

□ 2006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제 목	기 간	금 액	수행기관 (연구자)
1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방안 연구	2006-07-26 ~ 2007-03-19	43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규업)
2	금융권 신용공여 관련 잠재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2006-12-11 ~ 2007-02-28	28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3	주요선진국의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시사 점 연구	2006-10-18 ~ 2006-12-27	25.5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4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2006-09-08 ~ 2006-12-15	20	보험개발원 (이태일)
5	주요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2006-09-29 ~ 2006-12-15	22.5	한국금융연구원 (이병훈)
6	금융규제 인식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	2006-03-24 ~ 2006-12-01	30	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
7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제도 설 계방안에 관한 연구	2006-05-22 ~ 2006-11-30	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중진)
8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 제개선 방안	2006-10-10 ~ 2006-11-27	30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9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2006-08-28 ~ 2006-11-27	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형도)
10	갈등사례분석-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2006-08-22 ~ 2006-09-21	9.5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11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개선 방안 연 구	2006-06-12 ~ 2006-09-11	28.5	한영회계법인 (국균)
12	서민금융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006-05-30 ~ 2006-08-29	25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13	성과관리 시스템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용 역	2006-05-04 ~ 2006-07-04	26	(주)다산이앤이 (김영훈)
14	금융집적지역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03-30 ~ 2006-06-30	29.5	한국채권연구원 (박동규)
15	신용정보인프라 종합개선방안 마련을 위 한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조사.연구	2006-04-17 ~ 2006-06-16	40	한국금융연구원 (강경호)

□ 2007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제목	기간	금액	수행기관 (연구자)
1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07.10.19~ 08.03.04	45	한국증권 연구원 (노희진)
2	아시아 전자금융시장의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	07.12.18~ 08.02.17	3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충열)
3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31	30	한국금융 연구원 (이병윤)
4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07.11.19~ 07.12.28	29	한국금융 연구원 (이상재)
5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조사	07.10.01~ 07.12.24	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준)
6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방안	07.09.07~ 07.12.20	21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신인석)
7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	07.11.05~ 07.12.20	33	BHP 코리아(주) (한국회)
8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07.09.21~ 07.12.20	28.5	한국법제 연구원 (박찬호)
9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07.10.05~ 07.12.20	3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상일)
10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07.10.05~ 07.12.20	28.5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 이저리 (강동원)
11	역외금융기관, 역외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07.09.05~07.12.20	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형도)
12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현황 분석과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07.10.26~ 07.12.17	38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13	금융업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분석	07.11.02~ 07.12.17	19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14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07.07.30~07.12.14	33.2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15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07.11.07~ 07.12.07	10	케이티지엘에스(주) (위명숙)
16	기업 상장제도의 국제정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07.07.24~07.10.08	22	한국증권연구원 (엄경식)
17	어음제도 개선방안	07.02.01~07.04.30	14.25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 2008년도 발주용역보고서 상세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제 목	기 간	금 액	수행기관 (연구자)
1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04~ 08.10. 3	3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2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용역	08.7.21~ 08.12.20	40	아주대학교 (이진국)
3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범 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01~ 08.12.24	40	법무법인(유)태평양 (정의중)
4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08.8.13~ 08.12.12	37	언스트앤영어브바이 저리(주) (정태수)
5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구용역	08. 09.02 ~08.11.21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강홍)
6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 템 개선 연구용역	08.8.0 6 ~08.11. 4	46	(사)국제금융센터 (오창석)
7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연 구용역	08.7.28~ 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김영모)
8	외환시장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11~8.29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웅)

18. 5년간 감사원 감사자료 및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사후조치

실시연도 및 기관	제 목	주요 지적 사항	조치 및 회신 내역
2008 (감사원)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문서를 캐비넷 등 문서보관함에 시진하여 보관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금감위 결산감사	□ 특정업무경비를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주 의)	주의조치
2008 (감사원)	기획재정부 결산감사	□ 금융법규 영문화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주의)	주의조치
2007 (감사원)	자금세탁방지 대책 추진실태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 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신용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혐의거래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제재기준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혐의거래보고 감독 등을 위하여 최소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조치(통보)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통보)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개선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7 (감사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감사	<input type="checkbox"/> 보증규모 적정 관리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증업체 보증졸업 방안 마련(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복보증문제 개선 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연계투자 업무 폐지방안 마련(통보)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금 사후관리 업무 지도·감독 강화(통보)	신·기보 발주 용역을 참고한 정책수립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6 (감사원)	금감위, 금감원 기관운영실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펀드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미비(통보)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소액공모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반영 계획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5 (감사원)	중소·벤처기업 보증(보험) 지원실태	<input type="checkbox"/>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감독체계 불합리(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출연을 결정 부적정(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출연금 납부 대상기관 선정 부적정(통보)	신보법 · 기보법 시행규칙 개정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2004 (감사원)	금융기관 감독실태	<input type="checkbox"/>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정책기능 분산(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 겸임 부적정(통보) <input type="checkbox"/> 동일사항의 권역별 금융감독법규 상이(통보)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법령 제·개정 협조 미흡(통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조치 결과 및 계획 감사원 회신

19. 5년간 퇴직자 및 이직자의 재취업 현황

성 명	퇴직전 직책	퇴직일자	퇴직사유	재취업 기관	직 책
박00	기획과장	04. 5.28	의원면직	코스닥증권시장	전무이사
이00	위원장	04. 8. 3	"	-	
정00	서기관	04. 8.31	"	주택금융공사	팀장
이00	부위원장	04. 9. 3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00	기획행정실장	04.10.15	"	열린우리당	수석 전문위원
이00	서기관	05. 7.11	"	금융감독원	팀장
이00	상임위원	05.12. 9	"	금융감독원	부원장
석00	기획행정실장	06. 2.15	"	하나금융지주	상근 감사위원
안00	서기관	06. 2.27	"	한동대	교수
양00	부위원장	06. 9.11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문00	상임위원	07. 2.28	"	금융감독원	감사
정00	기획행정실장	07. 7.27	"	보험개발원	원장
윤00	위원장	07. 8. 3	임기만료	-	-
윤00	부위원장	07.12.21	의원면직	중소기업은행	행장
박00	상임위원	08.1.2	"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00	위원장	08.3.5	"	-	-
이00	부위원장	08.3.13	"	-	-
이00	FIU원장	08.3.28	"	증권선물거래소	시장 감시위원회 위원장
전00	제도운영과장	08.4.30	"	은행연합회	감사
김00	혁신행정과장	08.5.15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 관련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 일체**

**21.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 관련
우리금융 및 하나금융,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의 컨소시엄 구성 관련 자료**

□ (질의23 관련) 동 문건은 향후 미국 측(美정부 및 리먼)과의 분쟁소지나 국제 거래관계에서의 관례* 등을 감안, 비공개함이 바람직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거래관계 CA(Confidential Agreement; 비밀유지약정서)상 거래내용의 일방적인 공개는 국제 관행에 어긋나는 측면

□ (질의24 관련)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산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주식시장 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책

□ 정부는 리먼브러더스 파산(9.15) 및 美 구제금융법안 부결(9.29) 등 미국발 악재로 인한 국내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위, 재정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구성(9.16)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 9.22~12.31간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공매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 (9.24, 9.30 발표)

- 10.1일부터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ale)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

* 결제불이행 위험이 큰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은 이미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공매도시 결제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대차거래시 담보비율 상향 조정, 대차거래 공시 강화 등 관련 규제를 강화

○ 중국·중동 등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외 IR 시행을
통해 외자 유치 지원

○ 이와 함께 시장불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서는 철저히 조사·처벌

□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우리나라 증시는
美 구제금융법안 부결 등 미국발 시장 충격에 대하여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 구제금융법안 부결 이후 주요국 증시 하락폭(%)

미국 (DOW)	영국 (FTSE)	일본 (Nikkei)	호주 (All ORD)	대만 (TWI)	한국 (KOSPI)
△6.98	△5.30	△4.12	△4.30	△3.54	△0.57

○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속적으로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응해 나갈 것임

23.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방안 최종보고서

- 신·기보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 추후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통합여부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4.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 근거

□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근거 및 부과기준은 은행법 등 각 개별 금융업법에 존재하며

* 예) 은행법 65조의3에 의하면 은행이 동일차주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 위반 시 신용공여한도 초과액의 10%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은 금융위 감독규정인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에 근거

* 제·개정시 행정 예고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치고 금융위 및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의해 대외 공개

- 동 기준에는 과징금 산정의 일반원칙,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가중 및 감경 사유 및 조정 비율 등이 규정

※ 첨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과징금의 부과통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과징금) 제6항·제206조의12(과징금의 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와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 「은행법」 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 위반행위 제외),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10억원 이하 (1단계)	×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 7/2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단계)		× 7/4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 7/80
1조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기준금액	기본과징금
10억원 이하	기준금액×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9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0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4단계 기본부과율
1조원 초과	1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1단계 기본부과율 +9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2단계 기본부과율 +9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3단계 기본부과율 +9,000억원×법정최고부과비율×4단계 기본부과율 +(기준금액-1조원)×법정최고부과비율×5단계 기본부과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1천만원 이하 (1단계)	×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단계)		× 7/20
5천만원 초과 25억원 이하 (3단계)		× 7/40
2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단계)		× 7/80
10억원 초과 (5단계)		× 7/160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4)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아래의 다. (3), (4),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text{가중금액} = \text{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times (\text{위반일수}-1) \times 0.1\% \text{ 또는 } 0.2\%^{**}$$

* 180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180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180일 초과일수에 적용

- (2) 최근 3년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

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증권회사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위의 다. (1), (2)를 제외하고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위반행위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6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3) 위반행위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특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위의 6. 가., 나. 및 다.의 감면사유를 고려하여 산정한 부과과징금이 기본과징금의 50%이하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기본과징금의 50%로 한다.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4-1. 최근5년간(2004 ~ 2008.8) 과징금 부과 수납 건수 및 건별 부과사유(상세)

□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및 수납실적

(단위 : 백만원,건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부과 ⁽¹⁾	수납 ⁽²⁾	부과	수납	부과	수납	부과	수납	부과	수납
여전법		250 (4)	100 (1)	100 (1)			50 (1)	50 (1)		
증권거래법	17,004 (71)	17,576 (84)	4,566 (58)	8,795 (66)	10,082 (29)	6,150 (30)	9,557 (50)	9,235 (46)	4,223 (26)	3,113 (19)
지주회사법		187 (1)		140 (1)						
은행법	11 (1)	842 (2)							2,992 (1)	2,992 (1)
보험법	2,598 (4)	2,598 (4)	3,284 (3)	2935 (1)	97 (2)	446 (4)	1,076 (3)	1,076 (3)		
계	19,613 (76)	21,453 (95)	7,950 (62)	11,970 (69)	10,179 (31)	6,596 (34)	10,683 (54)	10,361 (50)	7,215 (27)	6,105 (20)

(주1) 부과는 부과년도 기준

(주2) 수납은 수납년도 기준

○ 상세 부과 현황은 붙임 참조

최근5년간(04년 ~ 08년 8월말) 과징금 부과·수납 건수 및 건별 부과사유

채납사업자 명	최초 부과금	부과사유	부과일	납부기한	완납일	부과금 잔액
OO정기	939,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1-30	2004-04-04		939,400,000
조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1-30	2004-04-04		30,000,000
박OO	1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1-30	2004-04-04	2006-11-15	-
OOSIT	63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1-30	2004-04-04		639,000,000
OOO테크	87,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2-16	2004-04-21	2004-04-20	-
아이OO	137,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2-16	2004-04-21	2006-01-20	-
홍OO코	18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3-04	2004-05-08	2004-10-04	-
(주)파써OOO	38,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3-04	2004-05-08	2004-05-07	-
(주)와이OO	22,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3-04	2004-05-08	2004-05-07	-
신일OO(주)	46,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3-04	2004-05-08	2004-05-10	-
(주)마담OO	43,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3-10	2004-05-14	2004-05-13	-
세광OOO(주)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3-15	2004-05-19	2004-05-19	-
OO컴테크	361,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3-15	2004-05-19	2005-03-29	-
티비케이OO	169,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3-15	2004-05-19	2004-10-04	-
OOOO전자	217,521,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4-16	2004-06-20	2004-10-04	-
OOO텔레콤	263,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4-16	2004-06-20	2004-07-14	-
OOOO소프트	18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4-16	2004-06-20	2004-06-25	-
OOO클럽	16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4-16	2004-06-20	2004-06-25	-
엔써OOOO	185,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4-29	2004-07-03		185,600,000
OO정보통신	454,123,69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5-04	2004-07-08		394,123,690
OO림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5-27	2004-07-31	2004-12-17	-
OO창업투자(주)	68,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5-27	2004-07-31	2004-07-29	-
(주)세O	8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5-27	2004-07-31	2004-07-29	-
(주)두O	30,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5-27	2004-07-31	2004-07-30	-
(주)시OO	21,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5-27	2004-07-31	2004-07-30	-
김OO	3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7-21	2004-09-24	2004-10-21	-
기가OOO	70,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7-21	2004-09-24	2004-10-21	-
오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7-22	2004-09-25	2005-01-24	-
나리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7-22	2004-09-25	2004-09-24	-
쌍용OO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7-22	2004-09-25	2004-09-30	-
디미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7-22	2004-09-25	2004-12-03	-
이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7-22	2004-09-25	2004-11-11	-
넥OO	134,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7-22	2004-09-25	2004-10-25	-
윤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8-27	2004-10-31		20,000,000
에이엠OO	119,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8-27	2004-10-31	2004-12-30	-
청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8-27	2004-10-31		22,000,000
(주)업O	2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8-27	2004-10-31		196,000,000
한국OOOO통신	47,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8-27	2004-10-31	2004-10-25	-
OOO소프트	10,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8-27	2004-10-31	2004-10-29	-
여당OOOOO	12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8-27	2004-10-31	2004-11-01	-
해원OOO	108,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8-27	2004-10-31	2004-11-03	-
OO생명보험	1,76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4-09-06	2004-11-10	2004-09-13	-
OO은행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09-16	2004-11-20	2004-11-22	-
OO생명보험	828,300,000	보험업법 위반	2004-09-30	2004-12-04	2004-12-06	-
OOO화재보험	3,700,000	보험업법 위반	2004-09-30	2004-12-04	2004-12-02	-
OOOO홈어슈어런스	4,500,000	보험업법 위반	2004-09-30	2004-12-04	2004-12-09	-
OO회계법인	77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0-01	2004-12-05	2004-12-06	-
OOOO반도체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0-01	2004-12-05	2004-12-06	-
OO은행	11,700,000	은행법 위반	2004-10-20	2004-12-24	2004-12-24	-
OO전장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0-28	2005-01-01	2004-12-30	-
OO바이오링크	95,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0-28	2005-01-01	2004-12-31	-
OO정보기술	17,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0-28	2005-01-01	2005-01-06	-
OO석유화학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0-28	2005-01-01	2005-01-06	-
OO투자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0-28	2005-01-01	2005-01-03	-
OO소프트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0-28	2005-01-01	2005-01-13	-
고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0-28	2005-01-01		30,000,000
OOOO기술	47,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1-01	2005-01-05	2005-01-05	-
김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1-01	2005-01-05	2005-04-29	-
엔에스OO	32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1-01	2005-01-05		321,200,000
OO랜드	1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1-01	2005-01-05	2005-03-15	-
한국OO	107,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1-01	2005-01-05	2005-01-05	-
김OO	1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1-23	2005-01-27		10,000,000
태산OOO	8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09	2005-02-12	2005-02-11	-
OOO시스	27,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09	2005-02-12		27,000,000
국제OOOO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09	2005-02-12	2005-02-14	-
김OO	1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13	2005-02-16	2005-02-16	-

채납사업자 명	최초 부과금	부과사유	부과일	납부기한	완납일	부과금 잔액
코스모000	53,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13	2005-02-16	2005-05-12	-
OO건설	1,616,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17	2005-02-20	2005-02-21	-
동부OO	1,257,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17	2005-02-20	2005-02-17	-
OO정기	73,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23	2005-02-26	2007-09-18	-
노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28	2005-03-03	2005-02-28	-
장OO	1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28	2005-03-03	2005-03-03	-
OO회계법인	39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28	2005-03-03	2005-03-02	-
OOOO	105,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28	2005-03-03	2006-12-29	-
OO어스	231,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28	2005-03-03	2005-03-03	-
OO상선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4-12-28	2005-03-03	2005-03-03	-
2004년 76건 소계						
OO파미낸셀	100,000,000	여신전달금증업법 위반	2005-01-24	2005-02-18	2005-02-17	-
OO포라	79,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2-07	2005-04-13	2005-04-13	-
OO생명보험	2,935,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5-02-28	2005-05-04	2005-05-04	-
아OO	14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3-25	2005-05-29	2005-05-30	-
대아OOO	5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3-25	2005-05-29	2005-03-25	-
세OO	48,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3-25	2005-05-29	2005-05-30	-
삼문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3-25	2005-05-29	2005-05-30	-
아이OO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3-25	2005-05-29	2005-05-30	-
류OO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3-25	2005-05-29	2005-05-30	-
신일OO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3-25	2005-05-29	2005-06-20	-
영창OOOO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3-25	2005-05-29	2005-05-30	-
OO테크놀로지	16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4-21	2005-06-25	2005-11-14	-
모OO	11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4-21	2005-06-25	2005-06-27	-
포이OO	105,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4-21	2005-06-25	2005-08-25	-
OO창립투자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4-21	2005-06-25	2005-06-24	-
O실업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4-21	2005-06-25	2005-06-24	-
OO테크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4-21	2005-06-25	2005-06-27	-
삼양OOO	9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16	2005-07-20	2005-07-20	-
한국OOOOO	25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2005-09-06	-
대한OOOOOO	6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2005-08-01	-
와이즈OOO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2005-09-30	-
베네데스OOO	2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21,400,000
한성OOO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2005-07-29	-
현대OOO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18,000,000
신일OO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2005-08-01	-
OO정보통신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2005-07-29	-
파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2005-07-29	-
OO캐피탈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5-26	2005-07-30	2005-07-29	-
OO기업	6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6-22	2005-08-26		68,300,000
OO디엠씨	24,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6-22	2005-08-26	2005-08-26	-
(주)무OO	110,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5	2005-10-29	2005-11-01	-
OOO씨정보통신(주)	5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5	2005-10-29	2005-10-31	-
김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5	2005-10-29	2005-10-31	-
김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5	2005-10-29	2005-10-31	-
OOOO조인트	21,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5	2005-10-29	2005-11-01	-
OO메카(주)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5	2005-10-29	2005-11-01	-
OO건설(주)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5	2005-10-29	2005-10-19	-
(주)시스OO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5	2005-10-29	2005-10-28	-
OOOO아이씨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5	2005-10-29	2005-10-28	-
OOOO고속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8-25	2005-10-29	2005-10-27	-
강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9-09	2005-11-13	2005-11-08	-
(주)제일OOO	11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9-09	2005-11-13	2005-11-28	-
OOOOOO상호저축은행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9-30	2005-12-04	2005-12-01	-
OO기계기술(주)	1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09-30	2005-12-04	2005-12-02	-
유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31	2006-01-04	2005-12-27	-
한OO우레탄공업(주)	3,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3	2006-02-26	2005-12-29	-
OO정보통신(주)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0-31	2006-01-04	2006-01-02	-
OOOO파이(주)	600,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1-14	2006-01-18	2006-01-19	-
OO화재해상보험(주)	30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5-11-14	2006-01-18	2006-01-18	-
OOOO코퍼레이션	181,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1-24	2006-01-28		181,800,000
(주)알O엘바이오	3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3	2006-02-26	2006-01-06	-
OO생명보험(주)	47,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5-12-23	2006-02-26	2006-02-20	-
OO온반도체(주)	5,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3	2006-02-26	2006-01-10	-
OOOO	37,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3	2006-02-26	2006-02-27	-
(주)엘립OO[구 (주)인츠커뮤니티]	39,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3	2006-02-26	2006-04-03	-
최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3	2006-02-26		30,000,000
(주)대OO	13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3	2006-02-26	2006-12-29	-

제납사업자 명	최초 부과금	부과사유	부과일	납부기한	환납일	부과금 잔액
(주)세이브존0000	26,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6	2006-03-01	2006-02-28	-
00회계법인	10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6	2006-03-01	2006-02-28	-
000건설(주)	30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6	2006-03-01	2006-03-02	-
김OO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6	2006-03-01	2007-07-03	-
(주)우리OO	1,035,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5-12-26	2006-03-01	2007-07-03	-
2005년 82건 소계						
OO원테크(주)	5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2-09	2006-04-15	2006-04-14	-
000엔터프라이즈(주)	1,222,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3-10	2006-05-14		1,222,700,000
남광OO(주)	7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5-15	2006-07-19	2006-07-19	-
이OO	1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5-15	2006-07-19	2006-07-19	-
대OO(주)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5-15	2006-07-19	2006-07-19	-
(주)세종OO	4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5-15	2006-07-19	2006-07-19	-
OOOOOO네트웍스	159,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5-15	2006-07-19	2006-11-30	-
(주)예일OOOO	833,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6-09	2006-08-13	2007-03-29	-
OOO화재해상보험(주)	64,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06-09	2006-08-13	2006-08-09	-
(주)성OO	268,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6-22	2006-08-26	2006-08-25	-
(주)코리아OO	76,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6-22	2006-08-26	2006-12-22	-
OOOO네트웍스	39,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6-22	2006-08-26	2006-09-11	-
OOOO브릿지	37,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6-22	2006-08-26	2006-08-28	-
OOOO코트	2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6-22	2006-08-26	2006-08-25	-
OOOO이컬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6-22	2006-08-26	2006-08-25	-
(주)무OO	1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6-22	2006-08-26	2006-08-28	-
OOOOOOOO	2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4	2006-10-28	2006-10-30	-
(주)넷시큐어OOOOOO	11,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8-24	2006-10-28	2006-10-30	-
OOO손해보험(주)	33,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6-08-28	2006-11-01	2006-11-01	-
OO미디어(주)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9-11	2006-11-15	2007-02-16	-
OOOO테크놀로지	96,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09-28	2006-12-02	2006-12-04	-
OO저지(주)	25,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1-09	2007-01-13	2007-01-12	-
(주)티보OO	5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1-09	2007-01-13	2007-07-16	-
OOOO통신(주)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1-09	2007-01-13	2007-01-15	-
OOOOOO상호저축은행	36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1-23	2007-01-27	2007-01-26	-
OO메카(주)	231,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2-08	2007-02-11	2007-02-12	-
OOOO개발(주)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2-08	2007-02-11	2007-02-12	-
OO인터랙티브(주)	1,112,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2-08	2007-02-11	2007-07-02	-
OOOOOO창업투자(주)	6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2-22	2007-02-24	2007-02-09	-
OOOO에너지	5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2-22	2007-02-24	2007-03-22	-
OO기술금융(주)	3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6-12-22	2007-02-24	2007-02-23	-
2006년 31건 소계						
(주)에스엔OOO	247,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02	2007-04-08	2007-06-13	-
(주)큐OO	25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5	2007-04-21	2007-04-20	-
(주)코스모OOO	25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5	2007-04-21	2007-04-25	-
(주)세고엔OOOOO	245,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5	2007-04-21	2007-04-23	-
김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5	2007-04-21	2007-04-23	-
(주)티에스엔OOO	12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2-15	2007-04-21	2007-06-12	-
케이컬인트OOOOOOO	50,000,000	여신전환금융융합법 위반	2007-03-16	2007-04-10	2007-03-27	-
(주)케이OO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3-19	2007-05-23	2007-05-23	-
OOOO	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3-19	2007-05-23	2007-05-07	-
(주)세OO	44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3-30	2007-06-03	2007-06-04	-
OOOO생명보험(주)	18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4-02	2007-06-06	2007-06-07	-
OO소(주)	25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13	2007-06-17	2007-06-15	-
OO보증보험(주)	645,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5-15	2007-07-19	2007-07-19	-
OOOO텔레콤	17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8	2007-08-01	2007-07-31	-
OOOO토로	9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8	2007-08-01	2007-11-21	-
OOOO코리아	2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8	2007-08-01	2007-08-01	-
OOOO기술	2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8	2007-08-01	2007-08-01	-
OO관람개발(주)	156,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22	2007-08-26	2007-08-24	-
OO선물(주)	7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22	2007-08-26	2007-08-23	-
OOOO플랜트(주)	148,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22	2007-08-26	2007-08-27	-
(주)세OO	359,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10-31	2007-11-23	-
(주)삼화OOOOO	2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10-31	2007-12-07	-
고OO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10-31		2,000,000,000
(주)나노OO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10-31	2007-10-30	-
(주)모텔OOOOO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10-31		50,000,000
(주)모리OOO	6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10-31	2007-10-30	-
(주)티에스엔OOO	8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10-31	2008-01-09	-
한국창업OO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7	2007-10-31	2007-10-25	-
OO생명보험(주)	249,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7-08-27	2007-10-31	2007-10-30	-
(주)디유OO	244,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9-11	2007-11-15	2007-11-15	-

제출사업자 명	최초 부과금	부과사유	부과일	납부기한	환납일	부과금 잔액
(주)솔트OO	2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9-11	2007-11-15	2007-11-15	-
OOOO산업(주)	14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9-11	2007-11-15	2007-12-14	-
이OO	2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9-11	2007-11-15	2007-12-20	-
OOOO로스(주)맥커스	4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12	2007-12-15	2007-12-17	-
김OO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12	2007-12-15	2007-12-17	-
(주)유비OO	45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12	2007-12-15	2007-12-17	-
OOOO	23,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2007-12-29	2007-12-27	-
(주)나노OO	48,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2007-12-29	2007-12-27	-
OOOO	324,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2007-12-29	2008-07-29	-
석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2007-12-29		16,000,000
박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25	2007-12-29		20,000,000
OOOOOOOO	560,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2	2008-01-16		560,700,000
OOOOOO	43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2008-01-26	2008-01-28	-
김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2008-01-26	2008-01-25	-
OOOOOOOO	1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2008-01-26		180,000,000
이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22	2008-01-26		30,000,000
OOOOOOOO(주)	14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145,100,000
OOOOOOOO(주)	152,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152,400,000
산양OO(주)	31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316,700,000
(주)삼화OOOO	144,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2008-02-27	-
윤OO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30,000,000
(주)한O	325,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325,300,000
생표OO(주)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2008-02-27	-
(주)한신OOO	45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4	2008-02-27	2008-07-09	-
2007년 54건 소계						
OO은행	2,992,000,000	은행법 위반	2008-02-22	2008-04-27	2008-04-24	-
OOOO	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2008-06-01	2008-05-23	-
OOOOOOOO	8,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2008-06-01	2008-05-30	-
OOOOOO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2008-06-01	2008-06-02	-
OOOOOOOOOO	441,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2008-06-01		441,700,000
임OO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3-28	2008-06-01		16,000,000
김OO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4-24	2008-06-28		40,000,000
동아OOOOOO	40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4-24	2008-06-28		407,800,000
OOOO소프트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5-26	2008-07-25		61,900,000
OOOOOO	318,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2008-08-12		318,700,000
조OO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2008-08-12		20,000,000
OOOOOO	1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2008-08-12		130,000,000
OOOOO	20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2008-08-12	2008-08-12	-
(주)네오OO	48,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3	2008-08-12	2008-08-12	-
OOOOOOOOOO	994,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17	2008-08-18	2008-08-18	-
OOOOOO	72,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008-08-25		72,500,000
OOOOOOOO	11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008-08-25		115,500,000
OOOOOO	10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008-08-25	2008-08-25	-
OOOOOOOO	8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008-08-25	2008-08-25	-
OOOOOO	77,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008-08-25	2008-08-25	-
OOOOOO	4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008-08-25	2008-08-25	-
OOOOOOOOOO	1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6	2008-08-25	2008-08-25	-
OOOOOOOOOO	820,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30	2008-08-29		820,800,000
OOOOOOOO	9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4	2008-09-29		98,300,000
한국OOOOOOOO	49,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9	2008-10-02		49,400,000
박OO	1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2008-10-27		17,500,000
이OO	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1	2008-10-27		10,500,000
2008년 27건 소계	7,214,500,000					
총 합계						

25. 최근 5년간 과징금 관련

25-1. 최근 5년간 징수한 과징금 중 불복건수 및 발생사
유별 내역

25-2. 최근 5년간 과징금 관련 소송제기 건수 및 발생사
유별 내역

25-3. 최근 5년간 과징금 관련 소송의 승소건수, 승소율
및 패소 건수, 패소사유, 패소율

□ (25-1) 과징금관련 행정심판 제기 현황

제기 년도	사 건 명	청구인	과징금부과 사유	결과
2007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고○○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기각 (‘08.9.23)

□ (25-2) 과징금관련 행정소송 제기 현황

제기 년도	청구인	과징금 부과사유	소송결과
2004	(주)화인쎄트로닉스	주요경영사항 공시위반	원고 소 취하
"	삼일회계법인	유가증권신고서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금융위 승소 (‘08.5.14)
2005	삼일회계법인	"	금융위 승소 (‘08.5.14)
"	(주)동아정기	회사정리절차 신청사실 지연 공시	금융위 승소 (‘06.6.22)
2006	플래넷팔이(주)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3심 계류중 (1~2심 : 금융위 승)
2008	(주)대한은박지	"	1심 계류중
"	임○○	"	1심 계류중

□ (25-3) 과징금관련 행정소송 패소 현황

제기 년도	청구인	과징금 부과사유	패소사유 (소송경과)
2003	(주)에이디칩스	허위공시(美 소재 아메릭스사에 대한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 등)	기술이전 계약내용 등이 허위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려움 (1심: 금융위 승, 2~3심: 패, ‘07.7.26 최종 패소 확정)

※ ‘04.1~‘08.9월중 과징금관련 소송 종결 5건중 상기사건 1건만 패소(승소 3건, 소취하 1건)

26.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정화방안’의 전반적인 내용

1. 붙임 참조

※ 다만,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열람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2007. 8. 30

- 목 차 -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II.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 III. 방안별 추진 일정

재 정 경 제 부
금융감독위원회
금 용 감 독 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05년 하반기 이후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 호전과 더불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논란 확산
-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07.2.20)
- 금융연구원의 원가산정 표준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07.8.23) 등을 통해 카드사,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정부와 감독당국은 원가산정 표준안을 확정·권고하여 카드사들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수수료 수준을 재조정토록 하는 한편,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결정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

- ① 업종별·가맹점별 수수료 체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 ②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한 분석, 카드사 이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하조정의 여지가 있음
- ③ 체크카드 거래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할 경우 신용카드와는 별도의 수수료 체계 구축 필요

II.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1. 가맹점 수수료 수준의 합리적 조정 권고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준의 합리화

□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각사 실정에 맞도록 가맹점의 수수료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권고

○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조정시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일정 수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협상력 부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 조정을 권고

* 평균 1%p 인하될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3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

(2)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차등화

□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 낮은 비용수준을 감안하여 수수료 수준을 신용카드와 차등화*하여 적용토록 권고

*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체크카드 사용과 무관한 자금조달비용, 채권회수 비용 및 대손비용 등을 차감

○ 다만, 전업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거래시 은행에 계좌이용수수료(예시 : 0.5%)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겸영카드사에 비해 추가 비용부담 요인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

2. 합리적 수수료 결정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1) 원가 수준을 감안한 가맹점 수수료 결정 시스템 정착 유도

-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이 반영된 내규에 의해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하는 시스템 정착 유도

- 감독당국은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원가산정 표준안을 제시

(2) 가맹점 수수료 공시 제도 개선

- 공시내용 다양화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정보 비대칭 해소

- 공시내용을 업종별 최저·최고 및 중간 수수료율 등으로 확대하여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제고하고 카드사간 경쟁 유도

※ 현재 카드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만 여전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 공시

(3)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

-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을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순화하도록 유도

* VISA는 8개 업종내에서 매출규모를 고려, 각각 3등급으로 구분 (총24개)

- 동일 업종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매출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반영하여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

(4) 프로세싱 비용 절감 방안 검토

- 재정부, 금감위·원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가맹점의 프로세싱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카드승인 건당 VAN 수수료 : (대형가맹점) 98원, (영세가맹점) 169원

(5) 카드사 비용수익 구조의 질적 개선 도모

- ☐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을 축소하고 카드사간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카드사에 대한 사전약관심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여전법 개정 추진 중

- ☐ 회원에 대한 연회비 면제 관행을 개선*하여 회원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부당하게 가맹점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

* 현재 제정중인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에 관련 내용 반영 예정

(6)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 ☐ 체크카드는 계좌잔고 범위내에서 사용되므로 예·적금, 펀드, 주식, 복권, 카지노칩 등에 대한 결제 허용 추진

- ☐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합상품(Dual Card)의 보급 확대 유도

- ☐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관공서 등의 법인카드를 Clean Card*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 추진

* 회원의 요청시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생활보조금을 유흥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

- ☐ 체크카드 생활영수증 복권제도 보상금 및 인원 대폭확대

Ⅲ. 방안별 추진 일정

방안	조치 내용 및 추진 일정	주관 부서
1. 수수료 결정 체계 개선 및 동 수준의 합리적 조정	- 카드사별 계획 마련 : 9월중	금감위·원
2. 합리적 수수료 결정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① 원가 수준을 감안한 수수료 결정 시스템 정착 유도	- 원가산정 표준안 제시 : 8월말	금감위·원
② 가맹점 수수료 공시 제도 개선	- 여신금융협회 T/F 구성 : 8월말 -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 10월말	금감위·원
③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	- 여신금융협회 T/F 구성 : 8월말 - 업종 구분 단순화 방안 마련 : 10월말	금감위·원
④ 프로세싱 비용 절감 방안 검토	- 관계기관 T/F 구성 : 8월말 - 프로세싱 비용 절감 방안 마련 : '07년중	재경부
⑤ 카드사 비용수익 구조의 질적 개선 도모	- 신용카드 표준약관(안) 반영 : 8월말	금감위·원
⑥ 체크카드 활성화	- 결제대상 확대 및 영수증 복권의 보상금 확대 : '07년중	재경부 국세청

27.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건, 억원)

	상담 및 접수		채무조정		
	상담	접수	건수	조정 전 금액	조정 후 금액
‘05년	646,448	193,698	208,231	5,763	4,331
‘06년	305,037	85,826	86,890	2,490	1,422
‘07년	251,948	63,706	61,597	1,875	8,500
‘08년 1~8월	271,113	50,029	42,357	1,341	550
누 계	2,488,330	743,666	703,068	229,444	169,522

28.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대책’ 의 8월말 현재 사업 실적

□ 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현황(자료:신용회복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08. 6월	'08. 7월	'08. 8월	합 계
신 청	2,168	1,019	2,062	5,249

※ 신청접수 후 심사→약정체결→대출실행의 단계로 진행

29.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한 금융위원회 대응일자 및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최초 9월 금융위기설 정보 입수 시점 및 이후 단계별 조치

□ '9월 금융 위기설'은 지난 7월말부터, 신문 등 각종 매체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도

-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5월 일일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외국인 보유 채권 만기의 9월 집중을 점검하고, 금감원을 통해 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5.22일)

* 주요내용 : 외국인 채권 자금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채권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나갈 계획

□ 이 후 금융시장·산업 전반의 다양한 잠재위험요인별 리스크 및 대응방향에 대해 금감원과 합동 점검회의(7.15)를 개최하고

- 점검회의 이후 위험요인별 대응 방안을 마련 및 추진

□ 아울러, 거시정책협의회(매주 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수시), 금융시장현안점검회의(통상 매주)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하여 재정부, 한은 등 유관 기관과도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공유

* 3월부터 9월초까지 거시정책협의회(장관) 총 16회,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차관) 총 9회, 금융시장현안점검회의(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주재) 총 9회 개최

□ 또한, 다양한 채널(TV, 신문, 라디오, 금융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위기설 등 우리 금융 시장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점검 결과 및 정확한 정보를 시장과 국민들에게 적시에 전달코자 노력

- * 주요사례 : 부위원장 은행권(6.12) 및 금융투자업계(6.18)간담회,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7.17) 및 기자 간담회(8.25), 축사 및 강연(8.26, 8.28), 조선일보 인터뷰(9.3) 부위원장 TV 토론회(9.5), 위원장 라디오 인터뷰(9.8)

30. FTSE지수 관련 질의

□ (지수편입 · 승격) '04.3월 FTSE 국가분류 가운데 “잠정적 관찰대상국”으로 편입된 이후, 지난 '08.9.18 Global Index Series의 국가 분류에 관한 연례 검토(annual review) 결과를 발표

○ 한국은 '09.9월부터 현행 준선진시장(Advanced Emerging)에서 선진시장(Developed)에 편입*

* 우리 시장은 '04.9월 이후 선진시장 진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포함

【지수편입절차】

- ① FTSE내 지수위원회 산하, 각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를 대상으로 편입대상 시장에 대한 의견수렴(매년 3월경)
- ② 지역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가 재분류(Watch List 포함)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
- ③ 전문가위원회의 지수분류(Classification) 결정에 대해, FTSE내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에서 이를 최종 추인
- ④ 선진지수 편입이 결정되는 경우, 편입발표후 통상, 1년의 주지·준비기간을 거쳐 익년 9월부터 정식으로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

※ 한국의 경우, '09.9월부터 정식편입 예정

- (지수편입 조건) '04.3월 FTSE 선진지수 편입기준에 따라 “잠정적 관찰대상국”으로 편입하였을 당시 선진지수 미충족 요건을 5개 항목*으로 평가

* 대차거래, 통합계좌, 장외거래, 공매도규제, 분리결제

구 분	'04.2 ^{주1)}	'04.9 ^{주2)}	'05.9	'06.9	'07.9
① 대차거래	미충족	제한적 충족	제한적 충족	충 족	충 족
② 장외거래	미충족	미충족	제한적 충족	제한적 충족	제한적 충족
③ 공매도 규제	미충족	제한적 충족	제한적 충족	제한적 충족	충 족
④ 분리결제	미충족	충 족	충 족	제한적 충족	제한적 충족
⑤ 통합계좌	미충족	미충족	제한적 충족	충 족	충 족
⑥ 외환자유화 ^{주3)}	-	-	제한적 충족	제한적 충족	제한적 충족

* 주1) FTSE가 최초로 한국시장에 대해 공식 언급

2) 선진지수편입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정

3) 외환자유화는 '05.9월 처음으로 개선 필요성 언급

- (제도개선 사항)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우리 증권시장이 FTSE 선진지수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04.9월)된 이래

- 우리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FTSE 선진시장 미충족 요건을 중심으로 '04~'07년 동안 증권시장 국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매매 제도개선을 추진

※ 최근 외국인투자자 관련 제도 개선내용

- ◇ 대량매매제도 및 공매도 제도 개선 ('05.3, '07.8)
- ◇ 외국인투자자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 허용 ('05.4)
- ◇ 외국인투자자의 장외거래 허용범위 확대 ('05.4)
- ◇ 외국인투자자의 대차거래규모 확대 및 절차간소화 ('05.7, '06.1)
- ◇ 외국인투자자의 장외거래 허용범위 확대 ('07.11)
- ◇ 외국인 취득한도 소진종목 매매제도 개선 ('07.11)
- ◇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증권 대차거래 절차 개선 ('07.12)
- ◇ 외국인투자자의 증권투자관련 외환거래제한 완화 ('07.12)

최초('04.9) 미충족항목	제도개선 경과	'07.9 FTSE 판단시	'07년 추가 제도개선 내용	소관 기관
① 대차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대차거래 한도 확대 및 신고절차 간소화(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원 → 100억원 - 허가제 → 신고제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거래한도 추가확대 및 신고절차 간소화 (0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 → 300억(사전신고 불요) - 300억~500억 이내 대차 거래 포괄신고제 도입 	재경부 (외국환 거래규정)
② 통합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자집단 계좌 제도 개선(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계좌 허용, 사전신고제 폐지 	충족	-	금감위 (증권업 감독규정)
③장외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장외거래 허용 사유 확대(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W 연계거래, 경쟁 입찰 등 	제한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집단 내 편드간 이체 (free delivery)를 위한 장외거래 허용(07.12) ○ 복수상장 유가증권의 외국거래소 통한 취득처분 및 시장간 이동 허용(07.12) 	금감위 (증권업 감독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중 대량매매 허용 및 시간외매매 요건 개선 (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 종가±7% → 가격 제한폭 - 수량 : 1만주, 2억원 → 5000주,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한도 소진 종목의 외국인투자자간 장내대량매매 허용 (07.7) 	거래소 (시장 업무규정)

최초('04.9) 미충족항목	제도개선 경과	'07.9 FTSE 판단시	'07년 추가 제도개선 내용	소관 기관
④ 공매도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도 가격제한 미적용 범위 확대(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 전환청구, 대여주식 반환 등의 경우 ○ 공매도 가격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가 미만 금지 → 직전가 이하 금지(05.3)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도 가격제한 미적용 범위 확대(0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W 발행자(LP) 해지거래 ○ 직전가개념 명확화*(0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NYSE tick-test와 동일 	거래소 (시장 업무규정)
⑤ 분리결제 (Free deliv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확인 펀드 합병 해산 등의 경우 계좌간 주식이체 허용 	제한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집단내 펀드간 계좌이체 허용(07.12) 	금감위 (증권업 감독규정)
⑥ 외환거래 자유화 ^{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06.5) ○ 원화차입 한도 확대(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 → 100억원 	제한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외환거래 제도 대폭 개선(0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투자통합계좌 허용 - 투자자금 환전절차 개선 - 유사 원화계정 통합 - 원화차입한도 확대 (100억 → 300억) 	재정부 (외국환 거래규정)
⑦ 외국인 투자등록(ID) ^{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채권 투자등록 통합(98.4) ○ 선물거래 투자등록 폐지(0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투자통합계좌 ID 미적용(07.12) ○ 투자등록 절차 간소화(07.6) 	금감위 (증권업 감독규정)

주 1) 외환거래자유화는 '05.9월 처음으로 개선필요성 제기

2) 외국인투자등록(ID)은 해외로드쇼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

31. 은행 및 개인에 대한 대차거래 및 대주거래 완화 관련 내역

- 대차거래(기관·외국인)와 대주거래(개인)는 증권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증권예탁결제원·증권금융·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1. 은행의 대차거래

- '08.7.25 :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목적 제한 폐지
 -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
 - (기존)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는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
 - ⇒ (개정) 유가증권 차입거래 목적 제한 폐지

2. 개인의 대주거래

- '08.1.23 : 대주거래 재개
 - 증권금융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주식 278개 종목에 대하여 대주거래 시행
 - * 대주거래는 증권금융에서 '74.3월부터 시행하여왔으나 '86.3월 재무부의 「증권시장의 수급안정 방안」에 의하여 일시 중단되었다가 '08.1.23일부터 재개
- '08.10.1 :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라 대주거래 중단

32. 매입당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과 관련 문서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① (03.9.26) 금감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51%)를 승인
- ② (03.10.30)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0%(취득가액 1.38조원) 취득

2. 감사원 감사 경위

- ① (06.3.3) 국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05.12월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 ② (07.3.12)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 ③ (07.5.8) 금감위, 03년 인수승인의 직권취소 등의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단 이후 재검토할 것을 감사원에 답변

3. 검찰 수사 및 재판 진행 현황

- ① (06.3.7)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매각관련 의혹사항 검찰에 고발
(05.10월 최경환 의원 대표 발의)
- ② (06.11.20) 검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외환은행, 론스타
(LSF-KEB Holdings), 유회원을 기소
 - (08.2.1) 서울지법(1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선고
* 론스타(LSF-KEB), 외환은행 각각 벌금 250억원, 유회원 징역 5년
 - (08.6.24) 서울고법(2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 선고, 검찰은 08.6.30 대법원에 상고
- ③ (06.12.7) 검찰, 외환은행 매각관련 수사를 통해 변양호(前 재정부 국장),
이강원(前 외환은행장) 등을 배임·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

4. 론스타-국민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계약

- ① (06.5.19) 국민은행,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 체결
- ② (06.5.23) 국민은행, 금감위에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 ③ (06.11.23) 론스타, 계약기간(9.16)이 지나고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파기

5.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 계약

- ① (07.9.3) HSBC,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 체결
- ② (07.9.27) HSBC, 공정위에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 심사 신청
- ③ (07.12.17) HSBC, 금감위에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승인을 신청
- ④ (07.12.20) 금감위, 승인 심사 보류를 HSBC에 통보
- ⑤ (08.3.5) 공정위, HSBC에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
- ⑥ (08.4.29) HSBC, 론스타와 08.7.31까지 인수계약을 연장
- ⑦ (08.7.25) 금융위, HSBC의 승인심사 절차 개시를 발표

* HSBC가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면 승인심사 절차를 개시하되,
최종승인은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여부 등을 보아가며 결정

- ⑧ (08.8.11) 금융위, HSBC의 승인심사 개시(HSBC 보완자료 제출)
- ⑨ (08.9.19) HSBC, 외환은행 인수 계약 일방파기
 - (08.9.25) HSBC, 외환은행 인수 승인 철회 신청

신 학 용 의 원

**1. 최근 3년간 재벌가 자제들 관련 주가조작 사건
에 대한 금융위의 진상파악내역, 해당 재벌자제
들에 대한 고발 등 조치 여부**

【○○철강】

- 2007.11.22. 증권선물거래소가 일반투자자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을 통보해 옴에 따라 조사 착수하였고 현재 조사진행 중입니다.

【(주)○○○스】

- 2007.11.20. 증권선물거래소가 일반투자자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의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조사 착수하였고
 - 조사결과, 일반투자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이첩('08.6.25) 하였습니다.

【현○○○(주)】

- 현대상선의 경우 2007.5.29 현대상선측의 자사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민원제보에 따라 2007.6.26 조사착수하였고
 - 조사결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08.3.26. 종료)

【(주)○○○투어】

- 2006.11.6. 상시감시결과 시세조종 등 혐의가 있어 인지조사하고, 2007.1.25.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련혐의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합건하여 조사하였고
 - 조사결과, 보고의무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통보 조치 ('07.6.20.) 하였습니다.

【○○○프(주)】

- 2007.9.11. 상시감시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가 있어 인지조사하고, 2007.10.22.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련혐의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합건하여 조사하였으며
 - 대표이사 등 다수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2인을 고발하고, 8인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 ('08.5.21.) 하였습니다.

【기 타】

- 상기 종목 이외에는, 조사여부가 공개될 경우 해당종목의 추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사대상 개인 및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 진행중인 사건 수사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조사1국)으로부터 제출받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위원장의 중장기적 비전 및 세부 실천 방안 로드맵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의 역할분담은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완료된 사항
 -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
 - 동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2월말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 정부조직개편 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시 새로운 체계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관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3. KIKO 등 환해지 상품 피해 기업에 대한 부채 탕감, 융자지원 등 금융위의 세부 대책 및 자금 조달 방안

☐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08.10.1 보도자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KIKO거래기업 포함]

2008. 10. 1.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목 차

I. 중소기업 자금동향

II. 중소기업 유동성지원방안

1. 기본방향

2.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지원 확대방안

가. 기본방안

나.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다. 중기 Work-out 원활한 추진

라. KIKO거래기업 지원방안

3.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 방안

가. 신규 유동성 지원 확대

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

다. 旣 발표된 중소기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III. 기업자금사정에 대한 점검·평가 강화

〈별첨〉 KIKO기업 관련 종합지원대책 추진 필요성

1. 중소기업 자금동향

□ 최근 중소기업은 높은 원자재 가격, 수출부진, 국내내수 침체, 환변동에 따른 손실 등의 多重苦를 겪고 있으나,

○ 국내외 금융불안 등에 대비한 시중은행의 자금긴축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 자금수요 측면에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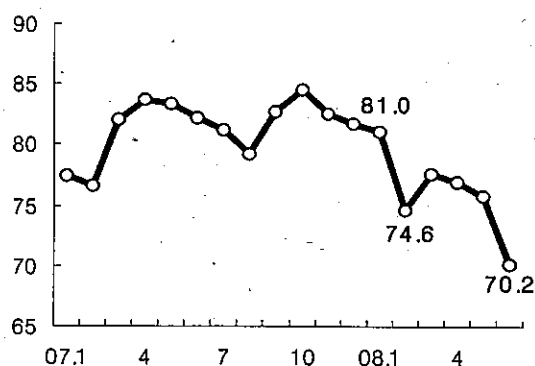
○ 원자재 구입비용 상승과 경기둔화에 따른 판매대금 결제 지연* 등의 영향으로 향후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 어음 평균결제기간(일) : (07.3/4)121.7 → (4/4)122.1 → ('08.1/4)122.2 → (2/4)1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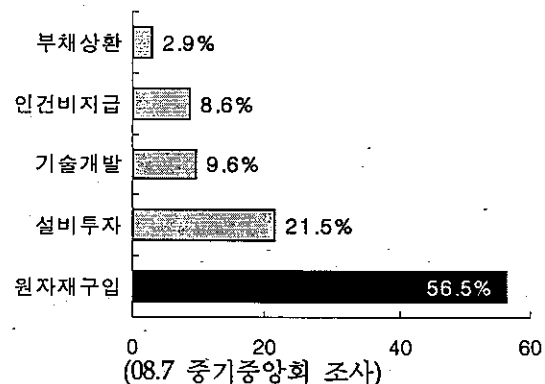
* 판매대금 현금결제율(%) : (07.3/4)63.3 → (4/4)63.6 → ('08.1/4)63.7 → (2/4)61.9

○ 실제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자금사정(BSI)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



< 차입자금 주요 사용처 >



□ 이에 비해 자금의 공급측면은

- '08.8월말 현재 은행의 중기대출이 총 413.8조원에 달해 금년들어 43.8조원(11.8%) 증가하고 있으나,

- 그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불안이 본격화된 8월이후 더욱 두드러짐

(단위 : 조원, %)

	'05년	'06년	'07년	'08년			08.8월 잔액
				상반기	7월	8월	
중기대출(증가율)	12.4(5.1)	45.3(17.7)	68.2(22.6)	35.1(9.5)	6.1	2.6	413.8(11.8)
개인사업자(증가율)	1.8(2.1)	13.7(15.0)	19.1(18.1)	5.6(4.6)	0.9	0.3	131.4(5.6)

* 은행의 中企대출태도지수(한은) : (07.1/4)25→(4/4)-28→(08.1/4)-22→(2/4)-22→(2/4)-19

- 아울러,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2.0조원수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5,973억원(22.6%) 감소하는 등 하반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보다 심화될 전망

* 직접금융조달실적 : ('07.1~7월) 26,375억원 → ('08.1~7월) 20,402억원

□ 또한, 최근 KIKO로 인한 손실기업이 확대*되는 등 일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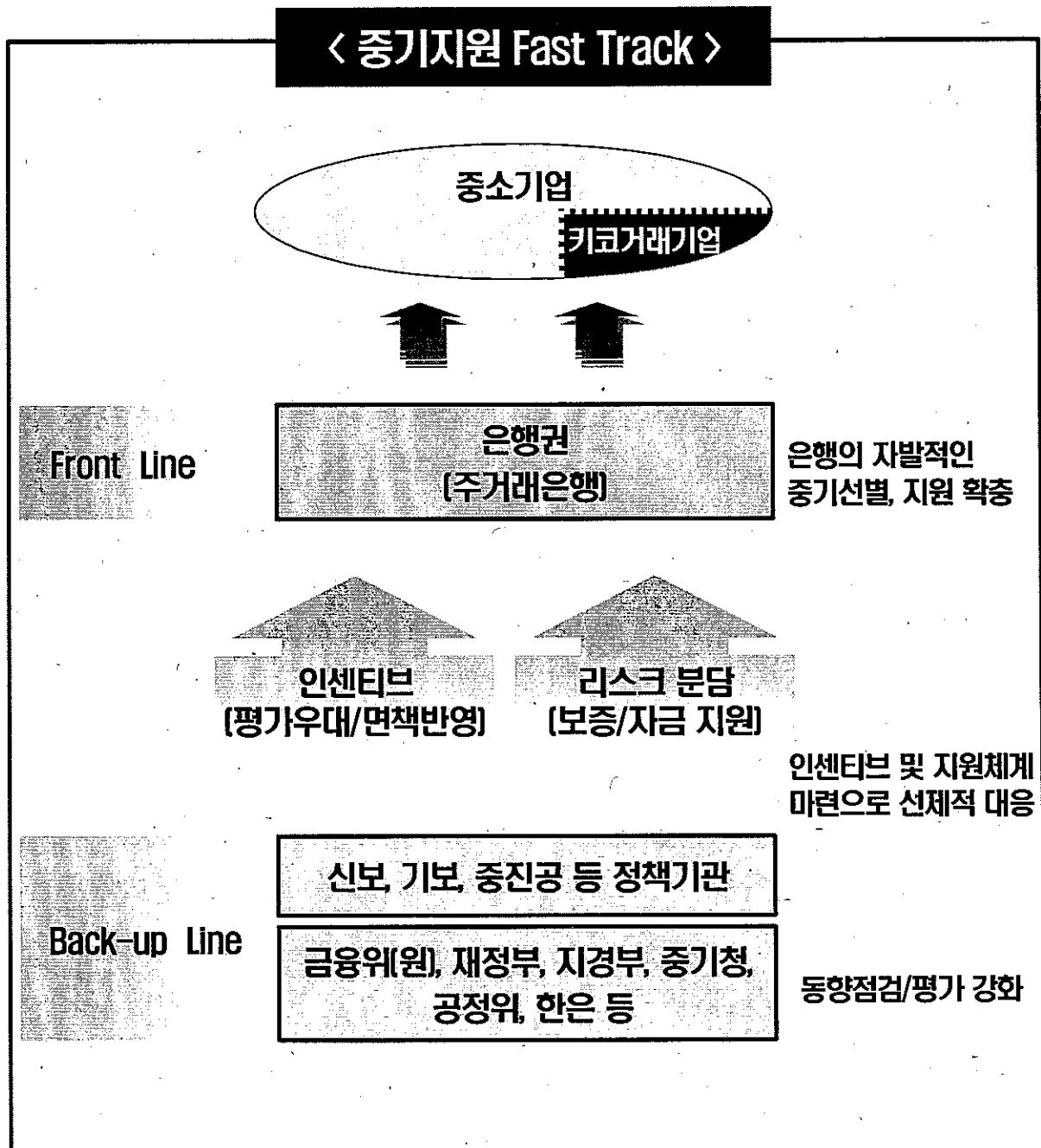
* '08.8월말 기준(환율 1,089원) KIKO 거래손실은 1조 6,943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거래손실은 1조 2,846억원(실현손실 5,062억원)

⇒ 따라서, 시중은행 등 민간과 정책금융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중기자금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 이례적으로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KIKO 등 파생상품 손실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

II.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방안

1 기본 방향



〈중기 자금공급의 Paradigm Shift〉

□ 종전에는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확대 및 보증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도

- 동 방안은 보증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 강화차원에서 무차별 대출축소를 진행해 중기지원의 과도한 위축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 노정

* (예) 08.8월 청년창업특례보증(3,000억원)을 도입→ 9.17일 현재 20억원 지원

⇒ 따라서, 경기위축기에도 민간부문의 중기지원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발적인 중기 선별·지원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 ① 은행이 자체적인 중기선별기능을 활용하여 회생가능한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및 지원체계 구축*

* 민간의 중기지원 역량을 최대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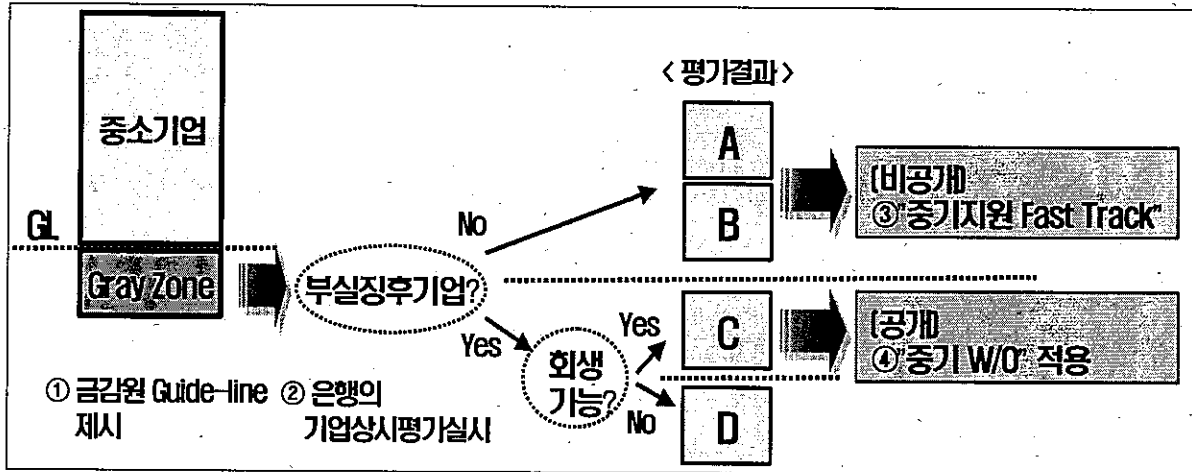
- ②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구조조정 비용을 감축하고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제어
- ③ 실제 자금집행실적을 대상으로 점검과 평가를 집중적으로 강화

2

은행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

가. 기본방안

◇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중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① 금감원이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신용평가등급이 정상하위등급~요주의등급이고 일정한 요건 충족기업

② 은행들의 상시평가결과 4개 그룹으로 구별*

* A(정상), B(C·D등급 될 가능성 큼), C(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 D(부실징후기업이며 회생불가)

③ A/B등급* 기업에는 “(비공개)중기지원 Fast Track”을 마련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신규유동성 공급을 지원

* 정상기업으로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은행들이 평상시처럼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조절적 프로그램 마련

④ C등급 기업에는 종래 “(공개)중기 Work-out” 프로그램* 적용

* i)기축법상 구조조정협약, ii)채권은행협약, iii)대주단협약, iv)법정관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신속한 회생을 지원

나.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 (~09.6월)

① **[지원대상]**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 은행의 상시기업 평가 결과 A/B등급 기업

② **[지원방식]** 주채권은행별로 '비공개' 자율지원 프로그램인 "중기지원 Fast Track"으로 지원(채권분산시 공동프로그램 추진)

* 주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심사시 신·기보 '특별보증' 심사도 함께 진행

○ 금감원, 주채권은행이 보증기관과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원프로그램을 유형화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은행들은 이를 개별 사례별로 일부 보완하여 적용 → 주채권은행에 대한 구속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

○ 경기조절을 위해 한시적(~09.6월)으로 실시하여 은행들의 위축된 대출성향을 전환하고, 사후 평가 실시

③ **[추진방식]** 경기위축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여건 조성

① **(인센티브 확충)**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시 中企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비중 확대

* (예) ①경영관리부문(M)에 中企대출비율 준수실적비중(現12.5%) 상향조정

② 中企대출을 유동성지원/기타대출로 구분하고 유동성대출 비중 상향조정

- 불공정거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지원 중소기업과 은행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성과공유상품 유형(例)

① 대출에 따른 이자수취 외에 신주인수권을 부여

② 대출(연장)시에는 이자율을 감면하되, 장래 기업이 성과시현시 공유

③ 대출채권을 전환사채(CB)로 전환(금리조건 등 유지)

② (負責감 완화) 고의·중과실이 없는 담당 임·직원은 면책되도록 각 행 내규 및 금감원 검사결과에 반영

- Fast Track상 신규취급여신은 은행 경영성과평가(KPI) 대상(영업점 및 임원·본부 성과평가)에서 제외*

* 동 기업 신용등급 하락시 총당금 추가적립 및 금리손실 등이 감점요인이 되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각 은행의 실무책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③ (특별보증 지원) 은행의 신규여신지원과 관련한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신·기보에서 특별보증 지원

※ 특별보증 지원의 주요내용

- (보증한도 및 보증금액 사정시 우대) 기보증 지원금액에 불구하고 최고 1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보증금액 사정시 매출액 한도 등을 일부 상향조정
- (신속한 보증지원)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및 전결권 하향조정 등
- (임·직원 면책) 특별보증취급관련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다. 중기 Work-out의 원활한 추진

① [지원대상] 상시기업평가 결과 C등급 기업

② [지원방식] 종래 (공식)워크아웃절차*에 따라 지원방안** 모색

- * W/O절차 : 기촉법상절차,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 법정관리 등 활용
- * 지원방식 유형(例) : 손실규모 크기에 따라 (大)출자전환, (中)대출지원, (小)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

③ [추진방식]

① (인센티브 및 負責감 완화) Fast Track과 동일하게 지원
(~09.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② (정책기관 지원 확대)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중진공의 「회생특례자금」을 지원

* 중진공이 주거래은행과 현장실사(종합진단) 등을 통해 선정

③ (W/O참여율 제고) 신·기보 구조조정 결정권한을 본점에
집중*하여 보다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4.7.7)」 이후 신·기보 업무방법서
개정으로 구조조정기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도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負責감 문제로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문제 개선

- “대주단 협약”에 증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 대주단협약의 실효성을 제고

* 협약 가입률(9.26일 현재, %) : 전체(70.5), 은행(100), 저축은행(94.4),
증권업(4.4), 자산운용사(6.5)

<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절차 비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01.6월 ~)	채권은행협약 (‘04.7월 ~)	대주단협약 (‘08.4월 ~)
대 상	· 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 부실징후기업 · ‘대기업’이 주요대상	·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부실징후기업 · ‘중소기업’이 주요대상	· 모든 건설기업 · 신용공여액 제한없음
근 거	· 법률(가입 강제)	· 자율협약(가입 자율)	· 자율협약(가입 자율)
협약가입 금융기관	· 은행, 보험, 증권, 여전 등 全 금융기관 · 예보, 캠프, CRV 등 포함	· 국내은행 등 23개기관 · 신·기보, 수출보험공사, 캠프, 중진공 포함	· 全 금융기관 중 70.5% · 은행(100%), 저축은행(94.4%), 증권(4.4%), 자산운용(6.5%) 등
주요내용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채권자 75%동의시 출자전환, 채무재조정 · 경영정상화 계획 실행	· 기촉법절차와 거의 동일 · 채권행사 자동유예 · 공동워크아웃추진의무화	· 채권행사 1년 유예 · 신규자금 지원은 개별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 출자전환, 채무재조정x
추진실적	· 워크아웃추진현황(기업수) (01.9~07.12) 71개 · 기업회생률 : 69%	· 워크아웃추진현황(기업수) (05)2,120~(06)1,416~(07)952 · 기업회생률 : 51.9%	· ‘08.4월 1건 시행 (채무기한연장)

라. KIKO 거래기업 지원방안

(1) 기본방향 :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에 KIKO의 특성을 반영

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 발생

* KIKO는 장외파생으로 타은행과의 거래내역을 모름(정보비대칭성) → KIKO가 이슈화됨에 따라 기업은 "거래사실"만으로 불이익 불가 봐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은행은 정보불확실로 자금지원에 더욱 소극적

②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집중되어 대부분 종료되는 한시적 구조

* '08.8월말 KIKO계약잔액 중 78.5%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KIKO 만기도래 현황('08.8월말 현재)

구분	08년					09년					10년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이후
금액(억\$)	7	8	8	7	30	18	14	7	5	44	5
구성비(%)	8.9	10.1	10.1	8.9	38.0	22.8	17.7	8.9	6.3	55.7	6.3

③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버헤지 등으로 인한 미실현손실의 대거 반영으로 '흑자도산'이 우려

⇒ KIKO의 특성을 반영한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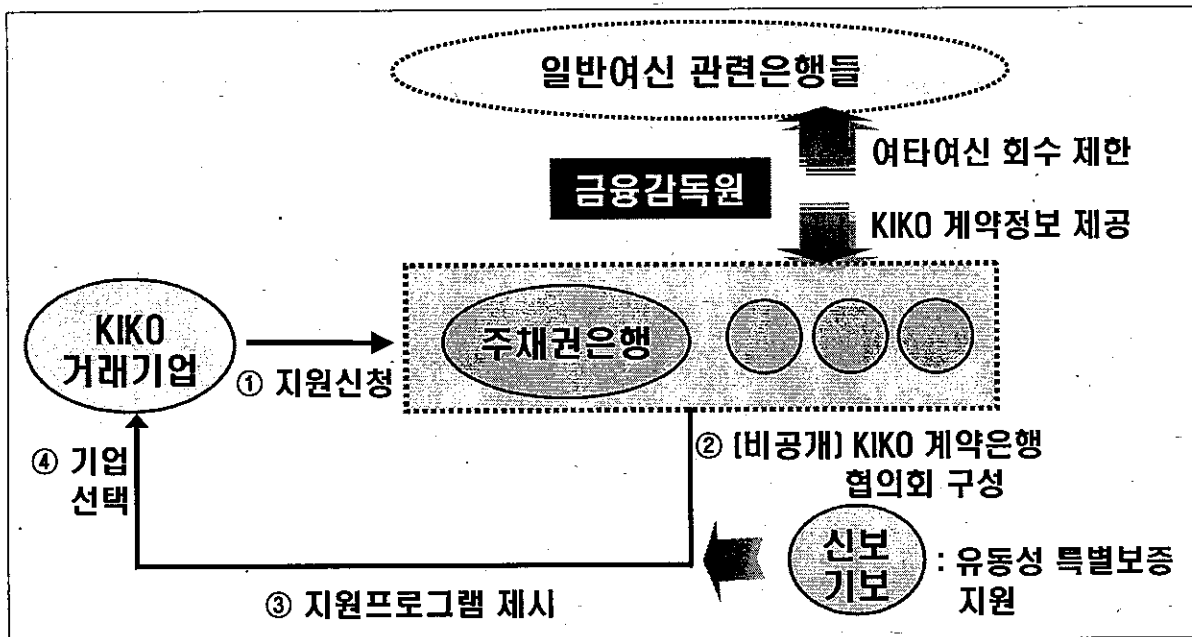
① 금감원을 중심으로, KIKO채권은행들간 「공동」·「비공개」 프로그램인 "KIKO거래기업 Fast Track"을 마련하여 시장실패 보정

② KIKO사태를 방지할 경우 태산LCD(주)의 사례*처럼 은행·기업 모두 큰 손실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Win-Win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태산LCD(주) 법정관리 진행으로 하나은행은 2,800억원손실

③ KIKO손실부분만을 우선적으로 떼어내서 조정함으로써, 보다 간명한 처리 추진

[2] 유동성 지원 추진방안



- ① 기업이 "Fast Track"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감원을 중심으로 비공개 대상인 「KIKO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

* KIKO관련 정보집중으로 KIKO 거래기업별 KIKO 계약은행 파악 지원

- ② 협의회(주채권거래은행)가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의 선별기준인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지원방법 등을 제안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구조

* KIKO손실만 대상으로 하고, 은행들이 여타 여신을 회수할 수 없도록 제한

③ 구체적인 지원방안(사례)

- ① (일괄청산) 현 시점에서 손실액을 확정짓고 동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 여신* 공급(또는 출자전환)

* 기업의 영업이익 흐름을 감안한 채무상환 일정·금리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보증기관간의 협력상품을 개발

- ② (만기까지 분할상환) 만기까지 환위험을 헷지하는 상품을 추가 제공하거나, 매월 정산시점에 신규 여신을 공급

* 매월 정산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credit-line”형 보증지원

- ③ (상환일정 연장) 은행·기업간 상환일정 연장 등 KIKO 거래구조 변경을 통해 일시 정산부담 경감

- ④ (손실규모가 미미) 수수료 감면 및 이자율 할인 등 지원

⇒ 원칙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금감원, 채권은행 협의회(국채은행 포함) 및 신·기보가 공동으로 각 회사에 가장 적합한 회생프로그램을 제공

- ④ KIKO만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술한 「중기 워크아웃」 절차에 의하여 지원

[3] 정책적인 지원방안

- ① (Fast Track 프로그램 적용) 인센티브 및 負責감 완화,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지원 등에서 “중기지원 Fast Track” 지원을 적용

* 일시 정산금 해소를 위한 신규여신 지원규모가 큰 경우 보증기간(장기 보증), 보증한도 등에서 KIKO손실의 특성을 반영

- 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KIKO 기업피해 사례 접수·처리 및 지원상황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운영

* 금융위 주관으로 중기청·금감원·은행권을 포함해서 구성

- 주 1회 손실기업의 유동성 지원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③ 은행의 불완전·불공정 판매에 대한 감독 강화

○ 금감원, 중기청·중소기업 중앙회와 피해사례 접수·조사

- * 9.30일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KIKO 관련 민원은 29건
: 계약재조정 등 조정유도 11건, 기업주장 기각 12건, 조사중 6건

○ KIKO거래은행(13개) 특별점검 실시(금감원, 8.21~9월말)

- 금감원의 민원 조사·은행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측의 잘못 입증시 기관조치·관련자 문책 요구 등 제반조치 예정*

- * 은행-기업간 최종적인 손해배상은 법원 판결로 가능

④ KIKO 손실기업과 은행간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소송 지원

⑤ 파생상품 거래제도 정비 등 추진

- 은행간 파생거래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판매시 은행의 설명의무 강화방안 마련
- 파생상품관련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검토
- 환헛지 교육 강화, 파생상품 설명자료 개선 등으로 상품 구조, 손실 가능성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파생상품의 위험에 대한 인지 강화

3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 방안

가. 신규 유동성 지원 확대

- ◇ 전술한 은행 중심 지원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유동성을 다음과 같이 공급·지원해 나갈 계획
 - 한은 총액한도대출 및 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P-CBO 신규발행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약 4.3조원 이상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 확대

(1) 자금지원 확대

- ① (한은 유동성 공급)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적기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금통위 의결사항)

- ② (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산은(25조→33조)·기은(24조→26조)·수은(6.5조→7조)의 중기자금 공급액을 3.3조원 확대

- 5개 국책기관 中企 자금지원의 조기집행

- (산은·기은·중진공) KDF 간접지원방식의 pilot-test 등을 위해 2,500억원 간접지원(10월초)
- (산은·기은/신·기보) 산은 자금(2,000억원)과 신·기보 보증을 결합하여 기은이 저리 긴급운영자금 지원(10월초)

- ③ (정책자금지원 확대) 일시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자금 지원(200억→500억원*)

* 회생특례자금(10억원 한도, 3년 만기, 7.49%)은 현재 약 70%가량이 집행이 완료되어, 재해복구자금(500억원)의 일부 전용 추진

[2] 보증지원 확대

① (보증배수 확대운용) 기타 중기대출 지원규모 확대지원과 관련하여 보증규모(배수) 확대 운용*

* '08.8월말 현재 신보 10.9배(유동화보증 포함시 7.5배), 기보 6.5배, 지신보 3.6배

○ 신보·기보·지신보의 보증여력을 감안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4조원 확대

* 신보 28조→29.5조원, 기보 11조→12.5조원, 지신보 5.3조→6.3조원

② (영세자영업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규모 확대 (1조원→1.5조원) 및 업체당 지원한도 상향(1→2천만원)

* '08.4월~자금(총 1조원) 소진시까지 지원, 업체당 1천만원 한도

'08.9.26일 현재 66,824개 업체에 6,572억원 지원

③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신보에 '공사계약체결~공사대금 결제기간'간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리지론보증” 도입*

* 보증한도 확대(30억원 → 70억원) 및 부분보증비율·보증료 우대

- 보증규모는 '08년 2천억원, '09년 5천억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보증료부담 완화를 위해 신보 “이행담보금 보증”의 보증상대처를 한시적('09년말) 확대*

*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투법상 시행사업자 → (확대) 유가증권 시장상장·코스닥등록법인, 신보 기준을 충족 민간기업

④ (장기보증 감축속도 조절) 신·기보의 하반기 장기보증의 감축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일시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 강화(보증한도 일부 유예 등)

[3] 中企 회사채발행 지원 등 대체 유동성 공급

① (中企 회사채발행 지원) 금융위 지침을 통해 신보에서 연말까지 신규 "P-CBO" 1조원 발행

* 신보 유동화계정 재원(약 1.2조원) 활용, 리스크관리대책 함께 강구

- 中企회사채발행 지원을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 도입도 병행 추진(신·기보법 국회제출, 08.12월)

②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가용재원 1,000억원*을 조기 집행하여 민간 벤처펀드 투자재원 확충

* 민간 투자재원 약 3,000억원 결성 효과 유발

** 既결성 모태펀드 출자조합(약 2.5조원)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확대
(현재 모태펀드 6,785억원을 출자하여 95개 조합, 24,856억원 결성)

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11월중 국회 법안제출)

-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계약시 납품단가 조정 조항과 분쟁 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명문화

□ 대기업-협력중소기업간 '파트너십 협약' 강화

- 현금결제 확대, 협력기업의 원자재 구입자금지원 등
- 네트워크론 결제(0.3→0.4% 세액공제) 및 대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 출자(수익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면제)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9.29일, 기시행)

□ 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단가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서면실태조사업체 수 : ('00) 4천개 → ('03) 3.5만개 → ('06) 9만개 → ('08) 10만개

다. 既 발표된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既 발표된 중기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책기관간 협력상품을 출시하는 등 협력을 보다 강화

- ① (원자재 구입자금지원) 산은(2조원) · 기은(1조원) · 수은(0.6조원)의 특별자금지원 확대 및 신 · 기보 특례보증 1조원 지원

* 산은 1조 244억원, 기은 1조 9,174억원, 수은 7,441억원
신보 1,192억원, 기보 133억원 지원(9.26일 현재)

-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기은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3,000억원(08.8월)*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신보에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보증 도입(08.10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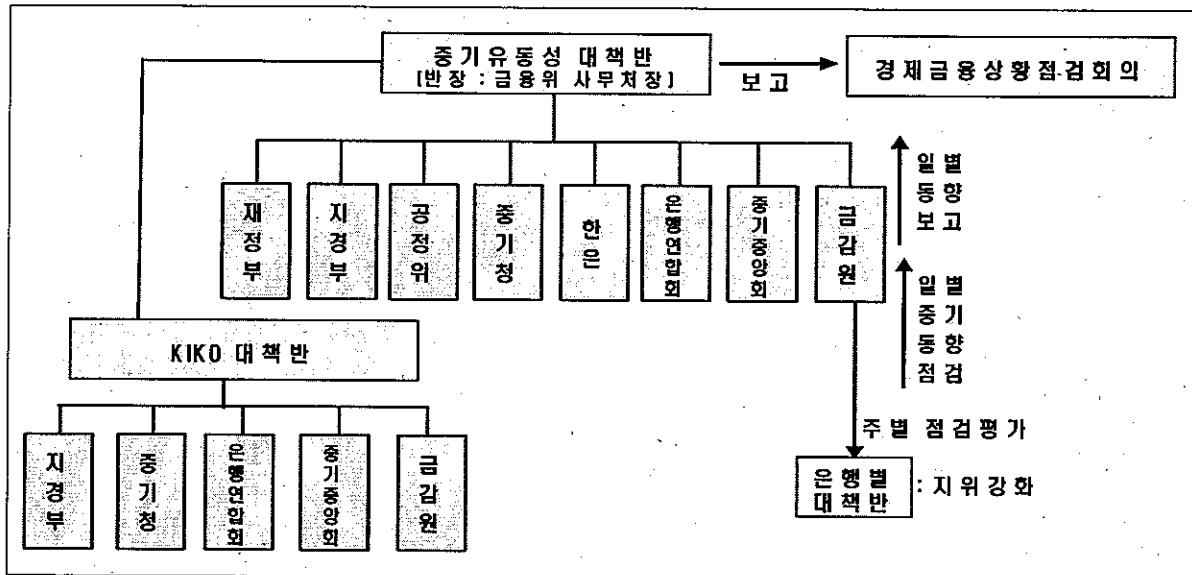
* 기은 7억원(9.26일 현재)

- ③ (창업 · 고용창출지원) 신보 창업보증공급을 2조원 확대* (5조원 → 7조원)하고, 청년창업특례보증 1,000억원 지원** 관련 기은에 “청년창업기업대출” 도입**(08.9.2)

* 4.7조원(9.23일 현재), ** 166억원(9.26일 현재), *** 45억원(9.26일 현재)

- ④ (기술기업 지원강화) 기보 “R&D과제 성공기업 특례보증” (500억원) 및 기은 “R&D사업화대출(Success Biz Loan)” 도입(9.25)

III. 기업자금 사정에 대한 점검·평가 강화



□ 금융위 산하에 관계부처 등으로 “중기유동성 대책반*”을 설치하고, 각종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평가

* 반장(금융위 사무처장), 관계기관(재정부·지경부·중기청·공정위·한은·금감원)국장급, 중기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 ‘KIKO 대책반’은 산하에 별도 구성(향후 건설·조선부문 대책반도 추진)

○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 금감원은 기업자금사정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은행들의 중기 유동성 지원현황을 집중적으로 평가

○ 각 행별 “중소기업 대책반” 지위를 강화(은행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 금융위/금감원에 직접 보고)

○ 금감원은 일단위로 중기대출 동향점검 및 금융위(대책반)에 보고하고, 은행별 유동성 지원대책 추진현황을 주단위로 평가

* CAMELS 등 은행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은행에는 금감원 감사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별첨〉

KIKO만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의 현실적 제약

□ 9.16 태산 LCD등이 KIKO 손실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KIKO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 집중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할 때, 'KIKO 피해기업 구제대책'만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

① 최근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은 환헤지 거래 손실 뿐 아니라, 원자재가격 상승·매출부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

②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환헤지 거래 손실도 KIKO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수출기업들은 환변동보험, 일반 풋옵션·선물환, KIKO, 피봇, 스노우볼 등 수많은 형태의 환율 관련 헤지 계약을 체결

※ 태산 LCD도 복수의 금융기관과 KIKO, 피봇, 선물환 등의 계약 중복체결 (수출금액의 500% 규모의 통화파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금감원))

③ KIKO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별로 환차익 규모, 과도한 계약여부·은행의 불완전 판매여부 등 복잡한 변수 내재

- KIKO 계약비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정도 상이

* 전체(517개 기업)적으로는 KIKO 손실을 제외하고도 2.45조원의 환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평균 KIKO계약비율(콜옵션매도금액/수출금액) 40.4%)

< KIKO 손익 현황(금감원, 8월말기준) >

(단위 :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잔액 (억달러)		총 손실(A)		환차익 (B)	총 손익 (A+B)
				실현손실	평가손실		
중소기업	471	59	△12,846	△5,062	△7,784	29,580	16,734
과도계약	56	13	△2,771	△1,053	△1,718	2,320	△451
대 기업	46	20	△4,097	△1,372	△2,725	11,890	7,793
과도계약	7	10	△1,837	△451	△1,386	1,015	△822
합 계	517	79	△16,943	△6,434	△10,509	41,470	24,527
과도계약	63	23	△4,608	△1,504	△3,104	3,335	△1,273

주1) 과도계약은 수출금액을 초과하여 KIKO 계약(콜옵션 매도금액기준)을 체결한 경우

2) '08년 상반기중 실현손실

3) 연수출액×환율상승액[환율상승액(추정)=현재환율(1,089원)-가중평균행사환율(944원)=145원]

- 또한 기업 피해 원인이 기업자체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인지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의한 것인지도 개별 건별로 규명 필요*

* 현재 민원접수·조사(27건), KIKO거래 은행 일제점검 등을 통해 조사
중에 있으며, 최종적인 권리구제는 법원의 판결(민사소송)로 가능

**➡ KIKO 피해 기업만을 따로 구제하는 것은 여타 기업·
거래와의 형평성 및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

*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KIKO 거래로 '부당'하게 '실질적인 피해'를
본 기업만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것이 사실상 곤란

□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

- ① '기업의 희생가능성'을 기준으로 우량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마련·추진
- ② KIKO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기업의
부당한 손실이 없도록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4. 국내 금융과 외환 금융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역할 분담 및 공조 관련 위원장의 중장기적 비전 및 세부 실천방안 로드맵

-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조직이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다는
 - 관계기관간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요인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특히, 정부조직개편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국제 금융업무의 소관변경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산은의 리먼 인수 시도 관련, 진상조사 내역 및
산은 행장 거취와 관련한 금융위원장의 입장

- 산은의 리먼 인수 시도와 관련, 협의 진전상황을 산은
으로부터 몇차례 보고 받았고,
 - 이와 관련하여 별도 진상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 아울러, 동 건 관련 산은 행장 거취문제도 별도로 검토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6. 08년 8월말 기준 금융위 산하 각종 기금들의
국내외 주식, 간접투자상품, 파생상품 투자 평
가손실

☐ 금융위 금정국 산하 기금은 총 6개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공적자
금상환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 08년 8월말 현재 해당 기금의 주식, 간접투자상품, 파생
상품 투자 실적이 없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주식,
간접투자상품, 파생상품 투자 실적은 없음

7. 금융위원회 홍보비 사용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금융위는 홍보관련 별도 사업예산이 없음

☐ 대변인실 주요 경비 집행 내역 (08년 9월말 현재)

○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6개월) : 2,020,000원

○ 스크랩마스터 사용료(6개월) : 3,420,000원

○ 뉴스 모니터링 및 문자 서비스 비용 : 9,894,300원

○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 3,750,000원

○ 기자단 간담회(3회) : 7,913,000원

○ 기자수첩 등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 : 1,748,226원 등

8. 펀드 판매보수 실태 및 외국 사례 참조한 금융 위의 수수료 감면 대책

□ 우리나라 전체 펀드 판매보수 · 수수료

- 판매보수 : 연간 0.88% (금액가중평균으로 산출)
(주식형 : 1.26%, 채권형 : 0.31%, 혼합형 : 1.00%)
- 판매수수료 : 펀드별, 투자금액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산출이 곤란함
 - * 434개 공모 주식형중 판매수수료를 받는 펀드는 53개인 것으로 파악
(자료 : 자산운용협회)

※ 펀드 판매 보수 · 수수료 수익규모

- FY07 은행 · 증권사의 펀드 판매보수 · 수수료 수익 규모는 2조 7,987억원

□ 펀드 판매 보수 · 수수료 외국 사례

- 대부분의 외국은 원칙적으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펀드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다양한 형태로 수취하고 있는 바,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함
- 다만, 미국은 판매수수료가 높고 판매보수가 낮은 반면, 일본은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가 혼합된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구 분	미 국	일 본
판매보수	주식형 0.43%	국내주식형 1.32%
	채권형 0.39%	국내혼합형 1.13%
판매수수료	주식형 4.98%	국내주식형 1.91%
	채권형 3.82%	국내혼합형 1.11%

* 자료 : 'Strategic Insight Inc.' 및 '모닝스타 재팬' 등

** 일본의 경우 신탁보수를 말하며, 신탁보수내에 판매보수가 포함되어 있음


□ 금융위는 펀드 보수·수수료와 관련하여 최대한 시장기능을 존중하면서 서비스에 대응하는 보수·수수료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임(세부방안 발표 : '08.9.26)

※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판매 보수·수수료에 대하여 법규에서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없음

○ 다양한 판매채널의 진입을 허용하여 판매채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 및 가격경쟁을 유도

○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가격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공시를 강화하여 합리적 가격체계가 형성되도록 유도

※ 상세내용은 '08.9.26일자 보도자료(「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08. 9. 29(월) 조간부터 취급 가능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책임자	도규상 과장(2156-9890)	담당자	서종균 사무관(2156-9895)
배포일	2008. 9. 26.(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 총 7매

제 목 :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 추진

1	추진배경
<p>□ 최근 우리의 경우 자본시장 성장과 더불어 펀드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p> <p>○ 가계 금융자산에서 펀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p> <p>* 수탁고 : ('01년말) 158조원 → ('05년말) 218조 → ('07년말) 320조원 → ('08.9.24) 310조원 비중 추이 : ('01년) 4.4% → ('07년) 9.8% (6년만에 2배이상 증가)</p> <p>□ 그러나,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경로는 다른 외국에 비해 협소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자문서비스 부족으로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p> <p>① 우리의 펀드 판매시장은 과점적 구조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판매사간 서비스 및 가격(보수·수수료) 경쟁이 부족한 실정으로</p> <p>- 가격 결정시 투자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며,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판매보수 수준이 높다는 지적</p>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fsc.go.kr>

② 독립적·전문적인 투자자문서비스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펀드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 반면, 미국 등 선진 외국은 원칙적으로 판매경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다양한 판매경로의 등장으로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이 유발되는 구조

⇒ 이에 선진국 사례 및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판매 채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2 글로벌 추세 및 시사점

① 은행·증권사 등 종합서비스 채널 이외에 펀드슈퍼마켓, 온라인 판매 단순중개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이 등장

- * 종합서비스: 하나의 창구에서 투자자문 및 판매서비스를 동시제공(예: 은행, 증권, 보험사 등)
- * 단순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없이 중개서비스만 제공(예: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 자산운용사 직판 등)

▶ 판매채널간 서비스 및 가격(보수·수수료) 경쟁을 유발

② 독립투자자문인력(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등 독립적·전문적 투자자문서비스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 투자자문서비스 경쟁 및 펀드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③ 적합성 원칙, 가격에 대한 공시 강화 및 판매수수료 할인정보 고지의무 부과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인정되도록 보수수수료 등 정보를 고객에게 충실히 제공

가. 판매채널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다양한 펀드 판매채널이 발전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 및 가격에 대한 경쟁구조가 부족하다는 지적

- 펀드판매회사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은행·증권사 등 대형 금융회사 위주의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

< 주식형 >	05.12말	06.12말	07.12말	08.6말
상위5사의 판매점유율(%)	46.2	52.4	49.6	49.1

* ('08.6말 기준)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그 결과 판매사는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판매보수를 계속 취득하는데도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하다는 지적

< 개선방안 >

□ 펀드 판매채널의 다양화 및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

※ 자통법령에 허용근거를 이미 마련한바 있음

- 일반법인의 펀드판매를 허용하여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사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사가 출현하도록 지원 ('09.20이후)
-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회사 등의 신규진출 허용 ('09.20이후)

나. 투자자문서비스 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펀드판매에 대한 전문적·독립적 투자자문서비스 기능이 취약
 - 현재 투자자문업은 법인에게만 허용되며, 투자자문사는 주로 기관투자가 등 거액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펀드투자자 대상 자문서비스는 미흡한 실정

< 개선방안 >

- 펀드 판매 관련 투자자문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개인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자통법 개정사항)
 - 다만, 불완전판매 소지가 없도록 개인인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별도의 투자자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 ('09년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

다. 투자자보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투자자보호수준이 취약하다는 지적
 - 투자자문서비스 및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 등이 부족하여 불완전 판매 소지가 상존한다는 지적

< 펀드 판매관련 금융분쟁 건수 최근 추이 >

구 분	'07년 상반기	'08년 상반기
전 체	32건	120건 (+275%)
은행	11건	71건 (+545%)
증권	22건	49건 (+122%)

* ()는 전년 同期 대비 증감율

< 개선방안 >

① 펀드 판매회사 신규설립 인가시 자통법상 규정된 Know-Your-Customer-Rule, 적합성 원칙 등의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 엄격히 심사 ('09.2이후 개별인가시)

○ 협회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기정착을 유도

② 판매관련 행태를 상시 점검하는 영국 FSA의 미스터리 쇼핑 (Mystery shopping)제도를 도입 ('08.11월 법규 정비 → '09.2 시행)

* 영국 FSA는 금융회사의 설명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판매회사의 평상시 판매행태를 감독

③ 판매사가 제정한 판매행위준칙의 적정성 및 준수 정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08.10월 협회 “표준판매행위준칙” 개정후 시행)

○ 판매회사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

④ 펀드 판매인력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시 ('08.12 협회 “펀드판매인력 기준” 개정후 시행)

⑤ 펀드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되도록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 시험 강화 등 ('08.8 금융위규정 개정, 기시행중)

⑥ 투자자가 투자위험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자필 확인사항*을 대폭 강화 ('08.11 시행세칙 개정후 시행)

* (예시) 판매사는 ①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최대손실 금액, ②운용하는 자산의 종류 및 투자위험, ③보수·수수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해당 부분에 각각 자필 확인을 받아야 함

라.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및 경쟁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 ☐ 외국과 달리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보수 위주의 가격체제가 형성되어 장기투자할수록 투자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

* 판매수수료 :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댓가로 가입시 투자자가 직접 부담

** 판매 보수 :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댓가로 간접투자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펀드자산에서 각출

- 판매이후 투자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판매보수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투자자는 장기투자할수록 불리한 구조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불만이 제기
- 특히 펀드판매 관련 서비스 내역이 제대로 투자자에게 설명되지 않는 등 투자자의 비교·선택권이 제약되는 결과

< 개선방안 >

- ☐ 제공하는 서비스 및 가격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공시를 강화하여 합리적 가격체계가 형성되도록 유도

① 펀드 판매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제 마련

- 서비스별로 판매보수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및 이에 따른 판매보수를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토록 의무화(공모펀드)

※ '08.10~11월중 금융위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되, 전산시스템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09.1부터 시행

② 자산운용협회는 펀드 보수·수수료를 비교공시*하고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함께 공시토록 자율규제

* 현재 판매보수만 공시하고 있으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비교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 (자통법령에 근거 기마련)

※ 펀드유형별 판매 보수·수수료 비교공시는 '08.10월중 先시행하고, 펀드별 서비스 내역 공시는 '09.2부터 시행

③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프로그램을 판매보수에 적용하도록 유도 ('08.10 협회규정 개정후 시행)

* 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체감함에 따라 일정기간(예:1~5년) 경과 후에는 낮은 수준의 판매보수를 적용 (※현재 일부상품에서 적용중)

4 향후 추진계획

□ 일반법인, 중소서민금융회사 등 펀드판매업 인가를 허용 ('09.2 자통법 시행 이후)

□ 개인인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허용 검토 ('09이후 자통법 개정 추진)

□ 투자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정비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

○ 미스터리쇼핑 관련 법규 정비(금년 11월중)

□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및 경쟁촉진 유도

○ 보수·수수료 비교 공시 (금년 10월)

○ 펀드별 서비스 내역 설명·제공 및 비교공시 ('09년 2월)